93340
9 788997 257157
ISBN 978-89-97257-15-7

값 20,000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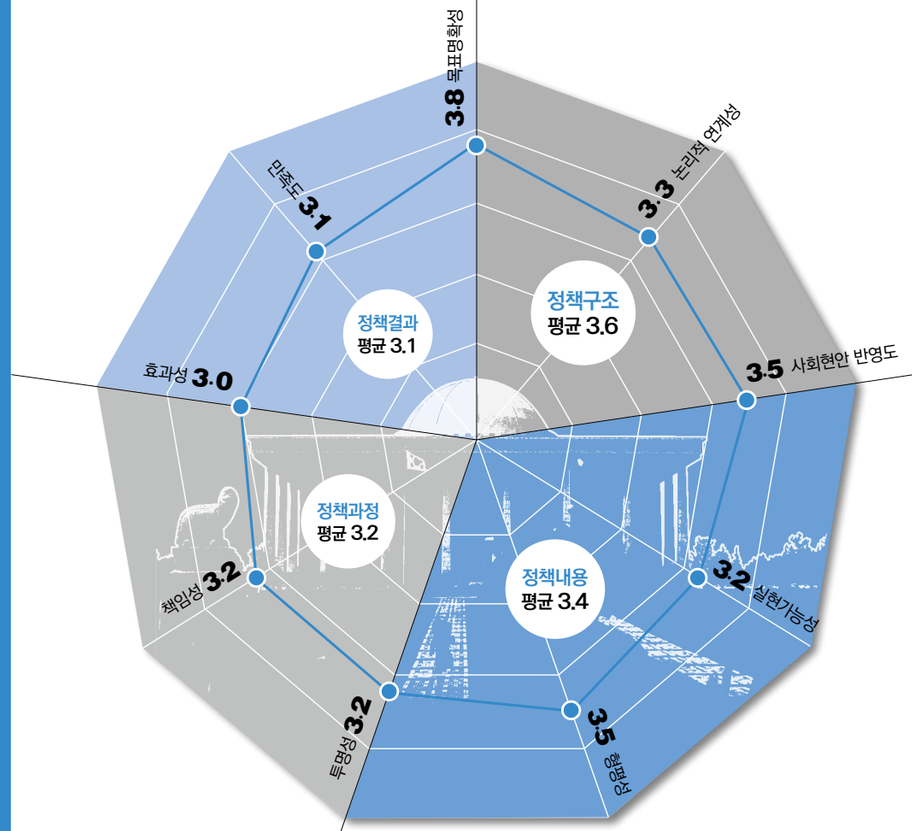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동아E&D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지은이: 최진욱, 심동철, 구교준, 이응균, 윤견수, 김희강, 김두래, 정해일, 김선혁, 임현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 서울 : 동아E&D 2018
p. ; cm

권말부록: 2017년 평가대상 정책 목록 (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97257-15-7 93340 : ₩20,000

한국 행정[韓國行政]
정책 평가[政策評價]

351.11-KDC6
352.3-DDC23 CIP201800481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800481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참여 저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심동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총괄)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총괄)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여론조사 수행기관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동아E&D

contents

제1장 서론 12

1. 연구 목적 14
2. 연구 방법과 대상 16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18

1. 평가지표와 의미 20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20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20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21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21
   5) 기타 영역 21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22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23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23
   2) 평가대상 정책 25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34

1. 경제정책분야 36
   1) 최저임금 인상(고용노동부) 36
   2) 가계부채 관리대책(금융위원회) 36
   3)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37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37
   5)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38
   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38
   7)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8)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39
   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40
   10)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40
2. 사회복지정책분야 41
   1)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41
   2)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42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43
   4)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44
   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45
   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45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46
   8)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47
   9)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47
   1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48
3. 교육문화정책분야 49
   1) 초등돌봄교실 49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교육부) 50
   3)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52
   4)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53
   5)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54
   6) 도시숲 조성 (산림청) 55
   7)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56
   8)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57
   9)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59
   10) 혁신학교 운영확대(교육부) 60
4. 외교안보정책분야 62
   1) 장병 인권보호 강화(국방부) 62
   2)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방위사업청) 62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추진(외교부) 62
   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63
   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63
   6) 굳건한 한미동맹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국방부) 64
   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외교부) 65
   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국방부) 66
   9)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국가보훈처) 66
   10)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67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68

1. 경제정책분야 70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70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95
3) 평가결과 종합 124
2. 사회복지정책분야 131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31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57
3) 평가결과 종합 187
3. 교육문화정책분야 194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94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15
3) 평가결과 종합 243
4. 외교안보정책분야 249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49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76
3) 평가결과 종합 308

제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14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316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320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326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28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32
1) 경제정책분야 332
2) 사회복지정책분야 335
3) 교육문화정책분야 338
4) 외교안보정책분야 340
참고문헌 343

부록: 2017년 평가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349

표 목차

[표 2-1] 경제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3
[표 2-2] 교육문화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4
[표 2-3] 사회복지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4
[표 2-4] 외교안보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25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분야 31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분야 32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분야 32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분야 33
[표 3-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42
[표 3-2]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 45
[표 3-3] 급성심장정지 생존률, 뇌기능 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45
[표 3-4]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50
[표 3-5] 5대 분야별 예산현황 51
[표 3-6] 전체 피해응답률 51
[표 3-7] 누리과정 지원 계획 52
[표 3-8] 원아 1인당 유치원 · 어린이집 연간 부담비용 비교 52
[표 3-9] 도시숲 정책 추진 현황 56
[표 3-10]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58
[표 3-11]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혁신학교 수 61
[표 3-12] 병 봉급 인상계획(2018-2022) 66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결과 320
[표 5-2] 정부신뢰도 교차분석결과 322
[표 5-3] 사회신뢰도 교차분석결과 323

그림 목차

[그림 2-1] 경제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26
[그림 2-2] 사회복지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27
[그림 2-3] 교육문화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28
[그림 2-4] 외교안보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30
[그림 3-1] '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53
[그림 3-2]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학부생, 등록금) 현황 54
[그림 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현황 55
[그림 3-4]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 자유학기활동 비교 57
[그림 3-5]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비교 57
[그림 3-6] 문화복지 증진 정책 추진체계 59
[그림 3-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인원 60
[그림 4-1] 경제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71
[그림 4-2] 최저임금 인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72
[그림 4-3] 최저임금 인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4
[그림 4-4] 가계부채 관리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74
[그림 4-5] 가계부채 관리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6
[그림 4-6] 주택시장 안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77
[그림 4-7] 주택시장 안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9

[그림 4-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79
[그림 4-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81
[그림 4-10]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81
[그림 4-11]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83
[그림 4-1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83
[그림 4-1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85
[그림 4-14] 통신비 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86
[그림 4-15] 통신비 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87
[그림 4-16]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88
[그림 4-17]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90
[그림 4-18]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90
[그림 4-1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92
[그림 4-20] 청년창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92
[그림 4-21] 청년창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94
[그림 4-22] 최저임금 인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95
[그림 4-23] 최저임금 인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98
[그림 4-24] 가계부채 관리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98
[그림 4-25] 가계부채 관리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1
[그림 4-26] 주택시장 안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01
[그림 4-27] 주택시장 안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4
[그림 4-2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04
[그림 4-2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6
[그림 4-30]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07
[그림 4-31]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09
[그림 4-3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0
[그림 4-3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12
[그림 4-34] 통신비 부담 경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2
[그림 4-35] 통신비 부담 경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15
[그림 4-36]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5
[그림 4-37]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17
[그림 4-38]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18
[그림 4-3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20
[그림 4-40] 청년창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20
[그림 4-41] 청년창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23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124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126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129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 131
[그림 4-46] 치매국가책임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32
[그림 4-47] 치매국가책임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34
[그림 4-48]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35
[그림 4-49]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37
[그림 4-50]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37
[그림 4-51]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39
[그림 4-52]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0
[그림 4-53]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2
[그림 4-54]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2
[그림 4-5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4
[그림 4-5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5
[그림 4-57]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7
[그림 4-5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7
[그림 4-5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49
[그림 4-60]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49
[그림 4-61]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2
[그림 4-62]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52
[그림 4-63]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4
[그림 4-64]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55
[그림 4-65]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56
[그림 4-66] 치매국가책임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57
[그림 4-67] 치매국가책임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0
[그림 4-68]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0
[그림 4-69]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3
[그림 4-70]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3
[그림 4-71]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5
[그림 4-72]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6
[그림 4-73]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68
[그림 4-74]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69
[그림 4-7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71
[그림 4-7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71
[그림 4-77]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74
[그림 4-7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75
[그림 4-7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77
[그림 4-80]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78
[그림 4-81]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80
[그림 4-82]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설문조사 결과: 평가항목별 ····· 180
[그림 4-83]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설문조사 결과: 평가영역별 ····· 183
[그림 4-84]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184
[그림 4-85]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186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187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189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192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 194
[그림 4-90]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95
[그림 4-91]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96
[그림 4-92]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97
[그림 4-93]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198
[그림 4-94] 누리과정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199
[그림 4-95] 누리과정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0
[그림 4-96]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1
[그림 4-97]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2
[그림 4-98]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3
[그림 4-99]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4
[그림 4-100]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5
[그림 4-101]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6
[그림 4-102]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7
[그림 4-103]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08

[그림 4-104]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09
[그림 4-105]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0
[그림 4-106] 문화복지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11
[그림 4-107]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2
[그림 4-108] 혁신학교 운영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13
[그림 4-109] 혁신학교 운영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14
[그림 4-110]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15
[그림 4-111]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18
[그림 4-112]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18
[그림 4-113]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0
[그림 4-114]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1
[그림 4-115]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3
[그림 4-116]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4
[그림 4-117]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6
[그림 4-118]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6
[그림 4-119]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29
[그림 4-120]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29
[그림 4-121]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31
[그림 4-12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32
[그림 4-123]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34
[그림 4-124]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35
[그림 4-125]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37
[그림 4-126]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37
[그림 4-127]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40
[그림 4-128]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40
[그림 4-129]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43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243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244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247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 249
[그림 4-134] 장병 인권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0
[그림 4-135] 장병 인권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52
[그림 4-136]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3
[그림 4-137]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55
[그림 4-13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5
[그림 4-13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57
[그림 4-140]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58
[그림 4-141]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0
[그림 4-14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0
[그림 4-14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2
[그림 4-14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3
[그림 4-145]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5
[그림 4-146]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5
[그림 4-14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68
[그림 4-14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68
[그림 4-149]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0
[그림 4-150]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71
[그림 4-151]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3
[그림 4-152]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 273
[그림 4-153]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 275
[그림 4-154]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77
[그림 4-155]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0
[그림 4-156]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0
[그림 4-157]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3
[그림 4-15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3
[그림 4-15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6
[그림 4-160]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6
[그림 4-161]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89
[그림 4-16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89
[그림 4-16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92
[그림 4-16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92
[그림 4-165]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95
[그림 4-166]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95
[그림 4-16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298
[그림 4-16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299
[그림 4-169]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01
[그림 4-170]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301
[그림 4-171]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04
[그림 4-172]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 304
[그림 4-173]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 307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 308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 309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 312
[그림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 사회신뢰 ····· 316
[그림 5-2]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 317
[그림 5-3] 4대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 318
[그림 5-4]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319
[그림 5-5]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319
[그림 6-1] 4대 정책분야별 종합평균 ····· 329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 330
[그림 6-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 331

01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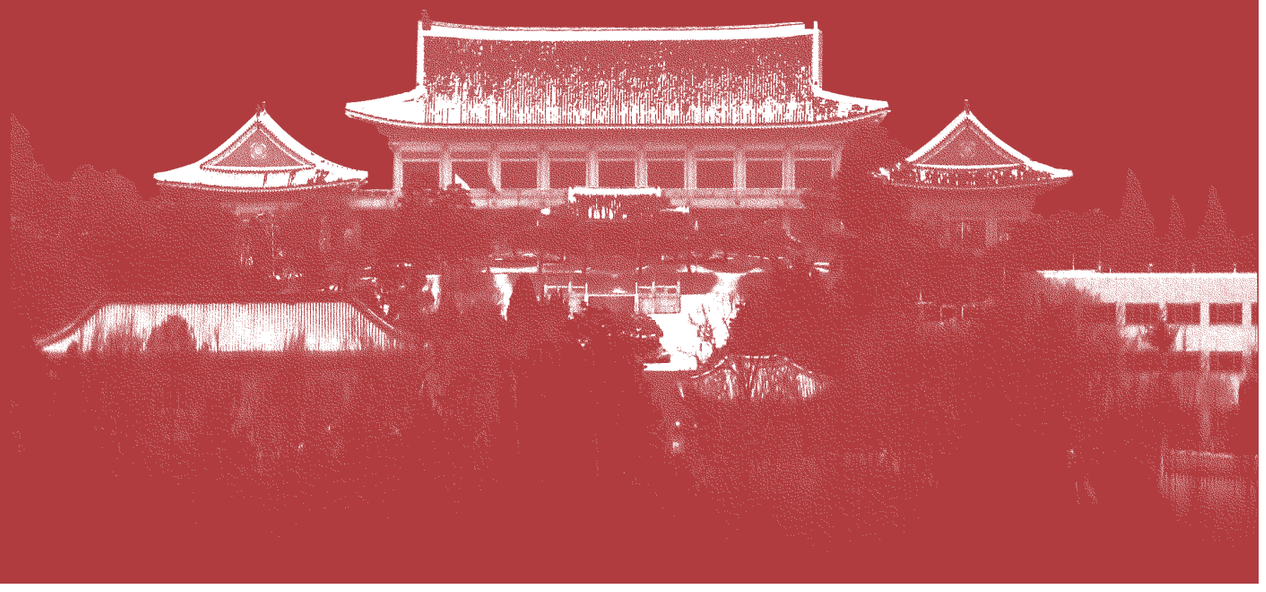
2017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올 3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중국과의 사드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과 관련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2017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1 | 연구 목적 014

2 | 연구 방법과 대상 016

정책평가 방법의 다양성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매년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항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2016년에는 4개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분야의 정책이 좋아졌다고 혹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2017년에는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여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연구 목적

2017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올 3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중국과의 사드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과 관련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2017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주요정책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책평가"를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2017년의 정책평가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가 정책평가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실시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엄정한 평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의문도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전 정부에서 수행하던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일 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정책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책평가에는 여러 다른 역할들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평가의 범위는 정책이 제안될 당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이론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정책의 방향과 집행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과정평가, 그리고 정책집행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비용편익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이 입안되면서 소통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환류를 통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역량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안되어 집행 중인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모두 정책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학연구소의 정책평가가 기존의 다른 평가와 다른 점은 조사의 엄정성과 조사의 범위, 그리고 일관성에 있다. 우선 정부학연구소는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문가들로 분야별 정책분석팀을 구성하고, 매년 각 분야에서 10개의 정책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총 40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평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일회성 평가와 이슈화에 정책평가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평가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일관적인 평가방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들은 향후 보다 깊은 분석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평가이론을 개발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정책평가"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매년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항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2016년에는 4개의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분야의 정책이 좋아졌다고 혹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2017년에는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여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7년 조사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정책평가의 점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통 정책집행 초기에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정책들은 정부 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거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표적 정책이다. 이러한 40개 정책들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평균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 정책들과의 대비효과로 인해 어떤 정책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에 포함된 각각의 정책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로 모두 각기 다른 정책 사이클에 놓여있는 정책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소의 정책평가는 단순 정책별 비교가 아닌 개별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보와 소통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례로 최근 일부 정책평가분야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책평가의 본래 목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과 대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 정책영역의 구분과 정책목록의 선정: 평가에 참여한 10명의 교수진들은 4개의 정책분야(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에서 대표되는 정책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여 취합하였다. 또한 각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은 중요한 정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차례 회의를 통해 누락된 정책을 추가하였다.

2. 정책평가 대상의 선정: 분야별 정책평가대상 선정은 1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참여교수들의 정성적 평가를 더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일반국민 600명(정책분야별 150명)과 정책전문가 80명(정책분야별 2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선정된 정책들의 영향력, 정책시행의 시급성을 물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연구진들이 검토하여 각 분야별 10개, 총 4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3.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는 앞서 1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40개의 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 2,000명(정책 분야별 500명), 정책전문가 200명(정책분야별 5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자들은 선택한 정책분야에서 9개의 세부항목의 질문에 답했으며, 응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40개 정책의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4. 전문가 정성평가와 최종 점수의 산출: 2차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분야별 연구진들은 9개의 세부분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결과(30%), 정책전문가 대상의 설문결과(35%), 그리고 연구진들의 정성평가결과(35%)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0개 정책의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2017년도 정책평가에는 2015년부터 조사된 국민의 삶에 대한 정책의 기여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설문 항목과 함께, 2016년도에 추가된 정책분야의 중요도 그리고 영역별 4개의 정책분야의 정책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올해 추가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는 항목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02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1 | 평가지표와 의미 020

2 |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022

3 |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3

본 연구진은 2014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투명성, 7) 정책의 책임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 년 간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책지지도, 삶의 질과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1. 평가지표와 의미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정책목표가 누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3) 복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목표 간 일관성이 있는지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수단으로서의 정책과 정책목표 간에 원인과 결과로서 뚜렷한 논리적 연계성이 존재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제시된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논리적 연결이 뚜렷하게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가)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대상 정책이 현재 거시적인 국가/사회의 목표(social goal)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성장이나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양극화해소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 수집 분석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원래 의도한 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해야 하고(재정적 실현가능성), 2)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타당해야 하며(행정적 실현가능성), 3) 정책의 법적근거가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적 실현가능성).

다) 정책의 형평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정책의 형평성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차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되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집단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혜택을 누려서도 안된다.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가)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과정(입안 및 집행)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이란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하고, 2) 정책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3)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궤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가)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대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혹은 정책이 고유의 목표뿐 아니라 연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반영하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5) 기타 영역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평가의 4가지 영역 이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규모의 적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등에 대한 질문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요인의 수준에 따라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병

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7년 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는 정책평가를 주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효과성 개념, 즉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ingham, 2002).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과관계의 틀(정책개입 → 정책효과)에서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효과성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 선정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책평가 관련 문헌에서 정책의 결과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과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된 좋은 정책의 기준은 구조와 내용,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학계의 평가 기준이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는 이미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 밑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자체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좋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의도한 결과를 가져 온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014년 평가에서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투명성, 7) 정책의 책임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평가에서도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 간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9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에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책지지도, 삶의 질과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체감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본 연구진은 평가의 대상이 될 정책들을 선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 대상 정책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샘플링(sampling)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 '정책'의 조작적 정의(定義)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 목록의 구성이 결정되므로 예컨대 근거 법령의 존재(신규 입법 혹은 개정), 예산 편성의 단위(項 혹은 目), 관할권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은 '정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과제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정책의 평가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정부에 걸쳐 있는 연속적 정책도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동일 정부에서도 상이한(혹은 상충적인) 복수의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평가 대상이 될 정책의 예비 선정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 동아일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망라적 목록(exhaustive list)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부처는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정책의 목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는 이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의 해당 부처 출입기자가 검토의견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마련된 망라적 목록을 가지고 연구진 전문가 집단 검토 FGD(Focused Group Discussion)를 통해 취합된 정책들 중에 영역 별로 다음과 같이 각 20개의 정책을 선별하였다. 전문가 집단 검토 시 고려된 요인들은 정책 목표 및 추진일정의 유무, 소요 예산의 규모, 전담 인원의 크기, 근거 법령의 존부(存否) 등이다.

[표 2-1] 경제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부담 경감
4		국세청	권리보호요청제도
5		국토교통부	신산업 투자 확대
6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7		금융위원회	조선해운구조조정
8		금융위원회	핀테크 육성
9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0		기획재정부	신산업/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
12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1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육성
14		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15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6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지원
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
19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측정 및 서비스
20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표 2-2] 교육문화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여건 조성
2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3		교육부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대학입학전형료 투명성 제고
4		교육부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		교육부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학사 제도 개선
6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7		교육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
8		교육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9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10		교육부	혁신학교 운영·확대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12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전2018
14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스토리 등 우수 원천 콘텐츠 발굴
15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16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주간 등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17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18		산림청	도시숲 조성
19		소방청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소방안전체험』 습관화 추진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표 2-3] 사회복지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실종아동 신속 발견
2		경찰청	치매노인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3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4		고용노동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5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6		기상청	황사특보와 미세먼지경보체계 통합
7		대검찰청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8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또는 국적회복) 제도
9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10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12		소방청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1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5	교육문화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16		인사혁신처	공직 내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 채용(균형인사)
17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18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지원
19		환경부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20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

[표 2-4] 외교안보정책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가보훈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2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3		국방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4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5		국방부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6		국방부	장병 인권보호 강화
7		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제도 개선을 통한 첨단무기 국내개발
8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9		병무청	병역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
1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제도운영의 공익성 강화
11		외교부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12		외교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13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14		외교부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인도적 지원 추진
15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16		외교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17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18		통일부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19		통일부	평화와 통일공감대 확산 제고
20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한 경제통일 구현

2) 평가대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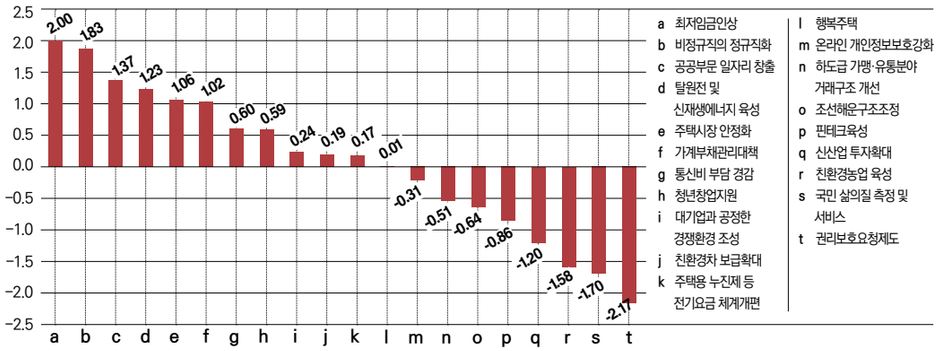
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

위에서 언급한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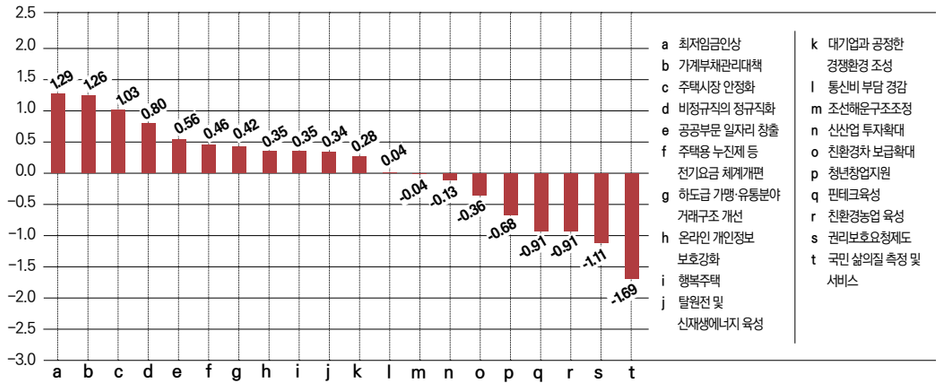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하고, 이를 다시 가중평균하여(전문가 60%, 일반인 40%) 점수화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20개 정책의 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2-1] 경제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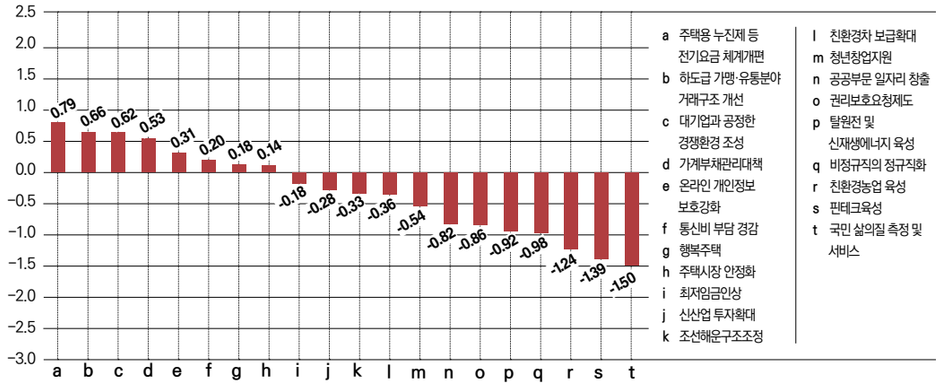
경제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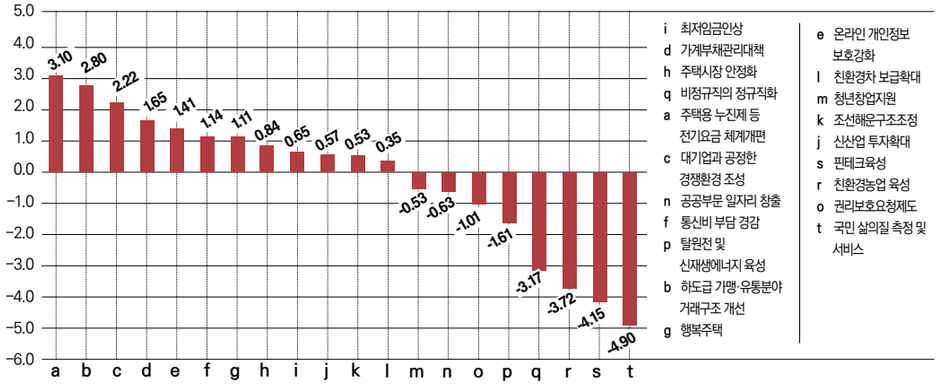
경제분야 : 영향력



경제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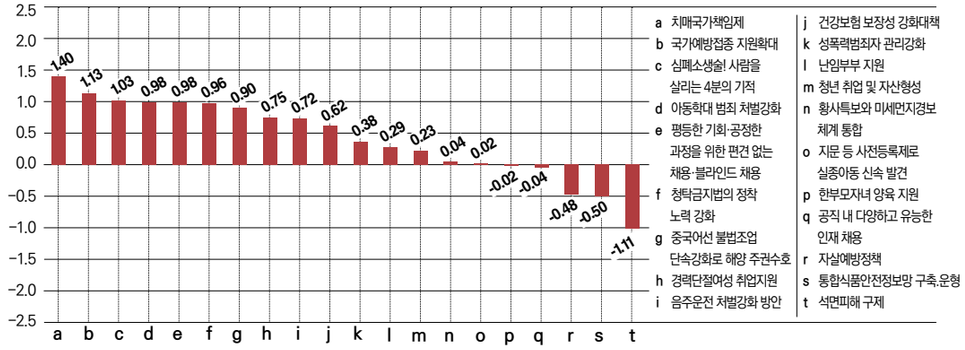


경제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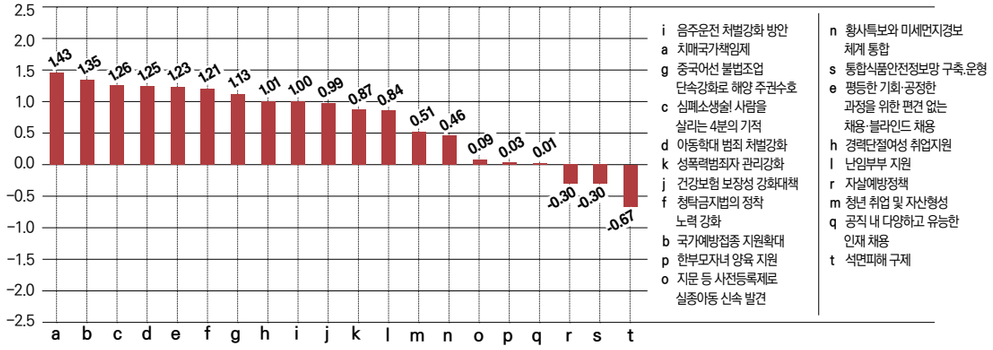


[그림 2-2] 사회복지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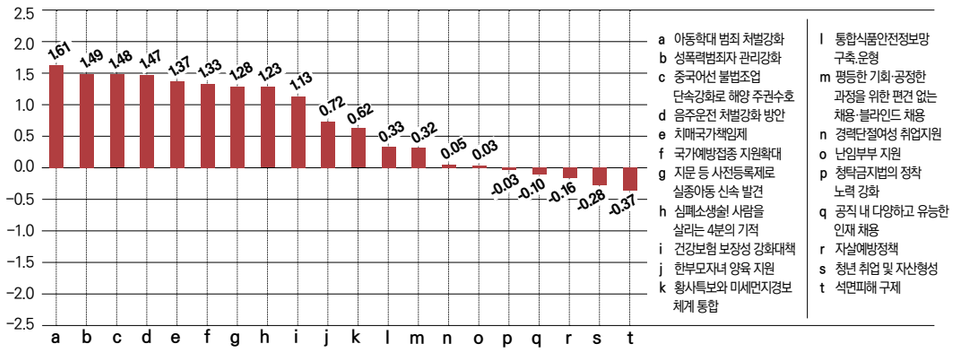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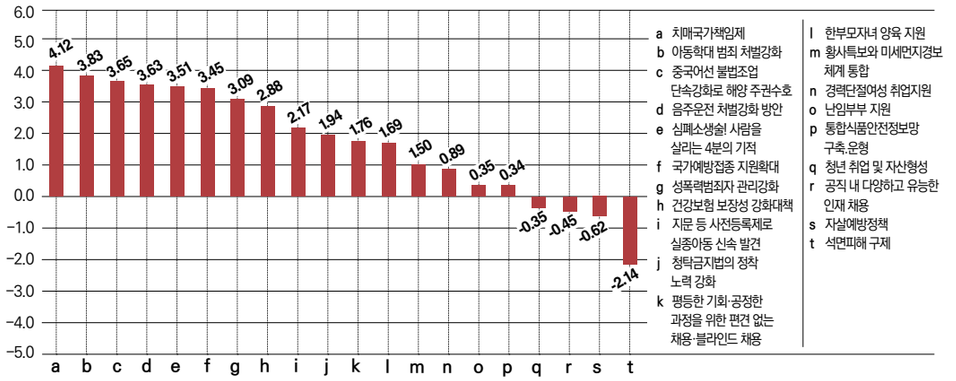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 영향력



사회복지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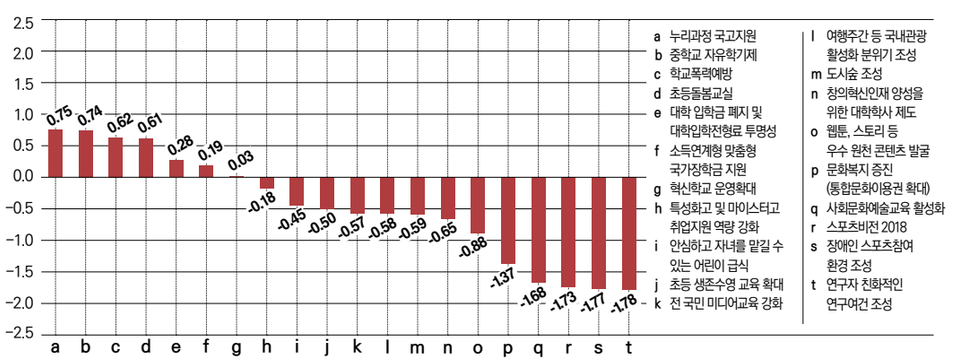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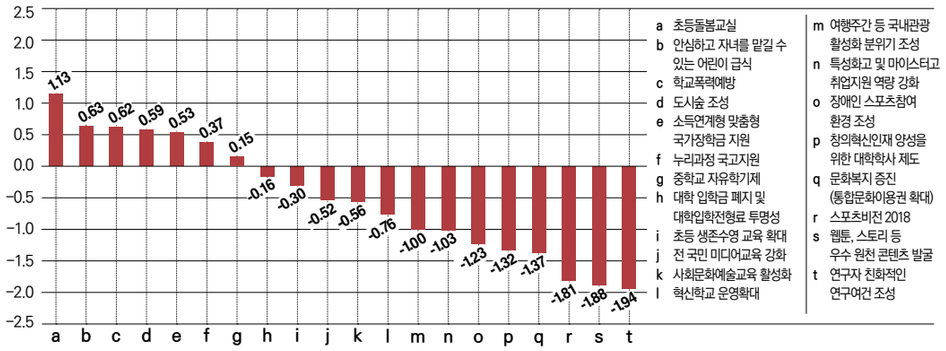


[그림 2-3] 교육문화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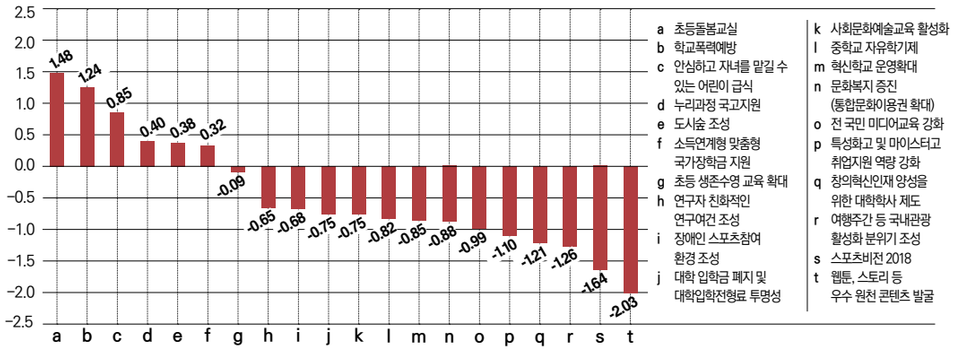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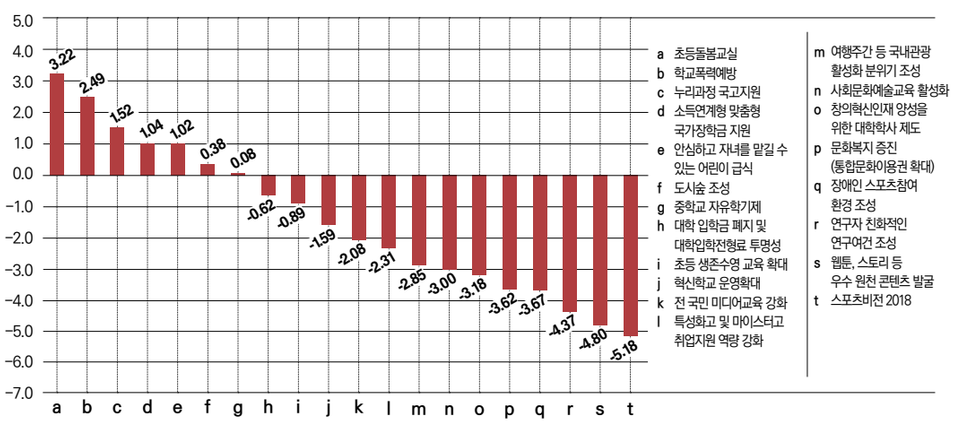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 : 영향력



교육문화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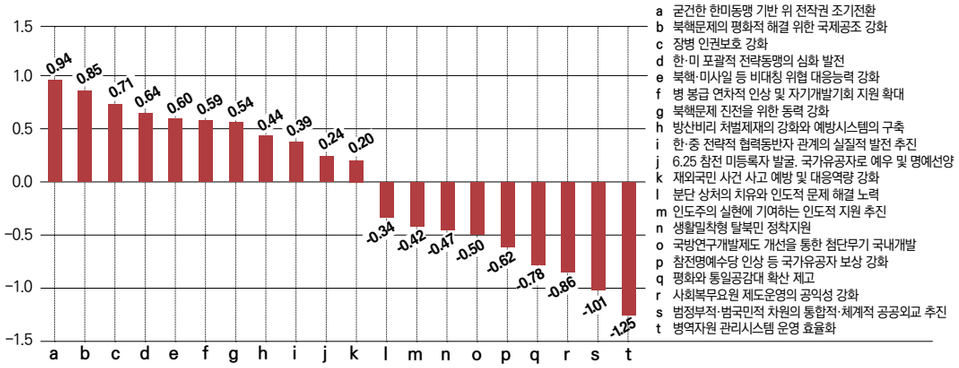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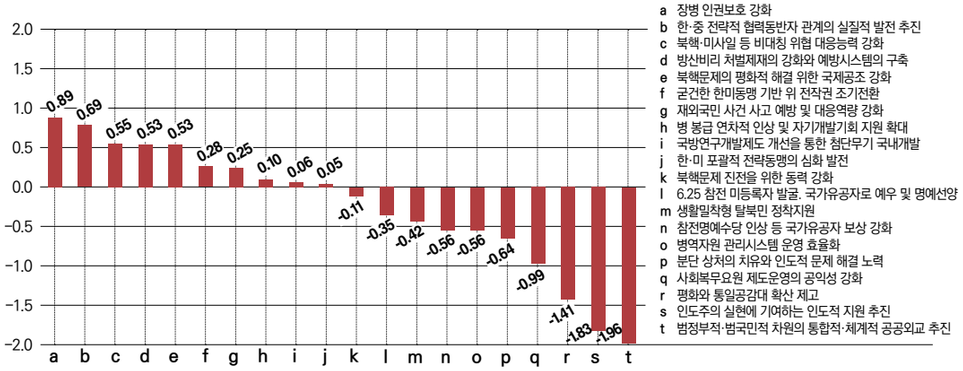


[그림 2-4] 외교안보정책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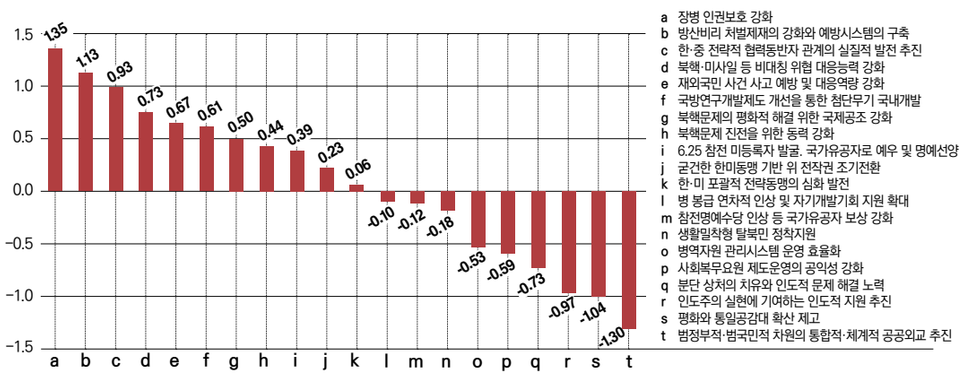
외교안보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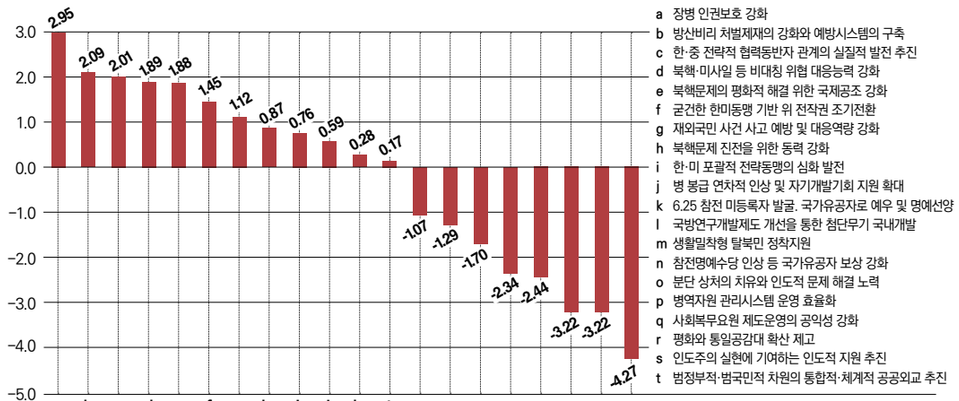
외교안보분야 : 영향력



외교안보분야 : 우선시행 여부



외교안보분야 : 합산점수



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결과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 분야 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정책 10개의 목록과 그 선정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다.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2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대책
3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4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6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부담 경감
8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9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10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지원

선정 근거

경제팀의 최종리스트는 1차 설문조사 결과중 상위 10개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설문결과 상위 10개 정책 중 유일하게 제외된 정책은 경제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며,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의 주요 대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으로 대체되었다.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2		대검찰청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3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4		소방청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5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6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8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9		고용노동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10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선정 근거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최종 평가대상 정책을 10개를 선정하는 일차 기준은 1차 설문조사 결과였다. 순서대로 상위 10개 정책을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10위권 밖의 정책 가운데 일부를 포함시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이 있었다. 그 결과 10위권 안의 정책 중 '음주운전처벌강화 방안'과 '지문등 사전등록제로 실종아동 신속발견' 정책 두 개를 제외하였다. 앞의 정책을 배제한 이유는 대검찰청 선정 업무 가운데 후순위 업무이며, 다른 업무와는 달리 타부처(경찰청)와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라 대검찰청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2016년의 교통사고사망자 감소정책(경찰청)을 통해 유사한 정책을 평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뒤의 정책을 배제한 이유는 이미 선정된 10개의 정책 가운데 인지도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이며, 영향력의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11위였던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과 12위였던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평가대상 정책으로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순위권 밖에 있었는데, 사회복지분야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두 부처의 정책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정책 하나씩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과 연관된 정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며,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이라 2016년도의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다.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2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3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4		교육부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6		산림청	도시숲 조성
7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8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10		교육부	혁신학교 운영 확대

선정 근거

교육문화 평가팀은 1차 평가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정책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대상을 선정하였다. 다만 교육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대학입학전형료 투명성 제고 정책은 담당부처에서 제출하였으나 2차 평가를 앞두고 시행이 지체되어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 정책도 다른 정책에 비해 사회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정책의 사회적 효과가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방부	장병 인권보호 강화
2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3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4		국방부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5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6		국방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7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8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9		국가보훈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10		통일부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선정 근거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최종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 1차 평가 결과, 즉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위 10개 정책을 선정하였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국가의 안전과 존립 및 국익의 신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들이 다수이며, 외교부와 국방부 정책 간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차 평가 대상이었던 외교부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정책과 국방부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정책 양자를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고, 국방부 정책만을 선정하였다. 한미관계는 외교부 정책 중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 중 하나이나 지난 3년간의 평가에서 항상 평가대상이 되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점 역시 이번 평가의 배제사유이다. 또한 외교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정책을 고루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의 정책은 설문조사 결과 11위에 해당하였지만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정책들의 경우 1위부터 10위까지의 정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03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평가대상 정책 분야 : 경제정책분야 / 사회복지정책분야 / 교육문화정책분야 / 외교안보정책분야
분야별 각 10개씩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

1 | 경제정책분야 036
2 | 사회복지정책분야 041
3 | 교육문화정책분야 049
4 | 외교안보정책분야 062

1. 경제정책분야

1) 최저임금인상(고용노동부)
2) 가계부채관리대책(금융위원회)
3)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5)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7)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10)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4)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8)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9)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10)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초등돌봄교실(교육부)
2) 학교폭력예방(교육부)
3)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4)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5)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6) 도시숲 조성(산림청)
7)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8)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9)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10) 혁신학교 운영 확대(교육부)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장병 인권보호 강화(국방부)
2)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방위사업청)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외교부)
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국방부)
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외교부)
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국방부)
9)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국가보훈처)
10)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1. 경제정책분야

1) 최저임금 인상(고용노동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또한 마련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까지 진행되었으며 11차 회의 때 재직위원 27명 전원이 출석하여 근로자안 15표, 사용자안 12표로 근로자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16.4%의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9일 3조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완화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각 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노사가 제출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를 위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정책은 국정과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록 시장 논리 상 강제로 1만원을 달성할 수는 없어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해당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가계부채 관리대책(금융위원회)

정부는 10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201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후속조치의 연장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3대 목표 및 7개 핵심과제」를 설정한 것이며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8월 2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금융규제 관련 대책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및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정책목표를 위해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로 연체 전 채무조정이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과 자영업자 대상 별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핵심과제들로 삼았다. 또한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정책목표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 유도하고 새로운 DTI 도입 및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관리 및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구조적 대응' 정책목표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용 절감 등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및 부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 공적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강화 및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및 서민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8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LTV·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등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정비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여 택지 확보 및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및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등의 세부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후 11월 29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계획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민간분양·택지확보 측면에서 2020년까지 총 공적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19.4조 원, 연평균 23.9조 원이 소요되어 2017년 대비 연평균 4.9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하여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구조를 다양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2017.11.29. 관계부처 합동 보도 참고자료). 아울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현재의 심각한 채용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케인지언 경제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본 정책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그 적용범위를 넓히는 2단계,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기관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정책의 골자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중 7만 4천 명, 2020년까지 20만 5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자치단체 평가 시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력을 중요지표로 삼고, 고용노동부 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설치, 공공부문 전담 감독반 및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등의 운영을 통해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5)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본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경제행위를 규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 중에 적발되지 않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시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 이는 현행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본 정책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에 맞추어 공무원을 17만 4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통해 일자리 확충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궁극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 일자리는 우선적으로 보육, 요양, 보건 등 시급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분야부터 시작하여(약 17만 명) 이후 다양한 사회서비스(문화, 체육, 환경)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의 경우 현장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간접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구체적인 시행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1단계에서는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작하고, 2단계에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간 위탁기관으로까지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 제고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직간접적으로 사적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7)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17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저소득층·노인(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통신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함으로써 알뜰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제반 환경의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장을 투명하게 조성하여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가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행위를 조사 및 시정하겠다는 대책 또한 수립하였다. 이러한 대책의 성과는 통계청의 물가지수 내 생활생계비 중 가구별 통신비 가계지출 수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성과지표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사업자·단말기제조사·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 7명, 정부에서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11월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협의회는 약 100여 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회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필요시 브리핑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통해 통신비 절감대책 첫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관련 제도 개선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본 정책은 원자력 발전 중심의 현행 에너지 생산 구조에서 탈피하여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지 등을 통한 단계적 원전 감축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여 탈원전에 따른 감소분을 충당하고자 한다.

한편 원전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원전관련 산업 및 원전유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보완대책 역시 강구되고 있다. 먼저 원전관련 산업을 위한 대책으로서 노후원전 해체 작업 과정에서 원전해체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해외의 원전해체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역할을 원전의 안전운영 및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원전건설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원전수출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동남권 원전유치지역에 원전해체 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본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구조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맹분야와 유통분야에서 건전한 공정거래구조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맹분야의 경우, 본 정책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 집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개선을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보 공개의 강화, 가맹본부와의 협상과정에서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의 도입, 그리고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처해있는 가맹점주의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법집행 강화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더 효율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처분, 그리고 분쟁조정업무의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가맹분야와 관련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포함된다. 가맹분야와 마찬가지로 유통분야 역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정책은 이렇듯 '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각 업계 내 행위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10)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이전 행정부부터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청년 대상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새 행정부는 정부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7년 8월 4일 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청년창업 지원사업들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있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며 내용 또한 재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도 정책수요에 맞춰 주요 청년창업 지원사업들의 모집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확대 및 39세 이하 청년의 창업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상의 청년 (예비)창업자들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ICT 등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노인(7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5년 5.5%에서 2030년 9.7%, 2050년 2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은 9.6%, 61.2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2050년 치매인구는 271만 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9년간(2006년~20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67.6만 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은 63.1만 명(전체 노인의 9.9%)으로 조사된다.

2014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환자는 443천명(65세 이상 416천명, 65세 미만 27천명)이고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제외)는 2014년 1조 6,142억원, 1인당 진료비는 364만원 수준이다.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435천명) 중 치매환자는 236천명(이용자의 54.3%)이고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고령화와 치매비용의 증가 추세 속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재정적·육체적·정신적 고통도 더불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차·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의 국가적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치매 예방으로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주기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어떤 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모호하며, 치매와 관련된 돌봄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예방과 초기대응체계, 치매가족 지원제도와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목표아래, 2017년 9월 18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올해 12월까지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둘째, 보다 많은 치매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제도가 개선되고,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다. 셋째,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나 MRI 같은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넷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과 치매노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 조기진단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2)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대검찰청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는 정부의 2016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울주·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에 의해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쟁점이 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정부개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의결,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2014년 2월 정부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아래의 표는 특례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표 3-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학대 범죄접수 현황(건수)	459	870	2691	4580	3,001
아동학대 기소건수 현황(건수)	144	244	462	679	446
아동학대 기소율 현황(%)	31	28	17	14	14

참고: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출처: 경기중앙신문, 2017.10.6.)

이러한 종합대책 이후에도 심각한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으며, 2016년 3월 정부는 다시 한 번 정부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대책은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동안 가정 내 훈육으로 여겨지기 쉬웠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며 신고이후 체계적인 대응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은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 처리기준을 엄정하게 적용,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건처리기준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인죄로 볼 수 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의 구형을 검토한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행위가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가중취급하고 친권자 기타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도 가중취급을 정하여 보호관계를 이용한 아동학대행위의 처벌을 강화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에 따라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범정에 따라 단계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즉, 범죄행위에 사용한 도구, 사회적 비난가능성, 성적 학대행위, 상해발생, 정신적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가중취급 또는 구속수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유기 또는 방임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을 구형에 반영한다. 경제적 궁핍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범행 후 피해아동과의 합의에 관해서 부적절한 피해아동접촉 또는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정책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주권을 지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곧 해양자원의 보호와 우리어민의 어획량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서해의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해경의 단속과 이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간의 마찰이 격화되며 해경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7일에는 불법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단속정을 중국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우리 해경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용화기 무기사용 방침을 선포하고 불법 중국 어선의 퇴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정책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노력의 일환으로서, 2017년 4월에는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불법조업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경비단(서특단)을 창단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배치하였다. 단속업무 전담기관은 NLL해역 성어기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뒤 북한 측으로 도망가버리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 민정경찰을 운영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불법 어선 퇴거작전을 실시하였다. 합법어선과 불법어선을 분리대응하여, 허가받지 않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불법어선에 대하여 선장의 구속, 담보금 미납선박의 억류, 담보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홍보전단지, 물품제공으로 준법조업을 유도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경의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해경은 유관기관(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등)과 함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으로서 협조회의(2회) 및 합동단속(4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중국정부의 협력 없이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기에, 중국정부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해수부 주관),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해수부 주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외교부 주관) 등을 통하여 자국어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였다.

4)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응급처치방법이다. 급성 심장정지는 갑자기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대부분 즉각적으로 의식이 소실되는 상태를 유발하며,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3만 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4년 12.9%, 2015년 14.1%, 2016년 16.8%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미국(39.9%, 2005), 일본(36%, 200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약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환자가 소생하더라도 뇌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장기적 의료비 상승은 사회경제적인 비용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은 병원 외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생존율 향상과 후유장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 대한 최초 목격자의 신고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심폐소생술 대국민 홍보 및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은 소방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말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표는 병원 외 상황에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퇴원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 210개 소방서 및 6개 소방체험관의 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4월 26일에는 『제1회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책은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지난 5년간 119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된 금성심장정지 환자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생존률과 회복률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환자(건)	27,823	29,356	30,309	30,771	29,832

출처: 급성심장정지조사(질병관리본부)

[표 3-3] 급성심장정지 생존률, 뇌기능 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주요 결과	2012	2013	2014	2015	2016
생존율(%)	4.4	4.8	4.8	6.3	7.6
뇌기능 회복률(%)	1.8	2.3	2.7	3.6	4.2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6.9	9.1	12.9	14.1	16.8

출처: 급성심장정지조사 (질병관리본부)

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의 감염병 퇴치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갖는다. 1954년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예방접종정책은 최근 들어 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은 2009년 백신 9종에서 2012년 10종, 2013년 11종, 2014년 13종, 2015년 14종, 2016년 16종, 2017년 17종으로 매년 국가지원 대상백신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모든 예방 접종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에는 인플루엔자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의 국가지원 대상연령을 6~11개월에서 6~59개월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노인(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시행되었을 당시의 불편이 경감되었다.

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미 구금형이 끝난 성폭력범죄자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세부적으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2000년도부터 시행, 2008년부터 강화), 전자감독제도(2008년부터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제도(2011년부터 시행)로 구분된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되며, 전자감독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위한 보호관찰제도와도 연계되는 성폭력범죄자의 관리정책의 핵심이 되는 정책이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성범죄자 관리 제도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2008년도부터 신상정보의 등록내용 및 공개방식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사진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된다.

'성범죄자 전자감독'은 인공위성과 전자장치 등 첨단 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24시간 현장의 밀착감독을 위해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을 전국에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로 피치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다.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2017년 8월 9일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재정(5년간 30조6천억 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한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2014년 기준), 이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고,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정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5년 단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10여년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4%로 머물고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였다면,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본 정책은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2017~2022년)하겠다는 목적이여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본 정책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2017~2022년)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둘째,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히 폐지된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본 정책을 통해서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되고,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도 10만 병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셋째,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넷째,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또한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섯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8)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법 적용 기준에 대한 혼란이나 일부 업종의 반발 등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요청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강화 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입을 말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주로 법령을 현실에서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기관 내에 청탁금지해석과를 설치하여 청탁금지법의 법령해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기관 외부 해석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정책을 포함한다. 한편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워크숍을 상·하반기별로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서 및 직종별 매뉴얼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2017년 9월에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를 초청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현재도 국민과 법적용대상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한 해동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각급기관에 강사와 교육자료의 지원, 법 내용 바로알기 사업 및 언론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 등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9)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 요구가 금지되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예

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7년 7월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원천 배제하였으며 응시자 전원에서 필기시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검증을 강화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입사지원서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직무관련성이 낮은 어학성적 등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332개) 및 지방공기업(149개)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블라인드가 의무화되었고,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 시험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에서도 표준화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권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전문가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으며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조건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학력 및 지역에 기초한 차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이 배제되고 채용이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됨으로써, 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현재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외 개인이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2년에는 모자가정만이 아니라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명칭 역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2006년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고, 공동생활과정을 설치하여 독립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을 보호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어 왔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조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를 근거로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양육비 월 12만원을 지원(조손가족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자녀 대상 월 5만원 추가 지원)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대비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월 17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학비(입학금·수업료 실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운영 및 영구임대주택 제공, 다가구 매입주택 등에 대한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이 있다. 또한 권역별로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하면서,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혼을 앞둔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한 가족 회복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 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초등돌봄교실(교육부)

2017년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년별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 강화,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7c1).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한부모 · 조손 가정의 증가, 양육 · 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과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구분된다.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의 학생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22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 총 5,998개 학교가 돌봄교실을 개설하여 238,480명의 학생이 이용하였고, 1,600개 학교는 저녁돌봄을 제공하여 12,388명의 학생이 이용하였다(교육부 2017c1). 2017년에는 교실당 운영비를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업일의 운영 시간도 조정하였다. 매일 1개 이상의 특기 · 적성프로그램과 더불어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의 틈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00실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전용교실 전환 및 노후 시설 보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교육기부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연계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가 제공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방문하는 수고 없이 온라인으로 미리 다양한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구분	2016년	2017년
실당운영비	• 오후 : 30백	• 오후 : 40백(10백만원 증액)
운영시간	•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연장·조정 운영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오전부터 운영 권장
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 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프로그램 지속 강화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다양한 돌봄인력을 활용하여 틈새 프로그램 운영
돌봄전담사	• 원격교육 운영 지원 • 대체인력풀 구축 권장	• 시도별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돌봄전담사 대상 집합·원격교육 및 대체인력풀 구축·활용
시설	• 시설 증축	• 시도의 수요 반영하여 시설 증축(약 200실) • 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 지원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구축 및 기존 노후 시설 보수
지역연계	• 학교 및 지역돌봄기관간 협의체 운영 강화 • 자원봉사 인력 등 활용	• 저녁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 연계체제 강화 • 대학생, 퇴직교원, 학부모 등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확대
홍보	•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SNS 등 활용	• 정책 소통 기회 마련, 돌봄교실 우수사례 확산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교원 대상 정책 인식 개선

출처: 교육부(2017c1). 보도자료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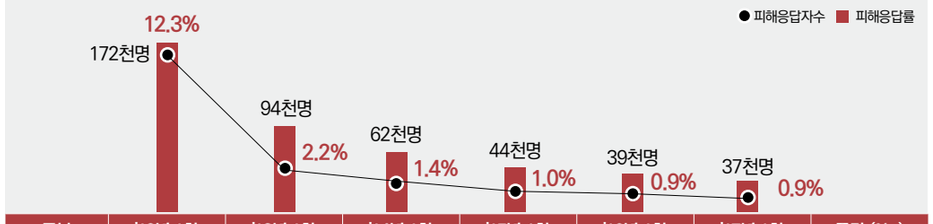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학교 폭력 및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과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깨동무학교'가 운영되어왔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문화의 전반적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왔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했으며,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치유는 물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전 사회적 대응시스템인 Wee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 지원을 강화하였다. [표 3-5]에서 보듯이 교육부는 이러한 5대분야별 세부정책을 중심으로 2017년에는 2016년과 비교하여 총계 35,8764백만원에서 345,078백만원으로 3.8%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인성교육 중심 학교 폭력 예방 강화와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에 각각 1300억원이 넘는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에도 700억이 넘는 예산을 할당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대책 추진 및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 확대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2017)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2012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6]을 보면, 전년 대비 동일한 비율이었지만 2000명이 감소하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표 3-5] 5대 분야별 예산현황

5대 분야	구분	2016	2017	증감	비고(%)
1. 인성교육 중심 학교 폭력 예방 강화	국고	43,517	42,459	△ 1,058	△ 2.4
	지방비(특별교부금)	94,438	90,172	△ 4,266	△ 4.5
	소계	137,955	132,631	△ 5,324	△ 3.9
2.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국고	8,312	7,684	△ 628	△ 7.6
	지방비(특별교부금)	124,165	113,018	△ 11,147	△ 9.0
	소계	132,477	120,702	△ 11,775	△ 8.9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국고	274	274	0	0.0
	지방비(특별교부금)	8,976	6,146	△ 2,830	△ 31.5
	소계	9,250	6,420	△ 2,830	△30.6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국고	15,541	17,219	1,678	10.8
	지방비(특별교부금)	57,847	56,911	△ 936	△ 1.6
	소계	73,388	74,130	742	1.0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국고	5,694	11,195	5,501	96,6
	지방비(특별교부금)	0	0	0	0.0
	소계	5,694	11,195	5,501	96.6
총계		358,764	345,078	△ 13,686	△ 3.8

[표 3-6] 전체 피해응답률



구분	'12년 1차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17년 1차	증감 (%p)
응답률(%)	12.3	2.2	1.4	1.0	0.9	0.9	0.0
명수(천명)	172	94	62	44	39	37	-2

출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2017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3)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2017년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 정부가 시행하고 있었던 3-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한다고 천명하였다(교육부 2017a, 2017e). 누리과정은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부터 양질의 표준교육을 제공하고, 만 3~5세 유아동에게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누리과정의 지원 대상은 2011년에 소득하위 70%로 국한되었으나 2013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월 지원금도 2013년까지 연령별로 차이를 두었으나 2014년부터 차등을 없앴으며, 2013년 22만원에서 2016년 29만원으로 인상하였다(교육부 2017g). 중앙정부는 2015년에 총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2.1조원, 유치원 1.9조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였고 추경으로 추가 지원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7a). 반면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까지 교육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17년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지원분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유치원은 기존과 같이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총 3조 8,927억 원이 편성되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조 586억 원의 국고지원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1조 8,341억 원의 지방교부금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7a, 2017c4).

[표 3-7] 누리과정 지원 계획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017년	3조 9,409(1,284천명)
	2018년	3조 8,927억원(1,275천명)
유아교육비 지원(유치원)	2017년	1조 8,534(688천명)
	2018년	1조 8,341억원(683천명)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2017년	2조 875(596천명)
	2018년	2조 586억원(592천명)

출처: 교육부(2017). 보도자료,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표 3-8] 원아 1인당 유치원·어린이집 연간 부담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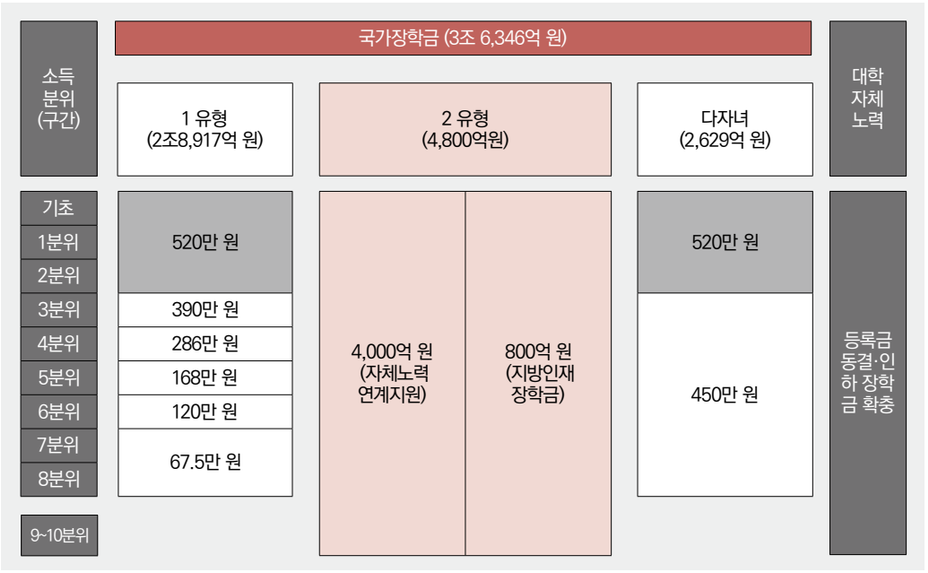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학비·보육료	1,457,376원	6,086,280원	-	4,114,476원
학부모부담*	137,376원	2,606,280원	0원	634,476원
가장 높은 지역	(경기) 430,692원	(서울) 3,720,756원	0원	(서울) 752,004원
가장 낮은 지역	(제주) 0원	(제주) 1,143,072원	0원	(경북) 501,996원

*학부모부담 = 학비·보육료·정부지원금(국공립유치원 121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348만원)
출처: 교육부(2017f).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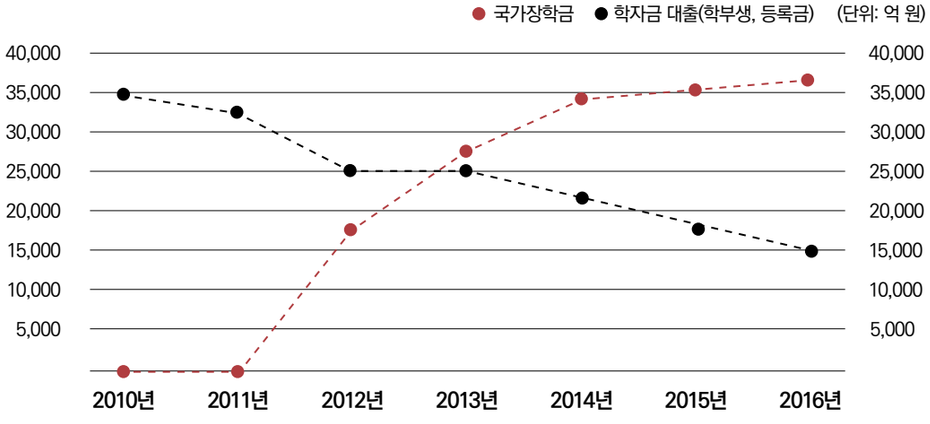
4)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교육부는 공평한 고등교육기회의 제공 및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정책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이 정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왔고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해당 정책은 세개의 유형으로 지원되어 왔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2017년 한해동안 I 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을 통해 소득 8분위(구간)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II 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지방 인재 장학금)을 통해서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셋째자녀 이상)의 경우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소득 8분위 이하의 가정에 대학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아래의 그림 3-2를 보면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2012년 이후로 국가장학금 총액이 증가('12년 1조 7,500억원 -> '16년 3조 6,545억원)하고 등록금 대출(학부생)은 '11년 약 2조원에서 '16년 9천 1백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11년 대비 절반수준이 되었다. 또한 34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국가장학금 효과성분석 결과,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 이상 경감(국공립 8분위, 사립 5분위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 비교하여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수혜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1.4시간), 근로시간(아르바이트) 감소(2시간), 일반 휴학률 하락(2.9%), 학업성적 향상(2.6점)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3-1] '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그림 3-2]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학부생, 등록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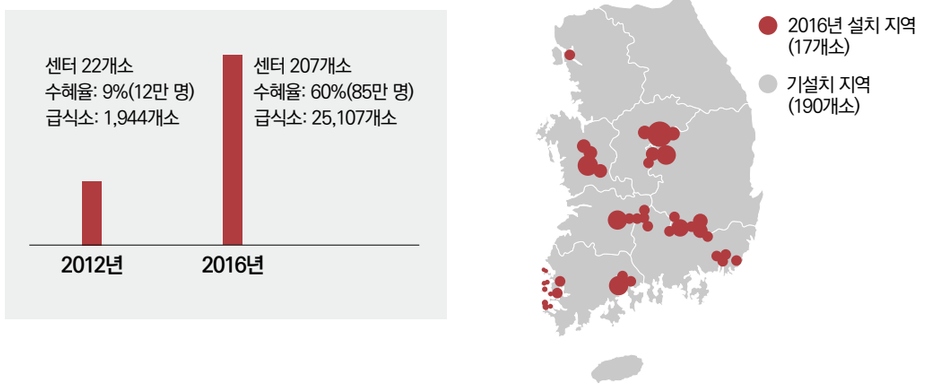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정보, 2017, 2016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교육부)

5)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5개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5대 영역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a, 2017a).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및 외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행동공간 밀착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며,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다.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상향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식품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영향성분을 통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하였다.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맞춤형 영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식생활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어린이 급식 안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2016년에 중앙 1개소와 지역 207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00미만 소규모 급식소 45,267개소 어린이 140만 명 중에서 25,107개소 어린이 85만명(전체의 60%)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식약처 2017d).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센터를 증설하고 580개 급식소를 추가 지원하여 약 98만명의 어린이(전체의 70%)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식약처 2017a).

[그림 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7a). 2017년 업무계획, p. 83.

6) 도시숲 조성(산림청)

산림청은 행복한 도시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 녹색공간의 확대와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통한 도시숲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도시숲은 기후완화 기능, 소음감소와 대기정화기능, 건강치유기능, 휴식과 정서함양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 기능을 한다. 이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아래의 [표 3-9]에 따르면 2017년에는 1,322억원을 투자하여 약 300ha 넘는 도시숲 191개소와 함께 명상숲 81개소 그리고 가로수 553km를 조성하였다. 또한 폐철도와 도시재생지역 등에서 도시숲 부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폭염 피해의 저감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하여 왔다. 도시녹화운동을 통한 도시숲 확대를 추진하여 민간 거버넌스(도시숲 트러스트)를 확대하여 왔으며 도시숲사랑 캠페인을 개최하여 도시숲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교통약자 및 노약자 등에게도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확대에 따라 대기정화, 기후조절, 정서함양 등의 다양한 도시숲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 여건은 삶의 만족도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숲세권'같이 주변 숲의 유무가 거주지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17년도 과제 추진을 통해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가로수 조성으로 도시 내·외곽을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상(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을 통해 산림문화자산 육성,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범국민적 도시숲 조성 참여욕구 충족 및 기업-정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표 3-9] 도시숲 정책 추진 현황

1.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으로 녹색공간 확대	
자투리 공간에 녹색쌈지숲 조성	('16까지) 1,953ha → ('17) 63ha
생활환경의 보호·유지를 위한 생활환경숲	('16까지) 326ha → ('17) 72ha
접근성이양호하고이용도가높은산림공원조성	('16까지) 1,901ha →('17) 195ha
2.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확보	
가로수 조성	('16까지) 41,130km → ('17) 553km
3. 명상(학교)숲 조성하여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및 휴식(쉼터)공간 제공	
명상숲 조성	('16까지) 1,574개소 → ('17) 81개소
4. 나라꽃 무궁화 저변 확대를 위한 무궁화동산 조성 및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무궁화동산 조성	('16까지) 90개소 → ('17) 17개소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17) 중앙행사 1회, 지역행사 4회
5. 경관숲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산림경관숲 조성	('16까지) 10개소 → ('17) 31개소
6. 훼손 소멸되고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	
전통마을숲 복원	('16까지) 118개소 → ('17) 26개소

출처: 산림청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7)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교육부는 학교혁신의 확산, 학생 진로탐색 여건 체계화, 진로체험활동 내실화 등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7e).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일정 기간을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유연하게 교과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42개를 지정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811개교, 2015년 2,551개교), 2016년 3,213개교(전체 중학교)로 확대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a). 단위 학교는 자율적으로 1~2학년 중의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면서 학기당 170시간(주당 10시간)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2017c5). 이를 위해 2016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80개교를 지정하였고 2017년에는 이를 406개교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단위 학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의 자유학기(자유학년제)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7c8).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1년간 4개의 자유학기 활동 영역을 골고루 편성하고, 연간 최소 221시간의 자율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자유학기 확대 및 확산을 위해 자율학기 운영학교에는 연간 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에는 7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는 연간 운영비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내실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을 설치하였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에서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3-4]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 자유학기활동 비교

자유학기	연계학기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 진로탐색 활동	• 주제선택 중점연계 활동 • 예술·체육 중점연계 활동 • 동아리 중점연계 활동 • 진로탐색 중점연계 활동

출처: 교육부(2017c8).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그림 3-5]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비교

구분	자유학기(현행)	자유학년(개선 후)
학기 설정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1개 학기만 자유학기로 설정	1-1학기와 1-2학기 2개 학기를 모두 자유학기로 설정
자유학기 활동 영역 설정	자유학기 1개 학기에 170시간 이상, 4개 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을 모두 설정하여 입력	자유학기로 선정한 2개 학기에 입력한 총 시수의 합이 221시간 이상, 학기별 설정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 4개 영역 입력
평가 결과 기록	자유학기에 교과 성취도 미산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	자유학년에 교과 성취도 미산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

출처: 교육부(2017c8).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8)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아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를 양성하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세부적으로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며 2016년 울산 센터 개관으로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의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조기·발굴양성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하였다. 전국 21개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인 미디어·VR·드론 등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방송제작 및 상영 등이 가능한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농·산·어촌 등 미디어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체험 교육 실시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만 613개의 프로그램에 46,579명이 참여하였고 미디어체험행사 747회에 18,010명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에 203개교, 동아리 미디어 교육에 68개교, 대학연계 교육과정에 30개교가 지원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아래 [표 3-10]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에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인터넷 윤리수준 향상,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계층·세대간 미디어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및 재능있는 인력의 조기 발굴·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의 역기능 최소화,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10]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주요 업무	실천 과제	소관 부서	일정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미디어교육 추진전략 및 체계 구축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인터넷윤리팀	연중
	시청자 참여 행사 개최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확대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거점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 강화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신기술 활용 미디어 교육 실시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인터넷 윤리 수준 향상	생애주기별·맞춤형 윤리 교육	인터넷윤리팀	연중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윤리팀	연중
	지능정보사회의 윤리 기준 마련	인터넷윤리팀	하반기
	생활밀착형 홍보	인터넷윤리팀	연중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시청자지원팀	연중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시청자지원팀	연중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	시청자지원팀	연중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7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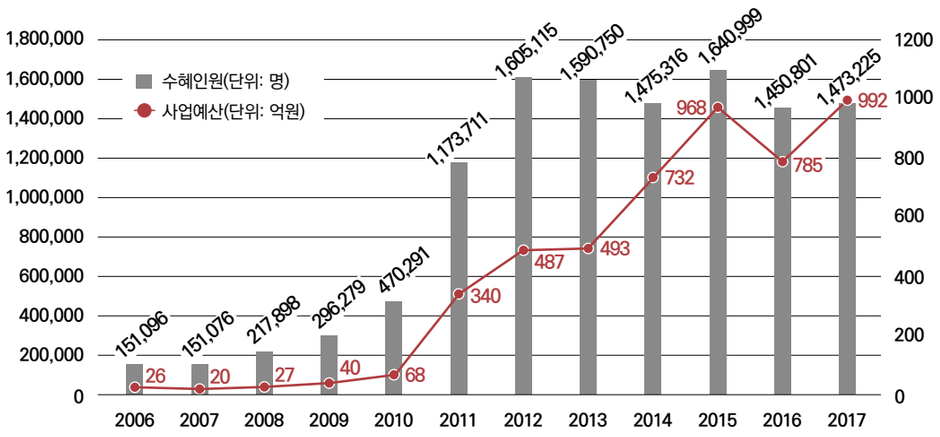
9)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의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을 향유하도록 지원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복지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a).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1인당 연간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가 협업을 통해 수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지침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카드 발급, 지역총괄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총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국비 및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지방자체단체는 이러한 과정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집행과정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2006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에 2011년 카드제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혜인원과 사업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a, 2015b). 2011년 1,173,711명을 대상으로 34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2017년에는 1,473,225명을 대상으로 992억 원이 지원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e). 특히, 2014년에는 문화이용권,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를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수혜자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서 편익을 증진시키고, 운영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게 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까지 개인당 지원금을 연 10만원으로 늘려 혜택을 현실화시키고 수혜대상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b, 2017c).

[그림 3-6] 문화복지 증진 정책 추진체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e). 보고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그림 3-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인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e). 보고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10) 혁신학교 운영확대(교육부)

혁신학교 운영·확대 정책은 교실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의 성과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채택하였다. 수업 측면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움 중심 교육 실천,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 학교운영 측면에서는 학교 운영 자율성,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교육부 단위 계획은 2018학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정책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아래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첫째는 현장의 자발성·창의성·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둘째, 시·도의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자체 계획 수립의 이행에 대한 지원. 셋째, 교실 수업 개선, 평가 개선, 시·도 및 학교 단위 네트워크 구성 등의 시·도 자율 추진 혁신교육 정책을 지원.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지원이 그것이다. 아래의 [표 3-11]은 혁신학교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명칭을 정하여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음을 보여준다. 혁신학교는 2009년에 경기에서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2017년 2월 현재 경기도 435개교, 서울 154개교를 비롯하여 전북 15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표 3-11]에서도 보이듯이 초등학교가 혁신학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해당 정책이 협력적·민주적 학교 문화의 형성,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 등)의 높은 교육 만족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혁신학교 운영·확대가 민주적 의사결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교사의 자발성·창의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11]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혁신학교 수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명칭	도입 연도	혁신학교 수(2017 2월 현재)			
			초	중	고	계
경기		2009	234	147	54	435
서울	서울형 혁신학교	2011	109	33	12	154
광주	빛고을 혁신학교	2011	26	15	4	45
전남	무지개학교	2011	64	20	3	87
전북	전북혁신학교	2011	100	44	14	158
강원	강원행복+학교	2011	22	13	6	41
충남	행복나눔학교	2015	23	14	8	45
충북	행복씨앗학교	2015	2	6	1	9
경남	행복학교	2015	13	6	2	21
부산	다행복학교	2015	18	8	3	29
세종	세종혁신학교	2015	5	4	1	10
인천	행복배움학교	2015	20	9	1	30
제주	다혼디배움학교	2015	12	7	2	2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정책포럼 혁신학교 운영 현황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장병 인권보호 강화(국방부)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책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4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인권 존중의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군 인권보장제도의 개선 및 법령 정비, 장병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 침해 구제·상담 및 인권실태조사 강화, 장병 인권침해 방지·감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인권보호관'이 사망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 인권침해 문제를 감소시켜 장병 및 가족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침해사고가 발생할 시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2)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책은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연일 계속된 비리 적발로 방위사업청장은 '반부패혁신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해 정책이 시작되었다.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사업 비리를 적발할 경우, 악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첫 번째 적발에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여 비리 의지를 척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약에 청렴서약서를 도입하고, 심사항목에 첨령성을 추가하는 등 청렴성을 강조하고, 사전에 방산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투명성의 증가를 위하여 방위사업의 감독·검증업무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관리절차 및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관리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추진(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담당 정책이다. 이 정책은 양국의 신뢰 회복을 통해 경색국면의 전환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연내 개시하고 미세먼지 저감 협력 추진 등 양 국간의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관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드배치 및 어선 불법조업 등 민감 사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모색한다. 또한 한국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전략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한·중 및 한·일 등 동북아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76억 원(2016년 대비 16억 원 증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7.6)과 외교장관회담(8.6, 9.20), 통화(9.4), 외교차관 전략대화(6.20), 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문발표(10.31)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7.2), 산업부 차관보 동북아박람회 참석(9.1-5), 한·중 국세청장 회의(9.5), 한·중 환경장관회담(8.24)등을 통해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한편, 주중 대사관 주최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8.24)하였고, 한·중 언론인 라운드테이블(7.24), 수교 25주년 기념 한·중 경제인 포럼(8.24) 등을 개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12.13) 하였다. 다음으로 사드관련 유관부서의 유기적 대응체제 구축(한·중 통상점검 TF운영) 또한 성과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당관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금년 성어기(4-6월)에 작년 동기대비 중국어선이 급감, 금년 상반기 54척, 전년 동기(138척) 대비 약 61% 감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과 전력자원관리실 전력계획과가 담당하는 정책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및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실화된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로 도발 시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며, 신속한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설명 및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한다. 또한 독자적·미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우리군 및 한미동맹의 대응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고, 그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대북제재수위를 높이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전력 구축의 조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내 북핵외교기획단 담당 정책으로 각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ASEAN, ARF, EAS등 주요 국제회의 및 UN등 국제기구)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정책에 기반을 두어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 정상회담(6.30)을 실시하였고, 확고한 한·미공조를 통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공동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미·일 3자 차원의 대북 공조의 지속적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이루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축 및 비핵화 노력 협력의 견인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ASEAN, ARF, EAS등 주요 국제회의 및 UN등 국제기구와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는 UN총회(9.22)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폐기목표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7.6, 9.22), 외교장관회담(8.7), 6자 수석협의(7.11), 한·중 정상회담(7.6), 한·러 정상회담(7.7)을 통해 실직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도모하였다. 이 외에도 G20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통한 G20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G20 (7.7) 정상회의 종료 후 의장국 독일 메르켈 총리는 북한관련 공동의 우려와 대응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8.6-8)를 통해 ASEAN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1차 IAEA총회(9.18-22)에서 북핵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각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6) 굳건한 한미동맹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국방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정책은 국방부 담당 정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전환계획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를 가속화하여 궁극적인 조기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며,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군 핵심능력의 재설정 및 추진계획의 보완 및 발전이 정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미 정부차원의 조기 전작권 전환시기 확정에 합의,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방향을 합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 정책은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을 발전시키고, 포괄적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조기 확보를 위해 한·미간의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하며,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핵위협에 대비한 필수적인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제49차 SCM(10.28) 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내년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음을 공동성명 발표하였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 도출(2017.6)하였으며, 전작권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3단계 로드맵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내년까지 현행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여 한국군이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상기의 로드맵 실현을 위해 2018년 SCM에서의 한·미간 구체화된 로드맵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신뢰감 구축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외교부)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재외국민안전과 담당 정책으로 해외방문 및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의 위난사항에 대비하여 24시간 체계적인 재외 국민보호 시스템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IS 등 국제적인 테러단체의 위협이 확대되고,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해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 안전예산을 확대하여 168억 원(2016년 대비 8억 원 증액)을 편성하고, 특히 재외국민의 안전제고를 위해 '재외국민 안전정보 문자발송' 예산(2.4억 원)을 신규 반영 하였다. 또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1,256억 원: 2016년 대비 82억 원 증액)하여 외교 인프라를 확충한다.

실시하고 있는 정책내용은 크게 24시간 체계적인 재외 국민보호 시스템 구축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언론매체를 통하여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안전여행 정보 및 해외안전여행 정보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안전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여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해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신속대응팀 운용을 통해 해외 긴급사태 발생 시 인근국가 혹은 외교부 직원을 신속하게 현지에 급파하여 효율적인 안전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통해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7개국(라오스, 인도, 필리핀, 칠레, 우루과이, 피지, 홍콩, 파키스탄) 치안·재난 관계자들(8명)을 대상으로 「2017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2017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은 7개국(태국, 베트남, 일본, 호주, 미국, 필리핀, 미얀마) 치안·재난 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7.3-7 실시].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언론매체와 모바일기반을 통해 국민에게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전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별 맞춤 로밍문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실시로 해외에 방문 또

는 체류 시 간편하게 목적지의 안전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재외공관과 주재국 치안·재난 당국 간의 협력기반을 증진함으로써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국방부)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정책은 군 복무 중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활동 지원을 통해 학업 단절을 극복하고, 전역 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생산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병들에게 자기개발 지원 여건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원격강좌의 참여 확대,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대, 검정고시 지원, 재능기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은 군 복무의 소명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함을 목표로 2012년부터 계속되어온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복무 장병들의 봉급을 현실화 하는 측면에서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적금에 대한 지원과 보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2012년에는 9만 7500원 수준이었던 상병 봉급이 19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증가폭은 미비했으며, 대다수의 병사들이 봉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17년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8%가 부족하다고 답변) 향후 2022년까지 획기적인 폭으로 봉급이 상승되어 최저임금의 50%의 수준까지 인상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인 2018년에는 상병을 기준으로 약 36만 6천원의 봉급을 받게 되어, 현재 봉급의 2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증가한 봉급을 장병들에게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저축을 통하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표 3-12] 병 봉급 인상계획(2018-2022)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저임금 대비		-	30%	-	40%	-	50%
봉급인상률		-	87.8%	-	33.3%	-	25%
병 봉급 (원)	병장	216,000	405,669	405,669	540,892	540,892	676,115
	상병	195,000	366,229	366,229	488,183	488,138	610,173
	일병	176,400	331,296	331,296	441,618	441,618	552,023
	이병	163,000	306,130	306,130	408,071	408,071	510,089

9)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국가보훈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6.25에 참전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등록된 용사들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등록자의 신상을 확인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며, 6.25 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 직계가족에 한하여 수여되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범위를 희망자에 한하여 방계가족까지 확대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에 대하여도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례와 의학전문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시 회복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최근 6월~1년 이내의 의무기록 등을 보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비참전 용사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를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간편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지원은 통일부 담당 정책으로 탈북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탈북민 지원체계의 효율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탈북민의 자립 및 자활 역량 강화, 탈북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 그리고 탈북민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탈북민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탈북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하나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거주 지역에 제한 없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북민 포털' 및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탈북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여성특화 직업훈련 강화와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판로지원 탈북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 확충, 대안학교 지원 및 장학금 확대 등의 지원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식개선, 탈북민-지역주민간 소통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서울 강서구 부지매입 완료, 11월 예정)하였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남북대학생 소통캠프(8월실시), 남북어울림 한마당(10월)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는 우선, 탈북민의 정착 개선 효과이다. 실업률은 2013년 9.7%에서 2014년 6.2%, 2015년 4.8%, 2016년 5.1%로 나타났는데, 다소 변동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률 또한 2013년 51.4%, 2014년 53.1%, 2015년 54.6%, 2016년 55%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3년 35.0%, 2014년 32.3%, 2015년 25.3%, 2016년 24.4%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탈북민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토대로 통일 준비를 위한 역량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여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촉진하였고 이것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04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정책들은 정부 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거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표적 정책이다. 이러한 40개 정책들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평균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 정책들과의 대비효과로 인해 어떤 정책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에 포함된 각각의 정책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로 모두 각기 다른 정책 사이클에 놓여있는 정책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 경제정책분야 070
2 | 사회복지정책분야 131
3 | 교육문화정책분야 194
4 | 외교안보정책분야 249

경제정책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그리고 본 연구진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균이 3.14점으로 나타났다. 2016년 평균이 2.9점, 2015년 평균이 3.1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가 점수에 상당한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분야 전체 평균은 3.46점으로 외교안보분야(3.4점), 교육문화분야(3.3점), 경제정책분야(3.1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정책분야 10개 정책에 대한 설문평가와 정성평가의 결과를 가중합산한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개 정책의 평균은 3.28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다소 긍정적이었다.

외교안보정책분야 평균은 3.4점으로 경제정책분야(3.1점), 교육문화분야(3.3점), 사회복지분야(3.5점)에 비해 근소한 차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외교안보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경제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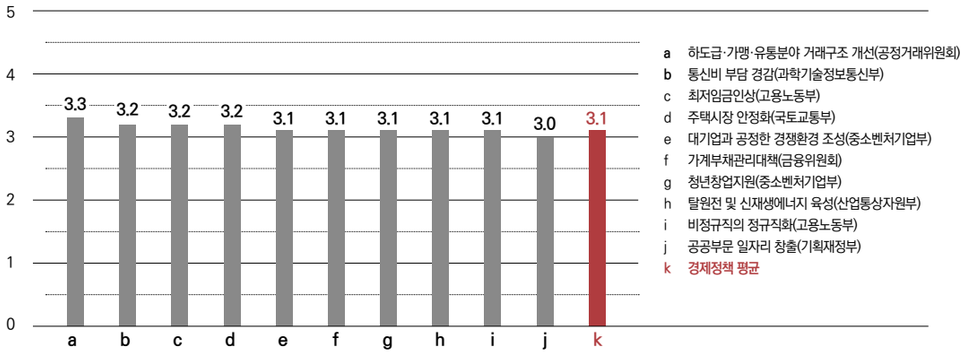
가)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은 경제 분야의 정책별 설문을 종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10개 정책의 평균은 3.1점으로 2016년의 평가 2.8점에 비해 0.3점 상승하였다. 상당수의 평가 대상 정책이 새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6년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최고 평점과 최저 평점의 편차가 0.3점으로 작년의 0.7점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책이 경제분야 설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인지도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통틀어 10개 경제 정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도 설문 결과가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올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이다. 지난 수 년간에 나타났던 패턴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일반 국민의 바람이 공정경쟁을 담보하는 정책에 대한 후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통신비 부담 경감, 최저임금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주려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같이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책들 간의 편차가 미미하여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이들을 좋은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평가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전문가 평가와 일반인 평가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정책들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의 경우 전문가 평가가 일반인 평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도 일반인 평가에 실제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므로 아직 평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기엔 이르고, 따라서 평가의 근거는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경제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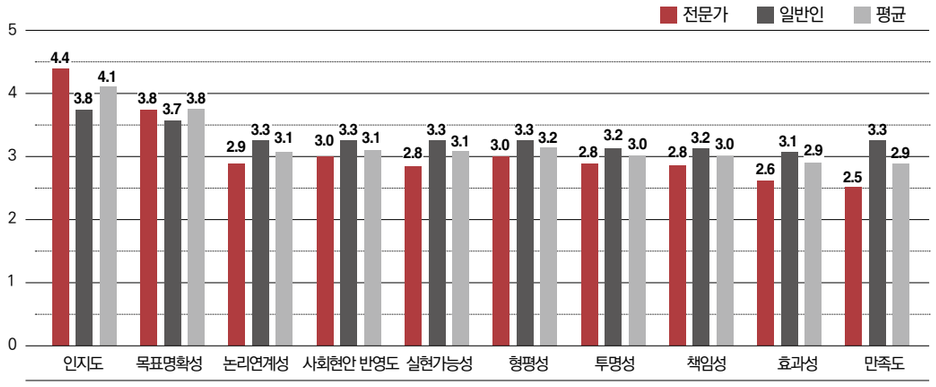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분야의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도 상당히 높다. 전문가 집단,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92%)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인지도 차이도 큰 편이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인지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갈린다.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림 4-2] 최저임금 인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책명 속에 목표가 잘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본 정책의 목표는 대체로 명확하다고 답하였다(전문가 3.8, 일반인 3.7). 특히 목표명확성의 측면에서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전문가·일반인 모두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응답 분포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긍정 평가의 비중은 부정 평가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목표의 명확성까지이고, 그 이후 항목에서는 두 집단의 의견이 갈린다. 우선 논리적 연계성에서 전문가 집단은 2.9점을 준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3.3점을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경제 분야 정책 중 7위로 하위권이었고,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2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패턴은 응답 분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전문가의 경우 긍정·부정 응답이 비슷했던 반면, 일반인의 경우 긍정 답변이 두 배 정도 많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전문가 3.0, 일반인 3.3).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에선 경제 정책 중 하위권에, 일반인 집단에선 상위권에 속하는 평가이다. 응답의 분포 또한 전문가 집단에선 긍정·부정 비율이 비슷한데, 일반인 집단에선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의 2배 정도로 나타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견해차가 더 크게 드러난다(전문가 2.8, 일반인 3.3). 전문가 집단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데, 실현가능성이 낮은 하위권 그룹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견해차가 존재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전문가 3.0, 일반인 3.3).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과 부정 답변이 비슷한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 답변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 항목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다시 벌어졌다(전문가 2.8, 일반인 3.2). 경제 분야 정책 중 전문가 평가는 8위, 일반인 평가는 2위에 해당하는 차이이다. 응답 분포에서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다소 높았는데,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의 두 배에 이르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항목에서도 투명성 항목과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다. 전문가 2.8, 일반인 3.2로 두 집단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응답 분포에서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 답변이 다소 많은 편이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의 두 배에 이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차이는 정책의 결과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효과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2.6, 일반인 3.1로 0.5점의 차이가 난다. 일반인 집단은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했으나, 전문가 집단은 7위로 하위권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 분포에 있어서는 일반인 집단의 경우에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보통이다'의 응답(3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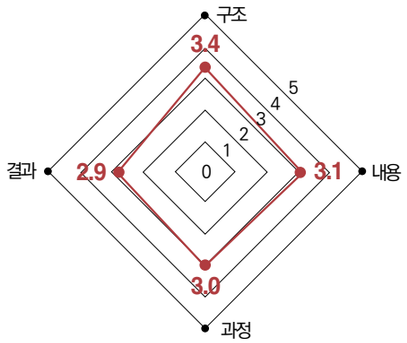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견해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정책의 만족도이다. 전문가는 2.5

점, 일반인은 3.3점으로 0.8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경제 분야 9개 정책 9개 항목, 총 81개 항목 평가에서 가장 큰 차이이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부정 응답의 비율이 24:58로 부정 응답이 두 배가 넘었으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정반대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용이 그 뒤를 따른다. 한편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와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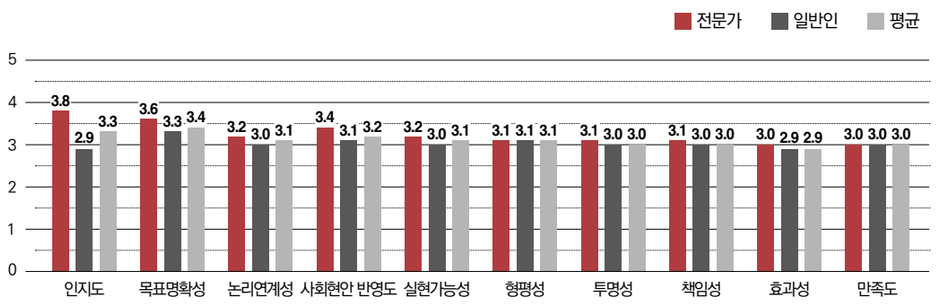
[그림 4-3] 최저임금 인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가계부채 관리대책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며, 이를 반영한 듯 전문가 집단에서의 인지도는 3.8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인 집단에서의 인지도는 2.9점으로 상대적으로 꽤 낮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지도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이다. 또한 일반인 인지도가 2점대인 정책은 10개 중 3개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가 포함되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주택정책 등과 얽혀 상대적으로 내용이 복잡한 것에도 기인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4-4] 가계부채 관리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문에 그다지 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 3.6, 일반인 3.3). 전반적으로는 전체 경제정책 중 중상 정도에 위치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인의 평가가 예상보다 낮은데, 본 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뒤섞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높지 않다는 점은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반인 집단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평가점수의 분포상 일반인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정책의 경우 대체로 전문가의 평가가 더 높은 편이다. 본 문항에서도 전문가 집단의 긍정 평가는 부정 평가의 두 배에 이르렀으나, 일반인의 경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 더 높게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의 경우에도 전문가 집단은 3.4점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전체 경제정책 중 세 번째로 높게 평가했으나, 일반인 집단은 3.08점으로 10개 경제정책 중 최하위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은 긍정 평가 52%, 부정 평가 16%로 긍정 평가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았으나, 일반인의 경우 긍정 평가 31.9%, 부정 평가 24.5%로 긍정 평가가 컸지만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관찰된다. 전문가 3.2점, 일반인 3.0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체 경제정책 중 2위, 일반인 집단에서는 전체 경제정책 중 9위의 상반된 결과이다. 응답의 분포를 보아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보다 두 배 많았으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부정의 비율이 비슷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3.1, 일반인 3.1). 점수 분포의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에 큰 차이가 없었다(전문가 3.1, 일반인 3.0). 다만 그 분포에 있어선 전문가 집단에선 긍정 평가가 다소 많은 반면, 일반인 집단에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항목은 투명성 항목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전문가 3.1, 일반인 3.0). 전문가 집단에선 긍정 평가가 다소 많은 반면 일반인 집단에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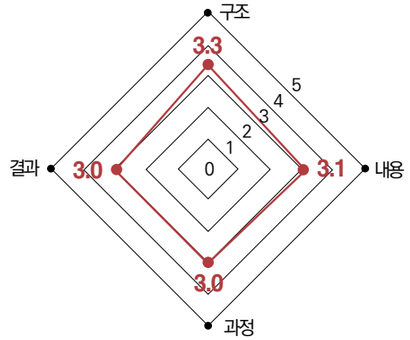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의견이 다소 갈린다(전문가 3.0, 일반인 2.9). 평균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분포는 다소 차이가 난다. 전문가 집단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일반인 집단의 경우엔 부정평가가 33.8%로 긍정평가 2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차이가 다시 사라졌다(전문가 3.0, 일반인 3.0).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시 차이가 발견된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만족도는 전체 경제 분야 10개 정책 중 가운데 3위로 상위권인데 비하여 일반인 집단에서는 10개 정책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정책이다. 이러한 점도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정책이 가지는 복잡성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용이 그 뒤를 따른다. 한편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와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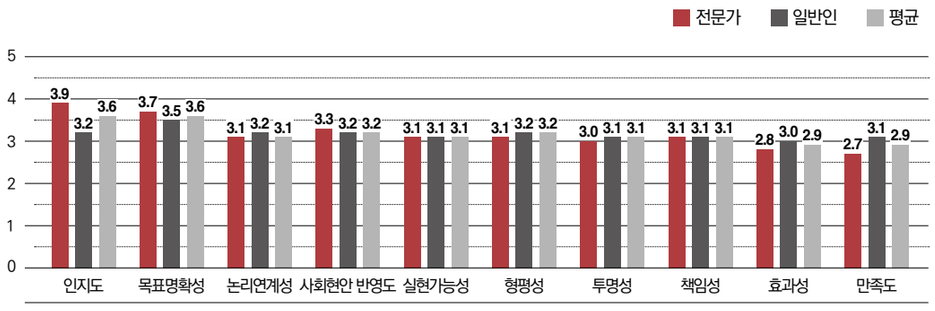
[그림 4-5] 가계부채 관리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화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에 속한다. 하지만 일반인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전문가 3.9, 일반인 3.2). 전문가 집단은 76%가 본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38.3%만이 본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해서 그 차이가 두 배에 이른다. 이는 아마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6] 주택시장 안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문가·일반인 집단 모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응답이 10개 경제 정책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전문가 3.7, 일반인 3.5). 또한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긍정 평가는 두 집단에서 모두 부정 평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목표가 뚜렷하더라도 본 정책이 과연 좋은 대안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1로 일반인 집단의 평가 3.2점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높은 주택 가격은 서민 가계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고 이를 반영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상당한 수준일거라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설문 결과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전문가 3.3, 일반인 3.2). 전반적인 평가는 경제분야 10개 정책 중 중상 정도 수준이며, 전문가·일반인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3.1로 경제분야 10개 정책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비율을 보더라도 전문가의 경우 34%:26%, 일반인의 경우 36%:2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이 전반적인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보다 다소 높았다(전문가 3.1, 일반인 3.2). 특히 일반인의 경우 형평성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41.1%로 부정적 응답 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전문가의 경우 44%:32%).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본 정책이 가지는 양면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질적 평가 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친 유동성 규제로 서민층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전문가 3.0, 일반인 3.1). 다만 형평성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경제분야 10개 정책 중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3.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는 앞의 두 개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다(전문가 30%, 일반인 24.6%).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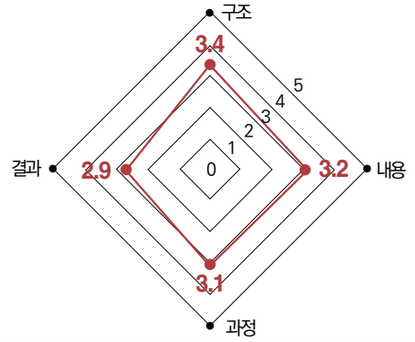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보다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2.8, 일반인 3.0).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40%로 긍정적인 응답 28%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일반인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30% 내외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도 역시 정책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이다(전문가 2.7, 일반인 3.1).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응답이 42%로, 긍정적인 응답 18%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일반인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33.6%로, 부정적인 응답 25.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도 역시 정책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용이 그 뒤를 따른다. 한편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와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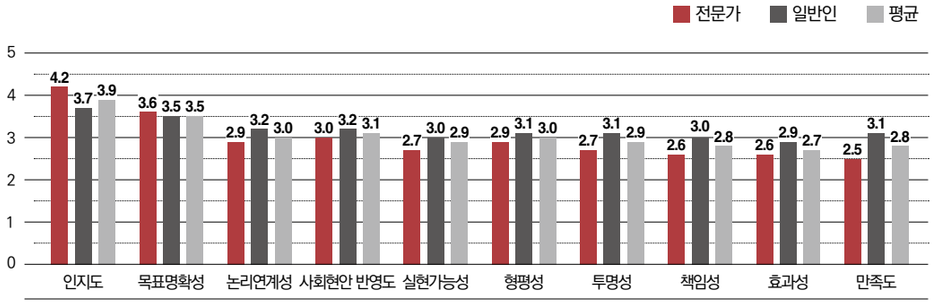
[그림 4-7] 주택시장 안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본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서 모두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4.2점, 일반인 3.7점).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6점, 일반인 3.5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항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목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그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구체적 비교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본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2점).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전문가들의 경우 정책목표 자체보다는 목표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등의 측면에 근거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2점). 본 정책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과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본 정책이 추구하는 바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7점, 일반인 3.0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재원조달 문제, 기존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과연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 처방인지에 대한 회의감 등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1점). 이는 전 국민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 반면 그 수혜는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이 전문가의 부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7점, 일반인 3.1점). 이러한 차이는 일반인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정책의 추진이 전 국민적 승인을 얻었다고 여기는 반면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가 곧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인했다고 여겨진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일반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6점, 일반인 3.0점). 이는 현 정부의 책임뿐 아니라 이후 정부들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정책을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근거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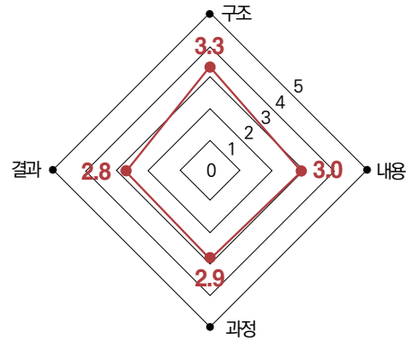
본 항목은 유일하게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6점, 일반인 2.9점). 이는 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통적인 '큰 정부 vs. 작은 정부'라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효과적인 집행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정치적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불일치 정도가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가 2.5점, 일반인 3.1점). 이와 같은 의견불일치는 본 정책을 둘러싸고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본 정책의 구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용은 중립적인 평가를, 그리고 과정과 결과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는 본 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인식이 존재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대안이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푸는 데 적절하며 또 재원 마련 등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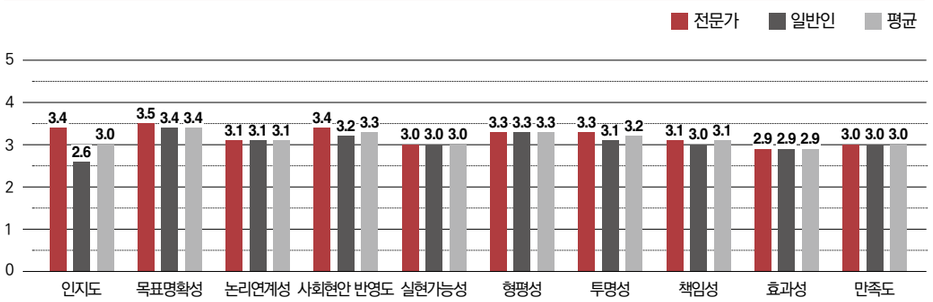
[그림 4-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본 정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3.4점, 일반인 2.6점). 본 정책의 수혜자 중 대다수가 일반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4점).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본 정책의 목표인 불공정 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명확하게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1점, 일반인 3.1점).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4점, 일반인 3.2점).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0점). 이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과연 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3점, 일반인 3.3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3점, 일반인 3.1점). 특히 신고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밀접한 소통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1점, 일반인 3.0점). 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책임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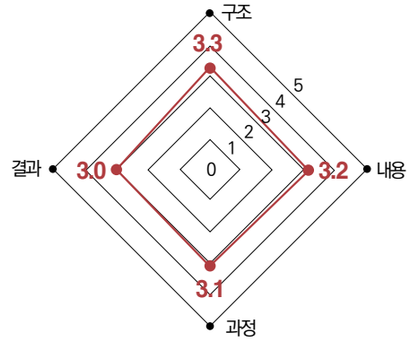
본 항목은 유일하게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9점, 일반인 2.9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중립적인 판단을 내렸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0점).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본 정책의 구조, 내용 및 과정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중립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본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혼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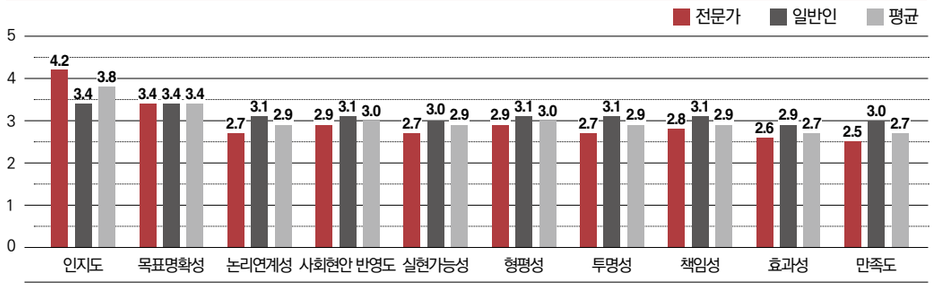
[그림 4-11]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본 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전문가 인지도는 일반인보다 높다(전문가 4.2, 일반인 3.4). 물론 일반인들의 인지도 수준도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본 정책이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추진 의제로 설정된 정책이라는 점, 더불어 심각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4-1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4점, 일반인 3.4점). 이는 본 정책의 목표가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늘린다는 단일한 차원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7점, 일반인 3.1점). 이러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상반된 평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본 정책이 포퓰리즘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도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1점). 이는 전문가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현재의 심각한 채용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한계를 지닌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7점, 일반인 3.0점). 전문가들의 위와 같은 부정적 견해는 본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막대한 재정과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1점).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원인은 앞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항목에서 기술한 이유와 동일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7점, 일반인 3.1점).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원인은 앞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항목에서 기술한 이유와 동일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8점, 일반인 3.1점).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비슷한 평가 결과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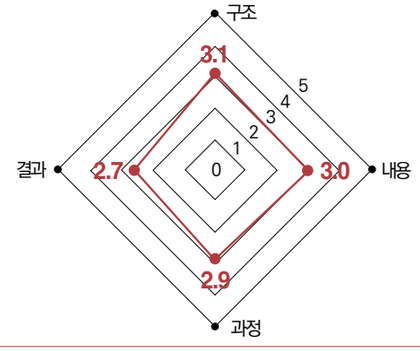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전문가 2.6점, 일반인 2.9점)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평가 결과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5점, 일반인 3.0점). 정부의 적극적 이행 의지라는 긍정적 측면이 그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상쇄되어 일반인들은 중립적 평가를 내린 반면, 양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인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를 보여 상호 대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본 정책의 구조 및 내용에서는 중립 혹은 중립에 가까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정책의 과정 및 결과의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본 정책을 수립한 목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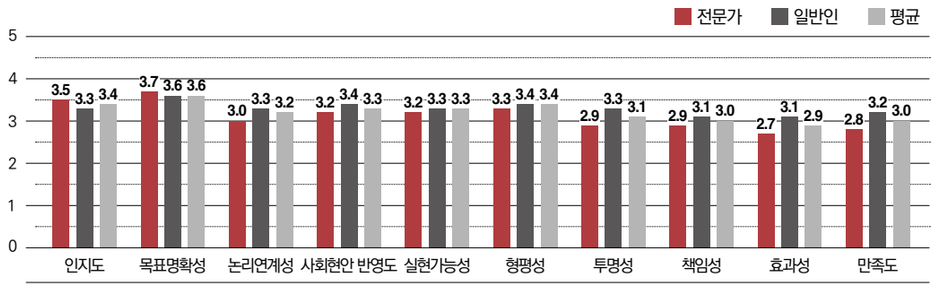
[그림 4-1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통신비 부담 경감

상당수의 평가 대상 정책이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전문가 3.5, 일반인 3.3). 일반인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편인데, 누구나 납부하는 무선통신비 감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은 통신비 25% 할인을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적용해주는 통신사 정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림 4-14] 통신비 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전문가·일반인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전문가 3.7, 일반인 3.6).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 지출을 줄여주려는 정책의도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전문가 3.0, 일반인 3.3). 가장 대표적인 통신비 할인율 25% 상향에 대해 내용과 절차를 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다소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증가된 할인폭은 5%로 실제 할인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이마저 통신사들의 팔을 비틀어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도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전문가 3.2, 일반인 3.4). 통신비 경감이라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성격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특히 긍정 답변과 부정 답변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일반인의 경우 긍정 52%, 부정 19%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다소 엇갈렸는데, 그 차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크지 않았다(전문가 3.2점, 일반인 3.3). 긍정·부정 답변의 비율도 일반인의 긍정 답변 비율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정책 집행의 저항이 크지 않고 실효성과 별개로 취지에 있어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도 전문가 3.3, 일반인 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긍정·부정 답변의 비율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약 3배 차이로, 두 집단의 평가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후한 편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전문가 2.9, 일반인 3.3). 이는 긍정·부정 답변의 비율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전문가 응답에서는 긍정 26%, 부정 30%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에서는 긍정 42%, 부정 19%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의 두 배가 넘는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편이다(전문가 2.9, 일반인 3.1).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 22%, 부정 26%로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많은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 35%, 부정 22.5%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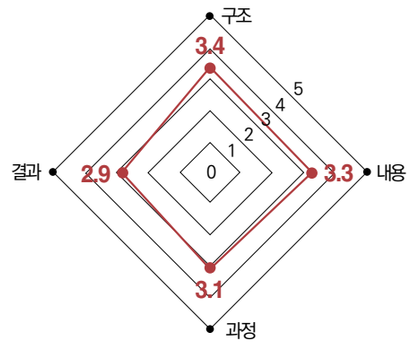
효과성도 전문가와 일반인의 상당한 의견 차이가 관찰되는 항목이다(전문가 2.7, 일반인 3.1). 전문가들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일반인 집단에서는 반대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효과성과 함께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크게 관찰된다(전문가 2.8, 일반인 3.2). 전문가들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일반인 집단에서는 반대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용이 그 뒤를 따른다. 한편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와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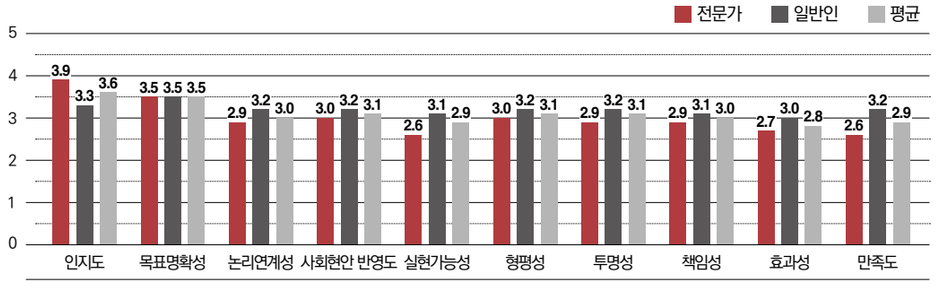
[그림 4-15] 통신비 부담 경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본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3.9점, 일반인 3.3점). 이는 얼마 전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가 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전체 에너지 생산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지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높은 인지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5점). 현행 원전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구조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본 정책의 목표가 일반인에게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2점). 이는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수준 아래에서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탈원전이야기할 에너지 공급부족을 효과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 일반인들은 이러한 기술적 측면보다는 탈원전 청정에너지 중심 구조 구축이라는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2점).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주요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이러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전문가는 본 항목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6점, 일반인 3.1점).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는 역시 정책의 근본적 방향성보다는 그 실현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채산성에 대한 의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0점, 일반인 3.2점). 이는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본 정책이 목표로 하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한 혜택은 국민 전반에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2점). 이는 전문가들이 본 정책의 수립이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관점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 역시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2.9점, 일반인 3.1점).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탈원전 이후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평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전문가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일반인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7점, 일반인 3.0점).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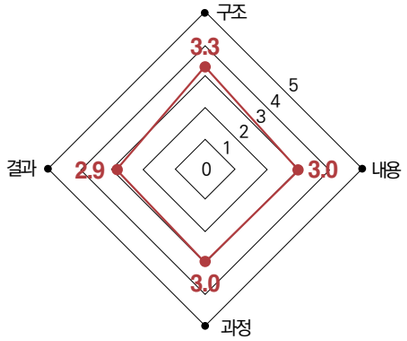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2.6점, 일반인 3.2점). 이 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인이 본 정책을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전문가들은 기술적, 공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본 정책의 과정 및 내용에서는 중립적 평가를, 구조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정책의 결과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본 정책은 정치적 의제로서는 긍정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과연 현재 이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본 정책이 추구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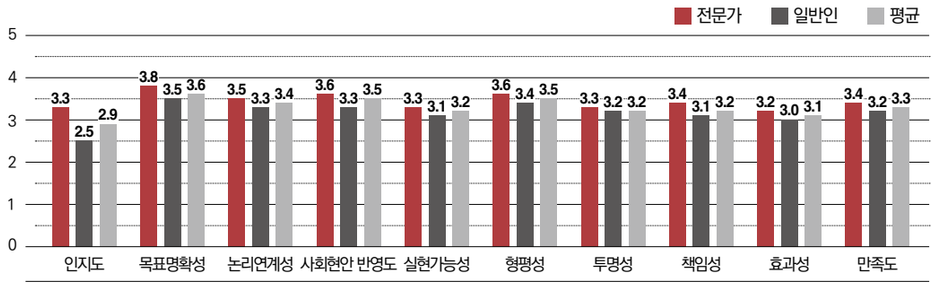
[그림 4-17]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본 정책의 인지도는 보통 수준이며,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전문가 3.3, 일반인 2.5). 이는 본 정책의 대상이 가맹분야 및 유통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림 4-18]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8점, 일반인 3.5점). 따라서 본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개선이라는 목표의 명확성이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5점, 일반인 3.3점). 이는 제도개선 및 법집행의 강화라는 입체적 접근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항목에서도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6점, 일반인 3.3점). 이는 정책 대상이 하도급 가맹 유통분야로 매우 협소함에도 본 정책이 시정하고자 하는 소위 '갑질' 문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전문가 3.3점, 일반인 3.1점). 지난 2016년 평가에 포함된 본 정책과 유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 비해 실현가능성 점수가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등을 통해 보여준 정부차원의 정책실현의지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6점, 일반인 3.4점). 본 정책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약자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고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항목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전문가 3.3점, 일반인 3.2점).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4점, 일반인 3.1점). 앞서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높은 정책이행의지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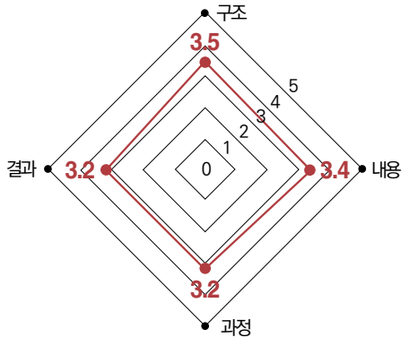
전문가는 긍정적, 일반인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2점, 일반인 3.0점). 일반인들이 본 정책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이는 본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3.4점, 일반인 3.2점). 이는 본 정책이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 문화에 대한 개선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본 정책은 구조, 내용, 과정 및 결과의 측면 모두 보통 이상으로 균형이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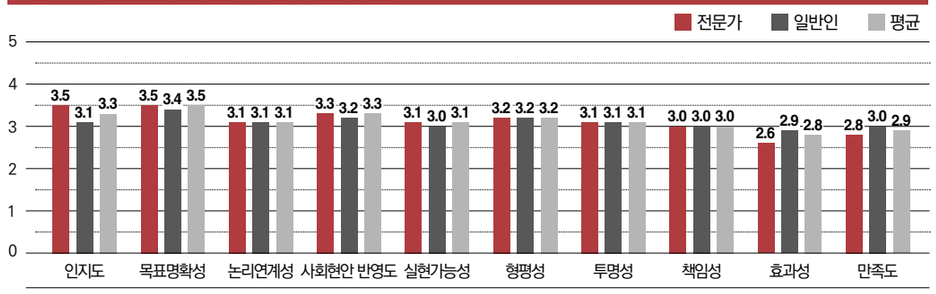
[그림 4-1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다수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묶어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청년창업지원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을 법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정책이다. 이러한 점은 인지도의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3.5점, 일반인 3.1점으로 인지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림 4-20] 청년창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서는 전문가 3.5점, 일반인 3.4점으로 다른 경제분야 정책들에 비해 그리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은 아니다. 이 또한 역시 여러 종류의 사업을 묶어 평가하는 구조적인 이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문가·일반인 모두에서 긍정 평가는 부정 평가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논리적 연계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전문가 3.1, 일반인 3.1). 응답의 분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약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청년실업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는 하지만 설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전문가 3.3, 일반인 3.2). 다만 전문가 집단의 경우가 사회현안 반영도를 일반인에 비해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10개 경제분야 정책 중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거의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전문가 3.1, 일반인 3.0). 경제 분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하면 전문가·일반인 모두 중위권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발견된다. 전문가·일반인 집단 모두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전문가 3.2, 일반인 3.2). 응답 분포에서도 전문가 44:24, 일반인 38:21로 비슷한 비율로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투명성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 3.1점, 일반인 3.1점으로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응답 분포에 있어서는 긍정 답변의 비율은 비슷했지만 부정 답변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부정 답변 비율이 다소 낮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책임성에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3.0으로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응답 분포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 비율은 비슷했으나, 긍정 평가 비율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이 여러 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평가에 차이가 적은 것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적어 응답이 중위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정책의 경우 많은 평가 항목에서 중위값(보통이다)의 비율이 경제 분야 10개 정책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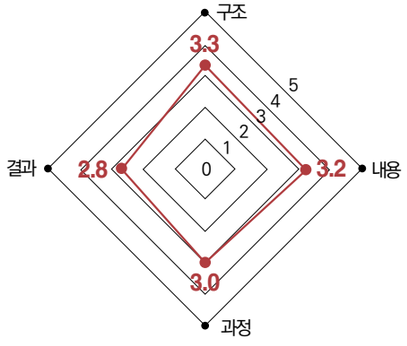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전문가 집단의 평가보다 상당히 후한 편이다(전문가 2.6, 일반인 2.9). 그러나 다른 경제 분야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본 정책의 순위는 전문가·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비슷한 하위권에 속해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4배가 넘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보다 높았다(전문가 2.8, 일반인 3.0). 특히 응답 분포에 있어서 일반인 집단에서는 긍정·부정 응답 비율이 비슷한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32%:20%으로 부정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내용을 정책의 구조와 내용, 과정, 결과의 네 가지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용이 그 뒤를 따른다. 한편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와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청년창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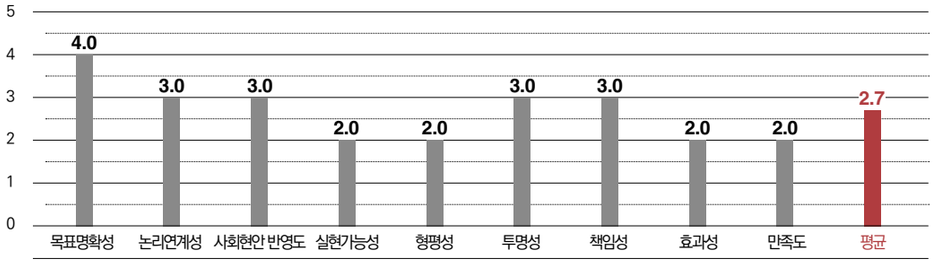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뜨거운 감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일 것이다. 논란이 큰 만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이 갈린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의견이 뚜렷하게 차이가 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통적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최저임금제에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한 성장의 관점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더해진 성장의 관점은 그 근거가 그리 뚜렷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4-22] 최저임금 인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고 있고, 따라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다. 단계적 임금 인상 차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4% 인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모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목표의 존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인상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담당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은 장기적 정책 방향이라는 주장인데, 과거 수출 100억불 혹은 국민소득 1만 달러 등의 레토릭이 그대로 정부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레토릭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른 정책들과 같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그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순

한 구조이다. 따라서 본 정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유효한 수단인가라는 질문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얼마나 적정한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의도한 대로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로의 파이 이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노동자들 간의 파이 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노동자들 간의 파이 이동 현상이 발생한다면 한계 상황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중요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실질소득이 8분기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계소득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최장 기간의 소득감소이다. 게다가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3.53%가 늘었다(머니투데이, 2017.12.6.).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2-3%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임을 고려하면, 이는 생산된 부가 제대로 일반 가계에까지 흘러가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이 가지만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커브의 한쪽 끝에 위치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어디서 필요한 파이 조각을 떼어 오느냐의 문제이다. 의도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선 고소득 근로자 혹은 자본가의 파이 조각을 떼어 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끼리의 파이 다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거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연봉 1억이 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최저임금제로 보호하려고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주유원, 식당 종업원 등 저숙련·저임금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저임금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3조원 규모의 한시적 고용보조금이다. 정부도 최저임금제로 인한 영향이 어느 계층에 집중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이는 한시적 생명연장일 뿐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한시적 지원이 끊어지는 내년 이후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은 바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도 본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정책의 원래 취지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 주려는 형평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달러 상승으로 3.5스타 레스토랑의 폐업 가능성은 14% 증가하는 반면 5스타 레스토랑의 폐업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 and Luca, 2007). 최저임금제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저소득층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설정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것은 업종별·규모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최저임금의 인상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형상으로는 16.4%에 달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경영계, 공익대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과정이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에 대한 고려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다른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균형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정책의 양 축에 있는 경제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최대한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의 문제가 한 예이다.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연봉 4000만원 수준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모순이 발생함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경제계의 우려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리는 듯한 인상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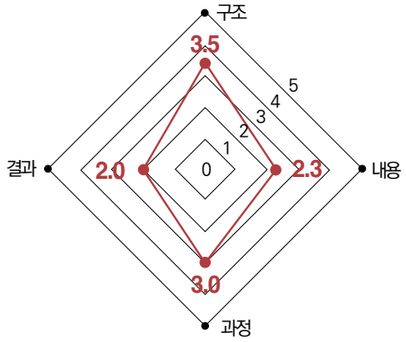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들의 대량실업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폐업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시적 고용보조금에도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느낌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상승을 통한 성장과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라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정책이라 해도 의도까지 나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쁜 정책도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 예상치 않은 결과로 인해 나쁜 정책이 되는 것 뿐이다. 본 정책도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본 정책이 원래의 의도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관해서는 그 구조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정책의 과정은 중립적으로, 내용과 결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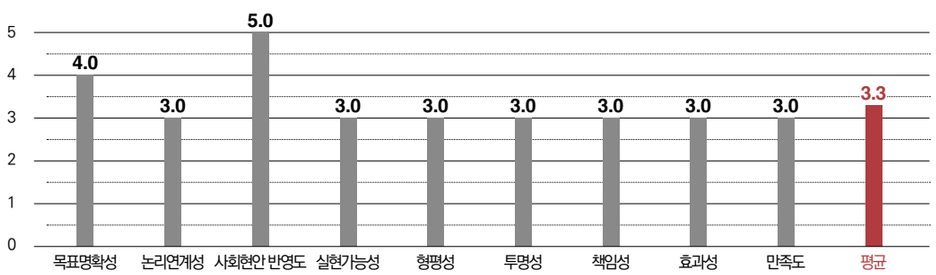
[그림 4-23] 최저임금 인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가계부채 관리대책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이 평균 부채비율은 1500%였다. 지금은 200% 정도이다. 기업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7000만원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 15년 사이에 2.4배 증가한 규모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림 4-24] 가계부채 관리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우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정책문제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수단은 DTI, DSR 등 부채의 총량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총량규제 못지않게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 제1금융권에 대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금리가 더 비싼 제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금리인상 시기에 서민 대출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문제는 총량규제와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계대출의 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서민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개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를 대출 수요억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소득증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우리경제의 침체로 가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에는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의하면 국내 61개 금융기관 68명의 전문가가 꼽은 우리나라 최대 리스크 현안은 가계부채 문제이다(김형태, 2017). 2017년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400조원을 넘고 있고, 이는 2007년 말 665조에서 10년 만에 두 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2016년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와 부채규모가 31만 5천 가구, 62조 원에 이르고 금리 인상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가구와 부채규모는 126만 가구, 186조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의 21%가 넘는 수준이다(연합뉴스 2017.11.30).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는 금융부실과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정책의 핵심 수단인 금리 조정을 제때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부채의 총량을 줄이려는 노력과 부채 상환능력을 늘리려는 노력이다. 전자는 대출규제, 후자는 소득증대를 의미하는데 본 정책의 초점은 전자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DTI 규제를 통해 억제하였고, DSR과 같은 부채의 총량규제 정책도 도입하였다. 대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계점에 도달한 금융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대출규제의 영향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이 받게 된다. 서민층은 생계자금 대출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고소득층은 대출이 필요 없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계대출규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규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본 정책은 정책모기지 확대,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교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금융실수요자들의 낮아진 대출접근성을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 이후 주택담보 관련 대출규제가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여기에 DTI, DSR 등 다층의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한동안 금융기관의 대출 창구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특히 강화된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바람에 기존 부동산 계약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큰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현장에서는 감독규정이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중앙일보, 2017.8.24.).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책 적용 시점이 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의 혼란은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 역시 투명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 현장의 혼란으로 항의와 비판이 속출하자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책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둔화되었지만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대폭 줄어든 것이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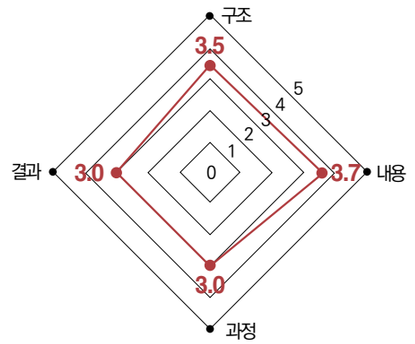
가계대출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가계대출 잔액은 4조 6509억이 늘었다. 월별 증가로는 올 들어 가장 컸다(한국경제 2017.12.4.). 담보대출 증가는 다소 주춤하다 지난 달 다시 늘었으며 신용대출 증가 폭은 올 들어 최대였다. 내년부터 더 강화되는 대출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취약층의 신용대출 이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취약층의 소득 증가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대출규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애초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작정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엔 숨통을 좀 틔워주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대책이 함께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나 주택 실수요 중산층을 위한 보완대책이 미흡한 부분, 부채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등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가계부채관리대책 정책에 관해서는 그 내용과 구조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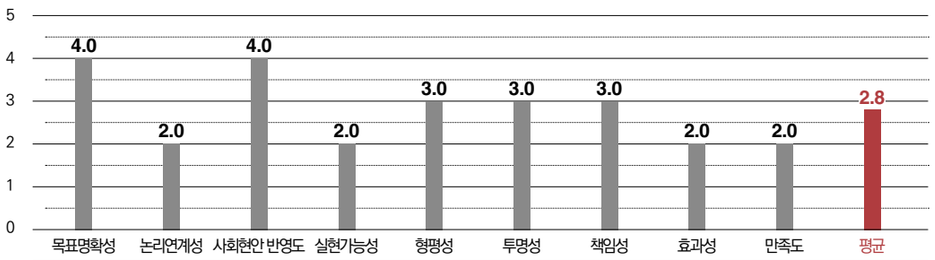
[그림 4-25] 가계부채 관리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강력한 정책 개입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거의 대부분의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여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의 주택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림 4-26] 주택시장 안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연초부터 지속되어 온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본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할 때 강도와 폭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려 가능한 대부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수단의 초점은 단기 투기수요의 억제에 맞추어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서울시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제외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LTV, DTI 등 금융규제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최근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 투기수요 억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 실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방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의 소득증가로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시내의 새 아파트 공급은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급 측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단순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심각하게 높은 수준일까? 국가간 비교자료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지난 11월에 한 국회의원이 배포한 서울의 집값이 뉴욕, 도쿄보다 비싸다는 자료에 대한 기사로 인터넷 포털이 도배되다시피 한 일이 있었다. 서울, 뉴욕, 도쿄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지 않고 서울은 매우 좁게 뉴욕과 도쿄는 매우 넓게(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도와 강원 일부까지 포함하는 지역) 잡아서 통계를 제시하여 생긴 해프닝이었다. 의원실에서 알면서도 통계적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를 잘 보여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회의감이 든다.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수요에 기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왔고, 그와 더불어 좀 더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왔다. 강남·강북을 망론하고 서울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는 바로 이와 같이 주거환경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각종 규제로 제한하고 외곽의 공급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8.2대책 이전보다 더 올랐다는 최근 동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매일경제. 2017.11.26.).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언뜻 보기엔 부동산 가격 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실수요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금융규제를 들 수 있다. 대출금액이 LTV 40%로 묶인 상황에서 선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과 함께 수억 원의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호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현금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고소득계층에게만 돌아간다면 형평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증대와 신규택지 확보 노력 등은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진행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논란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에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회의도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란도 있다(매일경제. 2017.8.24.).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가격에 대한 대통령 언급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문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점은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관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응답이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하려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지가 상승 등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개발과정에서 풀린 엄청난 규모의 현금은 다시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을 자극하는 사이클에 빠질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 근교의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실수요층이 원하는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에 여전히 미스매치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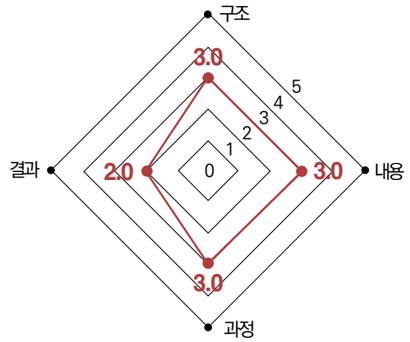
본 정책은 초기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최근엔 효과가 더 이상 없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대책 이전의 매매 최고가 경신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본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호지역의 공급 감소가 오히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내용도 복잡하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성격의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관해서는 그 구조와 내용, 과정은 중립적으로 평가되며, 정책의 결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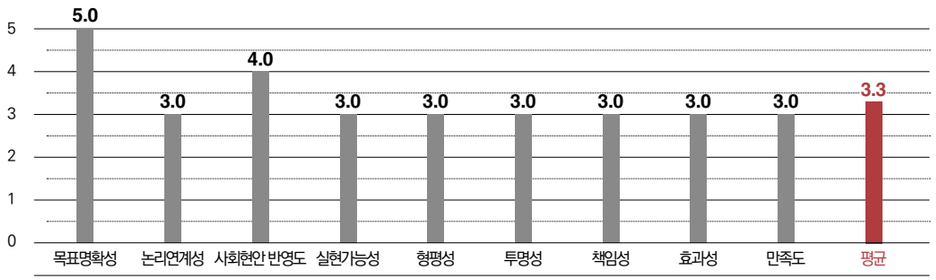
[그림 4-27] 주택시장 안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증대 및 노동환경의 악화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위축된 소비성향을 고착화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수요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이러한 전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잠재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의 수립,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대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 케인지언 경제학에 근간을 두고 있는 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진은 다시금 공공부문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앞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항목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불안의 해소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은 공공부문 고용근로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대안이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사적 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항목과 마찬가지로 본 정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 공공부문 고용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공공서비스 부문 확충 및 질적 제고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입안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항목과 같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의 문제가 본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일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추진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에 관해 불거진 '비정규직-정규직' 갈등 사례처럼 본 정책의 실현 과정에는 노-노 갈등의 뇌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할 때 정책 이행이 비교적 용이하다고는 해도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은 공적 자금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일차적인 수혜집단인 취업준비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책목표 항목에서도 언급되듯이 결국 본 정책이 형평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일반 국민들에게 질적으로 개선된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점이 채용의 형

평성을 둘러싼 '비정규직-정규직' 갈등을 일으킨 점에서 투명성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의 평가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동일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다는 점과 실제 집권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입안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본 정책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본 기관에 대해 조속히 간접고용을 직접고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실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정책이 책임성을 결여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역시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중립적 평가를 내린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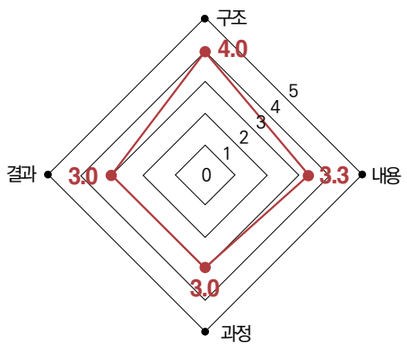
본 정책은 공공부문에 한정해서는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단,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동일하다. 본 정책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시 매우 높은 만족도로 귀결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정책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항목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해서는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의 이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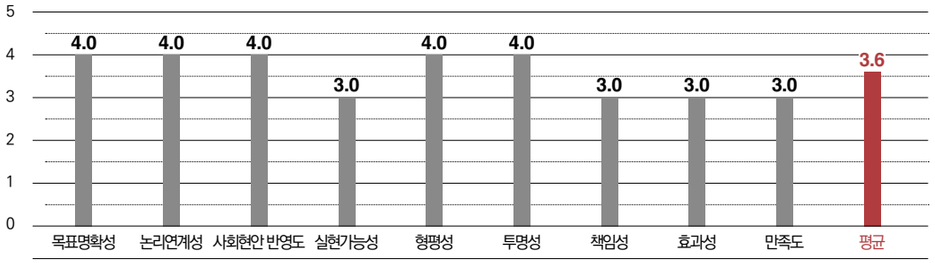
[그림 4-2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대기업에게 유리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분배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저해하는 시장실패의 결과이다. 특히 미국의 스타트업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적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는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인재 그리고 판로가 대기업에게 탈취되는 상황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정책은 단순히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측면과 아울러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0]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본 정책의 목표는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실패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입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중소기업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변하는 주무부처의 시장감시활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유익한 정책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제도의 운영 등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의 제공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항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익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경로로 자리잡은 IT 중심의 경제를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은 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시도들과 본 정책 간에 눈에 띄는 차이점이 부재한다는 점은 본 정책이 과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기업에게 유리한 현재의 경제구조를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의 결과는 중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합리한 지대를 누리고 있던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누려야 할 권익을 되찾아주는 시장실패 교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사회현안 반영도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은 장기적으로 소규모 벤처기업들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상담 및 접수제도의 운영은 본 정책의 수혜대상이 주무부처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수혜집단인 중소기업 측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운영 역시 현장과의 괴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본 정책의 주무부처가 청에서 부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원활한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이는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이라는 책임성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본 정책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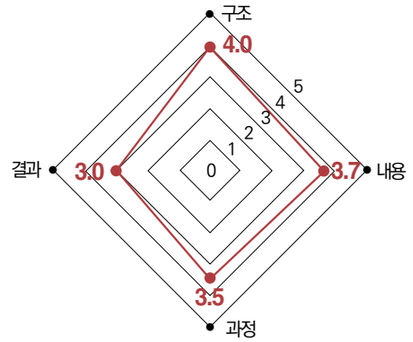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다. 정책의 구조, 내용 및 과정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공정거래 관행정착을 위해 시도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의 유지,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원,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의 증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립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본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본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인력확충과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본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정책은 그 구조, 과정,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가 합당하며 이는 본 정책의 규모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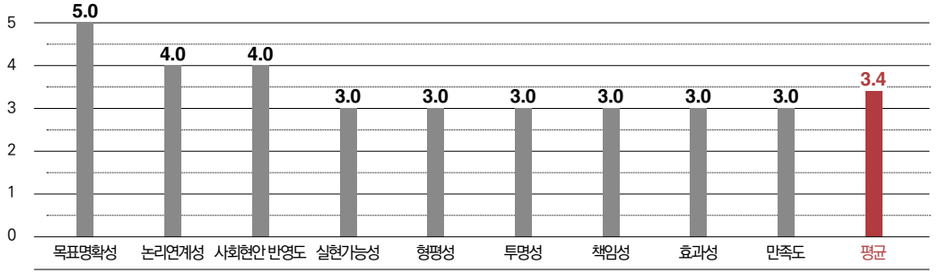
[그림 4-31]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및 노동 아웃소싱, 강도 높은 노동 및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정책은 작은 정부에서 탈피하여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의 증진 및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다시 노동환경의 개선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 등장한 뉴딜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케인즈식 정책처방이라는 관점에서 본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림 4-3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공공부문 채용확대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자체는 매우 명확하다. 또한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목표 또한 명확해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정책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불안의 해소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은 공공부문 고용근로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 공공부문 고용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공공서비스 부문 확충 및 질적 제고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입안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족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 차원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부문 고용 근로자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기인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본 정책의 목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다른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본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일 것이다. 또한 단순한 재원조달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러한 공공부문 채용확대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본 항목은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적 자금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일차적인 수혜집단인 취업준비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본 정책이 형평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질적으로 개선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결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결국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본 정책의 형평성을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기에 현 정부는 지난 대선 승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는 본 정책 이외에도 여러 공약들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대선 승리가 곧 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일반인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본 정책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본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본 투명성 항목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 중립적 평가를 내린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다는 점과 실제 집권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입안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본 정책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 사례에서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본 기관에 대해 조속히 간접고용을 직접고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실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정책이 책임성을 결여한 포퓰리즘적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역시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중립적 평가를 내린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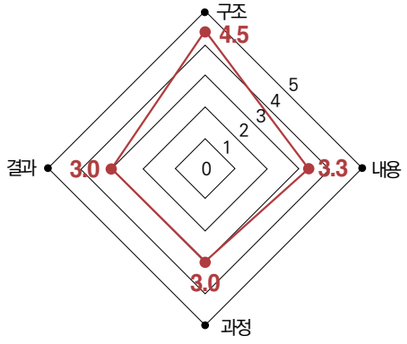
정책이 도입된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본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본 정책의 효과에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는지의 여부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시 매우 높은 만족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하지만 본 정책이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재원 조달에 대한 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항목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해서는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의 이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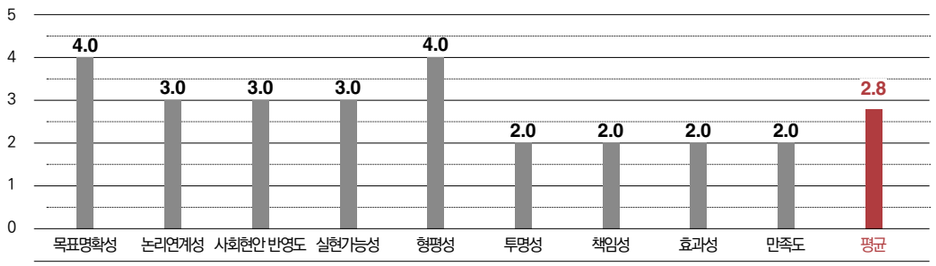
[그림 4-3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통신비 부담 경감

통신비는 주요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다. 따라서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방향성에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통신사들에 압력을 가해 정부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식에는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다.

[그림 4-34] 통신비 부담 경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가계통신비의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민 가계의 통신비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과 현재 통신시장이 3개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과점 상태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핵심 수단은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적용하는 것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최대 4조 6천원까지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아시아투데이, 2017.6.23.), 이는 명백한 착시효과이다. 현재 이미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5%를 고려하면 평균적인 4만원 요금제의 경우 추가할인은 매달 2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할인액은 한 달에 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얼마나 절감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마저 통신사들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마지못해 이끌어 낸 동의라 모양새도 좋지 못하다.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두 번째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은 매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임시방편이고 소비자들은 알뜰폰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알뜰폰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7.9.16.).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천1원으로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88만원의 3% 수준이다. 통신비로 가구 소득의 3%를 사용한다면 적지 않은 액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다. 게다가 단말기를 제외한 통신비 기준만을 놓고 볼 때는 국가 간 비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2017.6.1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계통신비 문제가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민간기업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요금할인율 상향과 전파사용료 감면연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추가적인 인하폭이 크지 않고, 알뜰폰에 대한 인지도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 하에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쟁 촉진과 통신비 인하를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은 알뜰폰의 경쟁력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시장 경쟁 강화와는 다소 엇박자인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고, 기초연급 수급 고령자에 대한 감면도 제도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경감시켜주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통신비 관련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회에는 정부 외에 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시민단체, 유통업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관련 중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 운영된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범 초기여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대가 심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 참여 없이 반쪽짜리 협의회로 출범하였다는 점도 원래 취지와는 잘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일반 소비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기업들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요금할인율 추가 인상에 대한 통신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별다른 울림 없이 가라앉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의 이슈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추가 요금할인과 단말기 자급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큰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고려와 의견수렴 및 반영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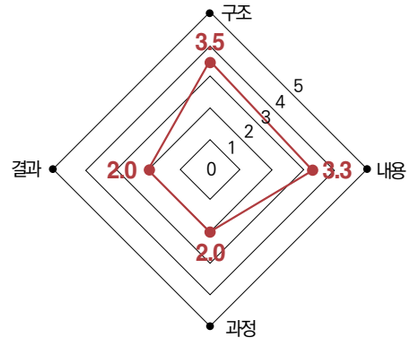
본 정책은 추가 요금인하를 하더라도 피부로 느낄만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1인당 2천원, 가구당 1만원 미만의 통신비 절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요금인하는 자칫 상충된 결과를 가져와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SKT, KT, LG 등 대형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는 곧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통신사의 마케팅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땅은 더 좁아지게 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피부로 느끼지 못할 성과를 위해 민간 기업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를 요구한 방식에서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정책 수단까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에 관해서는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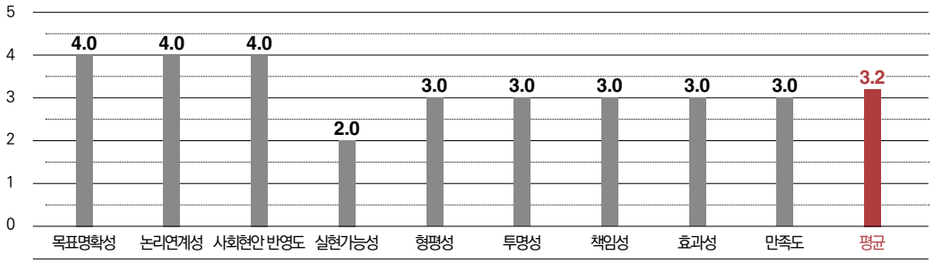
[그림 4-35] 통신비 부담 경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는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막대한 잠재적 위험을 수반한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 중심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생산 구조로의 궁극적인 변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최적 에너지 믹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에너지 생산 구조 변환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끌 수 있는 도구적 방안들이 제한적으로만 제시된 상황이다.

[그림 4-36]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본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해 보인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본 정책의 목표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확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현실적 수준을 논외로 둔다면 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단계적인 탈원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해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관련 산업 및 지역의 연착륙을 위한 훌륭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일반인들 사이에 높아져 있다는 점과 더불어 선진국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의 사회 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정책을 통해 탈원전 이슈가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책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본 정책은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탈원전 이후 필요한 추가적 에너지 수요를 무리 없이 채울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 당국은 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창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공급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이러한 기술적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추동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목표는 명확하고 방향성도 맞지만 가까운 미래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정책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방안과 더불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연 여건상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은 특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고려해야 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탈원전 과정에서 획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원전해체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존의 원전 관련 손해집단의 손실을 보전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형평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관련 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운영 및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향후 획득할 원전해체기술이 현재 원전산업이 누리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물론 본 정책은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원전 운영 및 시공기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원전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이러한 기존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목은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정책의 도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본 정책 관련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신고리 5.6호기 공론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민들 간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탈원전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본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합의된 정책의 방향성 아래에서 본 정책의 이행속도와 범위는 기술적 고려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책임성 역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며 여러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전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은 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정한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기존의 원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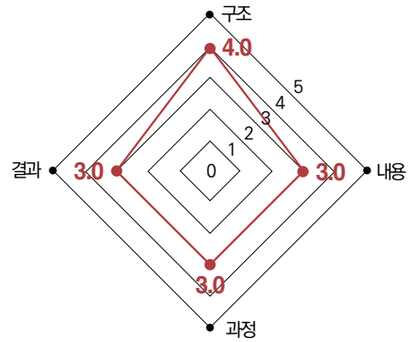
본 정책 또한 현재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본 정책의 효과는 결국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확보에 달려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 정책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래 이슈를 사회 전면으로 부상시켜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정책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은 그 구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내용, 과정 및 결과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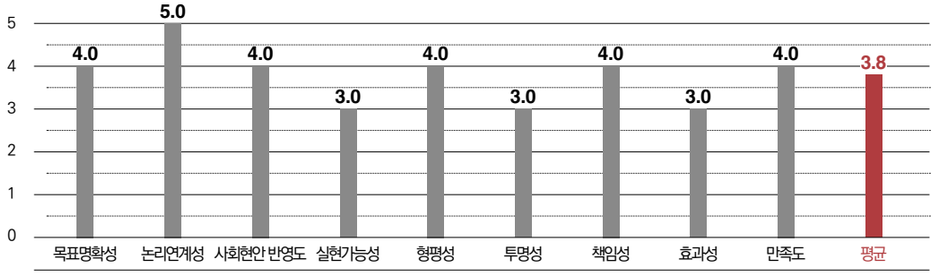
[그림 4-37]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 특히 하도급 가맹 및 유통업이 자영업의 주요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2017년 7월 현재 가맹점 22만 여 개), 해당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구조 확립은 매우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림 4-38]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본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래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주요 원인인 갑을 간 정보 비대칭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가맹점주·영세 유통업자의 경우 가맹본부·대규모 유통업체에 비해 관련 정보 수집 및 가공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양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정책 대안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또한 이를 위해 법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부처 차원에서 표명함으로써 본 정책이 제시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자기충족적(self-fulfilling) 성격을 띨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소위 '갑질'문화로 표현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맹 및 유통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렇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부와 관계당국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 정책의 실현 자체를 담보하지는 못한다. 즉 정책 의지와는 별개의 영역인 정책 실행능력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 자체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그 실행능력을 평가할 척도가 부족한 현재로서는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현재의 불공정거래 관행 아래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의 형평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대기업의 이득은 부당한 지대추구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의 투명성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정책이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분명 대기업,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 등 정책 시행에 따른 손해 집단이 존재한다.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손해 집단들 역시 자발적으로 제도에 순응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이는 정책 입안 시 손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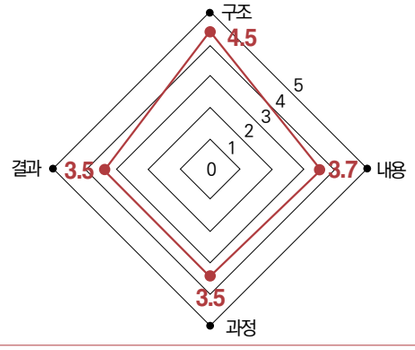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다. 앞서 정책의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정책의 성공 여부는 관계 당국의 정책 실행 능력에 달려있다. 특히 기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통해 이득을 보던 집단의 반발이 예측되는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 결과의 효과성과는 별개로, 본 정책의 목표 자체가 매우 시급한 민생현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가맹 및 유통이라는 세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이 추후 다른 경제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책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정책 그 자체로서는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정책 실행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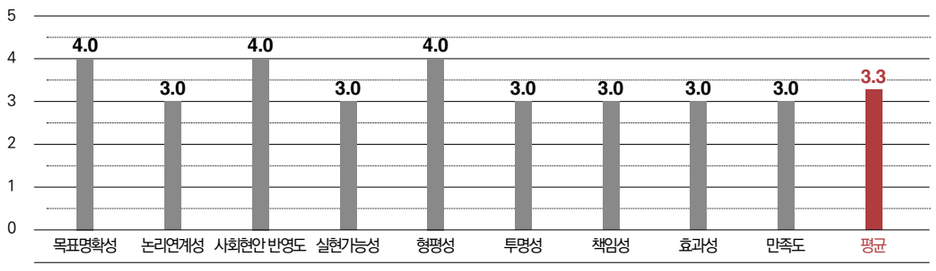
[그림 4-3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청년창업지원

본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묶어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및 육성을 도모하며, 2017년 청년실업률이 11.3%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40] 청년창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일반실업률의 세 배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청년 창업을 통해 완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육성이라는 대체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소 이질적일 수 있으나 청년창업 육성이라는 뚜렷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청년창업지원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서 우수한 청년 창업가의 사업화 및 후속 과정을 지원하고(창업성공패키지), 유망 중소, 중견 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을 제공하며(창업인턴제), 청년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청소년 비즈쿨), 실전형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등(창업 아카데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청년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청년 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기 생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밀착 멘토링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에서의 멘토링 기능을 하는 기관이 벤처캐피털이다. 하지만 정부 사업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멘토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한 선배 창업자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올해 청년 실업률은 11.3%, 고용보조지표인 청년 체감실업률은 21.7%에 이른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비중은 20·30·40대를 통틀어 가장 높고 임금도 낮아서 지난 10년 간 거의 제자리였다. 특히 2006년에서 2014년까지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한다는 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헤럴드경제, 2017.12.10.). 가장 생산적으로 일해야 할 시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비효율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청년 창업에서 찾으려고 하는 본 정책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창업의 다양한 단계에서 청년창업가를 도와 성공적인 청년 창업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창업 통계를 살펴보면 청년 창업의 비중은 극히 낮다. 2013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대 창업은 불과 1.4%, 30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6%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창업은 중장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40대가 33.4%, 50대가 37%이다. 즉 청년 창업은 성공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창업숫자가 매우 적어서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일반 창업에 대한 지원 비중에 비해 훨씬 큰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 현황 지도를 보면 일반 창업이 기술 창업에 비해 월등히 많다. 현실과 정책 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과 관련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 지자체, 심지어는 공공기관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난무하고 있어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면이 심하다. 따라서 본래 의도한 목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주요 타겟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이다. 따라서 본 정책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수당과 같이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제외하면 취업 문제가 심각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을 돕는 정책이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최근 현대경제원(2017)의 발표에 의하면 20대 청년 창업의 대부분은 생계형 서비스업이며, 기술 창업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형 창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낮고 폐업률도 높아서 3년 안에 4곳 중 3곳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에 나선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창업자금마련과 수익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프로그램들이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고 있는지에 다소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사업이 대상으로는 기술 창업에, 내용으로는 교육 멘토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정책과 현실 간의 미스매치가 엿보인다. 그리고 이는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니즈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청년 창업 정책이 가지는 현실과의 미스매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창업 지원은 우선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 창업에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창업비용과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의 내용도 여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갈 필요가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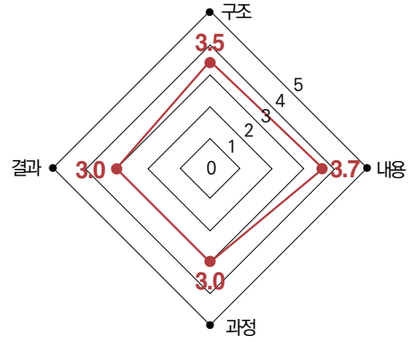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실업 완화라고 하면 본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기존의 20대 청년 창업 비율이 극히 낮고, 그 내용도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의 비율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청년 창업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기창업비용과 수익창출을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단순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기술창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기술창업 비중을 높일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일부 학자들은 생계형 창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나 경제기여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독려하는 정책은 자원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기술창업 지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hane, 2009). 우리나라의 실정은 좀 달라서 생계형 창업이라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기술창업 비중 증가가 정책 성패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청년창업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그 내용과 구조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정책의 과정과 결과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4-41] 청년창업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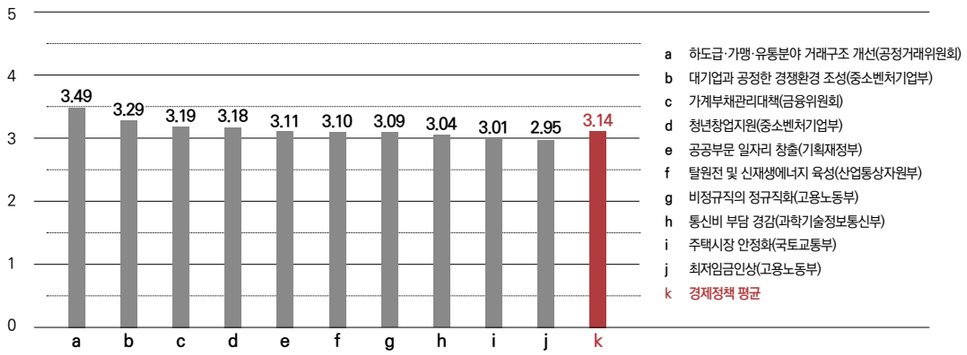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경제정책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그리고 본 연구진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균이 3.14점으로 나타났다. 2016년 평균이 2.9점, 2015년 평균이 3.1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가 점수에 상당한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정책분야는 2014년 평가를 시작한 이래로 올해의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작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야기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전반적인 상실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대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전반적 경제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받은 정책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관찰된다. 우선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갑-을 문화의 개선과 공정한 사회 건설을 취지로 하는 하도급 가맹·유통 분야 거래구조 개선,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같은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평균 3.49점과 3.29점을 얻어 다른 정책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위로 평가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3위와 거의 차이나지 않지만 4위로 평가된 청년창업 지원 역시 우리 경제의 탈출구로서 꼭 필요한 분야의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별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매우 뚜렷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원래의 의도대로 고소득층이나 자본가의 파이가 저소득 근로자로 이전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 간의 파이 나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형평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래 의도했던 대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자리를 줄이므로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한시적 고용보조금은 민간부문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기에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DTI, DSR 등 부채의 총량규제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 또한 요구된다. 특히 부채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나치게 투기수요의 억제에만 맞추어져 있고 중산층 실수요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방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의 원인도 있지만 소득 증가로 인한 보다 나은 주거지에 대한 갈증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기수요의 규제에만 초점을 둔 본 정책은 중산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줄여서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다른 주요 정책들과 더불어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기에 정부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 및 대안의 구체적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측면에서 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 목표 달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은 경제적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정거래 관행 정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정책의 주무부처가 승격되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관련 정책들의 실패 사례를 볼 때 효과성에 대해 확언하기는 이르다.

여섯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자는 취지로 실행되는 정책이다. 채용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경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목표의 명확성과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원 조달에 대한 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의 목표는 요금할인과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부담 경감이다. 그러나 요금할인을 지금보다 5% 상향하는 정도로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다. 할인액으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 촉진도 알뜰폰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이 가지는 목표와 방향성은 설득력이 있으나 정책수단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적잖은 회의감이 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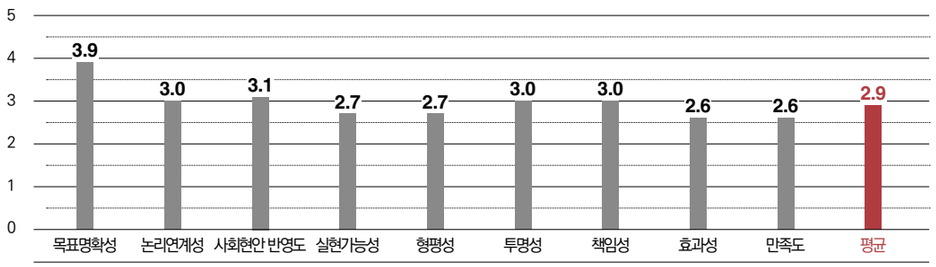
여덟째,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에너지 생산 구조의 재편을 위한 과정으로 정책의 목표와 대안에 대한 설계가 나름 명확하다. 에너지 생산 구조 전환이라는 환경·경제적 과제를 전면에 부각시켜 사회적 합의를 상당 부분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이 요구되는 기술 실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에서는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원전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모순에 있다.

아홉째,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은 소위 '갑질'문화로 표현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다른 분야의 관행 개선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손해 집단의 제도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견 청취 과정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 또한 정책적 의지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책 실행능력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입안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져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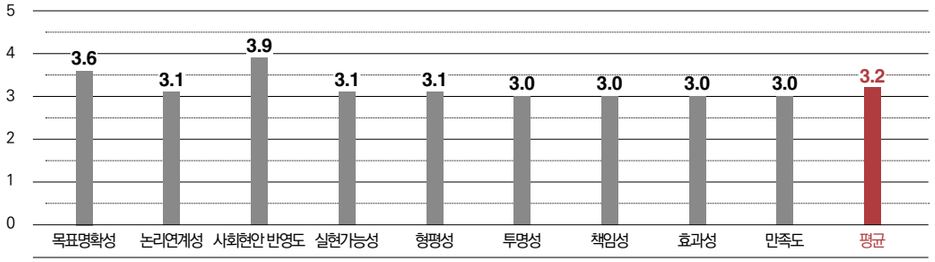
열 번째, 청년창업지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창업지원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멘토링을 위해선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한 선배 창업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창업의 대부분이 일반 창업임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일자리 효과가 큰 기술창업을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현재 프로그램이 대부분 기술 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일반 창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그것이다. 특히 청년창업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창업 비용경감과 수익창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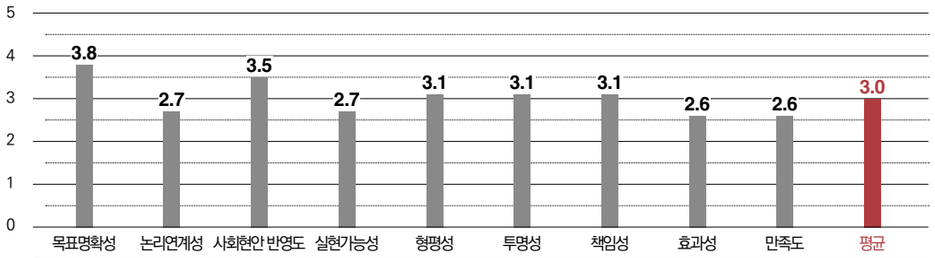
최저임금인상(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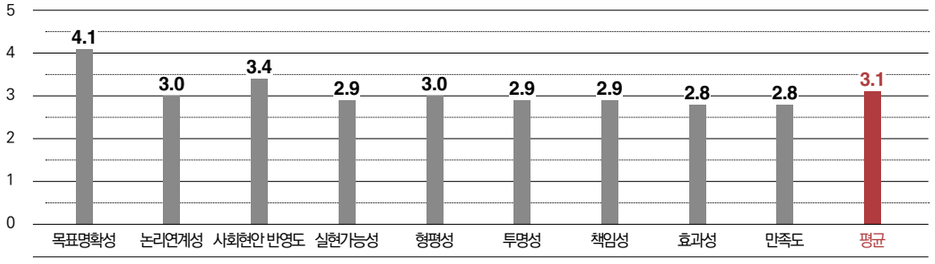
가계부채관리대책(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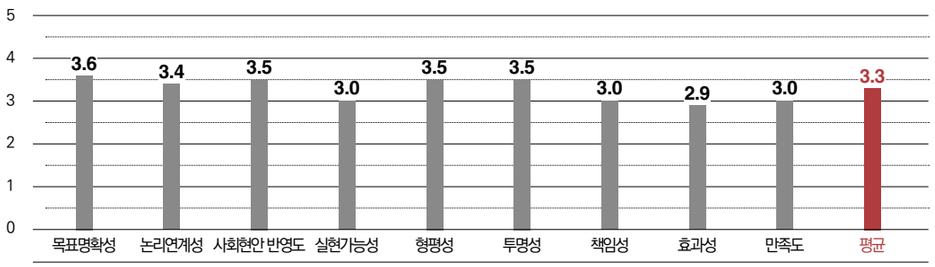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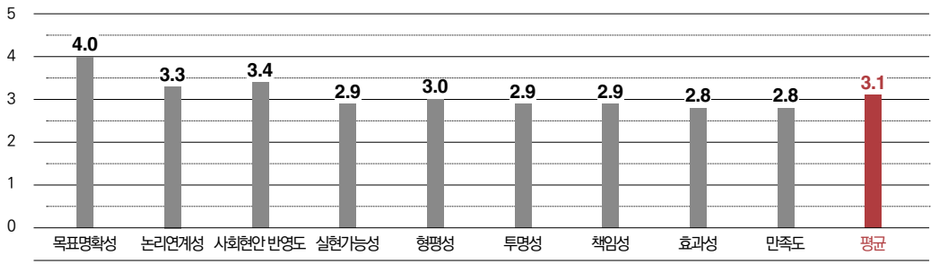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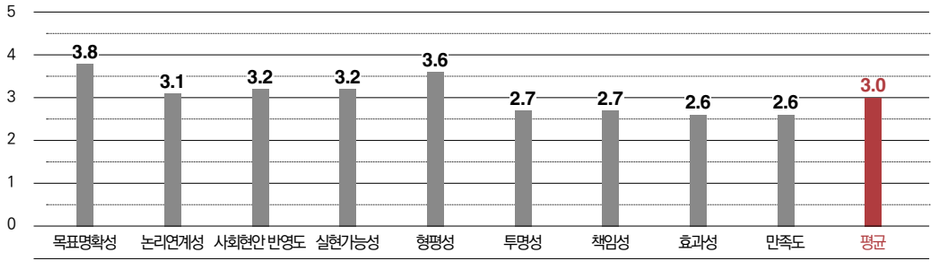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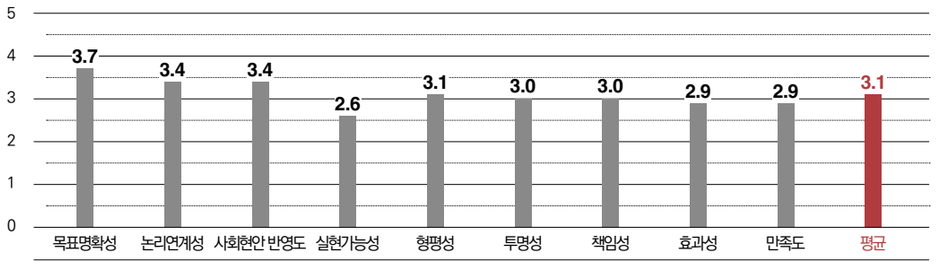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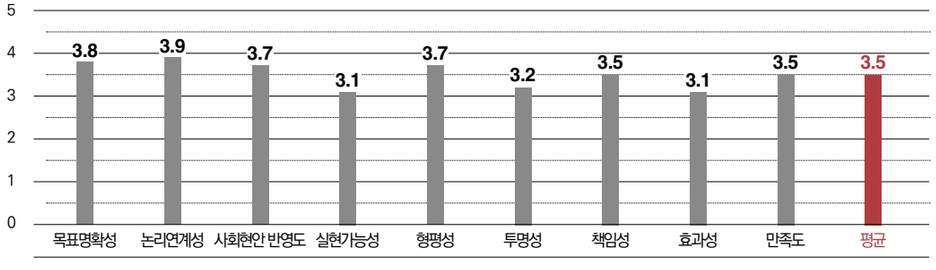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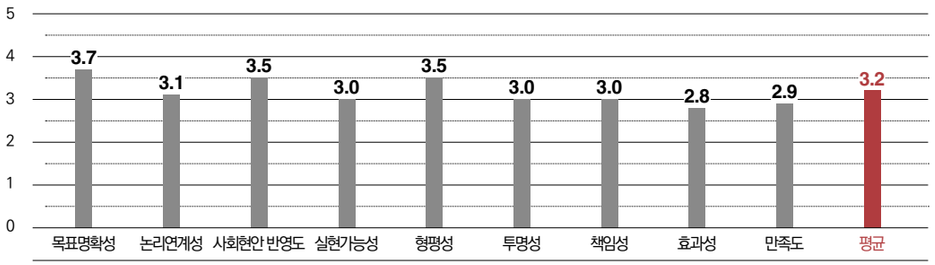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하도급 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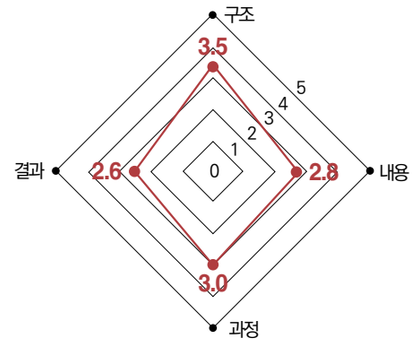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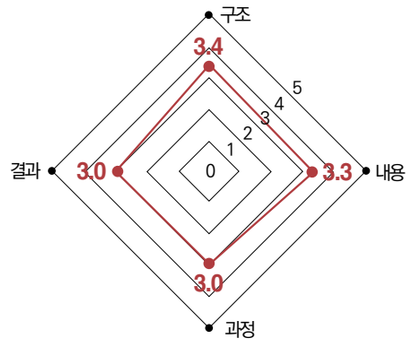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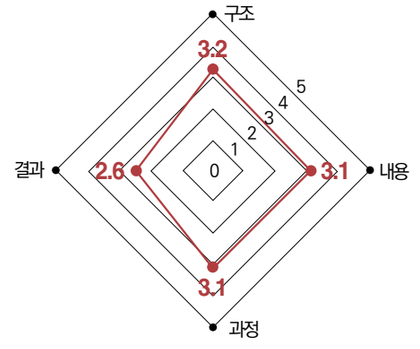
최저임금인상(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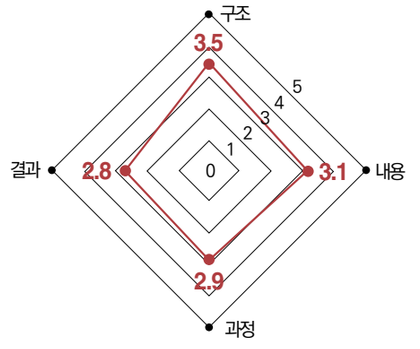
가계부채관리대책(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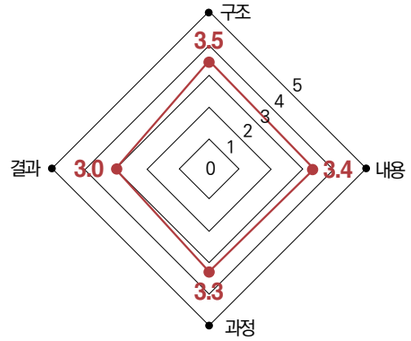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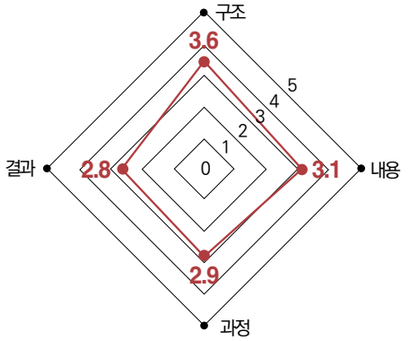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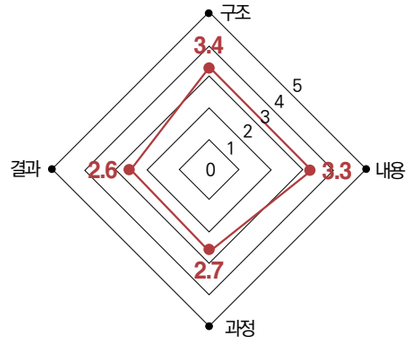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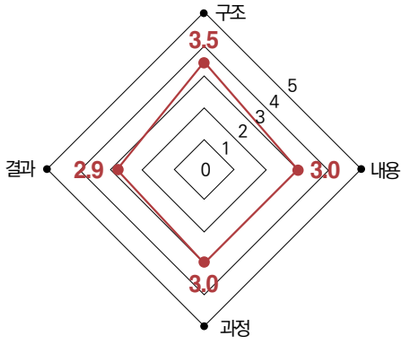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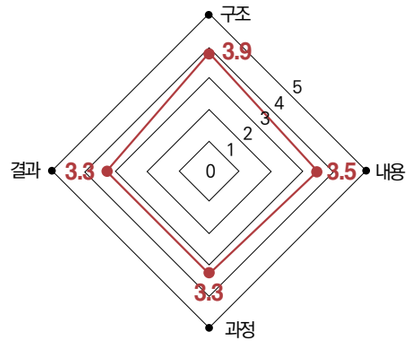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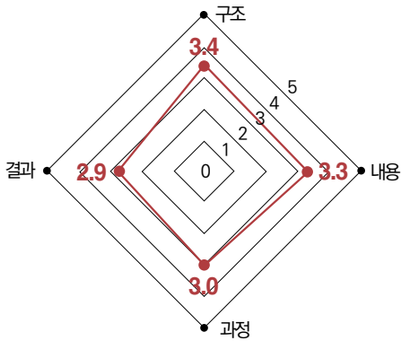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하도급 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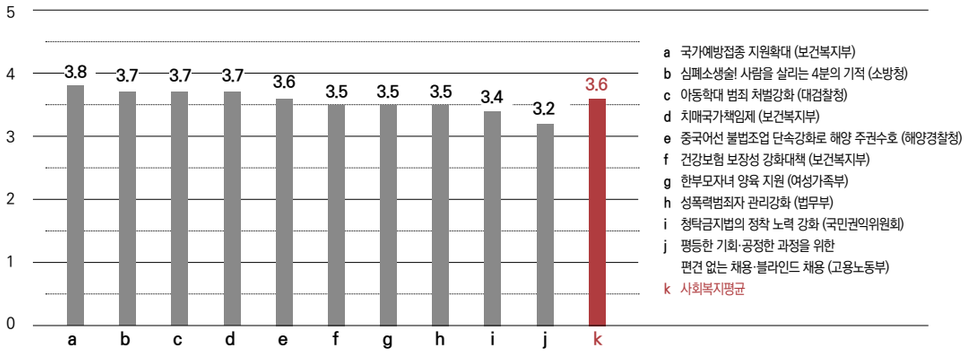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그림 4-45]는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별 설문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여준다. 사회복지분야 정책 10개의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 사이에는 0.6점의 점수차가 존재하며, 지난해의 0.3점에 비해서 격차가 늘어났다. 이것은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 사이에 평가 차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좋은 정책을 받은 평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보건복지부, 3.8점),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소방청, 3.7점),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3.7점),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3.7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주권 수호(해양경찰청, 3.6점)이다. 반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3.5점),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3.5점),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3.5점),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3.4점),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3.2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설문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인지도가 높다는 것 사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 인지도가 높거나 낮은 정책은 아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예방접종 정책은 사회복지분야 정책 중 전문가 인지도 및 일반인 인지도 순위가 모두 6위 정도로 중간 정도였고, 두 번째로 종합점수가 높은 심폐소생술 정책은 일반인 인지도는 2위였지만, 전문가 인지도는 9위였다. 반대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블라인드채용과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는 전문가 인지도에서는 전체 정책 중 2위와 1위였고 일반인 평가에서는 4위와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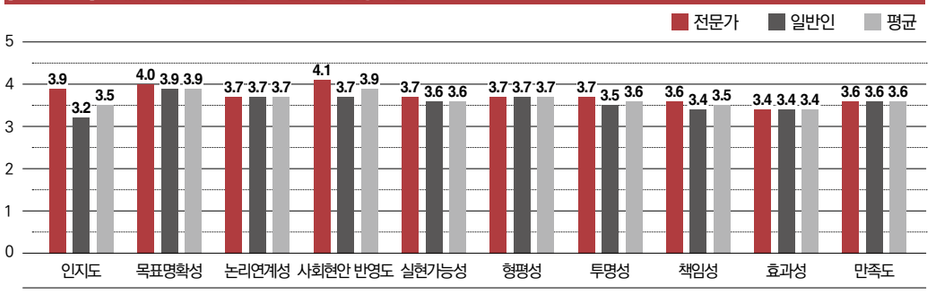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모든 정책평가의 세부영역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세부영역 간 평가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가 낮은 정책은 반대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고루 낮으며, 세부영역에서 구조, 내용에 비해서 과정과 결과 측면 점수가 낮았다. 평가점수가 높은 정책은 정책대상이 선택적이지 않고, 정책의 인과관계가 간결하며, 정책효과를 일반적인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는 전염병에 취약한 집단인 노인과 아동에 대하여 예방접종 보장범위를 넓히고, 더 편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령을 기준으로 누구나 그 시기에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그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율과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인데 정책의 파급효과가 일반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9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43.4%가 안다고 응답하고 25.4%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46] 치매국가책임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4.0점, 일반인 집단은 3.9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80%, 일반인 71.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4%, 일반인 6.6%보다 높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9점, 일반인이 3.7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6%, 일반인 62.3%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10%,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8.6%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점수는 전문가 4.1점, 일반인 3.7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86%, 일반인 내에서는 64.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4%, 일반인 10.3%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6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64%, 일반인의 경우 59.8%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8%, 일반인의 10.9%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7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2%, 일반인 63.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10%, 일반인의 경우 9.9%로 나타나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전문가가 3.7점, 일반인이 3.5점을 주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8%, 일반인 내에서는 55.4%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2%, 일반인의 1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4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62%, 일반인은 55.4%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2%와 일반인의 1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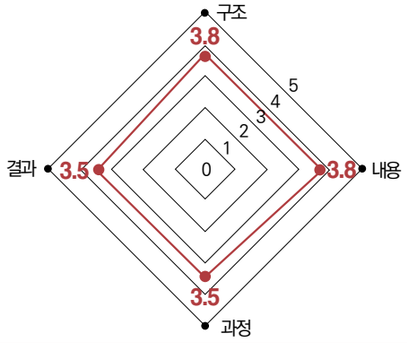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4점, 일반인이 3.4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52%가 긍정적으로 1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46.8%가 긍정적으로 15.5%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64%, 일반인이 55.8%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14%, 일반인 13.2%로 집계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도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8), 내용(3.8), 과정(3.5), 결과(3.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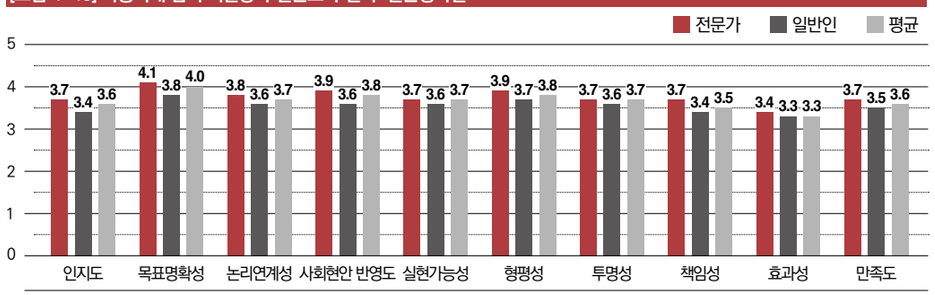
[그림 4-47] 치매국가책임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66%, 일반인 집단의 50.2%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해당 정책은 일반인 집단에서는 10개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이다.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48]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4.1점, 일반인은 3.85점을 주었다. 정책목표 명확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90%, 일반인은 71.9%인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에서 2%, 일반인에서 7.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목표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전체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 해당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알기 쉽고 분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주어진 정책수단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76점, 일반인은 3.6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보다는 낮지만, 전문가의 74%, 일반인의 59.5%가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전문가가 일반인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80%, 일반인의 62.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전문가는 평가점수 평균 3.92점, 일반인은 평균 3.64점을 주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서 해당정책이 우리사회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두 집단간의 인식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집단 모두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해당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평균 3.7점, 일반인은 3.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특히 전문가의 72%, 일반인의 58.6%가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인의 경우 58.6%만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인 평가 기준으로 다른 정책에 비하면 실현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는 3.9점, 일반인 점수는 3.6점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책의 형평성 점수를 비교적 높게 준 것이 확인된다. 전문가의 70%, 일반인의 63.4%가 해당 정책의 형평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 집단의 단 2%, 일반인 집단의 10.8%가 형평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형평성 측면에 집단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에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가는 3.72점, 일반인 3.6점이라는 평가점수를 주었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전문가는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반인은 58.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모든 집단이 중상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평가점수로 3.66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정책의 책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70%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일반인 집단에서 정책이 책임성 있게 추진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4%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문가와 비교하면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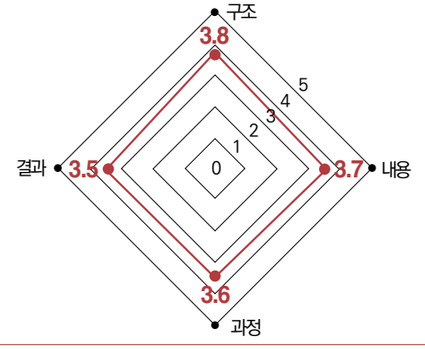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측면에서는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측면보다 낮은 평가점수가 발견된다. 정책이 처음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물어봤을 때 해당정책에 대해 전문가. 일반인 모두 평균 3.3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50%, 일반인의 44.7%가 정책의 실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17.7%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다른 사회복지 영역의 정책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비하여 만족도 평가는 보다 긍정적이다.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68점, 일반인은 3.4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의 52.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해서 해당정책에 매우 높은 만족도 점수를 주고 있다.

세부 평가항목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차이가 큰 평가부문들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는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 가능성, 책임성 측면에서 해당정책을 일반인에 비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세부평가가 정책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 처벌강화 정책은 일반인 집단에서도 정책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지만, 세부평가에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중간정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정책평가나 만족도 측면을 평가할 때 더 낮은 점수를 주었을 수도 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8), 내용(3.7), 과정(3.6), 결과(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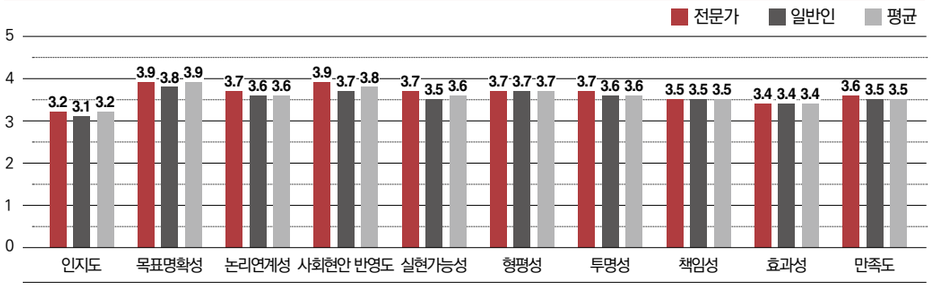
[그림 4-49]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정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46%, 일반인의 40.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인지도가 다른 사회복지 영역 정책과 비교해서 가장 낮고(10위) 일반인의 인지도도 낮은(8위) 정책이다.

[그림 4-50]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문가는 3.88점, 일반인은 3.85점이라는 평가점수를 주었다.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76%, 일반인 6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해당정책에 대해 전문가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점수를 높게 주지 않았지만, 일반인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목표의 명확성 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각각 3.66점, 3.59점으로 중간정도의 점수를 주었다. 두 집단의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전문가 60%, 일반인 57.2%로 사회복지 영역의 다른 정책에 비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88점, 일반인은 3.67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해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전문가의 78%, 일반인의 61.7%가 해당 정책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점수는 3.66점, 일반인 점수는 3.54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영역 평가정책에 비해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64%, 일반인의 53.6%이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10% 정도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목표와 혜택을 받는 집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3.7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 집단의 70%, 일반인 집단의 62%가 해당 정책의 형평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는 각각 3.66점, 일반인 3.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70%, 일반인 집단의 57%가 정책의 투명성 점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불법단속이라는 기본적인 정책특성상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강화라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문가 3.5점, 일반인 3.48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54%가, 일반인은 51.4%가 책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일반인은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해당정책의 책임성 수준을 높다고 보는 반면, 전문가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책임성 수준을 낮게 판단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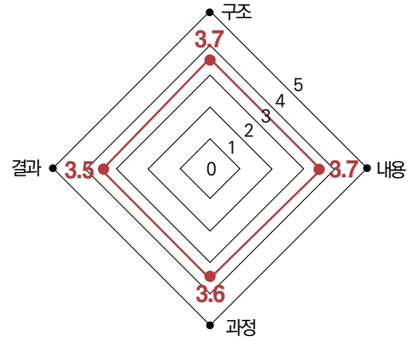
정책이 기대대로의 결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일반인이 모두 3.38점이라는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의 48%, 일반인의 45.8%가 정책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 영역 정책과 비교하면, 보통 수준의 평가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가는 3.62점, 일반인 은 3.47점을 주었다.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문가 58%, 일반인 48.9%로, 전문가의 정책만족도는 일반인의 정책만족도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 특성상 대중이 그 효과나 결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양경비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대중에게 인식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종합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과정(3.6)과 결과(3.5) 측면보다 정책의 구조(3.7)와 내용(3.7) 측면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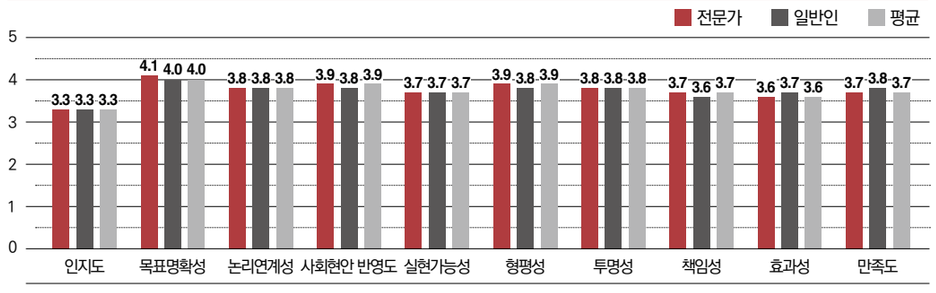
[그림 4-51]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해당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50%가 안다고 대답하여, 다른 사회분야 정책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전문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2%였지만,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높은 수준이다.

[그림 4-52]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4.06점, 일반인 4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86%, 일반인 76.8%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4%, 일반인 3.8%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78점, 일반인이 3.79점으로 거의 같은 점수를 주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70%, 일반인 68.8%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 6%, 일반인 집단 내에서 8.1%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집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9점, 일반인 3.81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74%, 일반인 내에서는 70.3%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가에서 해당정책의 사회현안 반영점수는 모든 사회복지 정책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74점, 일반인은 3.75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62%, 일반인의 경우 67.4%에 이른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비하면 평가점수는 약간 낮아지지만,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94점, 일반인은 3.84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82%, 일반인 71.3%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해당정책의 형평성을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8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은 두 집단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 평가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투명성이 문제가 될 만한 정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투명성 점수를 높게 준 것은 정책수단의 성격이 '교육'과 '홍보'라는 측면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6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64%, 일반인의 58.6%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4%와 일반인의 7.8%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책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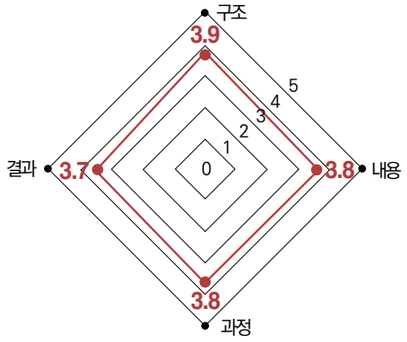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6점, 일반인이 3.6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62%가 긍정적으로, 1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60.4%가 긍정적으로, 9.4%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결과 부분의 평가점수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두 집단 모두 정책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7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64.0%, 일반인이 64.7%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복지 영역의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만족도의 수준이 높다.

다른 정책에 비해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세부평가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 평가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9), 내용(3.8), 과정(3.8), 결과(3.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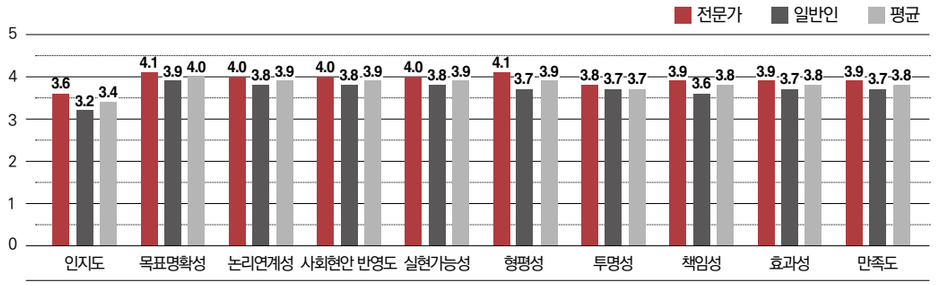
[그림 4-53]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해당 정책을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60%, 일반인은 42.5%가 안다고 대답하였다. 다른 사회분야 정책에 비교하여 중간 정도의 인지도 수준이다.

[그림 4-54]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 평가는 전문가가 4.1점, 일반인 3.9점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84%, 일반인 75.6%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이 준 목표 명확성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특히 전문가 집단은 전체 사회복지 영역 정책 가운데 해당 정책에 최고점을 주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가 3.9점, 일반인이 3.8점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78%, 일반인 69.4%로,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정책대안이 적절하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9점, 일반인 3.7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78%, 일반인 내에서는 67.8%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서 해당 정책이 우리사회의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국민예방접종의 지원확대정책이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실현가능성을 가지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4점, 일반인은 3.8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예방접종 확대정책에 대해서 사회복지영역 정책 중 최고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80%, 일반인의 경우 69.9%이다. 다른 평가측면에 비해서도 실현가능성 평가점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지원의 대상을 다소 늘리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4점, 일반인은 3.7점을 주었다. 국가예방접종의 형평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 84%, 일반인 69.2%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하면 형평성 평가는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책의 파급효과가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책임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는 3.8점, 일반인이 3.6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추진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2%, 일반인 62.5%로 나타났다. 국민예방접종의 대상확대 정책의 투명성 평가는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평균점수가 높은 편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8점, 일반인은 3.6점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정책의 책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76%, 일반인의 59.5%로 나타났다. 모든 사회복지분야 정책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성 점수를 주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에서 예방접종의 지원확대라는 정책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며, 환류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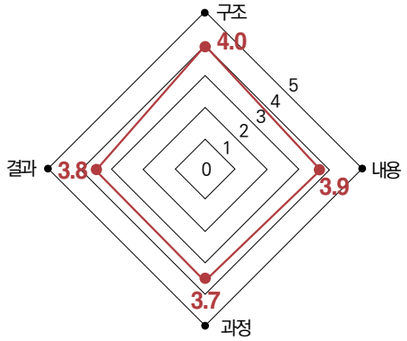
해당 정책은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해서 정책의 결과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점수는 전문가 3.8점, 일반인이 3.6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78%, 일반인은 6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을 비교하면 다소 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해당 정책에 최고점을 주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9점, 일반인은 3.7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76.0%, 일반인이 64.7%로 집계되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해당정책에 사회복지 영역의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주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정책에 대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정책 가운데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세부 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점수가 높다. 특히, 다른 정책과 다르게 결과 측면을 포함한 구조, 내용, 과정, 결과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4.0), 내용(3.9), 과정(3.7), 결과(3.8) 점수로 세부평가별로 고른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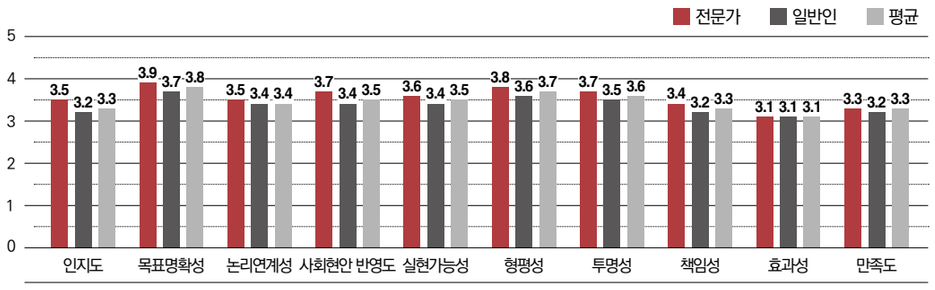
[그림 4-5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의 인지도는 평균 3.3점(전문가 3.5점, 일반인 3.2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전문가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일반인 인지도는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5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9점, 일반인이 3.7점을 주어서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여타 사회복지분야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중하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라는 정책의 목표가 이해하기 쉽고 변화 모습이 분명한가라는 평가항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에서 각각 74%, 65.5%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확인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점수는 목표의 명확성 점수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하위에 속하는 평가점수를 주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4점으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인 집단에서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20%로, 긍정적인 응답의 51%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책이 사회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보통 수준에 못미치는 점수를 주었다. 지난 몇 년동안 성범죄자 관리강화 대책의 허점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목표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 3.8점, 일반인은 3.6점으로,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 중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성범죄사범을 정책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인식 차이가 설문 응답자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전문가 3.7점, 일반인 3.5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하면 투명성 점수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성범죄자 관리 대책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세부 정책인 신상정보 관리제도,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때때로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되어왔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이 투명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판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50%, 일반인 집단의 39.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반면 전문가 집단의 14%, 일반인 집단의 24.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전문가보다 일반인 집단이 정책의 책임성을 더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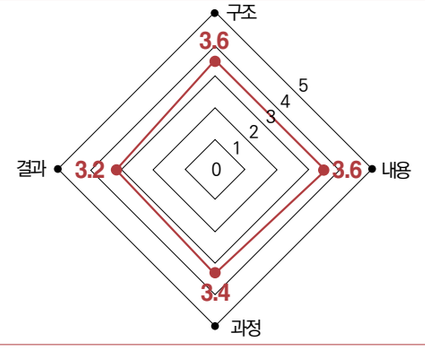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3.1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 측면의 부정적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32%, 일반인 집단의 35.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전문가 집단의 18%, 일반인 집단의 28.4%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전체집단에서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서도 역시 전문가 3.3, 일반인 3.2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문가 18%, 일반인 24%로 상당한 비율이 정책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전문가, 일반인 집단에 걸쳐 모두 하위권에 속하는 평가점수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구조(3.6)와 내용(3.6) 측면에 비해서, 과정(3.4)와 과정(3.2)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결과 부분의 평가가 낮아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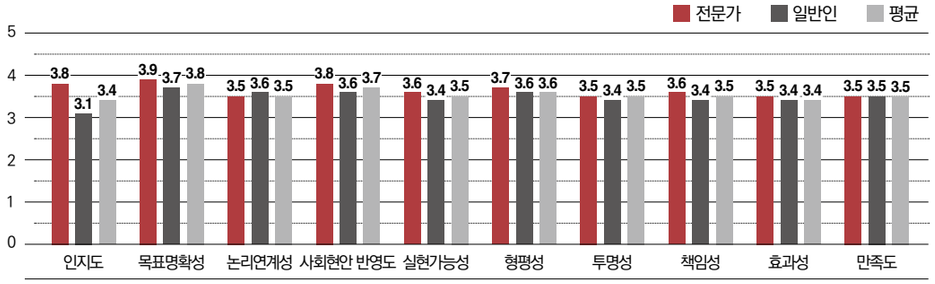
[그림 4-57]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8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1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6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36%가 안다고 응답하고 26.7%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 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9점, 일반인 집단은 3.7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4%, 일반인 66.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4%로 일반인 5.6%보다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이 3.6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8%, 일반인 57.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10%,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9.8%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4.0점, 일반인 3.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74%, 일반인 내에서는 57.7%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4%, 일반인 12.2%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0점, 일반인은 2.8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62%, 일반인의 경우 51.2%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10%, 일반인의 12.9%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6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6%, 일반인 58.6%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14%, 일반인의 경우 10.9%로 나타나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이 3.4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4%, 일반인 내에서는 58.6%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6%, 일반인의 12.7%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6점, 일반인은 3.4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66%, 일반인은 44.1%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0%와 일반인의 15.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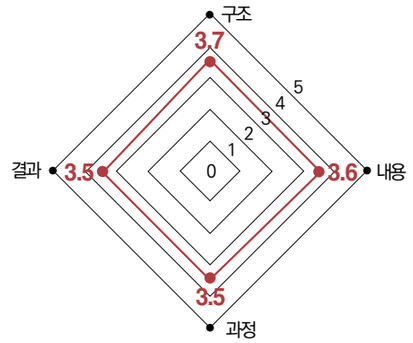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5점, 일반인이 3.4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58%가 긍정적으로 14%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45.7%가 긍정적으로 13.5%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5점, 일반인은 3.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62%, 일반인이 45.7%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14%, 일반인 13.5%로 집계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7), 내용(3.6), 과정(3.5), 결과(3.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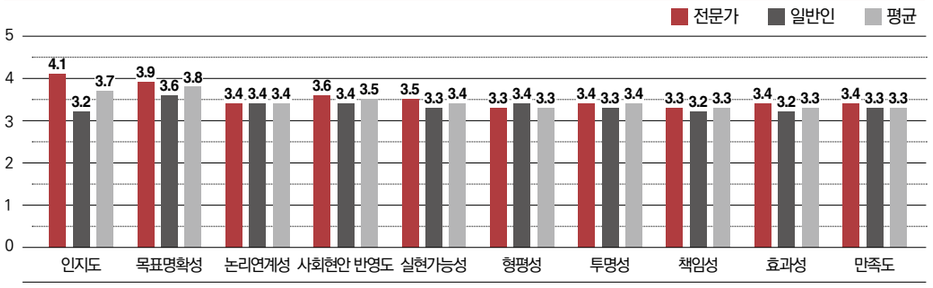
[그림 4-5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해당정책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76%, 일반인의 43.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지도 평가점수는 전문가 4.1점, 일반인 3.2점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전문가의 인지도가 높은 정책이다.

[그림 4-60]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9점, 일반인은 3.6점을 주었다. 각 집단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비중은 전문가 78%, 일반인 59.7%로 정책의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사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정착노력이라는 정책목표는 앞서 인지도 부문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정책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3.4점을 주었다. 정책 목표의 인지도와 명확성 측면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서 다소 차이가 보였던 것과는 달리 논리적 연계성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두 집단에서 모두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비해서 청탁금지법 정착노력 강화의 논리적 연계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 내용이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는 3.6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평균 3.4점을 주었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은 전문가 집단 66%, 일반인 집단에서 50.9%로 나타난다.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의 평가가 낮은 편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3.3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주었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복지 정책보다 평가 점수는 하위권에 속한다. 전문가집단의 64%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인집단은 46%만이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이라는 수단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강화'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특별히 차별받는 집단이 생겼을 것이라는 인식이 낮은 평가 점수의 이유라면, 이 부분을 개선하거나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3.4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은 전문가 집단에서 60%, 일반인 집단에서 43.8%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투명성 평가점수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많다고 보여지며 이런 점에서 정책 시행과 관련된 홍보 및 소통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점수는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2%, 일반인의 40%가 정책의 책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면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22.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정책 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책추진과정이 어떤 식으로 책임 있게 추진되고,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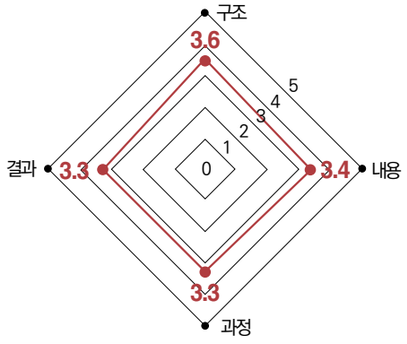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전문가는 평균적으로 3.4점, 일반인은 3.2점을 주었다.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58%, 일반인 집단에서는 41.6%로 나타나서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해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3.4,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전문가 56%, 일반인 41.6%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등 네 가지 분야별로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3.6)와 내용(3.4)에 비해서 과정(3.3), 결과(3.3)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평가점수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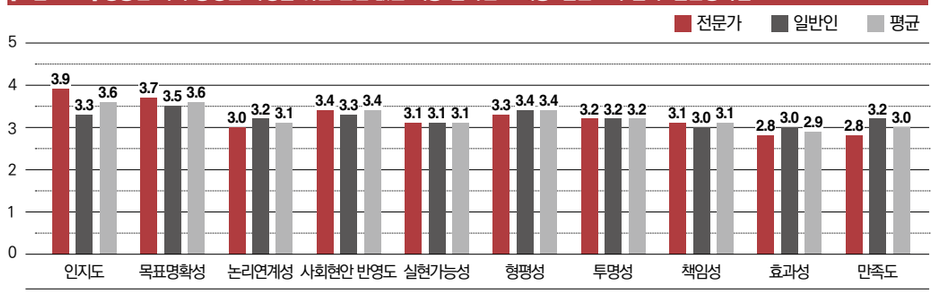
[그림 4-61]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9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7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45.8%가 안다고 응답하고 22.5%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62]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7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8%, 일반인 53.8%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 14% 일반인 13.6%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0점, 일반인이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32%, 일반인 40.4%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30%,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22.5%로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4점, 일반인 3.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0%, 일반인 내에서는 44.3%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16%, 일반인 19.3%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1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36%, 일반인의 경우 34%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30%, 일반인의 25.2%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3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54%, 일반인 49.7%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22%, 일반인의 경우 17.8%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2점, 일반인이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46%, 일반인 내에서는 38.7%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28%, 일반인의 22.1%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도 많음을 알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1점, 일반인은 3.0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44%, 일반인은 30.1%로 나

타났으며, 전문가의 30%와 일반인의 27.6%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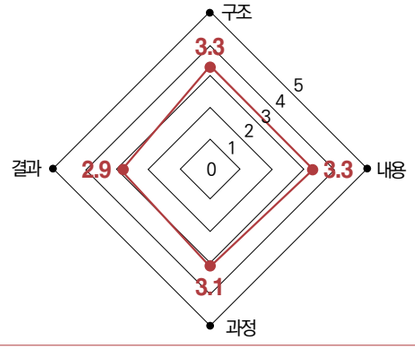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2.8점, 일반인이 3.0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24%가 긍정적으로, 3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29.3%가 긍정적으로 3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2.8점, 일반인은 3.2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28%, 일반인이 36.5%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40%, 일반인 23%로 집계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책인지도도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도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3), 내용(3.3), 과정(3.1), 결과(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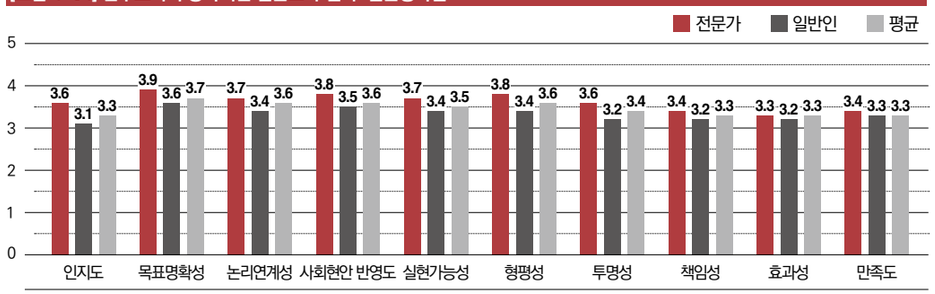
[그림 4-63]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3.6점, 일반인 집단에서는 3.1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 36.4%가 안다고 응답하고 25.9%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정책인지도가 전문가의 정책인지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64]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3.9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6%, 일반인 62%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2%가 일반인 8%보다 낮게 나왔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기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7점, 일반인이 3.4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68%, 일반인 52.1%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6%, 일반인 집단 내에서는 13.5%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3.8점, 일반인 3.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70%, 일반인 내에서는 55.6%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4%, 일반인 13.7%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7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64%, 일반인의 경우 49.2%에 이르는 반면, 전문가의 2%, 일반인의 13.4%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는 3.8점, 일반인은 3.4점을 주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70%, 일반인 49.6%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의 경우 8%, 일반인

의 경우 14.6%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6점, 일반인이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전문가 내에서는 64%, 일반인 내에서는 40.9%로 집계되었고, 전문가의 12%, 일반인의 17.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2점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문가 집단의 56%, 일반인은 37.4%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16%와 일반인의 18.5%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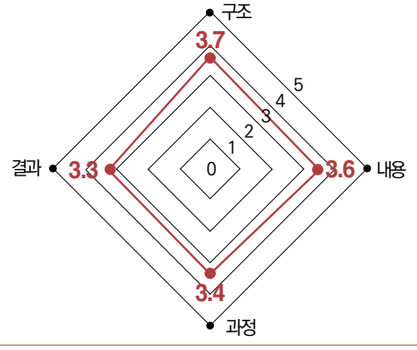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3점, 일반인이 3.2점을 주었다. 전문가의 40%가 긍정적으로 1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38.2%가 긍정적으로 19.8%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4점, 일반인은 3.3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문가가 48%, 일반인이 41%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문가가 12%, 일반인 16.4%로 집계되었다.

평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모든 평가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반인 집단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모든 평가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구조(3.7), 내용(3.6), 과정(3.4), 결과(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5]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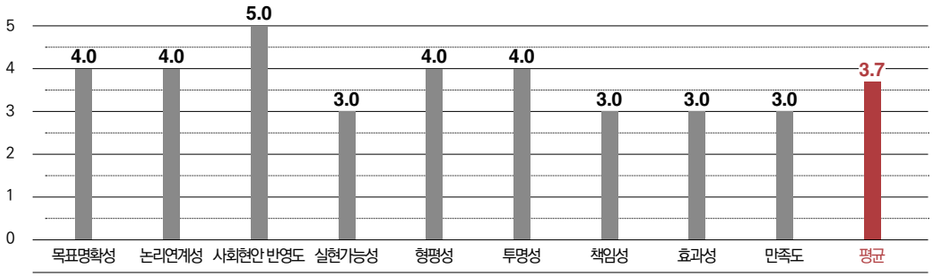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설계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가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목표의 명확성과 논리의 연계성, 형평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9월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현재 구체적인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이슈별 시행여부가 불확실하고 기존 치매관리종합계획과의 관련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책임성, 효과성 및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66] 치매국가책임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목표아래 2017년 9월 18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직 실질적인 이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이르나,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4점)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2017년 9월 18일 대국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발표된 이후 5가지 세부 정책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함께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1:1로 맞춤형 통합적인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구조, 치매 수준에 따른 지원기관의 상이한 역할 및 연계, '치매노인관리시스템'의 개설,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의 등급체계의 개선 및 치매 장기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을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가 발족·구성(2017년 9월 20일)됨에 따라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을 보다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대안이 정책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 긍정(4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치매노인의 돌봄이 본인과 그 가족의 재정적·육체적·심리적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설립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정책은 사회 현안을 적절히 잘 반영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된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이라고 사료됨으로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5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3점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의 구축, 치매노인 장애요양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치매관리법〉 및 〈노인정기요양보험법〉의 개정계획,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의 발족 등)이 현재 제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보통의 점수가 부여된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내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2017년 9월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내에는 단지 18곳만 개설할 수 있을 뿐이라는 조사가 존재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계획대로 설치하기 위한 공간 및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소 조급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대상인 치매환자의 범위가 이전에 비해 확대되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 및 검사, 경증 치매환자 및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4점)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치매 국가책임제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지원 혜택을 넓히기 위해, 이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고, 건강보험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율 또한 인하될 계획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2008년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차·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적 당위성 마련을 위해 〈치매관리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마련하는 등 입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들이 준수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정책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자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서 대대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아온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당면한 문제 및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로서 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4점)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법령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관리 및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는 2008년부터 지속된 치매관리종합계획(현재는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의 일환으로 기존에서 존재했던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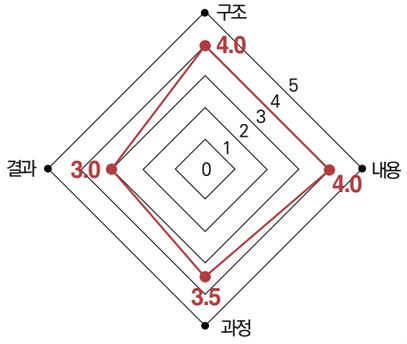
현재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이 발표된 상태로, 본격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최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해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기존에 집행되어오던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정책 효과성과의 비교를 통해 본 정책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우려를 고려한다면, 정책의 만족도를 현재 평가하기에는 매우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결과한 이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내용(4.0), 구조(4.0), 과정(3.5),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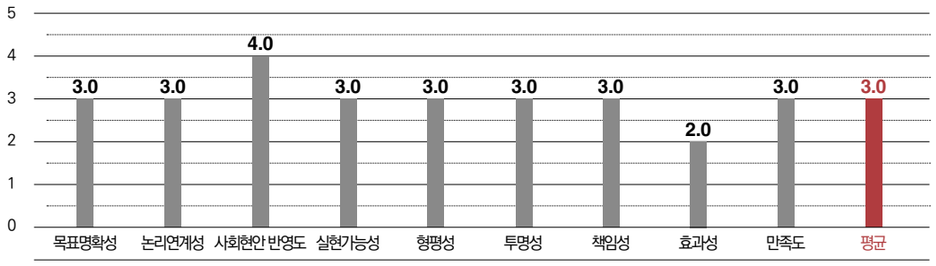
[그림 4-67] 치매국가책임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2013년 언론에 의해 보도된 울주·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대검찰청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는 종합대책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강화라는 측면으로써,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하여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다.

[그림 4-68]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를 통한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변화모습은 명확한 지표나 타임라인이 부재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책목표 명확성 수준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강한 법적 제재를 통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의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 강화 외에도 많은 정책수단이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가 강력할 때 아동학대 가해가 줄어들 개연성은 있으나, 이러한 징벌적 접근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비판을 고려하여 논리적 연계성 점수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3년 울주·칠곡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초점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피해를 직접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점에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아동학대의 신고체계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정의하고 개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중요한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점수(4점)을 부여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검찰청은 아동학대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사건의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인프라 구축과 함께 2016년 11월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엄정하게 다뤄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여부의 판단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문인력 충원과 사건처리기준의 정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과 이로 인한 반복적 소통과 교육의 어려움 등이 현실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실현가능성을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높여서 아동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안전수준이 높아진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일 것이다. 형평성은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아동학대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제정된 바 있고, 2014년 종합대책의 마련,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다양

한 관계부처(교육·법무·복지·문체·여가부 등) 관계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사후대책 중심이어서 피해아동의 보호나 아동학대 예방 측면의 대책이 미흡하고, 아동학대의 사법적 처벌 강화가 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재차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내지 재사회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의 반영 측면에서 정책의 투명성 측면은 보통 점수(3점)를 주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아동학대 처벌강화는 분명한 법적 근거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범죄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의 소지는 분명해보이나 이런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평가, 환류 및 모니터링 측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책임성 수준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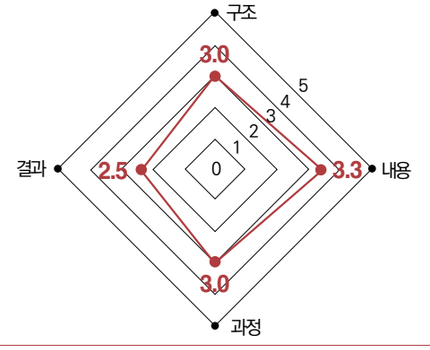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뒀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개별사건이 엄격해진 사법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줄어들었는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는가와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처벌강화 대책이 수립 시기를 2016년이라고 보면 효과를 확인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고 평가지표 또한 없어서 효과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접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동학대가 정말로 엄정하게 대처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기소율이 아동학대의 엄정대처의 내용적 측면을 말해주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할만한 지표의 개발과 처벌강화의 내용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수립된 이후 아동학대의 감소나 아동학대 처벌의 강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점수를 낮게 평가(2점)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여전히 새로운 아동학대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정대처를 약속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불분명한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보통 수준(3점)의 점수를 주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0), 내용(3.3), 과정(3.0), 결과(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해서 중간 정도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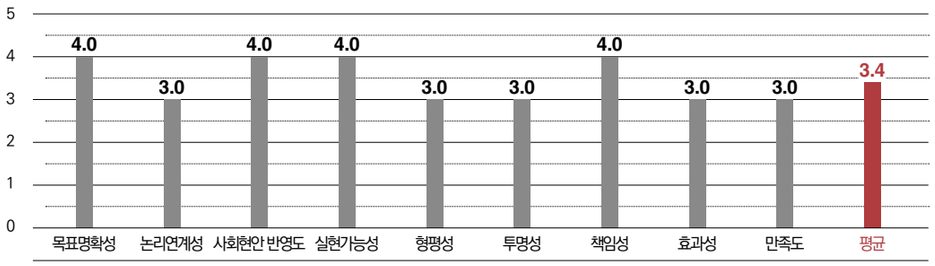
[그림 4-69]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정책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자원의 보호와 우리어민의 어획량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그리고 책임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0]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이를 통해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분명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선 단속건수라는 지표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은 수준(4점)이라고 평가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경은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특수진압대를 해양에 배치하는 등 집행력 강화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중국과의 대화를 시

도하였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수단들이 정책목표와 적절히 구조화되어 있지만 시기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분명하지 않아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의 해상에서 중국어선과 해경과의 마찰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지만, 2016년 10월에는 불법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단속정을 중국 불법어선이 격침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외국어선의 불법적 침입 및 불법조업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해역을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격렬한 저항으로 해경의 안전을 위협하고, 어민에게 단·장기적인 피해를 주며, 해상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엄정한 대처는 사회의 주요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불법조업 단속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경은 2016년 11월부터 중국어선에 대해서 '공용화기 무기의 사용 방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해양경비법 개정을 통해 근거법을 보완하고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를 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다. 정책에 필요한 인력·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4점)이라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정책은 일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해역에서 일어나는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해양의 안보, 치안을 지킨다는 더 큰 목표를 지니고 있다. 어획량이 보존되는 등의 파급효과는 일반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형평성 점수는 보통 점수(3점)를 주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은 2016년 10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용화기 사용요건의 확대, 사법처리의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또한 '무기사용 매뉴얼'을 작성(2016.11) 그 과정에서 학계 및 관계부처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을 보아 때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3점)으로 지켜졌다고 보여진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해경의 우리해역 내 선박에 대한 일상적인 해양 경비활동과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어선에 대한 집행은 모두 『해양경비법』이라는 분명한 법적근거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의 중국어선 단속수는 매달 기록되어 국가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의 중국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결정과 이에 따른 법 개정은 해양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의 저항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점사건('단속정 격침')에 대한 정책환류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어선 불법단속 강화 정책은 비교적 책임소재가 분명하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시스템을 갖춘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높은 점수(4점)를 주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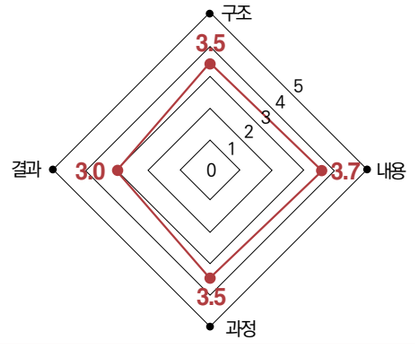
2016년 11월부터의 2017년 상반기의 불법어선 단속강화 정책은 비교적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상반기 중국어선 조업실태에 따르면 NLL해역 불법조업이 작년에 비해서 약 61% 감소하고, 연평도 주변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급감하였다. 그 밖에도 중국어선 조업이 줄어들면서 파급효과로 연평지역 꽃게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효과를 한 해의 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보다 긴 기간동안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종합적으로 보통의 점수(3점)를 주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인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해양경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었으며, 파급효과로 국내 어업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일 것으로 생각되어 정책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의 점수(3점)를 주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7), 과정(3.5), 결과(3)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내용, 구조와 과정 측면에서 다른 사회복지 정책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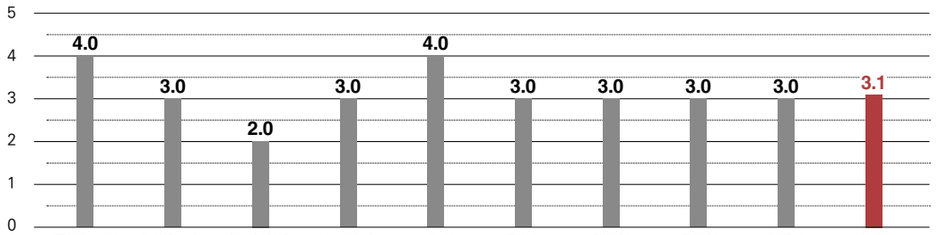
[그림 4-71]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심폐소생술은 급성 심정지환자의 최초 생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3만 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6년 16.8%로 미국(39.9%, 2005), 일본(36%, 200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심정지환자 최초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여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심정지환자의 생존퇴원률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일반인 교육 및 홍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성평가의 평가 항목별로 보면 목표의 명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사회의 거시적 목표와의 연계를 의미하는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72]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책은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정책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목표 명확성에 비교적으로 높은 점수(4점)를 주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급성심정지 환자의 소생과 뇌기능 회복에는 최초 목격자의 몇 분 이내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홍보한다는 내용의 정책대안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병원 밖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에 비하여 중요한 사회적 목표 또는 국가 목표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폐소생술 교육은 국민에 대한 기본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교육 가운데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안 반영도는 낮게 평가(2점)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이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책은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또는 홍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집행 장소로서 전국의 소방서와 소방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고, 2016년~2017년 사이에 전국 210개 소방서 안전교육담당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지역 소방서 예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일부 필요물품 비용을 직접 마련해왔던 비판점이 있었고(2016년) 2017년부터 각 소방서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미리 예산안을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마다 심폐소생술 지원 체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일반인에 대한 고른 정책 전달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보통(3점)을 주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심폐소생술의 교육 및 홍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정책목표는 병원 밖 민간에서 급성심정지 환자를 최초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급성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향상이다.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누구에게든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측면에 비하여 정책 형평성에 높은 점수(4점)를 부여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는 많은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성격의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은 보통 수준(3점)이라고 평가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소방청은 질병관리본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소방서 외에 보건소, 민간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주무부처의 책임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등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분명한 지표를 통해 정책의 모니터링과 환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정책에 의해서 소방청은 2016년 일반인 1,260,339명, 학생 627,460명, 공무원 158,939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책이 이행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급성심정지환자의 수는 약 3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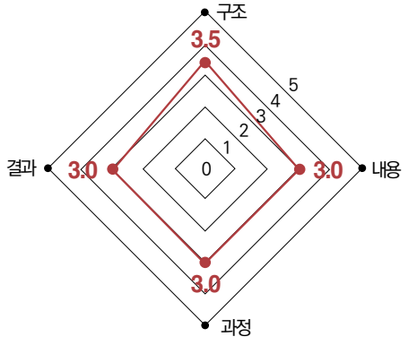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율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2012-2016년) 개선되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지표만으로 해당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양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일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도 해당 정책과 별개로 심폐소생술을 홍보 및 교육에 노력을 쏟고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단일부처에 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책효과성은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동안 다양한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해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심폐소생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국민들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점수(3점)를 주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0),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분야 정책 가운데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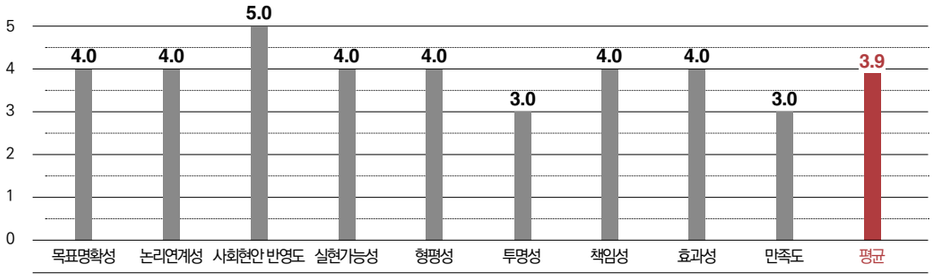
[그림 4-73]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예방접종은 우리 국민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이자 정책수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1954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매년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백신종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낮추고 접종대상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명확성,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책임성, 효과성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가기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투명성과 만족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4]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는다. 매년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백신종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 및 추진경과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긍정(4점)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반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평가하였다. 매년 접종대상자와 접종백신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보다 많은 양의 백신 수급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따라 추가로 확보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라 판단되어 사회현안 반영도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5점)의 평가를 하였다.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보건소를 포함해 병의원 같은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행정적,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1954년부터 약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법·제도적 측면에서 기초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백신수급 안정화를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시적 지역 내 인플루엔자백신 부족 시 조치사항 및 계획을 철저히 제시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매년 지원대상과 백신종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으로 평가하였다. 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백신을 1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생후 6~11개월에서 6~59개월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2015년 노인대상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기관이 확대되면서 노인의 국가예방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65세 이상 인구의 접종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정책의 투명성 측면은 보통 수준을 평가를 하였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정책 수혜대상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국가예방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관도 병의원으로 확대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전체 시행기관 1만 7586곳의 1.5% 만을 차지하는 보건소가 접종 실적 전체의 16%를 차지할 만큼 보건소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적이다. 특히 고령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정책으로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주기적인 정책 환류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1950년 〈전염병예방법〉제정 이후 정부는 예방접종 정책을 공공보건 향상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2013년 예방접종 지원정책인 '국정과제'로 지정되는 등 정책의 계획, 집행, 환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백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백신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관리 지침 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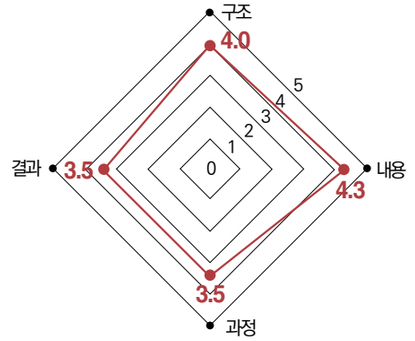
2017-2018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8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 대상자의 9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자의 80% 이상이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에 만족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양육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함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대해 대다수의 보호자가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책 만족도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방접종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국민적 염려 및 불안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방접종 백신 성분의 안정성,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우려 등 예방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학아동 필수예방접종 미접종률이 10%정도(연평균 약 5만명)이며 2016년도 이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지원이 없는 일부 접종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큰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예방접종 무료시행의 국민적 만족도가 높음에도, 동시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염려가 크고 지원되지 않는 일부 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3.0)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내용(4.3), 구조(4.0), 과정(3.5), 결과(3.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비교할 때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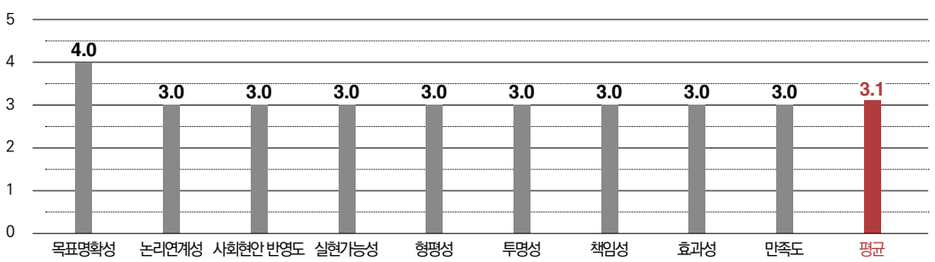
[그림 4-7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특히 구금형이 끝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재범을 예방하려는 정책이다. 세부정책으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있다. 평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목표명확성 측면에서는 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그 외는 평이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그림 4-7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정책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제도를 통하여 재범 개연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을 후속 관리하고 이들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다.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 모습과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은 점수(4점)를 부여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각각 구금기간이 끝난 성폭력사범을 관리·추적하고, 비정상적 성충동을 억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 행위를 억제하려는 정책수단이다. 성범죄자 가운데에서도 형량을 마친 뒤에 사회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만하다.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하며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행동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해서 비정상적 성충동을 제어하여 재범을 억제한다는 것이 정책수단에 대한 기대효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수단과 정책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모든 정책수단이 엄벌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재범 억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치료, 재사회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다양한 비판을 고려하여,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정책은 이미 구금이 끝난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관리·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의한 재범을 예방하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재범의 개연성이 높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법무부의 〈2016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는 다른 흉악범죄와 다르게 지난 10년 동안 강간 등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촬영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대폭 늘어나면서, 범죄자 유형이 초범이거나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사회 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범죄 특성에 비추어볼 때, 해당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제도는 각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제도적인 구축도 잘 되어있다. 그러나 관리해야 할 성범죄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하여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소의 전담 인력부족이나 과도한 업무량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 4066명 가운데 71.2%(2894명)가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자인데, 전자발찌를 도입한 2008년 205명과 비교하면 1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성범죄자 전담인력은 1인당 약 20여 명의 성범죄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업무량 과도로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판을 고려하여 정책을 의도대로 실현하는 실현가능성을 보통 수준(3점)으로 판단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성범죄자 관리 강화 정책은 이미 구금이 끝난 성폭력사범, 그 중에서도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집단만을 분명한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얻는 심리적 안정감, 사회 전체 안전수준의 제고라는 혜택을 생각해 본다면 정책집행으로 특정 집단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런 점에서 형평성은 보통 수준(3점)이라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성범죄자 사후대책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분명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이중처벌적인 성격,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 재사회화의 미고려 등 다양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정당성, 효과성, 대안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정책은 효과적인 운영에 여러 기관의 공조를 필요로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공개제도까지 포함하면 경찰서,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연계되어 있어 제도운영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자감독제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법무부와 경찰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만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정보 공유 등 공조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운영상 허점에 대하여 언론에 알려진 바 있으나, 부처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환류에 의해서 제도가 개선되어나간다는 점에서 책임성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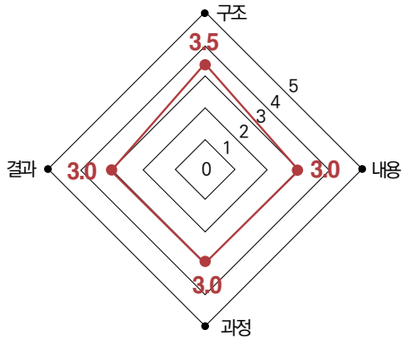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 강화정책은 구금이 끝난 성폭력범을 감시·감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가 정부에 의해서 자신의 행적이 추적될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 또는 제어약물을 통한 성충동의 억제 요인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감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전자감독을 한 다음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분명하게 낮아진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관리감독에 들어가는 노력 대비 재범률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이 존재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 역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비판과, 치료기간이 끝난 후 재범 억제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인 인식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가 과거에 비하여 감소추세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성범죄자 관리정책이 파급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효과성은 보통(3점) 점수를 주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책은 성폭행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엄벌주의에 근거하여 점차 확대되어왔다.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이 강화되어왔고, 재범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정부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화학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서 국민들은 만족스러울 것으로 본다. 다만 불분명한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면 심리적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3.5), 내용(3.0),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그 외에는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비교하여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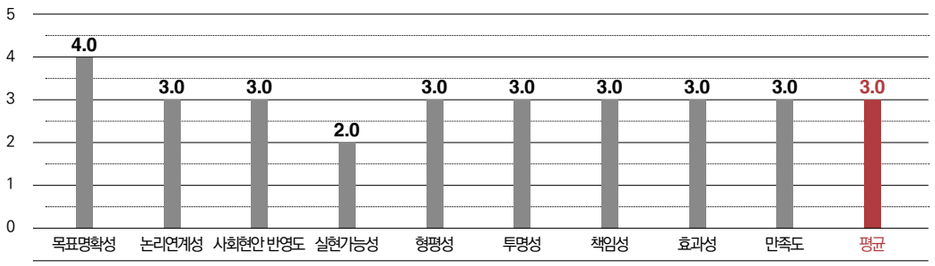
[그림 4-77]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년 8월 9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정책은 이전 정책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 정책과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정책과의 파격적인 차이로 인한 기대와 더불어 동시에 다양한 비판과 우려로 인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본 정책의 집행의 계획과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임 고려할 때, 논리연계성, 사회현안반영도,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7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본 정책은 2017년 8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또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과 재원 조달 방안 및 세부계획을 설명한 점에서 강력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긍정적인 점수(4.0)를 부여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정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법률안 연내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연내 마련,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연내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과 비교할 때, 정책 수단의 충분한 마련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이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이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의료비의 국가 책임성 강화라고 하는 거시적 국가 목표를 가졌다는 점, '문재인 케어'라고 불릴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목표라는 점, 본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은 기존의 중기적으로 지속되던 보장성 강화 계획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 파격적인 집행에 따라 이해관계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같은 보건의약단체)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사회현안 반영도는 보통(3.0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적, 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인 2.0점을 부여하였다. 본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며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된 수단들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의료 이용량의 증가,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불보상체계의 모색 필요, 재원 조달 방안의 우려 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기여(보험료 부담)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려할 때, 보장성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정책이 실현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이 현재 대비 18%가 감소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가 감소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취약계층(노인, 아동, 여성) 대상자별 의료비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은 별도로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의 경우, 횟수제한 및 나이제한, 본인부담 수위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3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본 정책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나, 현재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 문제와 관련된 보건의약단체의 반발이 큰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계와의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나, 원만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합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소재는 일견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본 정책은 2005년부터 지속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정책과제의 맥락에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 8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발표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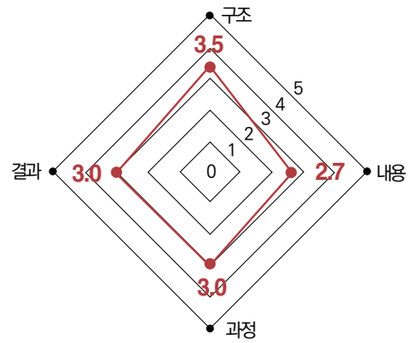
태로, 본 정책이 최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현재에도 계속해서 세부 추진계획들이 발표(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및 간호인력 수립 종합대책 연내 마련,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연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우려를 고려한다면, 정책의 만족도를 현재 평가하기에는 매우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다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결과한 이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3.5), 과정(3.0), 결과(3.0), 내용(2.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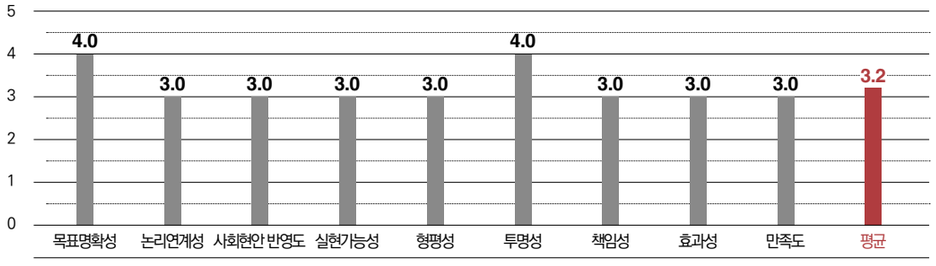
[그림 4-7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우리사회의 청탁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교육·홍보·지원 등이며 이를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를 확인해보면 목표의 명확성 측면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타 항목에서는 평이한 점수를 받고 있다.

[그림 4-80]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최근에 시행된 법이며 구체적 사안에서 법규정만으로 부정청탁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법령의 해석을 돕기 위한 부서의 설립, 자문단을 구성·운영,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수단을 채택한 것은 정책목표와 적절하게 연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들을 공직사회신뢰도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어떻게 연결시킬 지에 대한 전략은 애매하다. 그런 점에서 논리적 연계성을 보통(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2016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그 전해보다 3점 하락하여,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대규모의 부패·비리사건들이 반영되는 2017년 조사에서 더 낮은 평가점수가 부여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대책은, 청탁금지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실시한 작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현안 반영도를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 가운데 담당 부서의 설립, 자문단 구성, 통합검색 웹사이트 구축 등의 제도는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력들이 다부처 연계를 통한 정책이 아니라 소속부처 중심의 자문, 모니터링, 교육·홍보 중심의 정책이라 실현가능성을 보통(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 그런 이유에서 형평성을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시행 이후에도 청탁 문화 속에서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의문점이나 개선점 등이 제안되고 있다. 시행 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외에도, 경제에 대한 악영향,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기준이나, 농축수산업 등 일부산업의 가액기준 조정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이 자문, 모니터링,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히 활용되었고, 따라서 투명성이 다른 기준들보다는 잘 지켜졌다고 평가(4점)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시행은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다. 또한 법령이 일반인들에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차원에서 법시행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시행 1년 토론회와 인식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은 청탁금지법 자체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정착노력'이다. 정착의 노력에 대한 책임은 단일 부처 혼자 짊어질 수 없고, 여러 부처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임성 수준을 보통(3점)이라고 평가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의 성과는 다소 엇갈린다. 공직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청렴의식을 제고, 관행화된 부정청탁의 적발에 기여하며, 형사법의 사각지대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가 위축되고, 비현실적인 가액 수준으로 일부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이 가져올 전후방 연관효과는 시간이 경과한 뒤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이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때문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효과성을 중간으로 평가(3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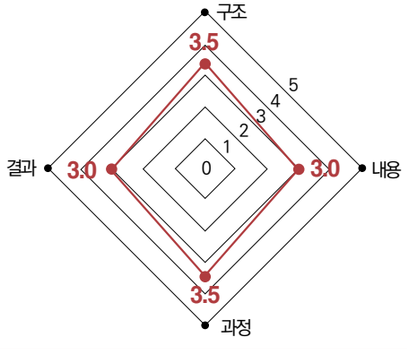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후 1년을 비교할 때, 모든 집단(일반인, 법적용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향상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일반국민의 57.1%, 법적용대상자들은 7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법적용대상집단이 체감하는 만족도보다

는 많이 낮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도가 법에 대한 만족도인지, 법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인지도 애매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만족도를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0), 과정(3.5),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과 투명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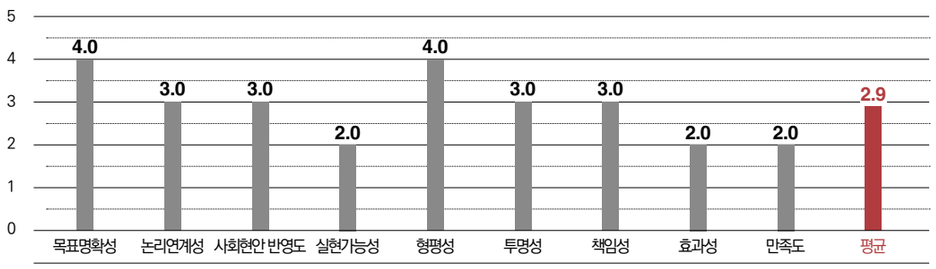
[그림 4-81]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인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요구를 금지하고, 실력 중심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의 사회'를 지향함을 목표로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목표의 명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논리연계성, 사회현안반영도,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선발 및 채용 방법에 대한 모호성, 시행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행률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서두른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2]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채용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본 정책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는다. 이는 직무·실력 중심의 채용을 통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의 사회'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하고 직무기술서 공개·체계화된 면접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나, 2017년 대통령지시 사항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4점)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가 금지되었으며 응시자의 인적 정보 제공 금지 및 인적사항에 대한 면접질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채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채용시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민간 부문에서 블라이드 채용을 법제화하는데 있어서의 우려점 때문에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구직자의 77%가 불공정한 채용평가를 경험하였고,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사회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언론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자주 언급되는 현실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 실현가능한지 에 대해서는 부정적(2점)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으로 마련된 정책이니 만큼 이들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선발방법 및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듯이,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준수 기관이 41%에 달한다는 점, 주무부처(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블라인드 채용은 청년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채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4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블라인드 채용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며 누구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시(6.22)하였고, 그 후 바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 발표(7.5)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짧은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반영되고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국무총리, 공공기업 신입사원, 공공기관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수렴) 등이 있었으나, 여전히 보다 많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요구된다. 대통령지시사항 이후 관계부처들이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최근 국정조사에서 비판적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관계부처합동 정책의 장점도 있지만, 그 결과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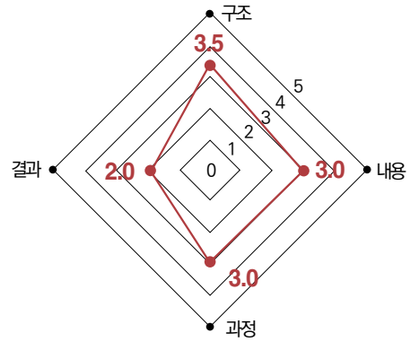
블라인드 채용은 현재 도입 초기이기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만, 시행 초기 현재 미준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안이 추진된 올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한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35개 기관(41.2%)이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채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이 공공기관에서의 단단한 정착을 거쳐 민간부문으로 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면접관이 차별적 요소를 직접 질문하는 경우, 민간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화 할 수 없다는 점)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미흡(2점)하다고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정책목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의심을 품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기준과 내용의 모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은 이름으로 인해 '깜깜이 채용'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동시에 '무늬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비록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매우 이른 감이 있지만,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 및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많은 노력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부정(2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3.5), 내용(3.0), 과정(3.0), 결과(2.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여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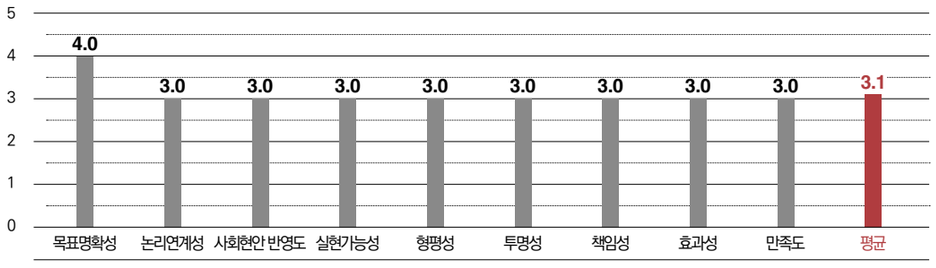
[그림 4-83]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재개정되며 시행되었다.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한부모자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주택, 교육, 생활지원을 통하여 한부모가정의 교육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도와주며, 나아가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평가항목별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4점)를 받았고 나머지 기타 항목에서는 보통(3점)의 평가를 받았다. 모든 항목을 종합한 평균은 3.1점으로 지난해의 평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 점수는 동일하다.

[그림 4-84]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한부모가족 주택지원 및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양육비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세부적이고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높게 평가(4점)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양육비지원 서비스, 가족 유형별로 미혼모시설·모자가족시설·부자가족시설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서비스 등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정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정책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평균 수준(3점)의 평가를 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우 세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뒷받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다. 이에 기초하여 매년 정책대상자의 범위와 복지급여액의 수준도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2016년도 아동양육비의 경우 월 10만원, 아동지원연령 만12세 미만, 학용품비 5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아동양육비 월 12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3세 미만, 학용품비 5.41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2016년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월 17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증액된 예산을 통해 복지대상자와 수준이 확장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급여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통(3점)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이혼 경력이 있는 편모나 편부의 가정뿐만 아니라 미혼모 가정 및 청소년이 가장인 가정, 그리고 조손가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혜범위가 넓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이들에게 충분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전체 예산(387조원)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17년도 925억원)은 매우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 예산(20억원)은 그 비율이 더욱더 미미하다. 더 나아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예산과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수혜 수준과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다 취약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존재함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개최, 한부모가족 사례발표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왔듯이, 양육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미혼모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어 추진 주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률은 저조하며, 정부의 양육비 이행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조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양육비대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자녀양육을 부모 사이의 채무관계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부모, 사회, 정부가 모두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관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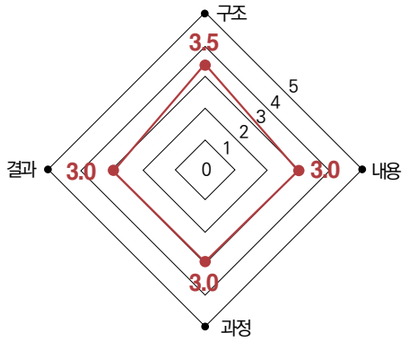
정책 성과로서 연도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현황을 보면, 2014년까지 지원 대상 가구가 2007년 대비 약 두 배인 14만 가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지급 이행을 위한 감치 집행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지원 수준은 낮으며 그마저도 기초수급대상자라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를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는 보통 수준(3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본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유형과 환경에 따라 수급자의 상황에 맞춘 정책설계를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이혼가정 등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흡한 측면은 현행 10~15만 원 정도의 양육비 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가계를 동시에 이끌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가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며, 구조(3.5), 내용(3.0), 과정(3.0), 결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여타 정책에 비해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5]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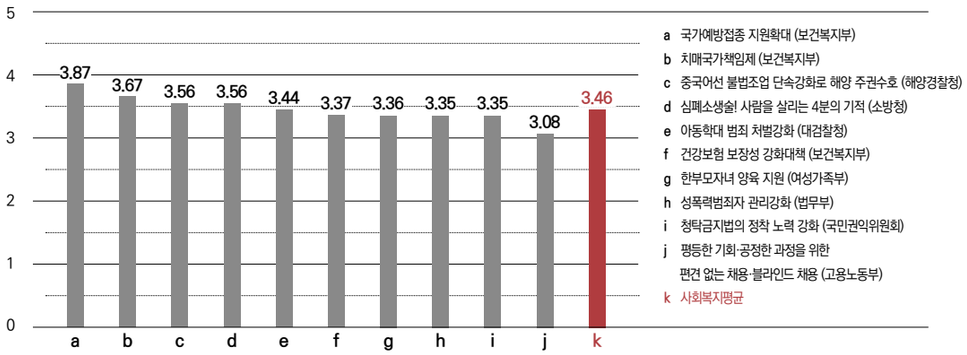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본 연구진의 정성평가 결과를 거쳐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한 결과, 전체 평균은 3.46점으로 외교안보분야(3.4점), 교육문화분야(3.3점), 경제정책분야(3.1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은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3.7점)를 받았고, 내용(3.5점)에 비해서 과정(3.4점), 결과(3.2점)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정책에서 정책 구조측면의 정책의 목표 명확성 항목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논리적 연계성 항목(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적절성이나 논리적인 인과성) 점수는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복지분야 대부분 정책의 취지에는 분명히 다들 공감을 하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분명한 정책목표 달성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와 정책수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고민과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정책목표 달성이 단일 부처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 어려운 경우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으로서 종합 3.9점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치매국가책임제가 3.7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정책과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책이 각각 3.6점을 받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에는 복지정책, 일반행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이들 정책은 공중보건, 국민건강과 국민안전 측면에서 선택적인 집단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의무

를 강하게 부과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복지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대상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며,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정책은 해양에서의 주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정책의 파급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게 되고,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과 홍보 정책으로서 불특정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종합적으로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정책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3.1점),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3.3점), 성폭력범죄자 관리강화 정책(3.3점)인데 이들 정책은 각각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공공·민간 기업, 청탁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일부 공직자와 관계자, 구금이 끝난 성폭력사범이라는 특정 정책대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보다 정책대상의 보편성은 다소 낮다고 생각된다.

한편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두 개의 복지정책(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 치매국가책임제)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우리사회의 변화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이 높은 사회현안도 점수를 주었으며, 전문가·일반인도 높은 사회 현안도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에서 모두가 시의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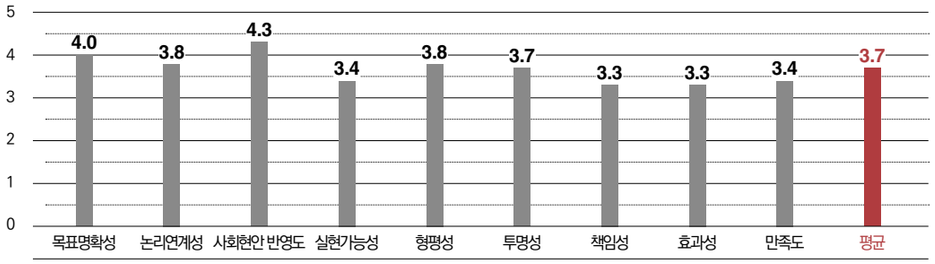
평가 대상 정책 중에서는 본 연구진의 평가와 전문가·일반인의 평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있었다.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정책은 전문가·일반인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본 연구진은 심폐소생술이라는 정책프로그램의 규모나, 거시적인 국가목표와의 관계 측면에서 낮은 사회 현안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형평성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은 전문가·일반인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본 연구진이 보았을 때는 직접적인 정책 수혜대상이 한정적이어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공정사회라는 정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형평성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3.1점),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3.3점), 성폭력범죄자 관리강화 정책(3.3점) 정책은 특히 사회적으로 의견이 나뉘는 쟁점을 가지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거나, 다부처가 연계되어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부처의 정책이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책목표(공정한 채용·공정한 사회,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억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의 추진과정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들 정책은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 구조, 내용, 과정, 결과 모든 측면에서 점수가 고루 낮지만 특히 정책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 항목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추진과정에 절차적으로 관련 집단·전문가를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통해 정책을 개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일반대중과도 소통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이 다른 부처나 사회 내의 다른 집단과 연계되는 경우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한다면 더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시간흐름에 따라 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류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시스템을 특별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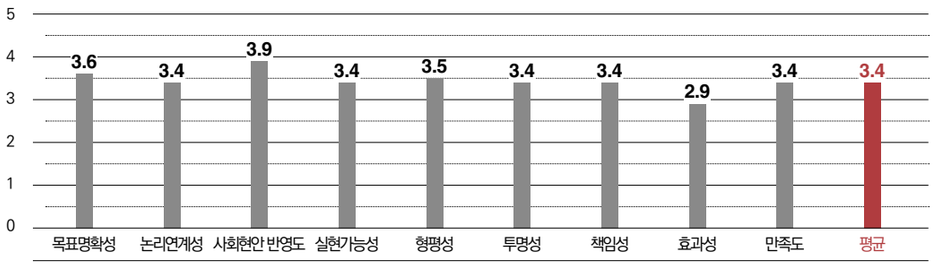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10개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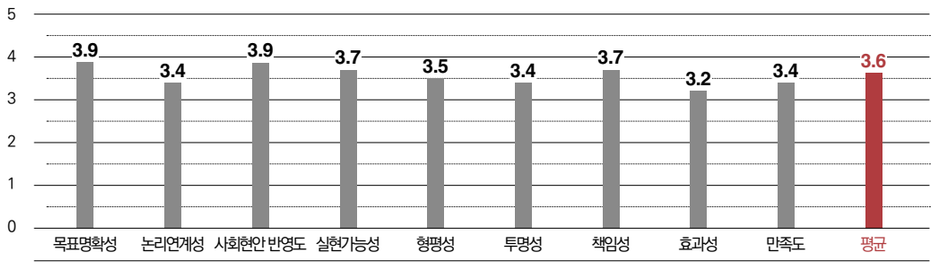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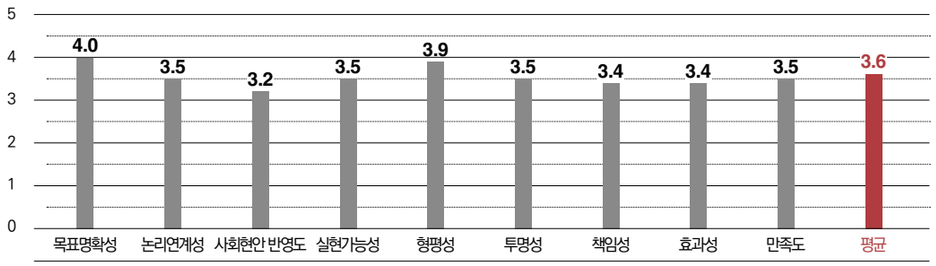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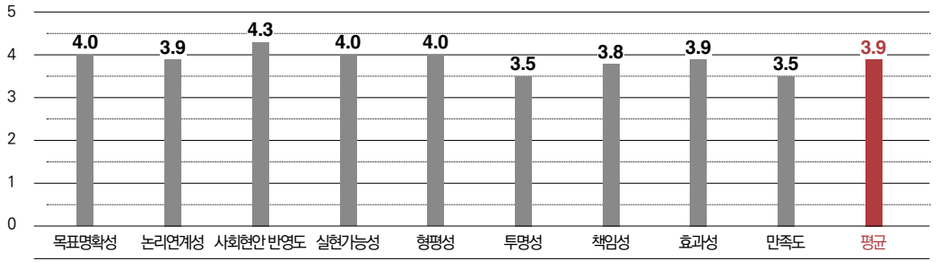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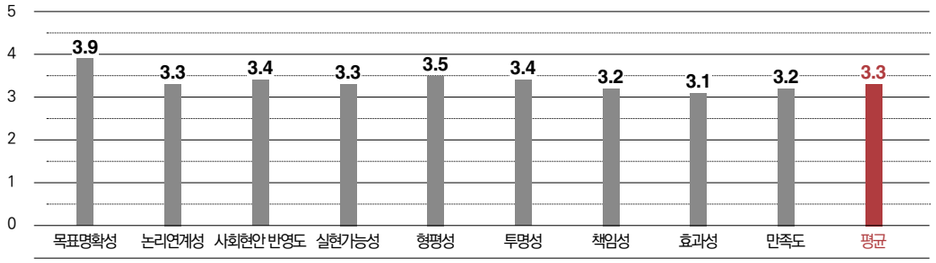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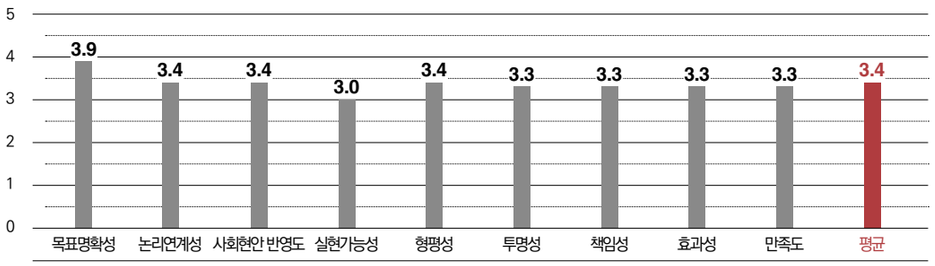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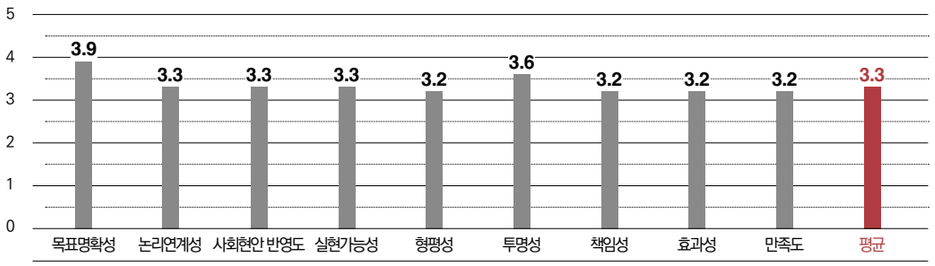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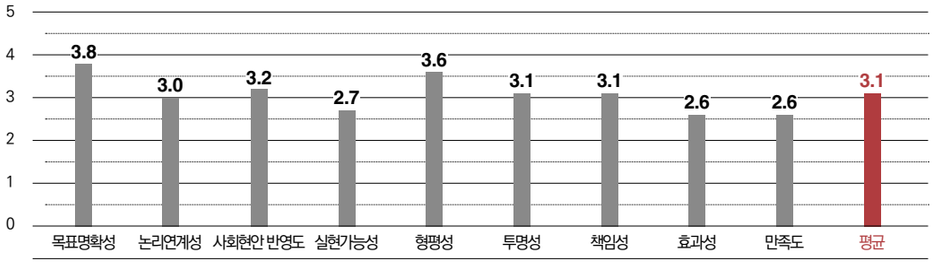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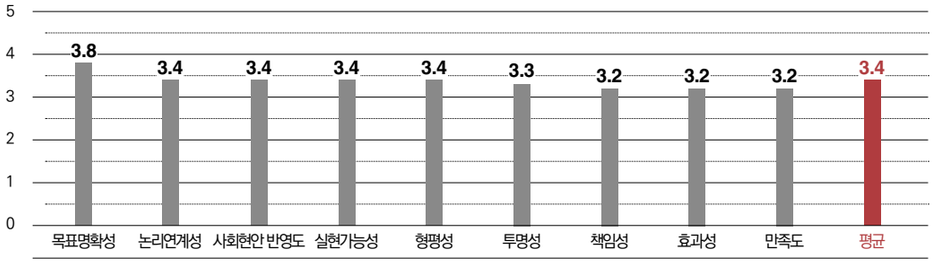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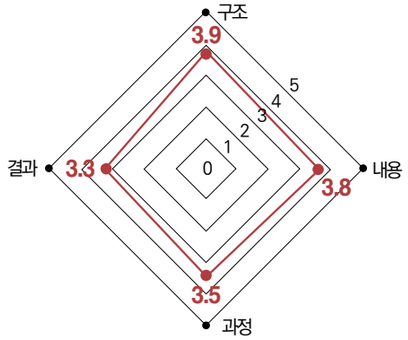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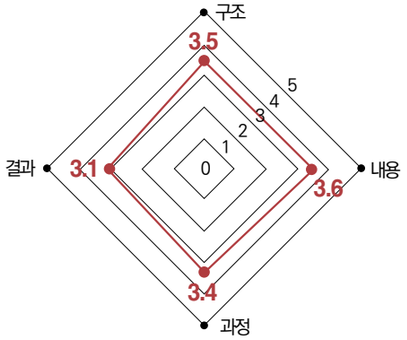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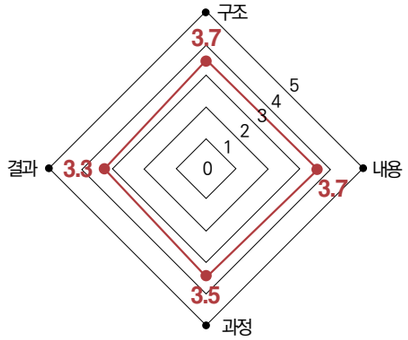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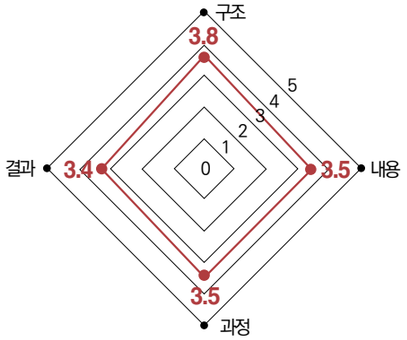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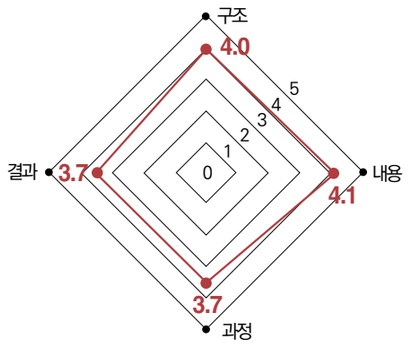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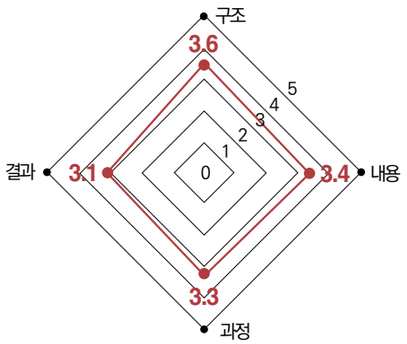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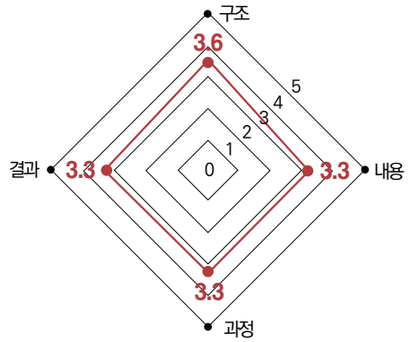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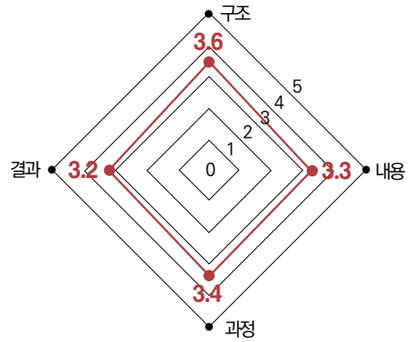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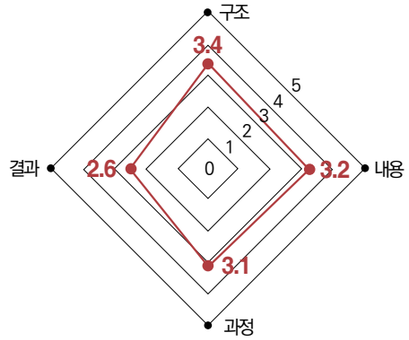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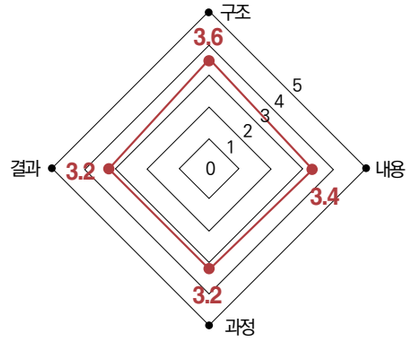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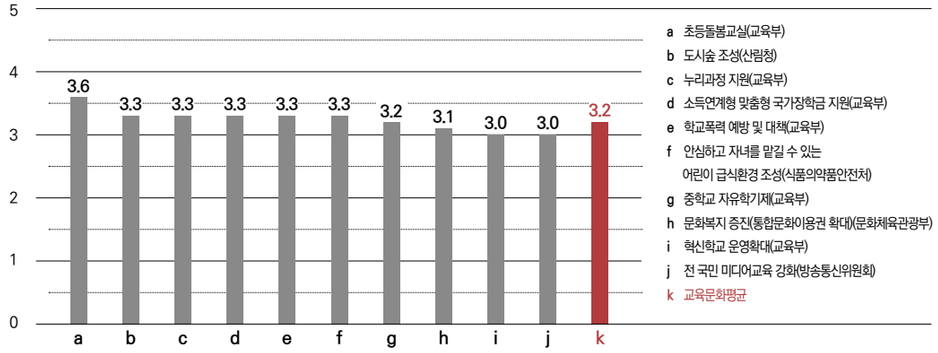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교육문화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는 평균 3.2점으로 10개 정책 모두 3.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초등돌봄교실이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도시숲 조성, 누리과정 국고지원,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학교폭력예방,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이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평균치인 3.2점이고 문화복지 증진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혁신학교운영확대, 전 국민미디어교육 강화는 평균보다 아래인 3.0점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초등돌봄교실은 정책 구조, 정책 내용, 정책 결과, 정책 과정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균 이하의 하위 집단(문화복지증진, 혁신학교운영확대, 전 국민미디어교육강화)은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 및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의 측면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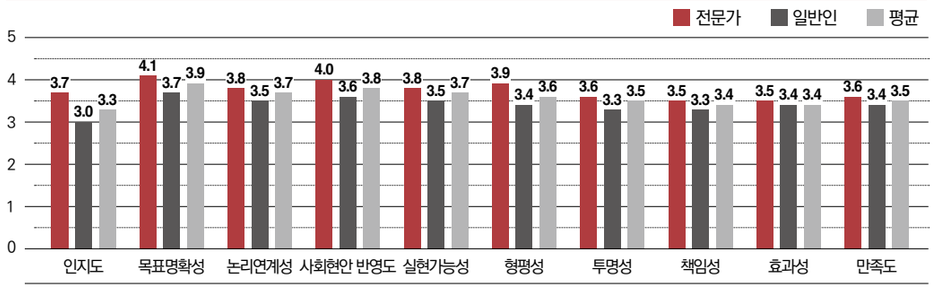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문화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의 인지도는 평균 3.35점으로 교육문화분야의 다른 정책의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정책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과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 역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의 개별 지표들은 인지도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 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3.4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보였다.

[그림 4-90]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 목표가 명확한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전문가는 4.12점이었고 일반인은 3.73점이었다. 초등돌봄교실의 정책목표 명확성은 교육문화분야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평균 3.68점이었다. 전문가 집단은 초등돌봄교실의 논리적 연계성에 3.84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이다. 3.52점으로 나타난 일반인 집단의 평가 역시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점수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4.00점, 일반인 집단은 3.59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집단은 3.82점, 일반인 집단은 3.53점으로 평가하며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다른 교육문화분야의 정책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목표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88점으로 평가했으며, 일반인 집단은 3.42점으로 평가했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형평성 점수 역시 다른 교육문화 정책들의 형평성 점수에 비해 높게 평가받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 집단은 3.64점, 일반인 집단은 3.30점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들의 책임성은 3.0점 내외의 평가 점수를 받았지만 초등돌봄교실 정책 책임성은 전문가 집단은 3.52점, 일반인 집단은 3.33점으로 3점 중반대의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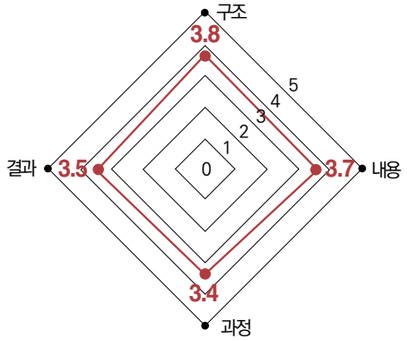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초등돌봄교실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52점, 일반인은 3.37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효과성 평가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결과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초등돌봄교실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문가는 3.60점, 일반인은 3.40점으로 평가했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 역시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만족도에 비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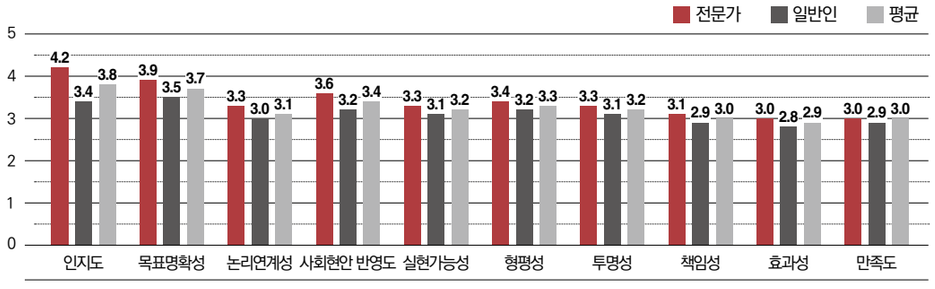
[그림 4-91] 초등돌봄교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학교폭력예방 정책 인지도는 전문가 4.20점, 일반인 3.43점으로 평가받으며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 구조(목표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3.4점,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3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1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2.9점으로 나타나며 높은 인지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별지표 가운데 해당 정책의 논리연계성, 정책 책임성, 정책 효과성, 정책 만족도는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림 4-92]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94점이었고 일반인은 3.52점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균은 3.7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에 이은 평균점수로 상위집단에 위치한 점수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에서는 평균 3.14점을 받으며 비교적 높게 평가된 정책목표의 명확성 점수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 평균 3.26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전문가는 3.28점, 일반인들은 3.01점으로 평가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는 평균 3.41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균 점수(3.41점)와 동일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반영도에 3.64로 평균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일반인은 3.18점으로 평가하며 평균보다 낮게 평가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는 3.30점, 일반인은 3.09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정책 실현가능성 평균 점수인 3.26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은 전문가 3.44점, 일반인 3.20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형평성 평균 점수 3.32점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형평성 평균(3.30점)과 근사한 결과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3.32점, 일반인들은 3.05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균점수 3.27점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일반인들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균(3.07점)보다 낮게 평가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정책과정의 책임성 평가에 대해 평균 2.98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3.10점으로 일반인들은 2.86점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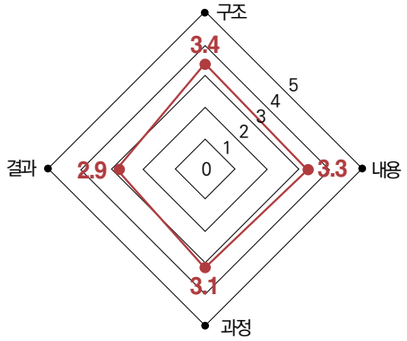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균 2.91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효과성 평균인 3.13점보다 낮은 3.02점으로 평가했으며, 일반인들 역시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효과성 평균 점수 3.01점보다 낮은 2.81점으로 평가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문가는 3.02점, 일반인은 2.9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2.98점으로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만족도 평균 점수(3.12점)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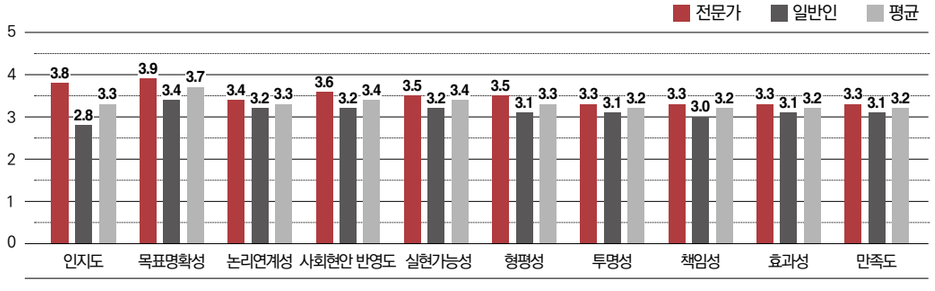
[그림 4-93]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누리과정 국고지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31점으로 교육문화분야의 다른 정책 인지도 평균점수인 3.1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해당 정책 인지도는 3.80점인 것에 반해 일반인 집단의 정책 인지도는 2.81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 구조, 정책 내용, 정책과정, 정책 결과 모두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정책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3.5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 구조 평균 점수 3.43점보다 높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4점으로 같은 분야 정책 과정 평균 점수 3.3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과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도 모두 3.2점을 받으며 교육문화분야의 다른 정책 평균보다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그림 4-94] 누리과정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의 목표 명확성은 평균 3.69점으로 다른 교육문화 정책들의 목표 명확성 평가점수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전문가집단의 교육문화 정책 목표의 명확성 평균인 3.73점보다 높은 3.94점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으며, 일반인들의 교육문화 정책 목표 명확성 평균인 3.41점보다 약간 높은 3.41점으로 일반인들은 평가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3.44점, 3.21점으로 평가했다. 전체 평균 3.32점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균 평가점수인 3.26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3.60점, 일반인은 3.25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3.41점) 평균에 위치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는 3.48점으로 일반인은 3.23점으로 평가했다. 해당 정책의 실현가능성 평균 점수인 3.35점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실현가능성 평균점수 3.26점보다 높은 평가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목표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3.46점, 일반인들은 3.15점으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30점, 일반인은 3.07점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 평균 3.19점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균(3.17점)과 근사한 평가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3.30점, 일반인은 3.05점으로 평가하며 전체평균 3.17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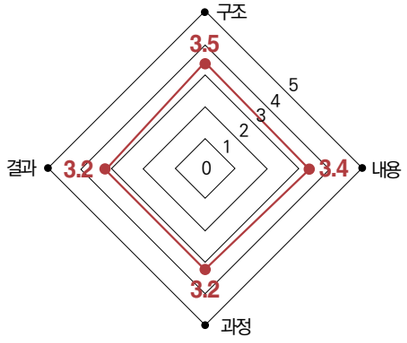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3.22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효과성 평균보다 높은 3.32점, 3.11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는 3.32점, 일반인은 3.07점으로 평가했다. 전체 평균 3.19점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만족도 평균점수인 3.12점보다 높은 평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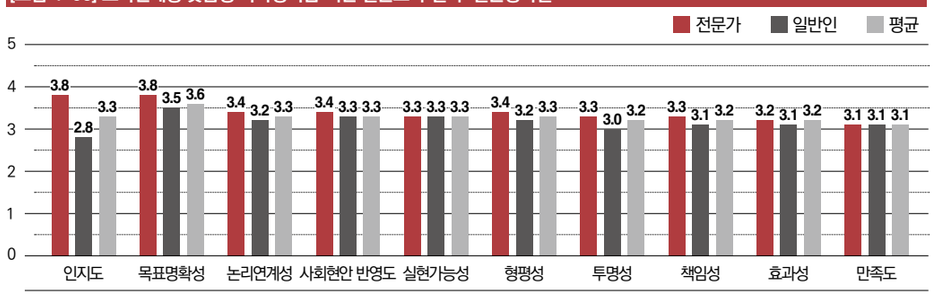
[그림 4-95] 누리과정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의 개별 지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해당 정책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의 평가는 3.5점을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3.3점,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2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1점을 받았다. 정책 인지도에 대해서 일반인 집단은 2.84점으로 평가했으며, 전문가 집단은 3.78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3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4-96]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평가에서 전문가는 3.78점으로, 일반인은 3.49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63점을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해당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3.38점, 일반인은 3.23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해당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균 3.33점으로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균 3.41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의 교육문화분야 정책 사회현안 반영도 평균인 3.57점보다 낮은 3.38점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지만, 일반인 집단의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균 3.24점보다 약간 높은 3.29점으로 일반인들은 평가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34점으로 일반인들은 3.26점으로 평가하며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실현 가능성 평가 평균 점수인 3.26점보다 약간 높은 3.30점을 받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해당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형평성 평가 평균 점수인 3.30점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3.42점으로 일반인들은 3.18점으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 추진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3.34점으로, 일반인들은 3.02점으로 평가했다. 해당 정책의 투명성 전문가 평가점수는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가 평균점수(3.27점)보다 높았지만, 일반인들은 같은 분야 정책 투명성 평가 평균점수(3.07점)보다 낮게 평가했다. 해당 정책의 투명성 전체 평균 점수는 3.18점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과정의 책임성에 대해 평균 3.17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3.28점으로, 일반인들은 3.06점으로 해당 정책의 책임성을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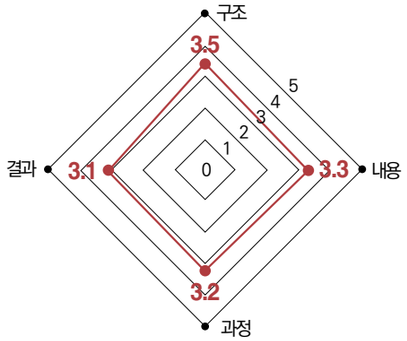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3.18점, 일반인들은 3.12점으로 평가하며 전체평균 3.15점을 받아 같은 분야 정책의 효과성 평균 점수(3.0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비슷하게 각각 3.10점, 3.11점으로 평가해 같은 분야 정책의 만족도 평균 점수 3.12점과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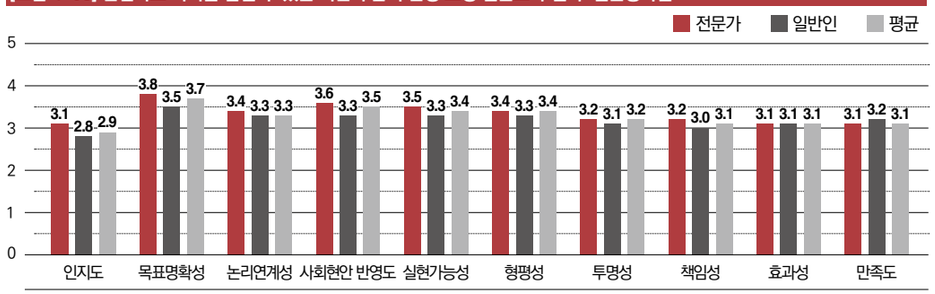
[그림 4-97]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평균 2.92점으로 나타나며 교육문화분야 평가 정책의 인지도 평균 점수 3.14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해당 정책 인지도에 대한 일반인 집단은 같은 분야 정책의 인지도 평균 점수인 2.79점과 비슷한 2.78점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 점수는 3.06점으로 전문가 집단의 교육문화분야 정책 인지도 평균 점수(3.49점)보다 낮았다. 해당 정책의 개별 지표는 인지도를 제외하고 평균 3.3점 내외에서 균등한 평가 점수를 보였다. 정책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3.5점,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4점,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과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각각 3.1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98]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3.80점, 일반인들은 3.53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정책의 개별 지표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 점수이며,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목표 명확성 평균 점수 3.57점보다 높게 평가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서 같은 분야의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균점수(3.26점)보다 높은 평균 3.34점을 받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2점, 일반인 집단은 3.33점으로 평가받으며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평가에서는 평균 3.40점을 기록하며, 같은 분야 정책의 실현 가능성 평가에서 초등돌봄교실(3.67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3.50점, 일반인 집단은 3.30점으로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은 전체 평균 3.38점으로 나타났다. 3.42점으로 평가한 전문가 집단평가는 다른 교육문화 정책 분야의 전체 평균 3.41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일반인 집단은 3.33점으로 나타나며 다른 교육문화 정책 분야의 평균(3.18점)보다 높게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22점으로 일반인들은 3.09점으로 평가하며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균 점수(3.17점)와 유사한 결과인 3.16점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묻는 평가에서는 평균 3.10점을 받아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책임성 평균 점수 3.11점과 근사했다. 전문가 집단은 3.16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04점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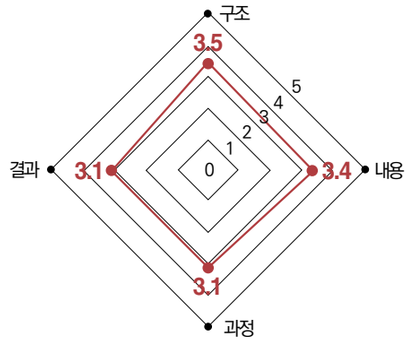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3.12점으로 일반인들은 3.07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09점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평균 3.14점으로 나타나며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만족도 평균(3.12점)보다 약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3.12점, 일반인 집단은 3.15점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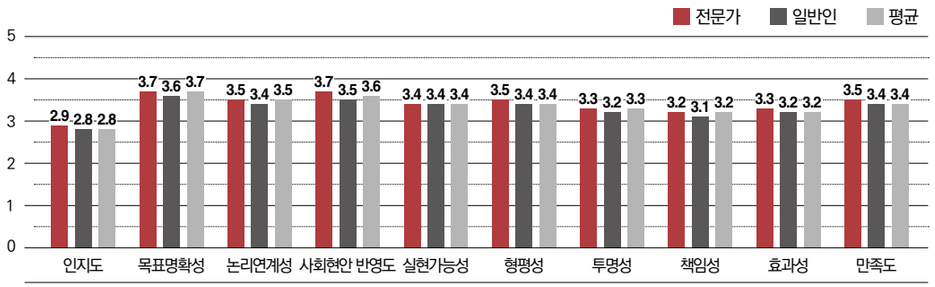
[그림 4-99]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도시숲 조성

도시숲 조성 정책은 10개의 개별 지표상 인지도를 제외하고는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 3.0점 이상의 점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 인지도의 경우 평균 2.83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인지도 평균(3.1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해당 정책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3.6점을 받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3.5점,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 3.2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 3.3점으로 교육문화분야의 각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4-100]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 평가 점수는 전문가 집단에서 3.70점 일반인 집단에서 3.60점이며, 평균은 3.65점으로 가장 개별지표 중 높은 평가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단의 다른 교육문화 정책목표 명확성 평균(3.73점)보다 낮게 평가했지만 일반인들은 집단의 다른 교육문화 정책목표 명확성 평균(3.41점)보다 높게 평가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평균 3.49점으로 나타나며 다른 교육문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 평균점수(3.26점)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3.54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44점으로 평가하며 초등돌봄교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 점수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74점, 일반인 집단은 3.45점으로 평가하며, 같은 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균 점수 3.41점보다 높은 평균 3.60점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38점으로 동일하게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목표와 혜택을 받는 대상의 형평성을 묻는 평가에서는 평균 3.44점을 받으며 다른 교육문화분야의 정책 형평성 점수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3.52점, 일반인 집단은 3.36점으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32점으로 일반인들은 3.19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26점을 받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에서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은 같은 분야 정책의 책임성 평균 점수(3.21점)와 유사하게 3.22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책임성 평균 점수 3.01점보다 높은 3.14점으로 평가하며 다소 긍정적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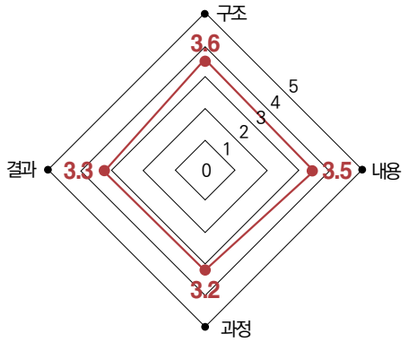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3.26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3.24점은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효과성 평균 점수인 3.07점보다 높게 나타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교육문화분야에서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만족도 평가 점수(3.5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 점수 3.46점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 점수 3.36점도 평균보다 높게 평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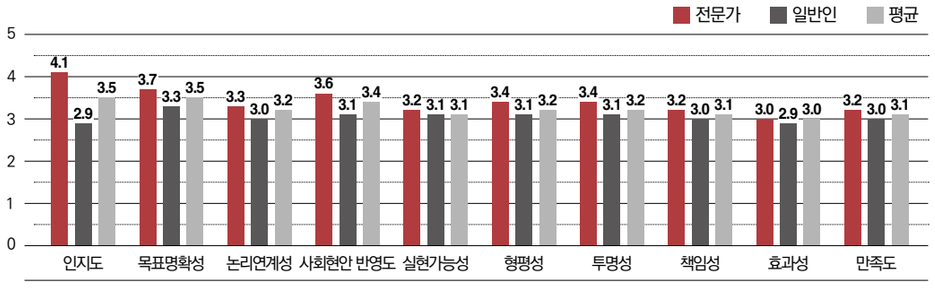
[그림 4-101] 도시숲 조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의 인지도는 평균 3.52점으로 교육문화분야 평가 정책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인지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의 인지도는 4.10점이었지만 일반인 집단의 인지도는 2.93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은 개별 지표 가운데 인지도와 정책 효과성 평가에서 2.9점을 주었지만 다른 개별 지표에는 대부분 3.0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해당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3.4점,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2점,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은 3.2점,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3.0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4-102]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전문가는 3.70점, 일반인은 3.32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51점을 받았다. 이는 교육문화분야 정책들의 목표 명확성 평균점수(3.57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일반인 집단은 같은 분야 정책들의 논리적 연계성 평균 점수 3.16점보다 낮은 3.04점으로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의 점수는 평균 점수 3.36점과 근사한 3.34점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의 평균 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같은 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균 점수(3.57점)보다 약간 높은 3.62점으로 평가했지만 일반인 집단은 평균 점수 3.24점보다 낮은 3.11점으로 평가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서 전문가 집단은 3.16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08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같은 분야 정책의 형평성 평균 점수(3.30점)에 비해 낮은 3.24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3.36점, 일반인 집단은 3.12점으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집단별 평균 점수보다 높은 3.36점, 3.09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평균 점수는 3.22점으로 같은 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균 점수 3.17점보다 높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었는지 평가하는 질문에 전문가 집단은 3.24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96점으로 평가했다. 일반인 집단의 평가 점수는 같은 분야 정책의 책임성 평균 점수 3.01점보다 낮은 결과이다. 평균 점수는 3.10점으로 평균 점수 3.11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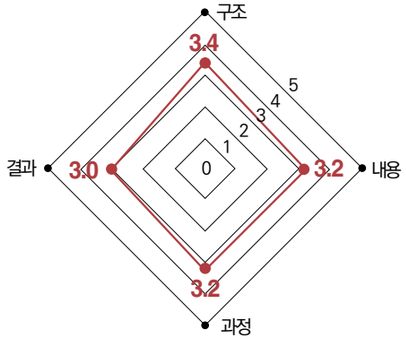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개별 지표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2.96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3.04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87점으로 평가했는데 모두 집단별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효과성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결과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3.16점, 일반인 집단은 2.97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3.07점은 같은 분야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 3.12점보다 낮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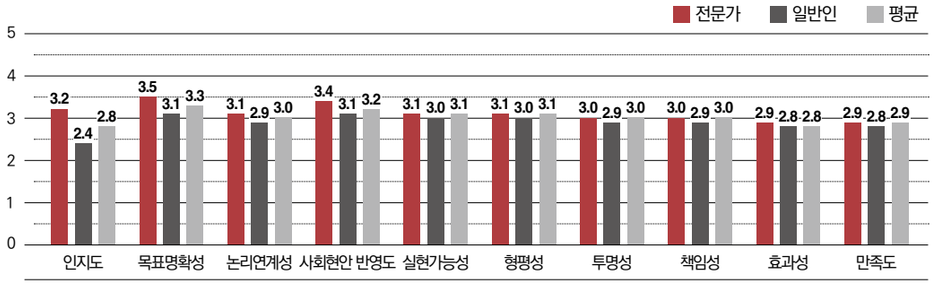
[그림 4-103] 중학교 자유학기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은 3.0점을 받은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을 제외하고 교육문화분야 각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 평균 점수는 3.43점이지만 해당 정책의 구조 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1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 내용의 평균 점수(3.32점)보다 낮았다.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교육문화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인 2.9점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16점, 일반인 집단은 2.36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2.76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의 정책 인지도 평가 점수는 교육문화분야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 결과이다.

[그림 4-104]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목표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3.46점으로 일반인들은 3.09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하지만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목표 명확성 점수 평균인 3.57점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으며, 일반인 집단은 다른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목표 명확성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14점과 2.93점으로 평가했다.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점수이다. 평가 점수도 같은 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평균 점수 3.26점 보다 낮은 3.03점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38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10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반인 집단은 2.99점으로 평가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도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실현가능성 평균 점수(3.34점)보다 낮은 3.14점으로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3.10점, 일반인 집단은 3.01점으로 평가하며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해당 정책의 평균 점수 3.05점은 혁신학교운영 확대 정책의 형평성 평가 점수에 이어 교육문화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평가를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평균 점수보다 낮은 3.02점과 2.94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일반인 집단의 평가 점수는 같은 분야 정책의 투명성 평가 점수 가운데 가장 낮은 결과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해당 정책의 책임성 평가 점수는 2.95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책임성 점수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3.04점, 일반인 집단은 2.87점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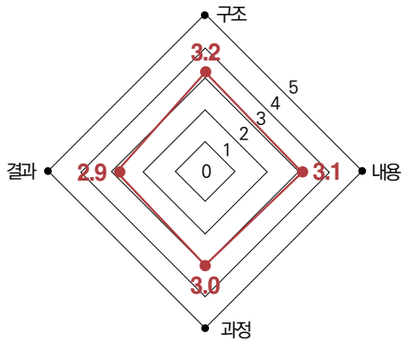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88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81점으로 평가하며 교육문화분야 정책들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보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도 2.89점으로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은 2.94점, 일반인 집단은 2.84점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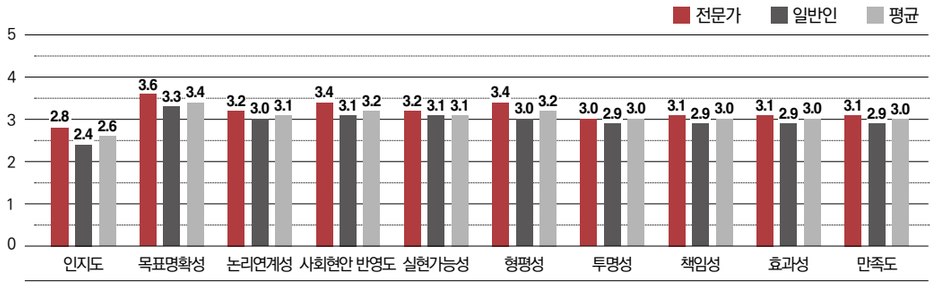
[그림 4-105]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문화복지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해당 정책의 인지도는 평균 2.63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인지도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교육문화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인지도 점수인 2.84점과 2.41점으로 평가했다. 해당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는 3.3점,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은 3.2점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과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모두 3.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6] 문화복지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62점, 일반인은 3.28점으로 평가하며 개별 지표들의 평균보다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교육문화분야 다른 정책의 목표 명확성 평균(3.57점)에 비해 낮은 3.45점을 받으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는 3.16점, 일반인은 3.00점으로 평가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평가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전체 평균 점수인 3.41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3.44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05점으로 평가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집단별 평균점수보다 낮은 3.24점과 3.06점으로 평가했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균 점수는 3.34점이고 일반인 집단의 평균 점수는 3.19점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평균 3.21점으로 나타나며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형평성 평균 점수(3.3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3.40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03점으로 평가하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지에 대한 해당 정책의 평가 점수는 2.96점으로 교육문화 정책 가운데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유사하게 2.98점과 2.95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12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91점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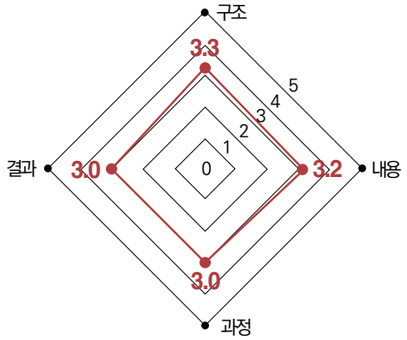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3.10점으로 평가했으며, 일반인 집단은 2.88점의 평가 점수를 보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서는 전문가 집단은 3.06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91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같은 분야의 정책 만족도 평균 평가 점수인 3.18점(전문가), 3.06점(일반인)에 비해 낮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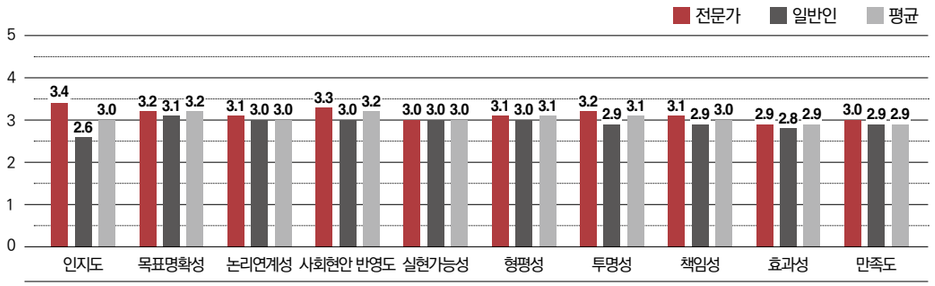
[그림 4-107]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혁신학교 운영 확대

혁신학교 운영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개별 지표 점수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비슷한 평가 점수를 보였다. 개별 지표 가운데 전문가 집단은 효과성을 제외하고 모두 3.0점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일반인 집단은 인지도,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3.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3.1점을 받은 정책의 구조(명확성, 논리적 연계성)와 3.0점을 받은 정책 과정(투명성, 책임성), 2.9점을 받은 정책 결과(효과성, 만족도)는 교육문화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며, 정책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역시 3.1점으로 하위 집단에 속했다. 전문가 집단의 해당 정책 인지도는 3.38점으로, 일반인 집단의 정책 인지도는 2.57점으로 나타나며 평균 2.97점을 받았다.

[그림 4-108] 혁신학교 운영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3.22점, 일반인들은 3.12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해당 정책의 개별 지표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 점수이지만 다른 교육문화 정책의 목표 명확성 평가점수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 점수이다. 교육문화 정책의 목표 명확성 평균 점수는 3.57점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정책의 목표 명확성 평균 점수는 3.17점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묻는 평가에서는 평균 3.02점으로 교육문화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3.06점을 받은 전문가 집단의 점수는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반영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서 해당 정책은 평균 3.17점으로 평가한 교육문화분야 정책 가운데 가장 낮게 사회 현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32점과 3.02점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3.02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97점으로 나타나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 평가 점수는 평균 3.09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14점, 3.05점으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인 3.16점과 2.95점으

로 각각 평가했다. 교육문화분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평균 3.27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3.07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투명성 평균 점수는 3.05점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추진과정의 책임성 평가에서 전문가 집단은 3.10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90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3.00점의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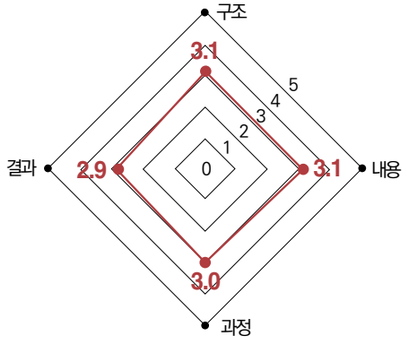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평균 2.85점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 집단은 2.88점으로, 일반인 집단은 2.82점으로 평가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집단의 교육문화분야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3.18점이지만 해당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2.98점으로 평가했다. 일반인 집단 역시 같은 분야 정책의 만족도 평균 점수(3.06점)보다 낮은 점수인 2.87점으로 평가했다.

[그림 4-109] 혁신학교 운영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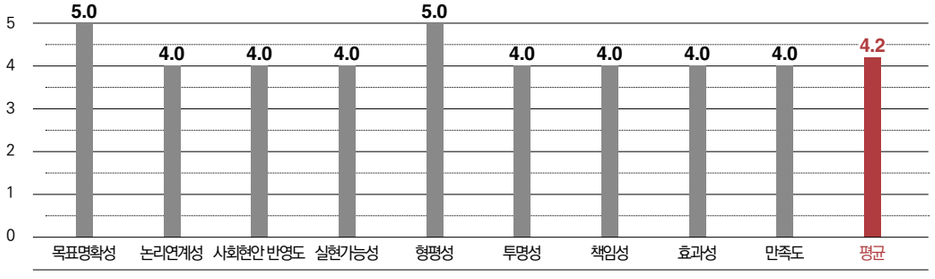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초등돌봄교실

[그림 4-110]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17년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운영 목표는 학년별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 운영,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활성화로 집약된다(교육부 2017c1). 이러한 운영 목표는 정부가 당초 보육교실을 대폭 확대하여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저소득층·한부모·조손 가정의 증가와 같이 부모로부터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 책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기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목표들이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단위학교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그러한 목표수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초등돌봄교실의 정책수단은 중점과제과 세부 추진과제로 체계화되어 있다. 수요자 중심 운영을 위해 학년특성에 맞는 서비스 다양화, 학기초·방학중 운영 내실화, 돌봄 운영시간 유연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지역의 아동센터, 지역별 교육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및 학부모, 퇴직교원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학년별 운영 내실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었다.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놀이·안전 및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운영하였고, 3학년 이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는 독서·운동 등의 틈새 프로그램을 보강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시범학교를 별도로 운영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학교에 보급하였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한 신청인원에 대해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정원의 탄력적 조정, 겸용교실 추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통해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니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수요자의 편익을 증진시킨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증가, 방과후 나홀로 학생의 증가, 양육사교육비의 증가, 여성이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정책대상 집단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확립되어 있다. 학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개학전 돌봄체험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학부모의 여건을 반영하여 오후돌봄을 연장 운영하거나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에는 오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에 대한 높은 반응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초등돌봄교실의 정책수단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사례, 관련 업무 표준양식,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방법 등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 학교와 시도, 시군구 및 지역돌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183개의 지역돌봄협의체와 949개의 권역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것도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연계형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감사원 2016a, 국회예산정책처 2017b)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국회입법조사처 2016a, 2017b)에 대응하여 교육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시도 및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범정부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교육부 2017a). 또한 교장·교감 자역연수 및 임용예정자 연수에 초등돌봄교실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보인다(교육부 2017b).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초등돌봄교실은 가정의 취약한 양육환경을 국가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면서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보편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는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 결과 2016년에 5,9982개 초등학교의 11,920개 교실에서 운영된 초등돌봄교실에 24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 보육·교육 대상 집단에 대한 파급효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전담인력, 학부모, 대학생, 지역의 기업 및 교육기관, 아동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양육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개방적 체계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돌봄교실 모델학교, 통합지원 시범, 정책토론회, 교육박람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의 투명성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초등돌봄교실은 학생,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신축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집단 및 관련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집행이 된다. 이와 같이 분권화된 과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모니터링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기관들로 구성된 개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박람회의 공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채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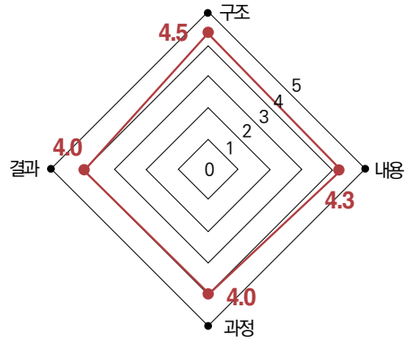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성은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을 통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단위학교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학생의 수준에 맞는 기본돌봄, 여가, 학습, 독서, 체육 등으로 돌봄교실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실이라는 기본적인 양육보조에서 출발하였던 돌봄교실이 양육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증액하려는 노력도 이 정책의 효과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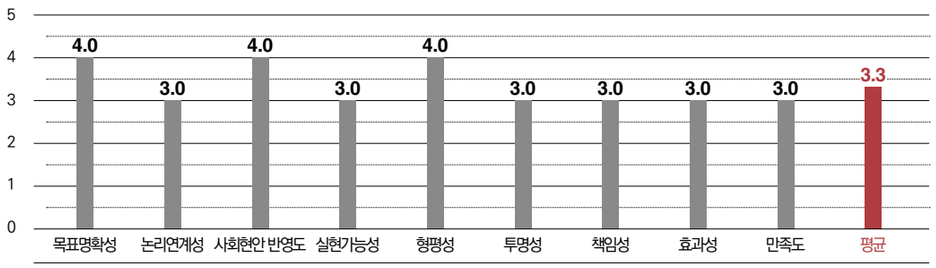
교육부가 매년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92.5%, 2015년 94.8%, 2016년 95.7%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4-111] 초등돌봄교실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학교폭력예방

[그림 4-112]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의 조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을 중점관리하고 대상별, 유형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과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깨동무학교'가 운영되어왔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문화의 전반적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왔다. 세부적으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하며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거시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정책대안들이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비교적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그동안 정부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이 커지고 폭력의 유형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다. 학교폭력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 그리고 동급생의 폭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학생들의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난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새로운 학교폭력의 경로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현안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부의 정책과 학교의 관련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의 관행과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절하고 관련 문서의 관리·보존에 관한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c, p1).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와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하교후의 생활까지 모니터할 수는 없다. 많은 학교폭력가해자가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소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정부와 학교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 종합해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전환이 미흡한 점, 정책적인 노력이 가정에서의 참여와 연계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평균정도로 보여 진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과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깨동무학교'를 통해 운영되어 왔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치유는 물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전 사회적 대응시스템인 Wee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왔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의 형평성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16a). 하지만 학교폭력의 은폐와 축소 등의 문제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으며 실적위주의 정책접근이 아직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의 투명성이 보통 수준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보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매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해당년도의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단위의 경우 다양한 학교폭력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를 실시하여 정책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교육부 2014d).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이 평균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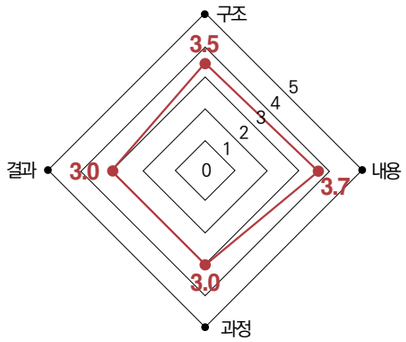
교육부의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2012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의 결과로 보았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응답률의 감소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인지 불확실하다. 전문가 및 일반인의 설문조사 결과에서의 효과성평가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정책의 효과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부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루고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정책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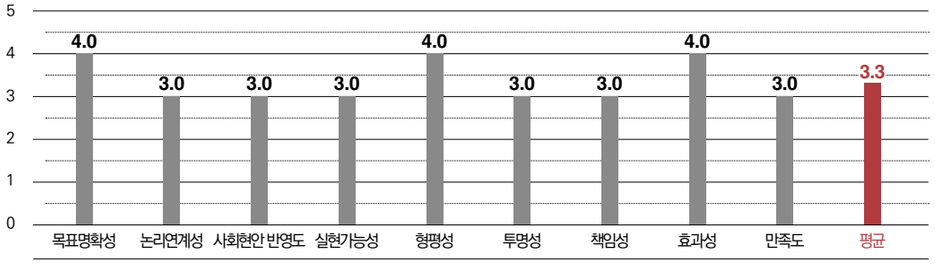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3.7), 구조(3.5), 과정(3), 결과(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이며 다른 영역에서는 평균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13] 학교폭력예방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누리과정 국고지원

[그림 4-114]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017년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누리과정의 정책목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2017c4). 즉,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기본 정책목표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가 만 3-5세 유아에게 양질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균등한 생애출발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이전 정부의 목표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17f, 국회예산정책처 2017b).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표준교과와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리과정의 내용은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소요가 매우 크다. 2016년부터 1인당 매월 29만원까지 지급액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및 교원 확충, 운영시간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용도 관리에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인다(국회입법조사처 2016a, 2017b).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와 육아 및 보육의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매우 높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동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정책은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결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7a,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2016). 즉,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책임이라는 원

대한 정책목표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적 기반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으나 재정적 부담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임시로 봉합되어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는 2016년에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16년의 경우에는 새학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방교육청 및 지자체는 2개에 불과하였을 만큼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7년 새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2018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이후 해당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계속 변화한 것을 감안할 때 정치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만한 온전한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국회예산정책처 2017b).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3-5세 아동에게 표준화된 공통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부처 관할권을 넘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전체 소득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수혜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교육 및 보육을 전체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누리정책은 최근 주관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수렴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집중되었다. 교육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의무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공포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불거진 정부당국 간의 갈등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법적으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표출된 입장의 차이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단가와 정부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미래예측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b).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재원을 마련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협력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요 재원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 발생한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의 갈등으로 노출된 추진체계의 불안정성과 재원 산정의 기준도 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은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안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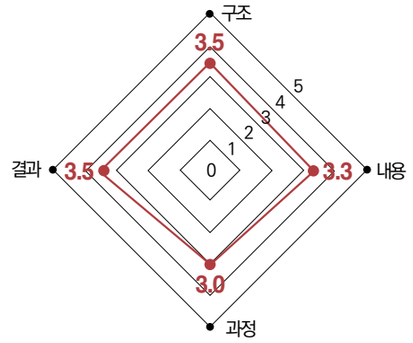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정부가 교육비와 보육비를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의 교과내용, 교사의 전문성, 관련 시설의 확충 등 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은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격차 해소,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확대와 같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누리과정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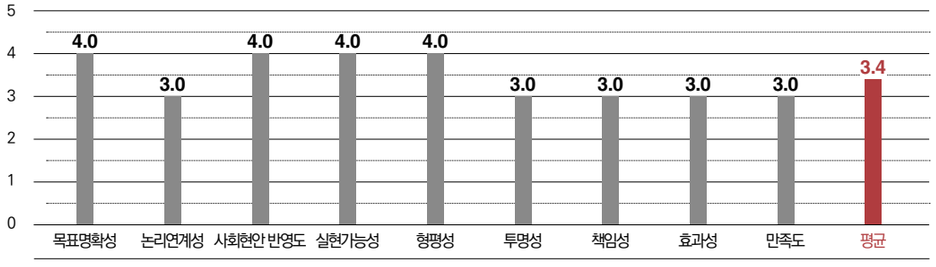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교육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 책임성의 확보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앞의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업적 추진체계와 합리적인 산정 기준으로 미래예측성을 증진시킨다면 향후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5]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그림 4-116]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공평한 고등교육기회 제공 및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라 뚜렷한 목표를 두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왔다. 뚜렷한 목표와 정책적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은 다음 세 개의 유형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지원해 왔다. I 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을 통해 소득 8분위(구간)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 II 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지방 인재 장학금)을 통해서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 III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셋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의 가정에 대학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정책목표를 위해 비교적 체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평균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 경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등록금 이외에 생활비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한 대학생들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민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정책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두고 세 가지의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각도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2012년 이후로 국가장학금 총액이 2012년 1조 7,500억원에서 2016년 3조 6,54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대출은 2011년 약 2조원에서 2016년 9천 1백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1년 대비 절반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국가장학금 총액과 등록금 대출액자료를 통해서 보면 정책의 목표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은 세 가지의 유형을 통하여 다양한 소득분위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수도권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에게도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앞선 점들을 감안할 때 혜택의 수혜범위가 넓다고 판단하여 정책의 형평성이 평균이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2017년부터 소득 분위 선정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었다. 국가장학금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득분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상대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로, 이 개정을 통하여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유은혜 국회의원실 2017a). 하지만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창구가 부족하다.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은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주체가 되어 2012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예산집행 실적 및 자체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이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매학기 선발결과 현황 및 사업성과 분석, 선발절차 진행, 집행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장학재단은 실적점검과 사업관리를 통해 정책 집행을 점검 및 관리하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7). 지금의 정책 환류 시스템에서는 대학,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의 거버넌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학재단이 자체 점검과 사업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책임성이 평균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교육부에 따르면 34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국가장학금 효과성분석 결과,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 이상 경감(국공립 8분위, 사립 5분위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결과, 2011년에 비교하여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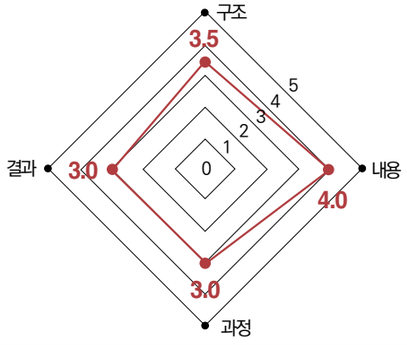
수혜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1.4시간), 근로시간(아르바이트) 감소(2시간), 일반 휴학률 하락(2.9%), 학업성적 향상(2.6점)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과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거주비와 생활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감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책이 제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교육부의 등록금 경감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장학금 총액의 증가와 대학생 등록금 대출의 감소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와 근로시간의 감소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지방학생들의 생활비와 거주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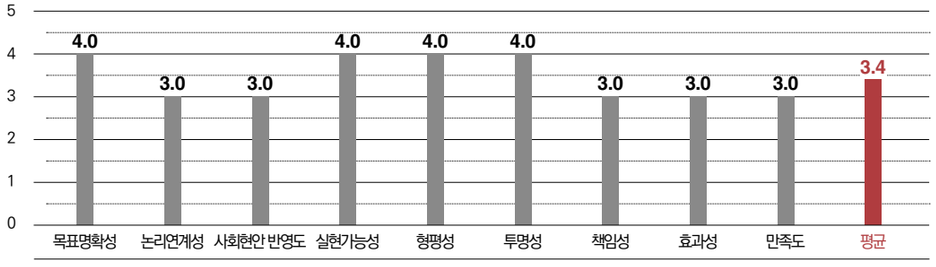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4), 구조(3.5), 과정(3), 결과(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이며 다른 항목들은 평이한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17]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그림 4-118]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과 외식의 영양과 안전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과제로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급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식 식중독 사고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정부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동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차례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부는 5개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5대 영역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a). 이러한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행동공간 밀착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식생활 미디어 환경,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위생관리와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급식 상향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식품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인증제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식생활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어린이집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과 안전성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유해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업체, 정책 동향에 관한 지식도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린이 급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에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발족시켜 정책의 사회적 가시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계획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청소년의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판매업자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노력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육시설 및 학교로 이루어진 집행체제는 높은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되는 지원센터, 수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의 수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재정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안전한 어린이 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증설하여 2016년에 중앙 1개소와 지역 207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00미만 소규모 급식소 45,267개소 어린이 140만 명 중에서 25,107개소 어린이 85만명(전체의 60%)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식약처 2017d). 이와 같이 급식 안전의 취약성이 높은 소규모 급식소를 중심으로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형평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급식소 대상 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지역 거점센터 정기협의회, 어린이 식생활 정책 홍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영양교사 및 담당공무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혜자 및 협력자 집단과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급식소 위생·영양 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 대상별 교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시상 및 사례 발표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정책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정책의 투명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정책은 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업이 필요할 만큼 다양한 식품안전의 환경요소를 다루고 있고, 실제의 집행단계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보육시설, 학교, 판매업소,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원활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정 및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복잡한 추진체계와 집행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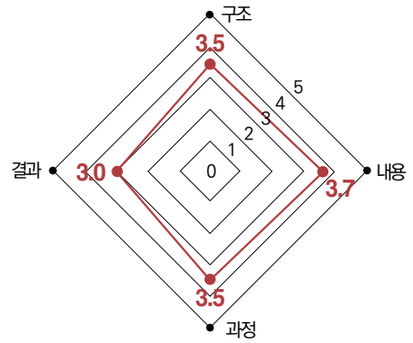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은 급식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 부분을 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환경적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으로 펼친 다양한 정책대안의 수립 및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집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투입에 비해 전반적인 급식환경의 질에 대한 체감도에서 괄목할만한 향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보육시설 및 학교의 급식체계에서 식중독 사고와 같이 현저성이 높은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성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아직 그리 높지는 않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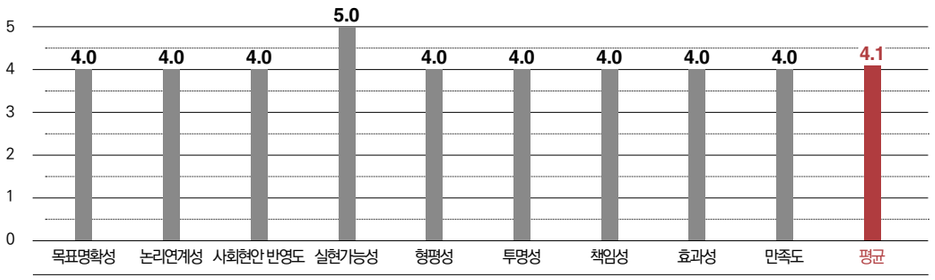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영양의 관리체계가 낙후된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걸쳐 확대하여 설치하고, 주기적 실태 점검과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주변 식품안심 체감도는 2014년 49.7% 수준에서 2016년 60%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좀 더 향상시킬 여지는 남아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d). 여기에는 학교 급식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외식환경의 질에 대한 체감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9]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도시숲 조성

[그림 4-120]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도시숲 조성 사업은 행복한 도시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 녹색공간의 확대와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통한 도시숲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도시녹화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숲 확대 추진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산림청은 폐철도, 도시재생지역 등 도시숲 부지 확보, 미세먼지·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연구 실행, 숲체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등의 직접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도시숲트러스트)확대, 도시숲사랑 캠페인 개최로 도시숲에 대한 관심과 참여홍보, 기업참여 유도를 위한 사회공헌안내 설명회 개최 등의 시민참여노력을 같이 해왔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측면에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가공간에 대한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숲의 확대와 관련 편의 시설의 공급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면에서 해당 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잘 반영한 정책이며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도시숲 정책은 도시숲 조성, 체계적인 가로수의 조성·관리, 명상숲 조성, 전통마을숲 복원 등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통해 정책목표를 구현하여 왔으며 민간 거버넌스의 확대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도시숲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교육장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노인들과 주부, 직장인들에게도 걷기 운동과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김철민 국회의원실 2017). 이렇듯 경제력이나 기타 사회적 계급과 관계없이 사회 여러 주체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정책의 형평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도시숲 정책은 매 사업 시행 전 사전설계검토 실시를 추진하고 있여 사업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산림청 2017a).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면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선도경영단지별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시적 성과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정책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도시숲 정책은 2014년부터 산림청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산림청의 자체 평가를 통해 정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서(환경부, 행복청)와의 협업과 재정집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공정률 점검회의 등을 실시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도모해 왔다(산림청 2017d). 또한 도시숲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 거버넌스(도시숲 트러스트)를 확대하여 왔으며 도시숲사랑 캠페인을 개최하여 도시숲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보장해왔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이 평균이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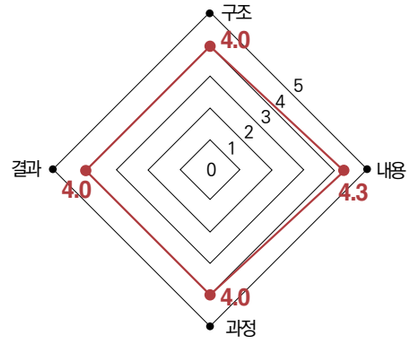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정책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도시숲 확대에 따른 대기정화, 기후조절, 정서함양 등의 다양한 도시숲 기능 강화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왔다. 또한 '숲세권'같이 주변 숲의 유무가 거주지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쾌적한 주거 여건은 삶의 만족도 상승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 및 노약자 등에게도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상당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도시숲 조성정책은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뿐 아니라 거주환경의 변화를 통한 도시주거공간의 가치상승까지 이루고 있어 정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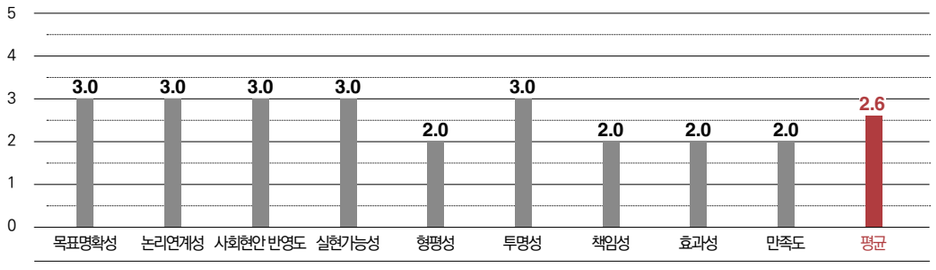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4.3), 구조(4), 과정(4), 결과(4)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특히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영역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21] 도시숲 조성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림 4-122]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중 일정 기간을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유연하게 교과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잠재력을 키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원대한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과제가 구체적으로 확립되기 보다는 적용범위와 시간의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국의 의지만 반복적으로 표명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한정된 기간의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자유학년제의 도입 및 전국적 확대 실시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핵심 내용은 교과과정의 일정기간 동안 시험 없는 참여형 교실교육,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학생 선택의 주제중심 자유과정, 동아리 활동 중심과정, 예술·체육 중심과정 등의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골격만이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700여개의 연구회를 교사들이 스스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수업연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7c5).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학기 연계운영, 자유학기를 연장한 자유학년제 도입, 전국으로 전면 확대와 같은 방안을 연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율활동의 여건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학교의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정책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유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교육부가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시험 위주 교실교육에서 탈피한다는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 유관 교육기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해당 기간을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활동으로 채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자유학기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그 실행기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방안들이 연이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운영, 학기당 170시간에서 2학기 221시간으로 연장한 자유학년제의 도입이 발표되어 교육현장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2016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면서 교육부는 체험처 58,882개, 프로그램 102,507개를 확보하는 등 짧은 기간에 상당한 노력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이 자율활동을 설계하고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역량을 제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에서는 확대 일변도의 정책 결정이 반드시 그 효과의 형평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2013년에 공교육 내실화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정책으로 채택되고 즉시 42개의 연구학교를 지정하면서 시행되었다.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의 체험활동 전수 조사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지역 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입시제도 등 제반 교육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교육부가 자유학기제의 활동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중앙부처, 민간기업, 대학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대안의 개발과 이행체계의 확립을 통해 정책의 책임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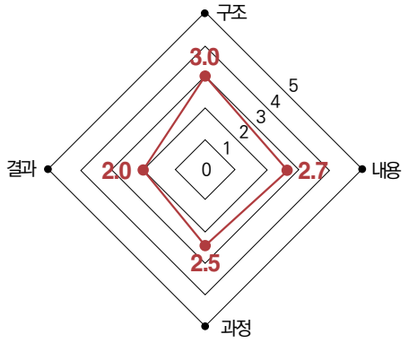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부는 당초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제한된 기간이나마 입시중심 교실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탐색과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현재 가용한 정책수단이 많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대상집단과 추진추제가 모두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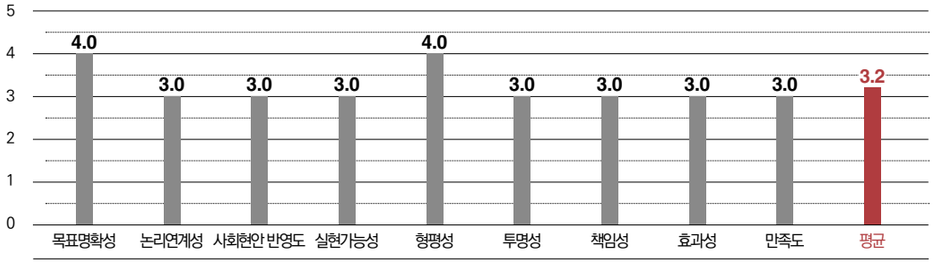
학생들을 입시중심 학교교육에서 탈피시켜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그 선후의 교육과정과 제반 교육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발전의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정책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3]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그림 4-124]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서 전 국민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접근 및 참여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를 양성하여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은 미디어의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조기·발굴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인 미디어·VR·드론 등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방송제작 및 상영 등이 가능한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농·산·어촌 등 미디어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체험 교육 실시하여 왔다. 다양한 정책대안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정책대안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평가를 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미디어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즐기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중요하다. 또한 미디어 관련 창의 인재의 양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향후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는 사회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은 전 국민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아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를 양성하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정책대상집단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인터넷 윤리수준 향상,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라는 세부정책대안이 충분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 하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평균정도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전 국민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 아래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취약계층에게까지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였다. 정책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형평성이 평균이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관련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b). 또한 시청자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시청자 참여 기회 제공 및 시청자권익 증진사업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7b).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책의 투명성이 평균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역·계층·세대간 미디어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및 재능있는 인력의 조기 발굴·양성하고자 2017년에는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인터넷 윤리수준 향상,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고정형 TV VOD 시청기록 조사,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기록 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피드백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b). 이러한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체계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책임성을 평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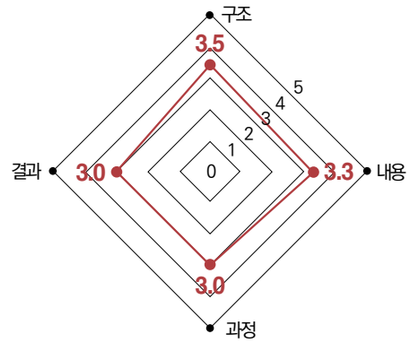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만 613개의 프로그램에 46,579명이 참여하였고 미디어 체험행사 747회에 18,010명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에 203개교, 동아리 미디어 교육에 68개교, 대학연계 교육과정에 30개교가 지원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실시결과를 넘어서 해당정책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를 넘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얼마만큼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계층·세대간 미디어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및 재능있는 인력의 조기 발굴·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정책을 통해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의 역기능 최소화,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느껴지기에는 정책대안들의 파급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만족도 측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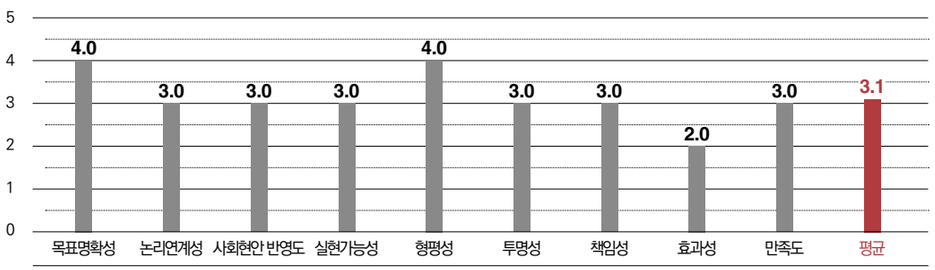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구조(3.5), 내용(3.3), 과정(3), 결과(3)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목표명확성과 형평성이며 다른 항목은 평이한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25]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그림 4-126]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한 문화복지증진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편적

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기능에서 문화의 영역을 판별해내고 그 속에서 사회적 수요의 변화와 양극화의 위험에 대응해야 함을 정책의 목표에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보편적인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그 대상으로 매우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무료 문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문화향유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지불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특색을 보인다. 이는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들이 범하기 쉬운 정치·행정·재정적 제약요인들을 무시하는 우를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집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부분적인 지불능력의 보전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감안한 정책의 설계라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일반 국민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 개입의 범위에 대한 평균적인 사회적 인식과 괴리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문화복지증진 정책은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의 구성요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감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이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 시민의 분명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지는 아직 다소 불분명하다. 즉, 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의 절실한 문화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문화욕구를 이끌어내는 계도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반복되거니와 이러한 개인의 문화 향유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정한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17년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총 16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006년 26억원에서 2017년 99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지방비 매칭을 시작하여 이 중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699억원 가량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그 대상자의 수를 감안할 때 소요재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개인별 지급금액이 연간 6만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불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계층을 위해 소액의 부분적인 보조라고 한다면 정책 대안의 재정적 실현가능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새정부의 계획처럼 개인별 지연원금의 규모를 연간 1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일반국민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상당한 국고 및 지방비의 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사회의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계층 간 문화접근권 및 지불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구입의 한정된 범위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체육의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주관사를 중심으로 여건 맞는 다양한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대상집단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혜택을 집중시키면서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소액의 부분 보조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다른 시급한 복지의 경제적 차원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목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실제 집행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관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누리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지역주관처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사업비를 수령하여 집행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과정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의 실제 사용실태와 카드가맹점의 운영실태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 무엇보다 지원금액이 소액이어서 장거리 여행에는 실효가 없고 주로 주변 지역의 문화 기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지역별로 구축된 문화인프라의 격차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국회입법조사처 2016a).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의 협업에 바탕을 둔 복잡한 추진체계, 현장의 이용행태 및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제한, 지역간 문화인프라 차이로 인한 격차 발생 등의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23,817개의 가맹점과 140만명의 수급자의 거래를 통해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7e), 이러한 과정에 대해 정부당국과 대상집단의 정보비대칭이 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 자격심사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점차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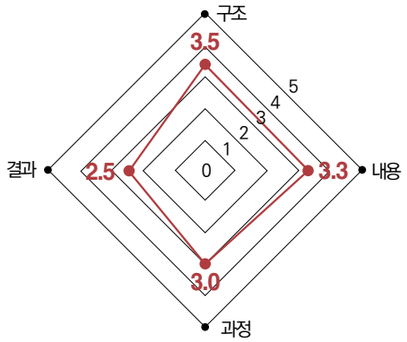
정부는 2017년까지 개인별 연 6만원에 머무르던 지원금액을 2018년부터 연 7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과연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문화 향유를 위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적정한 규모도 무한정 늘려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문화, 여가, 체육 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변화는 최근 문화복지카드 가맹점 중에서 숙박, 교통, 여행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있는 바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안민석 국회의원실 2017).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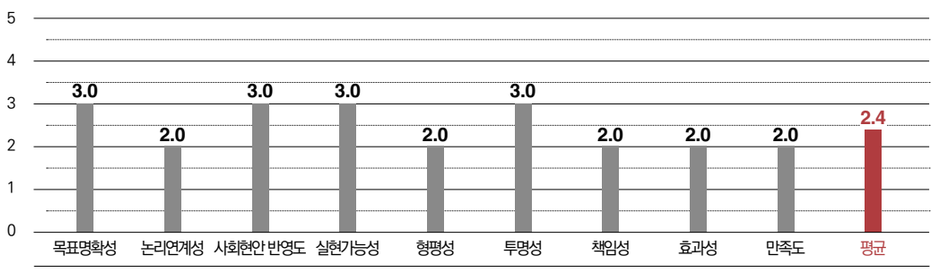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 증진 사업은 그 동안 문화이용권,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로 분리되었던 것을 통합하고 주거지 주변의 다양한 체육시설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정책의 수혜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분명하게 설정되어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갖는 일반 국민으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27]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혁신학교 운영 확대

[그림 4-128]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교실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의 문화 등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혁신의 방향과 결과물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어 평균적인 점수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아래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하였다. 첫째는 현장의 자발성·창의성·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둘째, 시·도의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자체 계획 수립의 이행에 대한 지원. 셋째, 교실 수업 개선, 평가 개선, 시·도 및 학교 단위 네트워크 구성 등의 시·도 자율 추진 혁신교육 정책을 지원.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지원이 그것이다.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교육부 단위 계획은 2018학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교육부 단위 계획이 어떻게 실시될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항목은 평균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획일적인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중앙의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요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운영은 바람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얼마나 지역의 특성과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학교 운영·확대를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서 평이한 평가를 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혁신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기도의 2009년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2017년 2월 현재 경기도 435개교, 서울 154개교를 비롯하여 전북 15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그 수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교육부가 중앙에서 단위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평균정도로 평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시·도교육청은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혁신학교 여러 사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주체들,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운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를 선정 시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신설 및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등에 직권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공평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과정을 거친다(교육부

2017i).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역별 그리고 학교별 차이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면에서 정책의 형평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시·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4년차 운영교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이는 학교자체평가, 교실개방과 컨퍼런스 운영, 현장평가로 구성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17). 이처럼 다각적으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다. 하지만 평가지수의 모호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평균점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혁신 학교 정책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를 위해 5회 이상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게 하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정책과정의 질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혁신학교는 학교자체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평가, 2년마다 성장나눔(중간 평가), 4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잘 실시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안을 공유한다.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정책의 질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7). 하지만 이러한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과정이 경기도 외에 모든 지역에서 체계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책임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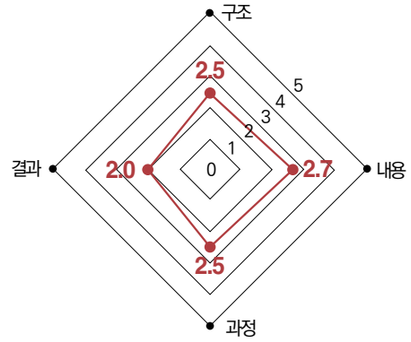
교육부는 그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해당 정책이 협력적·민주적 학교 문화의 형성,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 등)의 높은 교육 만족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혁신학교 운영·확대가 민주적 의사결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교사의 자발성·창의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설문을 통한 정성적인 평가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정책이 학생의 학업능력과 전인적 인성발달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정책을 정책의 효과성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다루었듯 정책이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업능력과 전인적 인성발달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종합하면 내용(2.7), 구조(2.5), 과정(2.5), 결과(2)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3점을 넘기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목표명확성, 사회현안반영도, 실현가능성, 민주성에서는 평이한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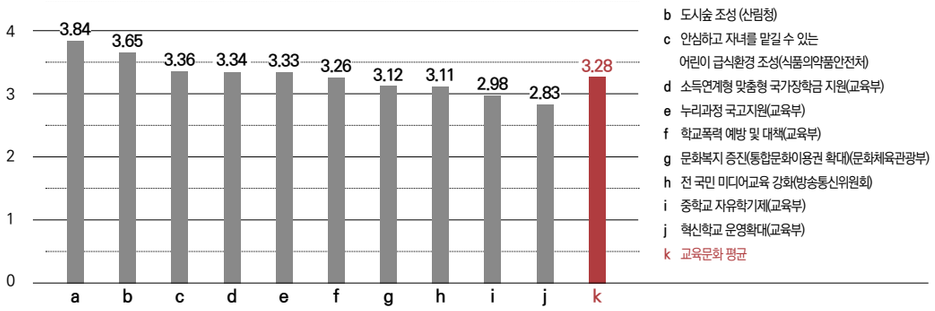
[그림 4-129]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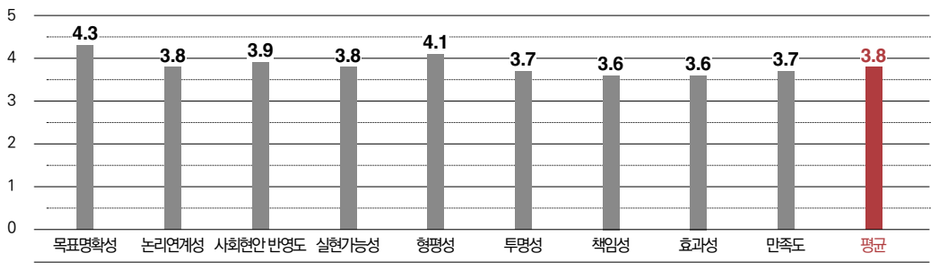
교육문화분야의 10개 정책에 대한 설문평가와 정성평가의 결과를 가중합산한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개 정책의 평균은 3.28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다소 긍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을 포함한 구조 영역이 3.5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을 포함한 내용 영역이 3.4로 뒤를 이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한 과정 영역과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포함한 결과 영역은 모두 3.1은 모두 중립적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3.84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도시숲 조성 정책이 3.65로 그 뒤를 이었다. 안신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3.36),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34), 누리과정 국고지원(3.33), 학교폭력예방(3.26) 등은 다소 긍정적으

로 평가되어 중위그룹을 형성하였다.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3.12),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3.11)은 중립에 가깝게 평가되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2.98)과 혁신학교 운영 확대(2.83)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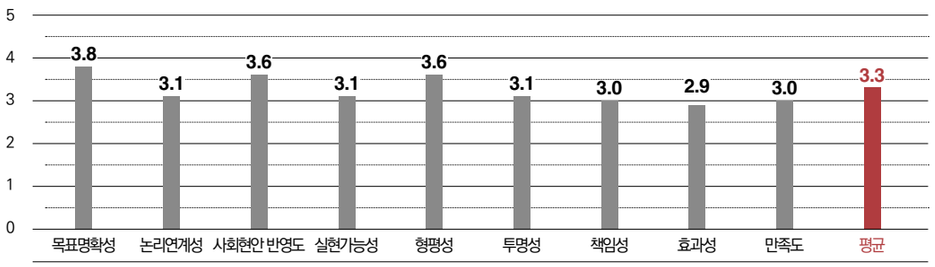
2017년 평가의 결과는 교육문화분야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도시숲 조성 정책이 예년과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3.6~4.3의 높은 점수로 고르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숲 조성 정책도 3.5~3.9로 비교적 고르게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상위군에 속한 정책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정책은 목표명확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의 지표에서 3.5~3.8의 점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의 지표에서 3.5~3.8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은 목표명확성, 형평성, 효과성 지표에서 3.5~3.8로 높게 평가되었고,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의 지표에서 3.6~3.8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하여 부정에서 긍정적 평가로 바뀌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형평성 지표에서 각각 3.7과 3.5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효과성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형평성의 지표에서 각각 3.5와 3.4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투명성의 지표에서 3.2~3.3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형평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의 지표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은 목표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투명성의 지표에서는 3.0~3.1의 점수를 얻어 중립으로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지표들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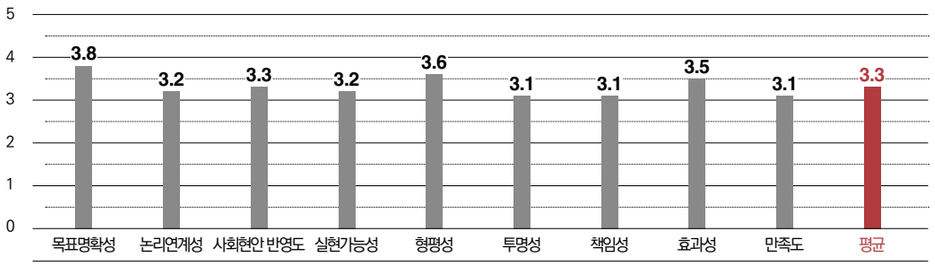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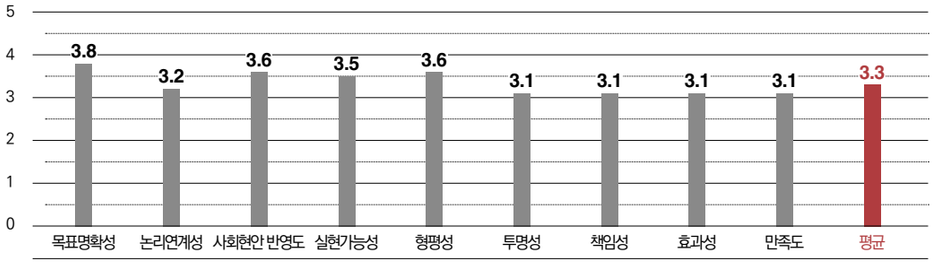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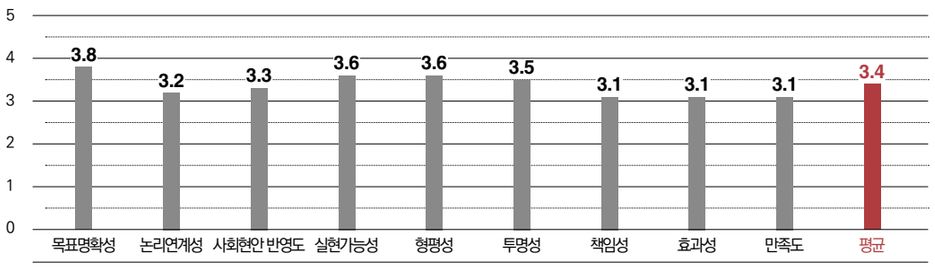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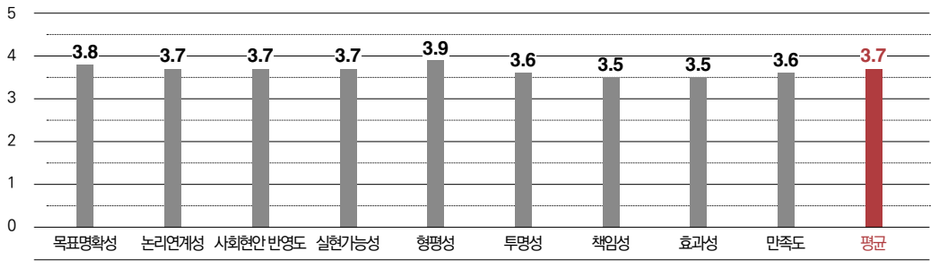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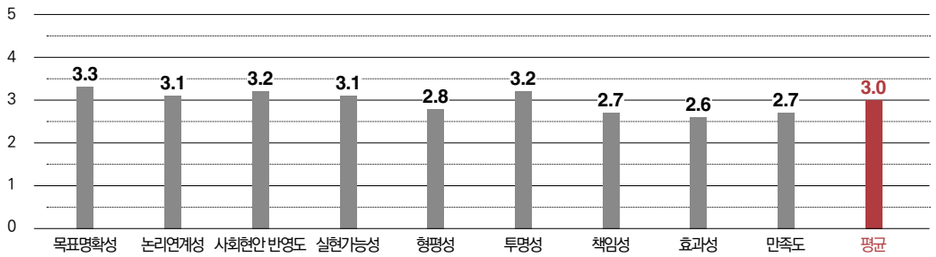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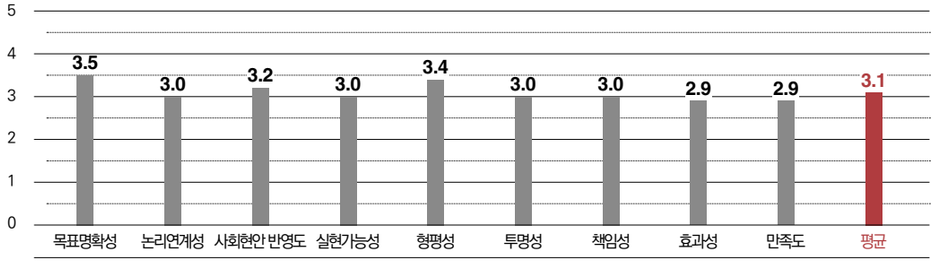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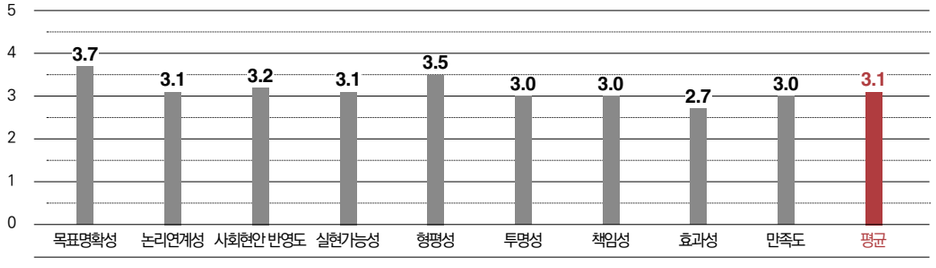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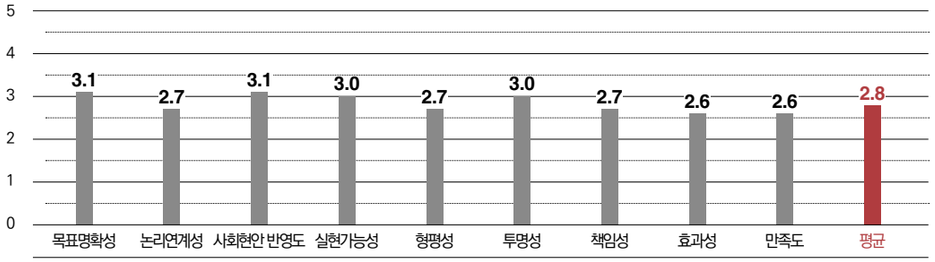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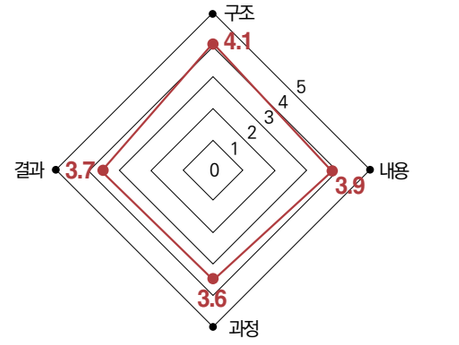


혁신학교 운영확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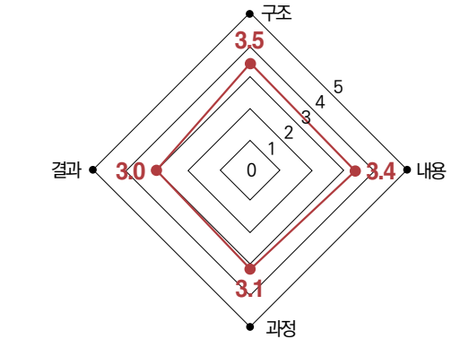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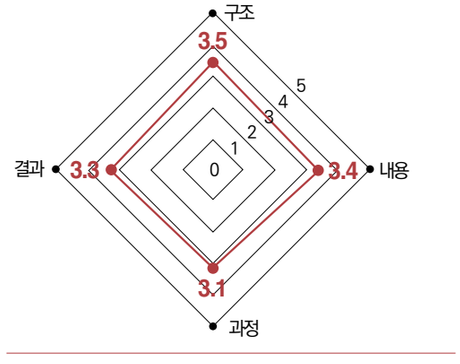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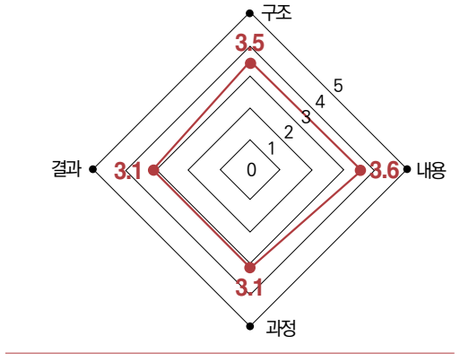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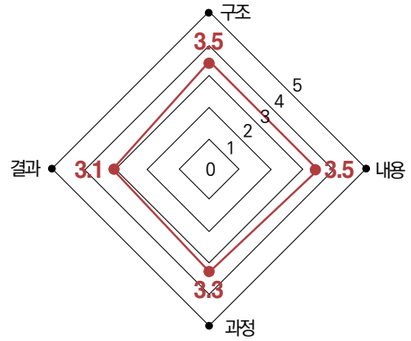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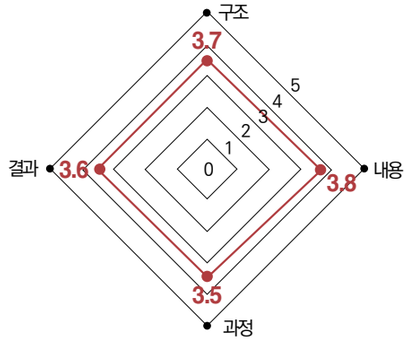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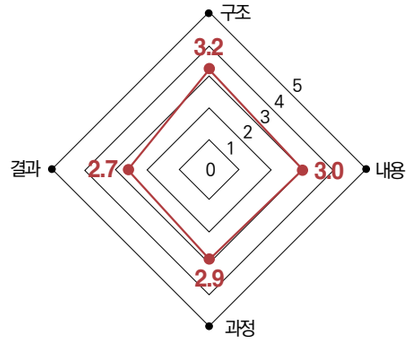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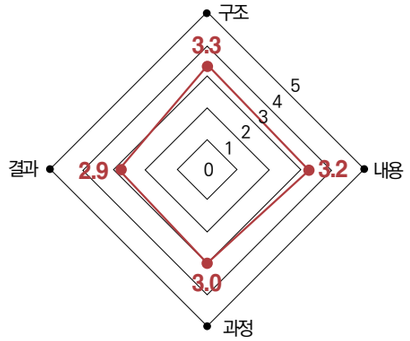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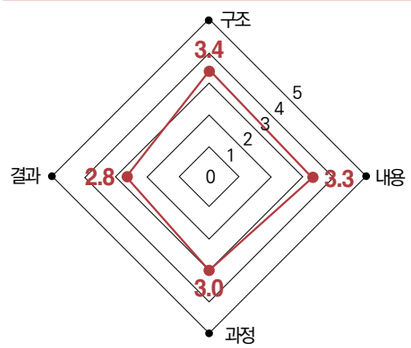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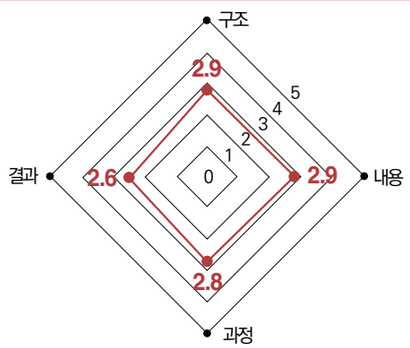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혁신학교 운영확대(교육부)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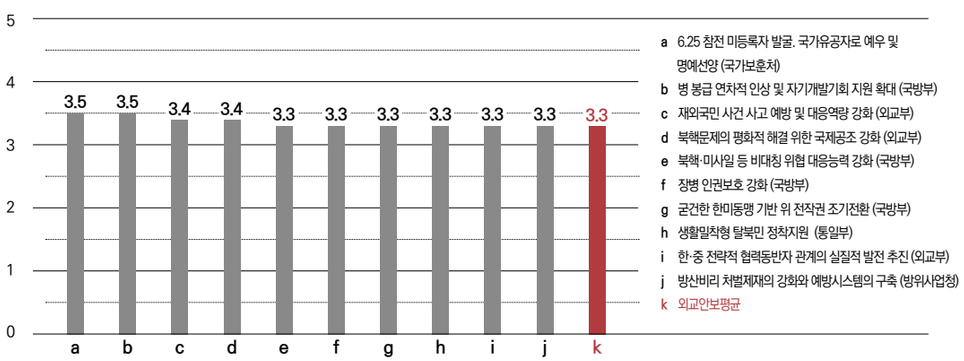
가)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모든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외교안보 정책분야는 3.3점의 평균을 나타내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정책(3.1), 교육문화정책(3.2), 사회복지정책(3.6)과 비교하였을 때 근소한 차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외교안보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구조나 내용에 비해 정책의 인지도 및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결과의 효과성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올해 외교안보분야 정책의 각 지표별 평가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책 인지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은 매년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정책들에 대한 전문가의 평균 인지도는 3.7점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인지도 평균은 2.9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외교안보정책별 평가에서 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일반인의 평가점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그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과 부족, 타 정책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과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외교안보 성과집 등의 자료들은 객관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어(최재혁, 2015) 일반인이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외교안보분야 10개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각 정책의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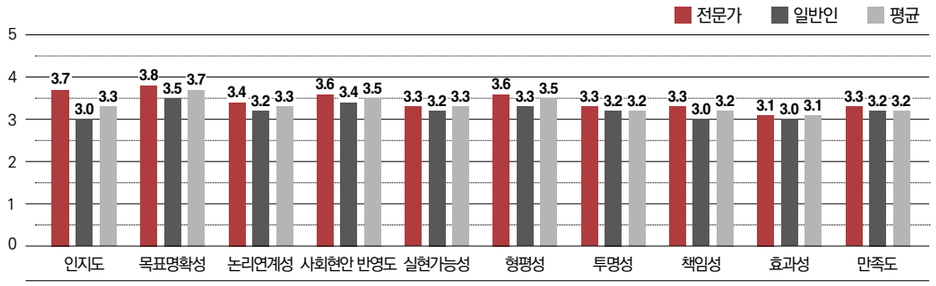


평균 점수는 [그림 4-133]에 나타나듯이 3.3~3.5에 해당하여 근소한 편차를 보였다. 각 정책의 평균을 순위별로 언급하면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3.5),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3.5),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3.4),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3.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3.3), 장병 인권보호 강화(3.3),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3.3),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3.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3.3),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3.3) 정책 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에 비하여(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2015, 2016) 외교안보정책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데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장병 인권보호 강화

[그림 4-134] 장병 인권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7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대 내에서 계급에 따른 강압적인 문화와 집단문화로 인해 꾸준히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왔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 비하여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책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체감 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과, 매년 언론을 통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정책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많은 응답자가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왔고, 정책을 시행해 가는 중에도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점차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렸다. 장병 인권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 복무시에 접하게 되는 내용이며, 그 가족들도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정책의 관련당사자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개선을 통해, 군 복무중인 장병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권문제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군대라는 특성상 다른 집단보다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군 인권문제에 대한 개방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군의 태도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우리 군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되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보다는 추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도 군의 특성상 외부의 개입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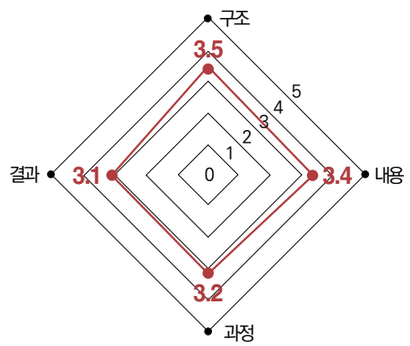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접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감소정도가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건을 주로 접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미비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방정책들이 공공재적 성격과 소통부족으로 대부분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성격상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아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군 인권문제에 대해 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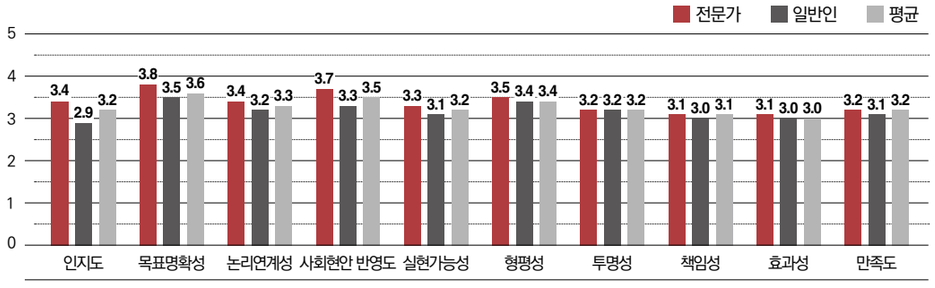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4), 과정(3.2),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35] 장병 인권보호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그림 4-136]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이 최근 지속적으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청렴문화의 정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감독체계의 정비 및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비리 예방 시스템을 방위사업청에서 구축하고 있으며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며, 사업관리절차 개선, 위원회 운영현황 관리 등의 방안들도 그 효과가 나오기 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문제 등 방산비리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고, 북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국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회현안 반영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방산비리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방탄조끼문제, 통영함 음파탐지기 문제 등 지속적으로 방산비리로 지적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

이 많았다. 장기적으로는 처벌강화 및 손해배상 확대 등,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법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은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의 특성 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구조나 내용에 비해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비리업체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식이 많아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비교적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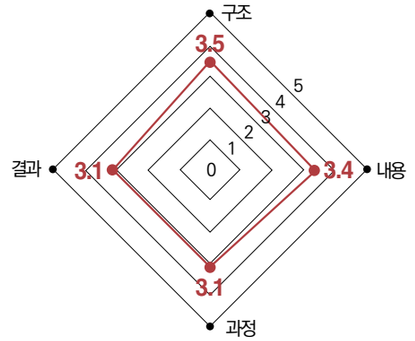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방산비리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만 터져도 정책효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에도 주요 방위사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가 적발된 것이 방위사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책의 목표에 비해, 이에 대한 정책이 폐쇄성을 띄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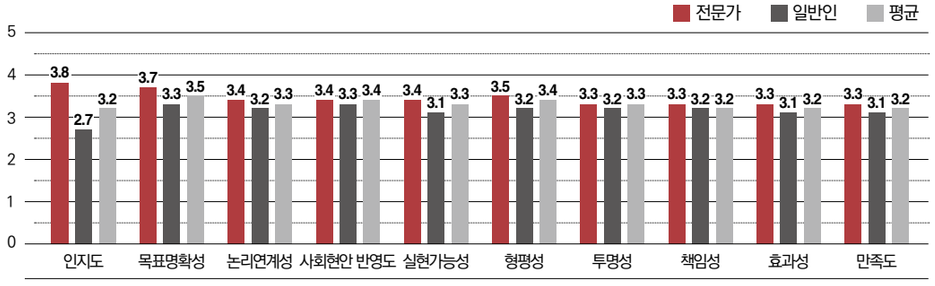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4), 과정(3.1),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37]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그림 4-13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점수 차이가 다른 정책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문가와 일반인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인지도 점수를 보면 작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3.8점, 일반인 2.7점으로 10개의 항목별 점수 중 차이가 가장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책 목표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표에 비하여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책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체감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과, 다양한 정책대안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전보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은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에서 한국으로의 여행 및 교류를 줄이는 것이 뉴스와 기사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점과, 관광업이나 요식업 등 중국 여행객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많아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간 지속된 중국과의 긴장관계의 여파로 국민들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할 요소가 당분간 가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이 낮지 않다는 점이 응답자들의 정책 실현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교 정책의 특성상,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은 국민 모두가 그 수혜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사드배치에 지속적인 경계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아직 금한령이 한시적으로 풀어지는 수준에 그쳐 그 이익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수준이 보통으로 책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비교적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교 정책은 일반 국민들이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성이 존재한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나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한·중 외교정책의 진행사항이나 결과등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이면의 자세한 사항들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이다. 이러한 점이 정책의 투명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와, 소통의 부족이 이후에 이어질 정책의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책임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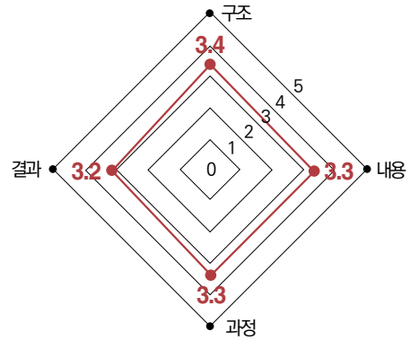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효과성 지표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금한령 또는 한한령이 일시적으로 풀렸다는 것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증명되었으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정책에 대한 이슈가 가장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보통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금한령이 일시적으로 풀려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 비판적인 제기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부분적인 호재가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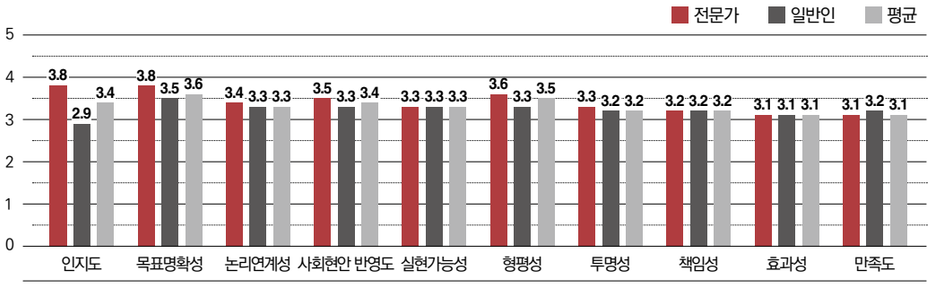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내용(3.3), 과정(3.3), 결과(3.2)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3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그림 4-140]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정책은 우리군 및 한미동맹의 대응의지·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대북제재 및 압박의 수위를 높여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및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북핵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이에 따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어 정책목표가 명확하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과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해당 정책이 사태의 진전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두번의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올해에도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이 계속되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 점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한·미·일이 연합하여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한 무력도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등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북핵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형평성 점수가 나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의 배치가 북한의 도발에 따라 전격적으로 배치가 결정되면서 다시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일반인 집단에서 조금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민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은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높았으나, 안보와 관련하여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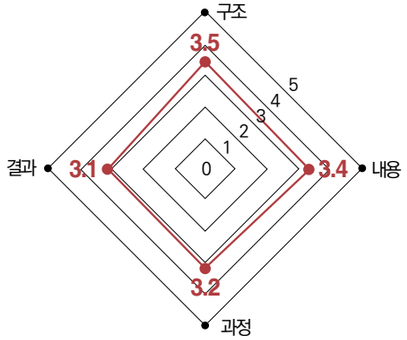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은 본 정책의 다른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역보복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성이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 시도를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동안 우리나라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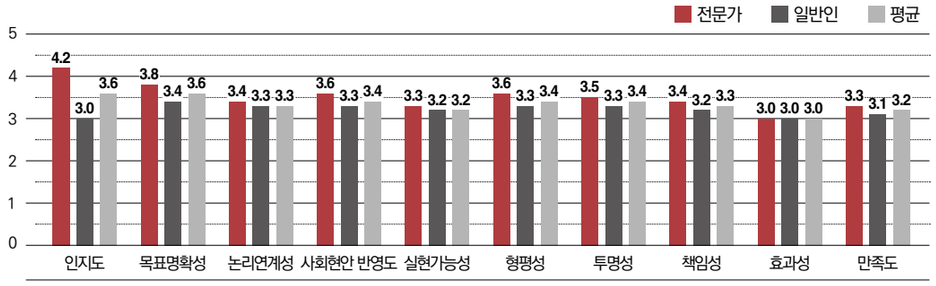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4), 과정(3.2),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1]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5)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그림 4-14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듭된 도발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매우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어, 목표의 명확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정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이냐의 질문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의 목표와 정부 대응이 명확하고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다수의 미사일 발사 및 핵보유국으로의 꾸준한 인정 요구 등 구체적으로 해결된 사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북핵 문제의 진전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슈화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보통의 평가를 받은 것은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에서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협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일반인들이 오히려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정책의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적 태도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조치 등이 행해지고 있어, 전문가 및 일반인 모두가 현 시점의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와 혜택을 받는 대상의 일치 여부를 고려해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개인을 넘어 전 국민의 안위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책의 형평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이 정책의 경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및 외교 정책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수준의 결과로 정책의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변함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의 부족 및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은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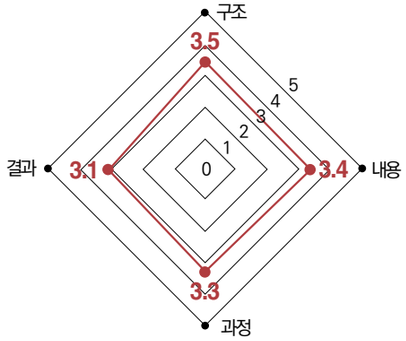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은 본 정책의 다른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에 차이가 없어 해당 정책의 효과성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정책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북한 핵실험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인 관계악화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다소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고, 그 목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신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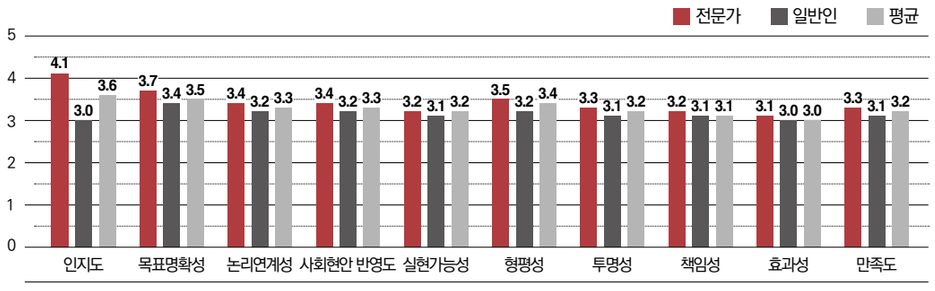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4), 과정(3.3),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그림 4-14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듭된 도발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시작전권을 조기 전환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지표에 비하여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책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체감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구체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양국 간의 합의나 훈련을 통해 전작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관련한 노력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가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 북핵문제와 같은 다른 사회현안에 비해 그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 관계와 전작권 전환이 여러 번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

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속적인 한미동맹 관계에서 제기되었던 전작권 이슈가 새롭거나 특별한 정책 대안없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작업들을 일반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전과정이나 결과를 알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교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전국민이 향유하고, 현재 북핵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당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결과나 혜택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교적인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그 진전과정이나 중간적 결과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형평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러 번 주지하였듯이 외교 정책은 정책의 형성과정부터 협상 등 집행의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만,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학계의 간담회 등의 참여나 양국의 공동성명 발표 등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통 수준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책임성 지표 또한 투명성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 배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전문가 간담회나 언론을 통한 일부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즉, 모니터링 체계와 같은 책임성 지표는 일반 국민들, 전문가, 언론 등의 참여에 해당하는 민주성 및 투명성의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없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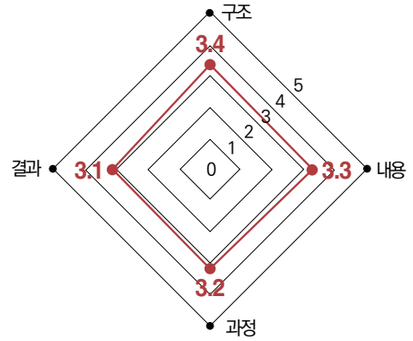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1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호적인 한미동맹관계의 지속과 함께 실제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전작전 전환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되어 온 정책 대안이 유지되고 있고, 특별히 전작전 조기 전환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양국 간의 협의 외에 전작권 조기전환을 위한 뚜렷한 정책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 대안을 생각해내기 어려우며, 공동성명 등의 미약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존재하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정책의 방향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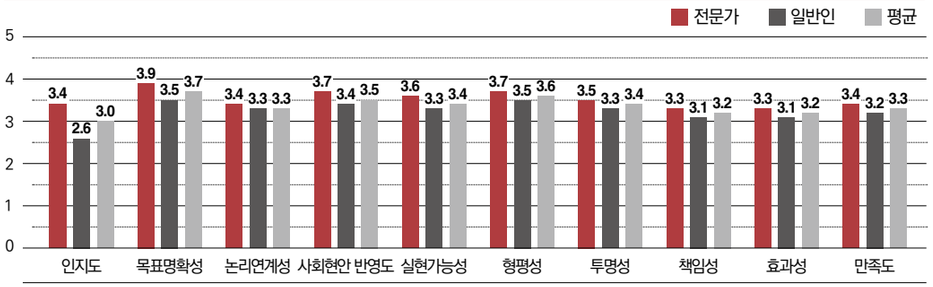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내용(3.3), 과정(3.2),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5]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그림 4-146]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9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7점으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고 해

외 사건사고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외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볼 때,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항목들의 점수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재외 국민들을 위해 시행중인 기존의 다양한 제도 뿐만 아니라 또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이 이 정책에서 제시하는 세부 정책들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에 보통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해외 교민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해외 현지의 재난 사고및 상해, 살인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 여행, 거주하거나 잠시 머무르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교부의 본 정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현안 반영도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의 내용은 재외 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언론매체와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와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해결 과제이며, 종합적으로 보통의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정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 중인 혹은 체류와 여행을 계획 중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외로 가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학이나 구직을 위한 해외체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 높은 형평성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5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다른 정책의 투명성 지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외교정책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여 투명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이 정책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은 해당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받아보거나,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 등과 같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바일의 경우 그 특성상 대응성이 매우 높은 점도 이러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동 정책의 다른 평가부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각종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점이 응답자들의 정책 운영에 관한 책임성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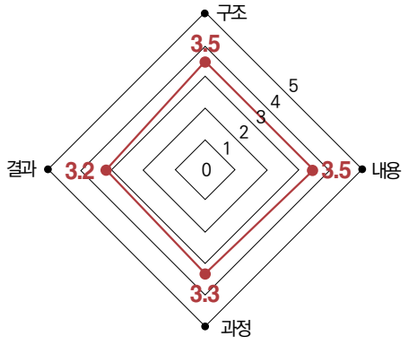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3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정책의 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더욱이 실시간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지표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뿐더러 예전부터 이어져 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해당 정책의 내용과 투명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이어져 온 정책의 효과성이 높지 않고,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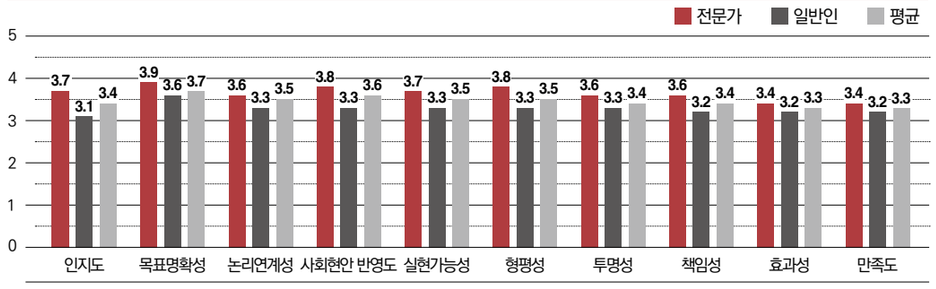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5), 과정(3.3), 결과(3.2)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그림 4-14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9점, 일반인 집단은 3.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이 간단한 간식 등을 구매하기도 힘들 정도로 낮은 봉급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비율도 높았다. 또한 복무기간동안 사회와 단절되면서 자기개발의 기회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장병의 근무여건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2012년 대비 2017년 봉급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큰 폭의 봉급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기개발의 경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받쳐줘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반인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책대상자인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사회현안을 반영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봉급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예산이 꾸준히 확보되고 있으나, 다른 사항들은 정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것이 어려워 전체적으로는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보상을 가산점제도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최근 청년실업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다른 정책에 비해 형평성에 기여하는 바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었으며, 국회의 합의 하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투명성이 높게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병사들의 봉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든 점들이 많아, 부족하게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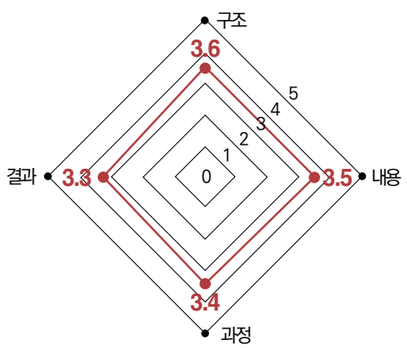
3.3점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는 최저임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러한 이유로 목돈마련을 위해 적금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병사들이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의 인식 전환과 함께 교육을 위한 부대환경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진행중인 시점에서는 그 효과성이 다소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기회의 지원 확대는 부대 전체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제반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감하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병 봉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더욱 큰 폭의 증가를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봉급의 증가가 이루어져 점차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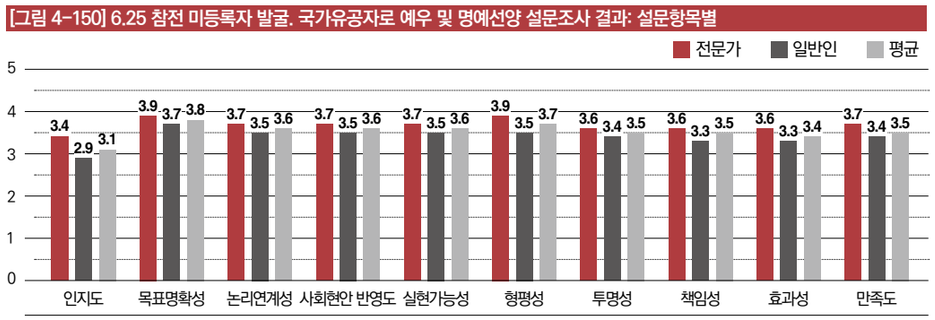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6), 내용(3.5), 과정(3.4), 결과(3.3)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49]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9)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그림 4-150]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이 정책의 목표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9점, 일반인 집단은 3.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8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직접 6.25 참전 미등록자를 발굴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도 명확하다고 인식하여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참전 미등록자의 발굴뿐만 아니라 비군인 참전자의 참전유공자 등록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판정기준에 대한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전쟁에서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찾아가는 정책을 수립하여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6.25 전쟁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명예 선양은 국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를 보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자의 발굴의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규로 참전용사로 등록하고, 방계가족에게까지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9점, 일반인 집단은 3.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7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 미등록 참전용사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일반 국민이 수혜자임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함께 수반되지 못해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추론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과정 영역 중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의 결정·집행에 있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많은 국민들의 경우 정책의 진행과정 등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명성 평가에서 보통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에서 정책의 책임성도 낮게 응답하였는데,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국민의 의견 수렴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 보통 수준의 평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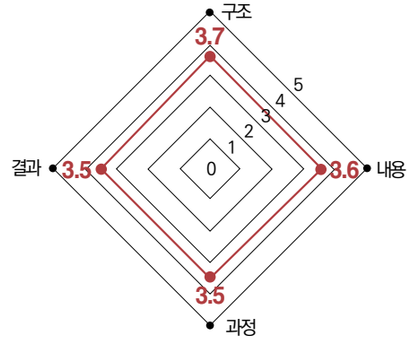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로 신규 선정된 참전용사에 있어서는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 신규 국가유공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7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정책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많은 경우 이 정책을 체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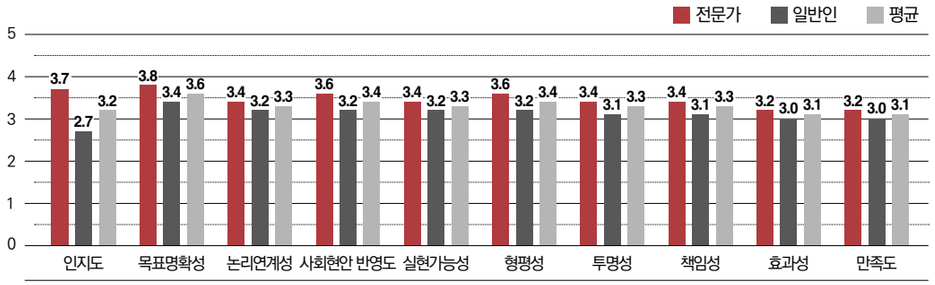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7), 내용(3.6), 과정(3.5), 결과(3.5)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51]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10)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그림 4-152]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8점, 일반인 집단은 3.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정책의 관련된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의 평가가 다소 낮지만,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 관련 언론보도 및 방송프로그램등을 일반인도 많이 접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체계 구축'과 '국민의 인식개선 등 소통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의 평가가 다소 낮은 것은 해당 정책이 탈북민이라는 특정 수혜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대상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연계성

이 구체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합적으로 정책의 평가 결과 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정책이 기대하는 결과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연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가까운 평가 결과가 나타났으며, 본 정책 내 다른 항목의 점수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조사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탈북민 지원정책의 홍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의 다른 항목에 비해 낮지 않은 점수이지만, 수치상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탈북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소통이나 통합, 즉 인식이 중심이 되는 현 탈북민 지원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6점, 일반인 집단은 3.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 내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비해 (평균 2.9점) 형평성 부분 평가점수가 상승한 요인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로 인해 여러 매체에서 탈북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집단의 평가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의 평가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이 정책의 특성 상 정책에 대한 논의와 형성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등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탈북민의 정책 참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투명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책임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4점, 일반인 집단은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투명성과 관련된 질문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높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일반인 집단의 점수가 전문가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결과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정책의 실행 과정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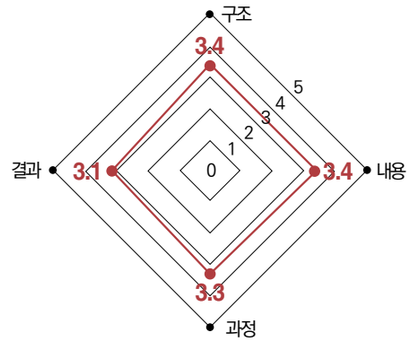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 부분은 정책의 만족도 부분과 함께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본 정책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거나 융화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또한, 탈북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책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 일반인 집단은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정책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식의 변화라는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탈북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4), 내용(3.4), 과정(3.3), 결과(3.1)의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53]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영역별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장병 인권보호의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및 형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각각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4점의 평가를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4위에 해당한다.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각각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2점의 평가를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9위에 해당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및 형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등 다른 항목은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3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7위에 해당한다.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3.5점, 내용 측면에서 3.3점,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각각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2점의 평가를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9위에 해당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및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4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4위에 해당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논리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평균 3.4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4위에 해당한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4.0점, 내용 측면에서 4.0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6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2위에 해당한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4.0점, 과정 3.5점, 결과 측면에서 각각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7점의 평가를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1위에 해당한다.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연계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및 만족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 외 정책의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4.0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3.0점, 결과 측면에서 각각 3.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는 3.6점의 평가를 받아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2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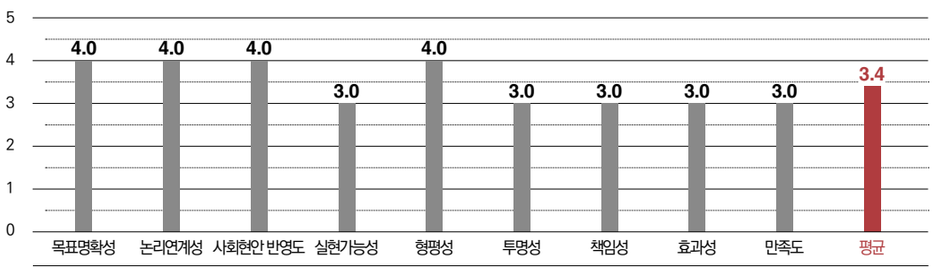
생활 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관련하여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지표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구조 측면에서 평균 3.5점, 내용 측면에서 3.7점, 과정 측면에서 3.0점, 결과 측면에서 3.0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3.3점으로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7위에 해당한다.

다음에서는 각 정책에 대한 상세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책별 정성평가 결과

(1) 장병 인권보호 강화

[그림 4-154]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군내 비인권적 행위들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여 인권존중의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군 인권보장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인권침해구제·상담 및 인권실태조사 강화,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즉 인권존중의 선진화된 병영문화 조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들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인권보장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장병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구제·상담 및 인권실태조사 강화,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 등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은 정책목표와 실질적·논리적 연계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2016년부터 군 인권보장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으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군형법에 군대 내 폭행·협박죄 신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1일 한시법으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현재 국방위에서 공청회 미개최를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연합뉴스, 2017. 12. 1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아시아경제, 2017. 11. 30). 의문사 진상규명제도,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임태훈, 2016) 등은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점검노력보다 인권침해 사건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통해 중요한 인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홍성수, 2014)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공관병 사건(아주경제, 2017. 10. 23.), 군대 내 자살사고(매일경제, 2017. 7. 25.) 등 여전히 크고 작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방부, 2016). 또한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데일리그리드, 2017. 11. 22.). 이러한 현황을 볼 때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 강화는 이번 정부 국방부 국정과제에 해당하기도 한다(청와대, 2017).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의 법개정은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 추진 중에 있으며, 군 가혹행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4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1.4%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입법에 근거한 강력한 정책추진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의 마련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인권문화가 정착되는데 있으므로 인권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연구진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장병들이다.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정책대상에 대해 그에 적합한 인권보호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군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개선되지 못한 인권의식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정책으로 잘못된 상급자의 태도나, 여성에 대한 인권개선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물들어 있는 반인권적인 요소를 개선해 간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도, 제2항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아직까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연구진은 이 정책의 투명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그동안 군은 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결해 왔다. 사건이 터지면 개선방안을 내놓지만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되는 문제는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현재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 등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존중의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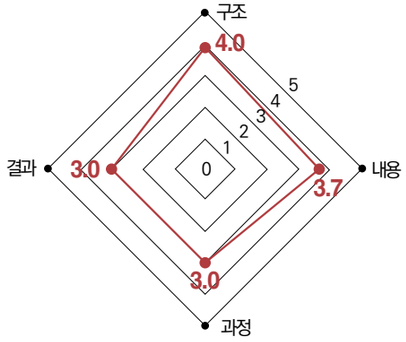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군 인권침해 사례들은 아직까지 이 정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군 인권 보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가 추진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군대의 특성 상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문제를 국방헬프콜 등 전화상담 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구속력 있는 제도를 구축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군인권 병영문화개선을 꾀하고는 있지만 민주성, 책임성, 효과성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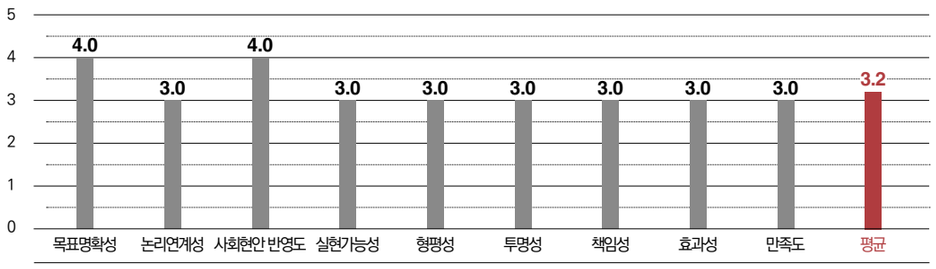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3.0), 결과(3.0)로 나타났다.

[그림 4-155]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2)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그림 4-156]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 감독검증 업무체계를 정착시키며, 준법지원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들은 이 정책이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예년과 같은 신뢰회복 내지 청렴도 회복 등의 추상적인 목표보다(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명확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동 정책은 처벌의 강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도의 도입, 심사항목에 청렴성 추가, 방위사업감독관제도, 준법지원협의회의 도입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JTBC, 2017. 12. 12.), 반복되는 정책 실패의 경험으로 방산비리를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정책내용들이 비리의 근절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방위사업감독관제도는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지속되었던 방산비리의 해결에 검증□감독활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방위사업의 중요성과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지속되는 방산비리 문제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청렴한 방위사업체계의 구축은 국방역량의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된다(성석호, 2015). 한편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청이 처음 출범한 2006년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사회문제로 언급되었고, 현재의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나, 방위사업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언제나 사회현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올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방위사업청은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가 크게 알려질 때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추가하면서 개선의지를 표현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기 어렵다. 다만 그 실현가능성을 예년에 비해(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2016) 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는 처벌제재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었고, 비교적 실질적인 대안들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의 마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렴문화,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 구축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소요군,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으나, 방위사업의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방위사업청, 2017). 즉 기본적으로 방위사업의 수혜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정책의 형평성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외교안보분야 평가대상 정책들 중 하위 3위를 기록하였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반적인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에 그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방위사업청은 정보공개의 확대와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방산비리 해결을 위한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에서는 2016년 12월 발족한 방위사업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준법지원협의회의 운영(방위사업청, 2017), 방위사업청의 정보공개의 정도, 설명회 개최 등에 근거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방산비리에 대한 정책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최근 방위사업청은 선제적 비리예방을 위한 방위사업감독관 조직과 준법지원협의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자율적 개선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방위사업청, 2017). 그러나 실제로 방산비리는 아직까지는 감사원이나(경향신문, 2017. 12. 7.) 검찰에(연합뉴스, 2017. 10. 11.) 의해 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자율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성 및 정책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그동안의 방위사업청의 낮은 책임성과 최근 도입된 방위사업감독관제도 및 준법지원협의회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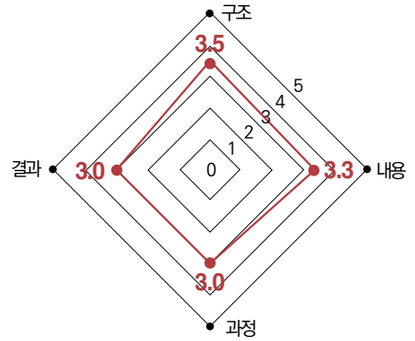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되는 방산비리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정책의 책임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위사업청 스스로의 예방과 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청의 자정노력만으로는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정욱식, 2015).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외교안보분야 정책들 중 이 정책의 효과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최근 도입된 제도들의 효과성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아 효과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그동안 방산비리의 해결노력이 뚜렷한 결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만족도는 높이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제의 개선, 준법감시시스템의 도입 등 실질적 대안의 마련으로 정책의 구조나 내용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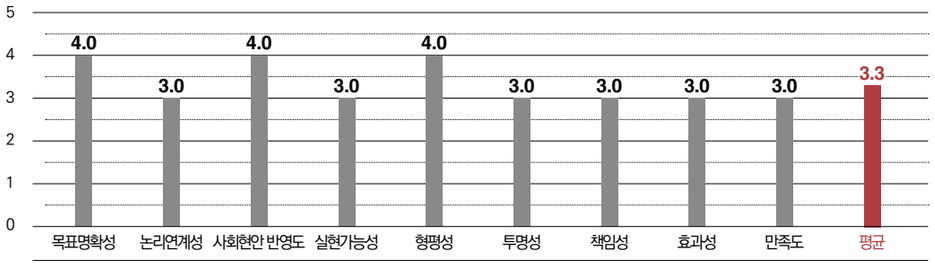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2.0), 결과(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7]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그림 4-15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사드배치 및 북핵안보 문제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전환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문제로 인해 올해 대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경제 및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바, 이 정책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여(2017.12) 중국의 제재가 어느정도 해소되긴 하였으나,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라는 정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의 목표성이 어느때 보다도 분명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한 것에 비하여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교 안보라인이 한중 관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부 원인

으로 보여진다. 특히,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지휘부에 중국통(中國通, 장기간 중국관련 업무를 해 한·중 관계에 정통한 지역전문 외교관)이 전무하고, 외교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세계일보, 2017.9.30.),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일부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어 재 악화의 가능성이 수시로 우려되고 있는 점에서도 논리적 연계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이 한국의 첫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그 지위를 상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호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최근까지도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한한령 및 금한령 등의 보복정책을 펼친바 있어, 양국 간의 경제적 교역 등의 문제 외에도 관광업 등의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이임자·조용원, 2017).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축해가려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외교부가 이 정책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사드배치와 관련된 양국 간의 관계는 중국 정부가 한한령 및 금한령의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경색되었으며, 중국의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의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박휘락, 2016). 다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당해 12월까지 총 세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노컷뉴스. 2017.11.11.)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보통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안보 및 주변국 외교와 관련된 정책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그 정책의 수혜자로 여기고 있으나, 이 정책의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한한령 및 금한령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이 한중 무역의 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관광업 또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좁혀질 수 있다. 또한, 보통 수준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게는 일반 국민에서 좁게는 특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모두 해당함으로 형평성에 있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외교 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수 없는 한계이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일반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기에 절차적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외교부 홈페이지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시행중인 정무 및 그 경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정부가 사드배치 다양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본 정책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한·중 간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최근 어느 정도 완화의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3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관계자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외교 정책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은 정책의 특성상 공개적인 모니터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외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체계가 외교부 또는 정부 내부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정책의 책임성 측면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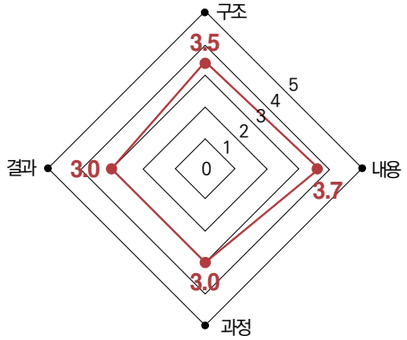
최근 중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인해 1년 4개월 간 경색된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한중 간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간부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및 통상 등 다차원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외교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이 체결되었고, 양국간 협의 결과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외교부, 2017)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책이 향후 긍정적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은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지만, 북한, 미국과의 관계 등 주변 정세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후, 한국에 대한 제재 및 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어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느끼는 정책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을 수 도 있으나, 중국 정부의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입장표명은 향후 재 악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므로 전반적인 정책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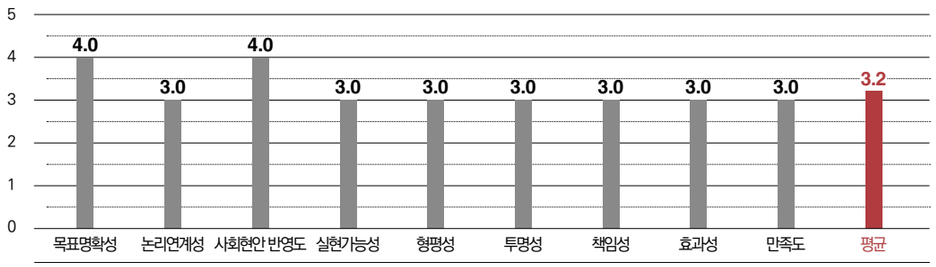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9]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그림 4-160]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군 및 한미동맹의 대응의지 및 대응능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북한이 도발 할 때마다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는 보통으로 판단된다. 한미동맹을 통한 전략자산의 전개와, 우리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국제공조를 통하여 대북제재수위를 높여가고는 있지만 그 정도에 대하여 각 국의 입장이 다르고, 최종적인 목표인 대화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적인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을 '핵무기국가'로 인정하고, 동등한 핵무기 국가의 지위에서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화와 협상이 단절되어 있다(박한규, 2017: 10).

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정책의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화된 핵 및 미사일 도발 능력에 대응하여 우리도 힘의 균형을 맞추어 전략핵무기를 배치해야한다는 입장과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등에서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외교적 해결을 전제로 국제공조를 통한 강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지만, 전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22.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정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정부 및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지만 야당과의 인식차이가 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서울경제, 2017.9.28.)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일관된 지지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승현·형혁규, 2017)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올 한해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무려 11번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되었다. 연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아시아경제, 2017.11.29.).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으로 국가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70.1%로 상당수인 것(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국방부는 이 정책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주변국들이 부분적으로는 협조하고 있지만,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자회담방식의 해결방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핵무력 기술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어조로 대응하며 대화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무장과 더불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군의 무장이나 대응방식에 대해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1] 및 '쌍중단(雙中斷)'[2]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다자회담방식을 선호하며 비판적

1)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을 말한다.
2)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말한다.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디지털타임즈, 2017.12.12.).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군의 무장 강화에만 치중할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중층적인 이해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이승현·형혁규, 2017).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본적으로 안보정책은 우리 국민 전체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사드배치 논란이나, 무역보복 등 특정계층의 희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따라 9월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잔여발사대 배치가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배치이지만 지역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경북일보, 2017.9.6.). 이전 국방부의 국정감사에서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일관성 미흡, 국민들에 대한 설명 및 설득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노력은 있었지만, 이번에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전격적으로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배치되어 정책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책임성 지표도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야당 및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지만, 사안의 급박함과 외교안보정책 특유의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이 정책의 수행방식 및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대북 안보관 및 정책의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들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하되 일부 국민들이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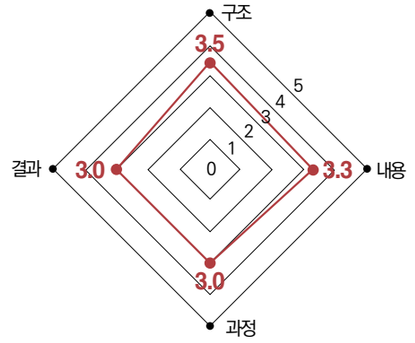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공조도 이끌어 낸 만큼, 정책의 효과성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현안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국간의 입장을 우리가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언제든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때 명확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주변국가들과의 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거나,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등 정책의 효과에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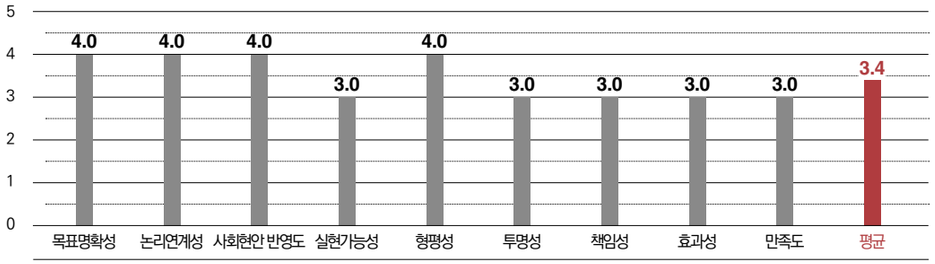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3),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1]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그림 4-16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ASEAN, ARF, EAS등 주요 국제회의 및 UN등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만큼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일관성 있고 명확한 목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국가들 간의 협력과 더불어 기존의 6자회담 틀 내 5자간 비핵화 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SEAN, ARF, EAS등 주요 국제회의 및 UN등 국제기구와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2008년 이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이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및 태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아세안, 6자회담 참가국, 북한 외무성 소속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여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므로(경향신문, 2017),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좋은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한다는 사실 외에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등 무기 개발을 지속할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이와 같은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1, 2017).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올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다수의 참석자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지역 안보 이슈로 언급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난해 정책평가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 자료집을 살펴보면, 이 정책의 주요 성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결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00개국으로 다른 대북제재 결의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작년 11월 기준 69개국이 제출한 것에 비해서도 많은 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접수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고서 제출율이 급증하는[VOA(Voice Of America) korea, 2017] 현재의 상황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를 통한 평화 유지에 있으므로,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을 선언한 현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도 지난 몇 년 간의 추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북핵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정책의 정책 대상은 국민 전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의미에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위협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지표에서 정책대안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국민들도 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본 정책은 외교부의 고유 정책으로 그 내용은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 및 협의체 참여 등 대외 교섭업무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다른 나라와의 직접적인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자격의 문제로 인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없어 투명성 제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정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산하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야 하는 점은 이 정책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본 정책의 수행자인 외교부와 한국과 우호적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북핵문제 해법의 이면에는 비핵화 보다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우선 책임성은 보통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부터 고수해온 북핵 문제의 핵심 방안이 6자 회담 또는 다자회담이지만 현재 그러한 부분이 재개 가능성만 보이는 수준이고, 북한의 외무성이 올해 말에야 국제안보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정책의 책임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여러 상황은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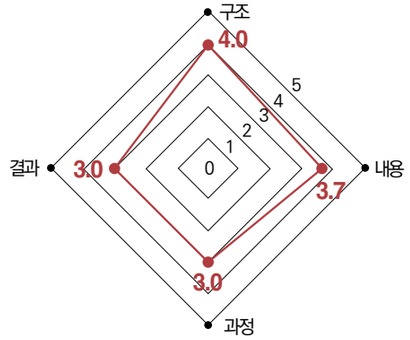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보고서의 이행률을 살펴보았을 때,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공조도 이끌어 낸 만큼 정책의 효과성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과 같은 추가 도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때 명확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2016년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3]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 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그리고 '한미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각각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정근식 외, 2016).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들도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만 아직까지 남북 간 협력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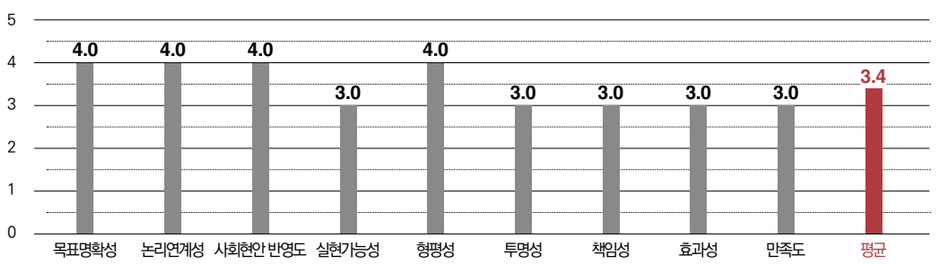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그림 4-164]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3) 이 문항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제공조와 관련된 다른 문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문항의 남북한 통일이 남북관계 개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자주국방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위체제와 군사지휘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이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안보 질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과 더불어 한미 관계에 있어서 균형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것으로서 비교적일관성 있고 명확한 목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진민정·김성해, 2015: 73).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는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대북억지능력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군대의 독자적 방위능력이 비록 병력 및 장비에 있어서는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국방비 규모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 수준 등을 고려한 군사분야의 국력지수는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군사력 외에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계획대로 전력증강과 정예화를 추구한다면 독자적인 대북 방어력은 물론 억지력까지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군대의 자주성 회복과 국가위상 확립 차원에서 자주국방이야 말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군사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며, 한미동맹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만이 우리나라 안보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향후에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라는 실제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전환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올 한해는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감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대한 시민 정책성향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기환수 찬성이 62.8%, 반대가 37.2%로 조사되었다(문화일보, 2017.04.04.).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보통이라고 판단된다. 2014년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민구 당시 한국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후속조치로서 2015년 11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 및 전환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즉,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완비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백민정. 2016: 2). 다만 전작권 전환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줄어들었으며, 전환시기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관계

당국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현화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본적으로 자주국방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형평성이 낮게 인식된 이유는 전작권 관련 공청회등에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정책의 특성상 국민들의 정보 습득에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전작권 전환 추진 논의에 있어서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정도로 판단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전작권 전환 논의를 수행하였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율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2014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환이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수렴 등의 절차 없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이 크게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정부의 입장이 다소 일관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책임성은 보통 정도로 평가된다. 물론 한반도 정세변화 등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의 정당성 및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중요해 보인다. 이에 전작권 전환 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향후 논의과정은 정책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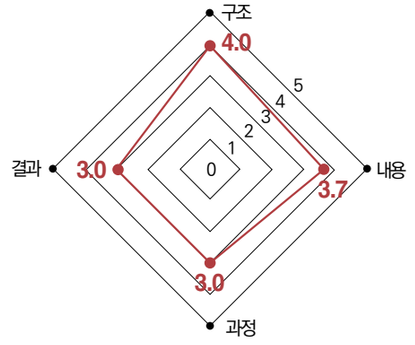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역시 투명성 및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보통 정도로 판단된다. 이는 전작권 전환시기가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결국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즉,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국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의 균형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나 내용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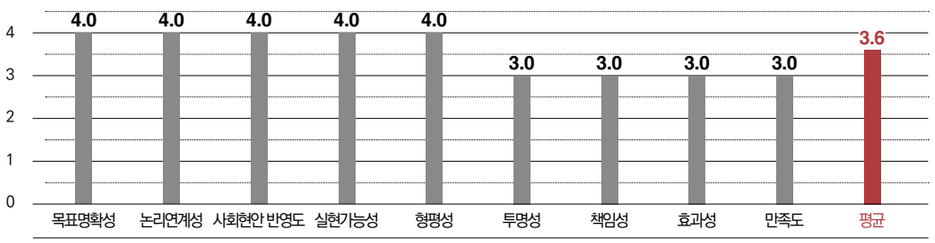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5]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그림 4-166]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24시간 체계적인 재외 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한 우리 국민의 위난사항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외교부, 2016a).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SNS를 활용하는 등의 세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접근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홈페이지, 언론매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안전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문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

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체류시에 많이 이용하는 영사관의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사건·사고만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긴급사태 발생 시 인근국가 혹은 외교부 직원을 신속하게 현지에 급파하여 효율적인 안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황태정, 2016). 이러한 정책 대안은 기존의 국민들이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정도에 머물고, 긴급사태시 영사관과 긴밀하게 연락하기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나은 수준의 해결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해외여행객이 연간 2,238만여명 이고, 해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7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황태정, 2016)이다. 올 한해 필리핀에서 한인 피살사건이 발생하였고, 발리섬 아궁화산 활동으로 인한 귀국 등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8%(42명)가 지난 1년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이지훈·조윤오, 2015: 190), 이후에도 각 국에 있는 교민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민원처리량도 2013년 38만 2970건에서 지난해 50만 3023건으로 늘었다(브레이크뉴스, 2017.10.9.).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위해 안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본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정책 목표가 명확하고, 정책대안의 연계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여행 정보제공 서비스가 국민이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접근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24시간 영사관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는 접근성의 측면이나 대응의 신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서비스의 플랫폼이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약 8.4%나 증가하였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및 시설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한 것을 살펴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외교부, 2017). 2017년 11월 발리섬 아궁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난시 재외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실무대책회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급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기 투입을 결정하였으며(아주경제, 2017.12.01.), 각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정책은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외교 정책의 특성상 본 정책의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지는 않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이 동시에 전국민이 아니라는 정책 대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그 인원이 전 국민의 상당수(2016년말 약 2,238만 명)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거주 및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7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을 위한 안전여행 및 안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외교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일방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경우 정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다. 또한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행(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서비스) 서비스 이용실적이 연평균 0.0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교부가 지난해 실시한 재외국민 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동행' 서비스를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제주신보, 2017).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건·사고 담당자 연락처와 같은 긴급연락처 등에 대한 접근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관 홈페이지에 재외국민보호 관련 사건·사고 시 영사 서비스 정보 및 안전정보 매뉴얼 게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미흡함도 존재하였다(감사원, 201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정책의 투명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사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교부가 신속한 대책회의 및 신속대응팀 급파 등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향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올해 감사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외교부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영사업무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금유용과 예산편법 집행, 영사업무 소홀 등 총 4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해 고발과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노컷뉴스, 2017).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9천2백여 건으로 2년 만에 56%나 급증했지만, 경찰 주재관은 63명으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YTN, 2017).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하드웨어 체계만 구축하는 것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 역시 정책의 책임성과 유사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정책 효과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기준 및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하여 효과성을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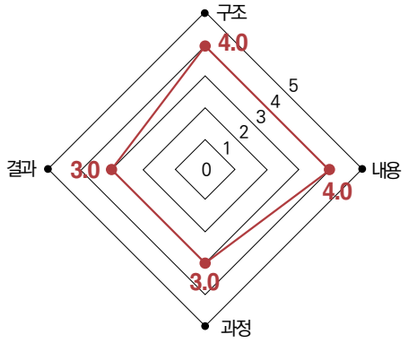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앞선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교부의 '영사핫라인'의 부실한 운영,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와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 또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재외국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범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수사 상황을 살펴보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해외안전여행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작년에 있었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인지도 조사에서 인지도가 45% 미만이었으며(이데일리, 2016.10.8.), 심지어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서비스의 인지도도 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존의 방식이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지하였듯이 본 정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온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부터 존재해 온 체계 및 국민들에게 친숙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들이 향후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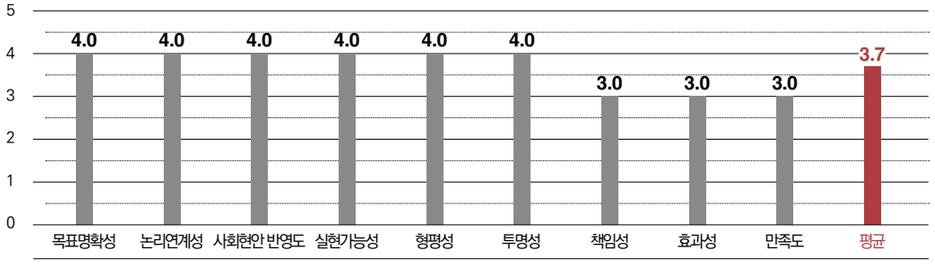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그림 4-16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의무복무에 종사하는 장병들의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장병들의 봉급을 2012년 대비 2017년에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중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활동 지원을 통해 학업 단절을 극복하고, 전역 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생산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방부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병들의 봉급을 2012년 대비 2017년에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병들의 자기개발 지원 여건 확대를 위한 법령 근거의 마련,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및 자기개발을 위한 대학원격강좌, e-러닝학습참여 확대 및 만족도 향상, 장병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대 및 군 특수분야 국방자격 신설, 고졸 미만 학력 입대자 대상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신장 지원, 고졸 전문하사 학력 신장을 위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신설, 병영 내에서 장병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한 장병사랑 재능기부 프로그램 확대, 군경험을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육' 등 대학 교과학점으로 인정 추진 등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대안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정책목표와 실질적·논리적 연계성을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개발 지원 확대는 군 입대를 꺼리는 입영 대상자나,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정책이다. 올 한해는 고용절벽과 더불어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청년실업률은 2016년 10월 8.5%를 기록했다.(통계청, 2016)이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등록금 마련과 취업문제로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에 대하여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강조하는 정책인 만큼,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도 높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국방부는 2017년까지 계획한 병 봉급 인상률을 달성하였으며, 현재는 2018년 이후 병 봉급 인상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자기개발지원 확대와 관련하여서도 올해 6월 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군인의 자격취득이나 학점취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생 수(2016년 수강생 12,294명),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2016년 취득자 수 20,608명)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은 모든 의무복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장 합리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병 급여의 현실화와 더불어 전역 시의 경제적 지원, 사회복귀로의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선택, 2011: 281-283). 현 정책의 방향성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증진에 높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병 봉급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민간의 최저시급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국방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정책을 홍보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상된 병 봉급 역시 현실의 생활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점취득 등 지원정책의 실행과 개선에 있어서도 수혜자인 군인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소 미흡한 바가 있으나, 이 정책은 현재의 상황에서 군인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투명성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의 점검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병 봉급의 인상은 처음 공약대로 이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에 목표로 했던 2017년이 경과한 후에도 높은 수준의 봉급 인상이 중기 계획으로 지속성 있게 마련되어 있다(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2017). 자기개발지원 확대 정책에 있어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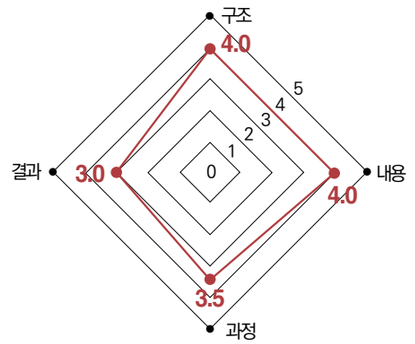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2017년까지 계획한 병 봉급 인상률을 달성하였으며, 현재는 2018년 이후 병 봉급 인상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또한 자기개발지원 확대정책을 통해 군인의 자격취득이나 학점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군 조직의 비대화와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안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국회국방위원회, 2015).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장병들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및 자기개발기회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인상된 봉급의 수준도 매우 미흡한 정도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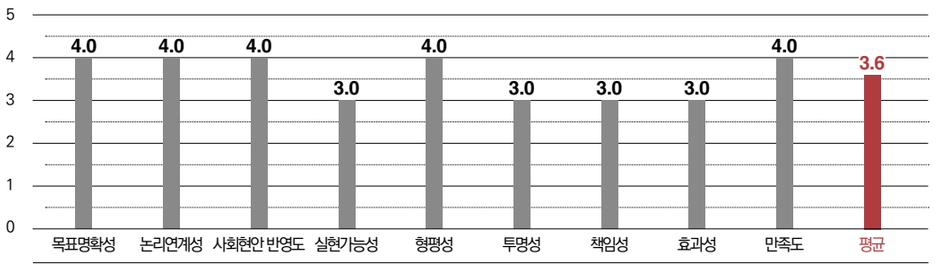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9]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9)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그림 4-170]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직접 6.25참전 미등록자를 발굴하고 예우 및 명예선양을 함에 있다(국가보훈처, 2014).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연구진 역시 목표의 명확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국가보훈처, 2015), 비군인 참전자의 참전유공자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인이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 행정기관을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한 행정쟁송에서의 인용사례와 의학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요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집안의 명예차원에서 방계가족까지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성 제고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허위·거짓 등록, 부정수급 예방 등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포상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국가보훈처, 2017). 이러한 내용들은 정책목표의 실현과 논리적·실질적 연계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6.25참전 미등록자의 발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6.25참전자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자들에 대해 생전에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충청일보, 2017. 6. 25.). 또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들 역시 종래의 문제점들, 즉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던 문제점,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했던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 역시 현 문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경북도민일보, 2017. 12. 12.). 무엇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헛되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사회현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으며, 연구진 역시 사회현안 반영도를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근거법률의 개정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발굴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미등록자 42만 명 중 신상이 확인된 165,891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생존자 4,622명(2.8%), 사망자 71,810명(43.3%),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거주지 불명자 89,459명(53.9%)으로 나타났다(국제뉴스, 2016. 6. 5.). 이처럼 6·25참전 미등록자가 42만여명으로 발굴대상이 방대하고, 수집한 참전자료가 '68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자료로 참전하신 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자료의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주소지 등이 한문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문서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하여 미등록자 발굴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이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한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무조건 많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동등한 처우를 대상으로 할 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책의 형평성은 다른 처우가 필요한 대상집단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함으로써 확보될 수도 있다(허영, 2016). 이 정책은 특별한 예우가 필요한 6.25참전자들과 그 유족들을 수혜자로 하고 있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적정한 예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합당하다.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본 정책의 형평성은 외교안보분야 정책들 중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며, 연구진 역시 정책의 형평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정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이 정책에 대해서는 2차례의 자체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국가보훈처, 2017). 즉 정책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체평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노력은 인정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이나 개선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외교안보분야 정책들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정책의 투명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전문가를 통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체 점검을 통해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력이나 시스템의 확충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인 양자 모두 이 정책의 책임성을 외교안보분야 정책들 중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정책의 책임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정책개선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 정책이 수혜적 성격을 갖는 정책이고 수혜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책임성 확보의 문제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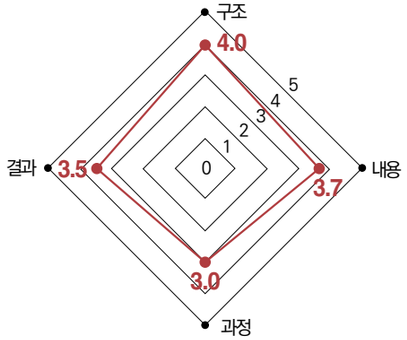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정부의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노력을 통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등록자 42만명 중 16만여명의 신상을 확인하고 5000여명 이상을 등록 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경북도민일보, 2017. 12. 12.). 이는 엄청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이 정책의 효과성을 외교안보분야 정책들 중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이 정책의 효과성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미등록자 발굴의 어려움이라는 본질적 한계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세부 정책을 통해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선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정책의 구조, 내용, 결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성과 역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책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3.0), 결과(3.0)로 나타났다.

[그림 4-171]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10)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그림 4-172]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 진정한 일원이 되도록 탈북민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것(통일부, 2017a)이다.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도록 우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며,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대학생 소통캠프 및 어울림 한마당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이 정책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목표 설정이 매우 명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탈북민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는가에 대한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에는 2015년 4.8%에서 5.1%로, 고용률의 경우에는 54.6%에서 55%로 증가하였으나(통일부, 2017b),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정책대안의 개선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올해 지역통합형 지원 정책으로 개선함에 따라 기존 탈북민 지원 정책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선 부분이 지원금을 늘린다든가 탈북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크게 차별성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탈북민과 주민 간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는 캠프나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보통 수준으로 보여진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통일부, 2017a).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29%'와 '27.3%'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중립적 대답이 '43.7%'로 나타나는 등 일반 국민들이 탈북자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는 유보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정근식 외, 2016). 또한, 국내거주 이주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을 경우에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이 미국·유럽인이나 조선족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별히 다른 수준의 친근감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본 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하나센터'를 '지역통합센터'로 확대 개편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4] (통일부, 2017a). 또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착지원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남북하나재단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동완·임성옥, 2017). 즉, 탈북민의 지속적인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하나센터를 확대·개편하였고, 지역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보호담당관, 교육청, 지역적응센터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협의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은 행정적·제도적인 환경이 본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책의 특성상 탈북인만이 정책의 수혜자로 제한하여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 주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정도가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2016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8.7%로

4) 현재 전국에서 지역별로 23개의 하나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나타나 찬성하는 의견(40.3%)에 비해 훨씬 우세하였다. 마찬가지로 '탈북자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 등의 문항에서도 탈북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탈북자만을 위한 지원정책의 형평성은 보통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투명성

탈북민 지원정책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하여 집행하는 정책으로 협의회는 외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9개 부처와 기관의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와 같이 탈북민 지원정책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라는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통합형 정착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에 따른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성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등 고위공직 선출에 있어 탈북민을 배제하는 등 여전히 배타적 문제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미래한국, 2017.1.6.).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본 정책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수혜자인 탈북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정착지원 매뉴얼이나 통일백서, 통일부 홈페이지, 각 지역의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서 탈북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찾고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 및 조정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탈북민의 개별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17a).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형성과 논의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탈북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민간전문상담사 참여 및 지역적응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책임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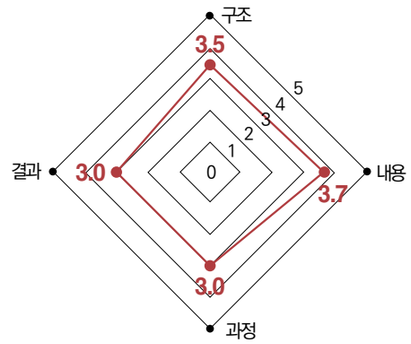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업률 및 고용률과 같은 경제적인 지표는 근소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통합형 지원정책이라는 현재 탈북민의 사회적 인식 악화에 따른 개선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년 강서구 마곡지구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국민들과의 갈등(연합뉴스, 2016.10.9.), 대학이나 취업 등 자신들이 원하는 눈높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VOA, 2016.11.22.)등으로 판단할때 아직까지 탈북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역통합형 지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응센터와 민간전문상담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문제는 본 정책이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높은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강동완·임성옥, 2017).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탈북민 중 58%(414명)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 때문에'(31.7%, 133명),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25.3%, 107명),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24%, 98명)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7).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탈북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능력과 하고 싶은 일의 격차 등의 문제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직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정책의 목표가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5), 내용(3.7), 과정(2.0), 결과(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3]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성평가 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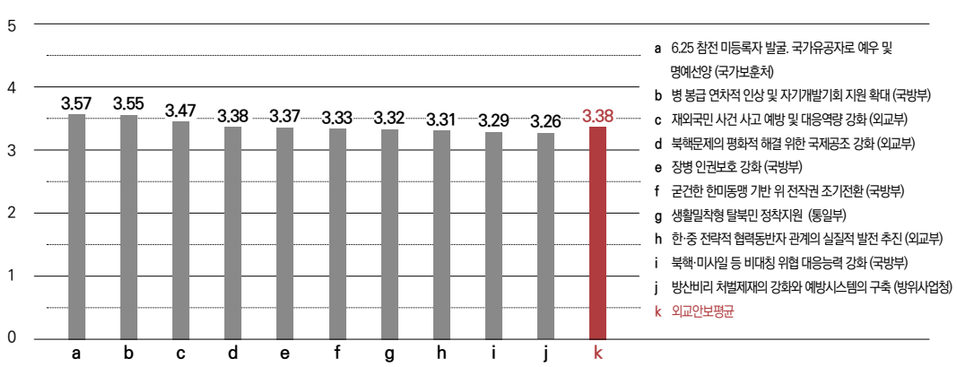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상기한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외교안보분야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57점의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다. 이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책이 3.55점으로 2위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정책이 3.47점으로 3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이 3.38점으로 4위,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책이 3.37점으로 5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 전환 정책이 3.33점으로 6위,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이 3.32점으로 7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이 3.31점으로 8위,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이 3.29점으로 9위,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책이 3.26점으로 10위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종합 순위 결과는 앞서 제시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와 정성평가 결과의 순위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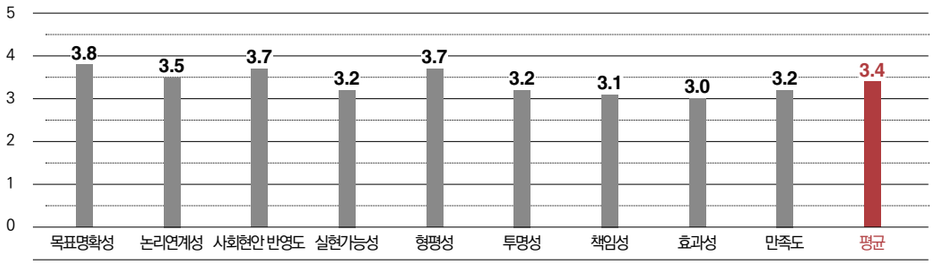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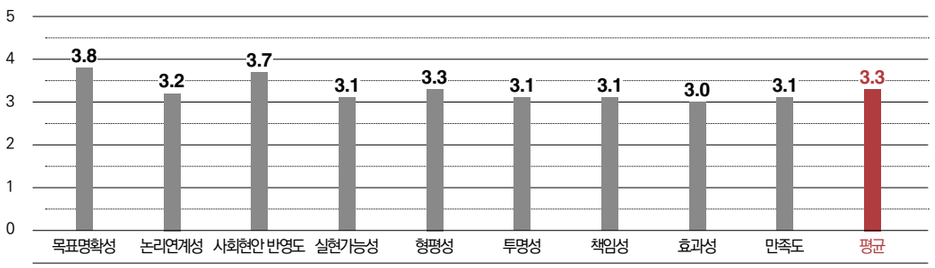
지표별로 살펴봤을 때 목표의 명확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9점의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으며, 근소한 차이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 전환 정책,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책이 3.7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논리연계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역시 3.8점의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2점의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책이었다. 다음으로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이 3.6점 또는 3.7점을 받아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현가능성 지표에 있어서는 3.7점의 가중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책,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 전환 정책이 3.1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형평성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3.8점의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으며, 3.3점의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정책,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투명성 지표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이 3.1점에서 3.3점 사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정책만이 3.6점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책임성 지표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이 3.1점에서 3.3점까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 지표에서도 3.0점에서 3.3점까지에 모든 정책이 분포하고 있으며, 만족도 지표에서는 모든 정책이 3.1점 또는 3.2점의 평가를 받았으나,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만이 3.6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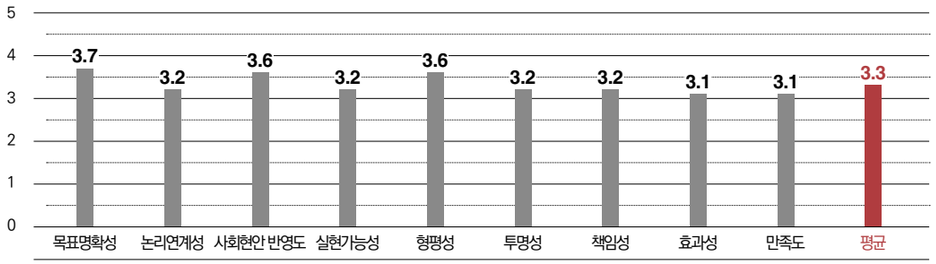
장병 인권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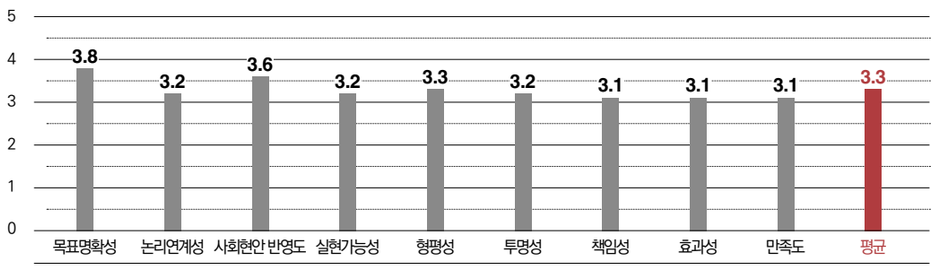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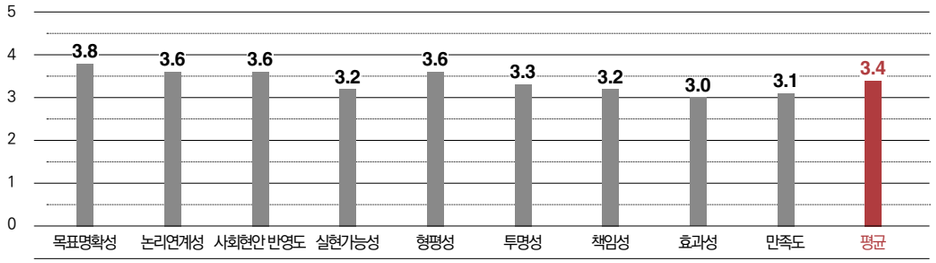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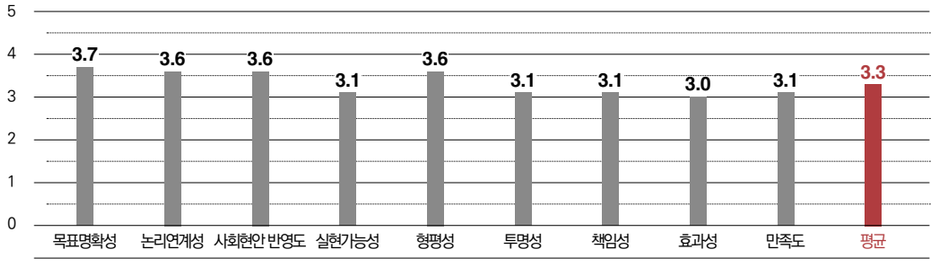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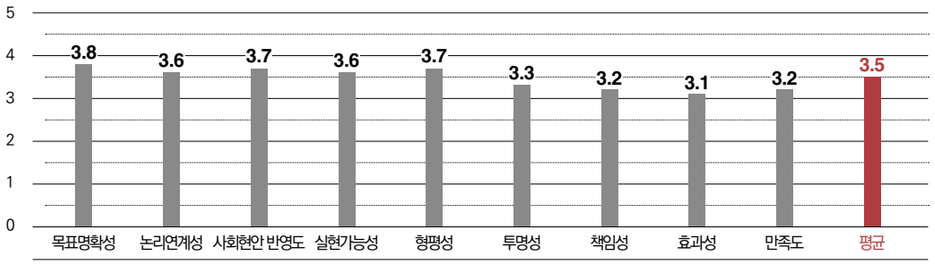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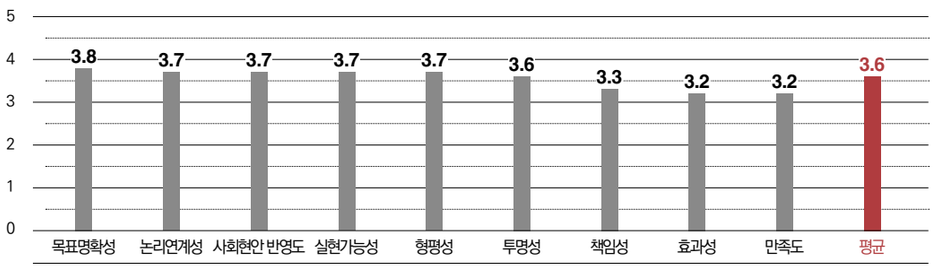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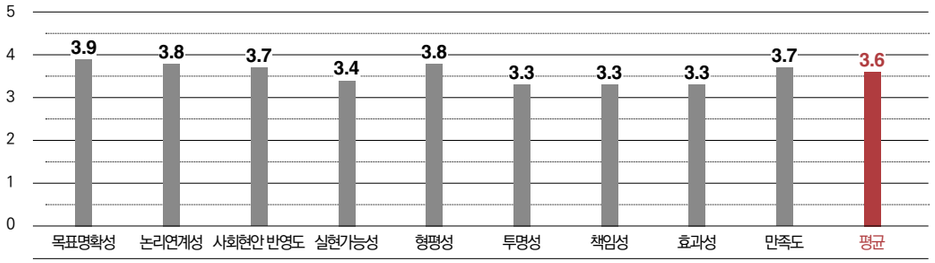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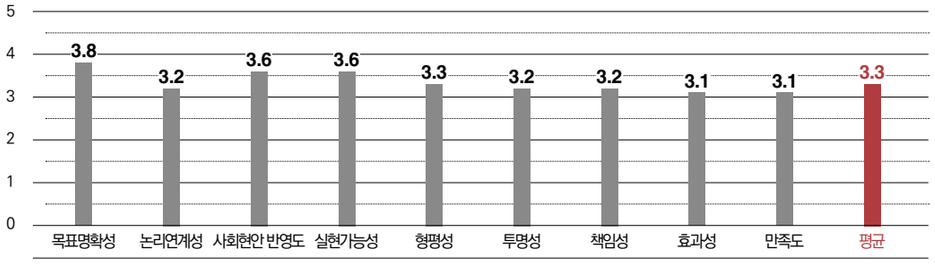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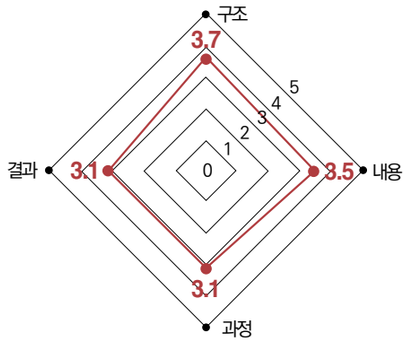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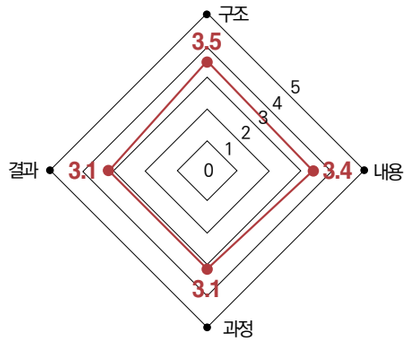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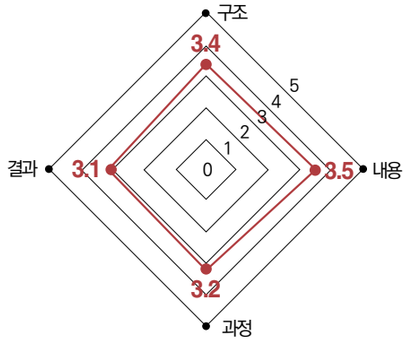
장병 인권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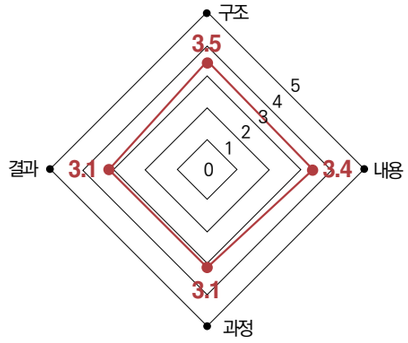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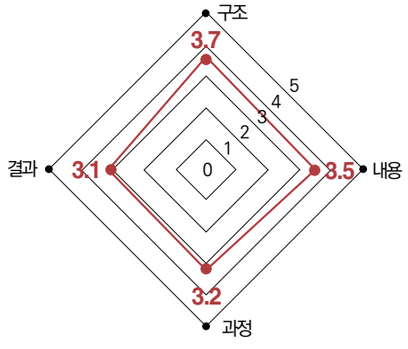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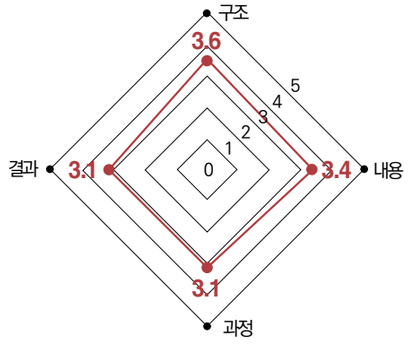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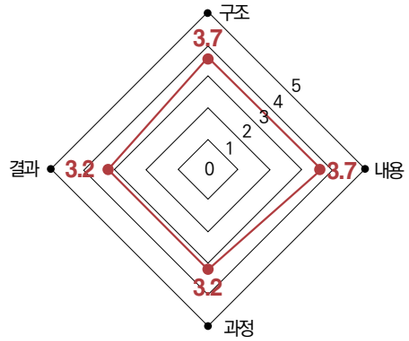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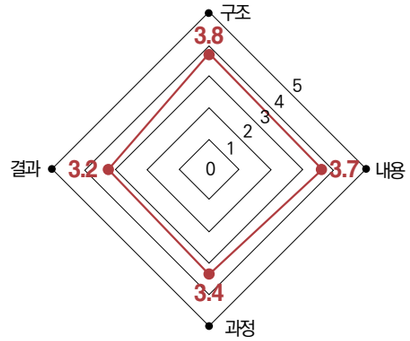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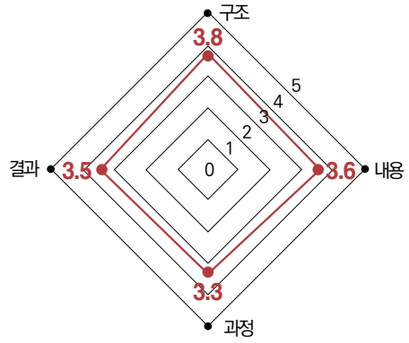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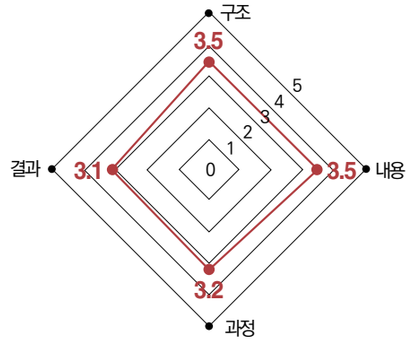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05

제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1 | 정부 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 316

2 |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 320

본 평가에서는 각 주요 정책별 평가와 더불어 정부정책지지도, 정부신뢰,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책이 삶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를 20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17년 정책평가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항목을 추가하여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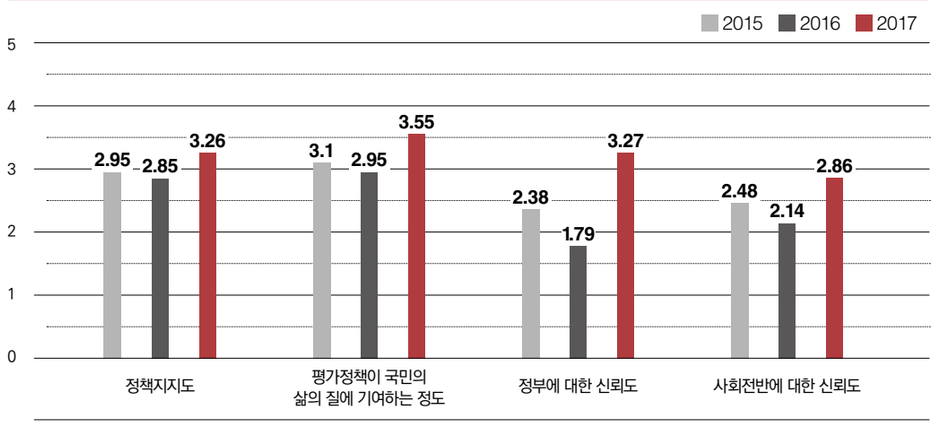
정책지지도 결과

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그리고 사회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책지지도 그리고 사회신뢰도가 2016년에 비해 많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촉진하고 사회의 전반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정부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에 비해 사회전체에 대한 신뢰에 대한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정치적 기준으로 양분화 된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전체의 유대감을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 정부에게 던진다고 하겠다.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본 평가에서는 각 주요 정책별 평가와 더불어 1) 정부정책지지도[5], 2) 정부신뢰, 3)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4) 정책이 얼마나 삶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를 20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아래 [그림 5-1]은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의 조사 영역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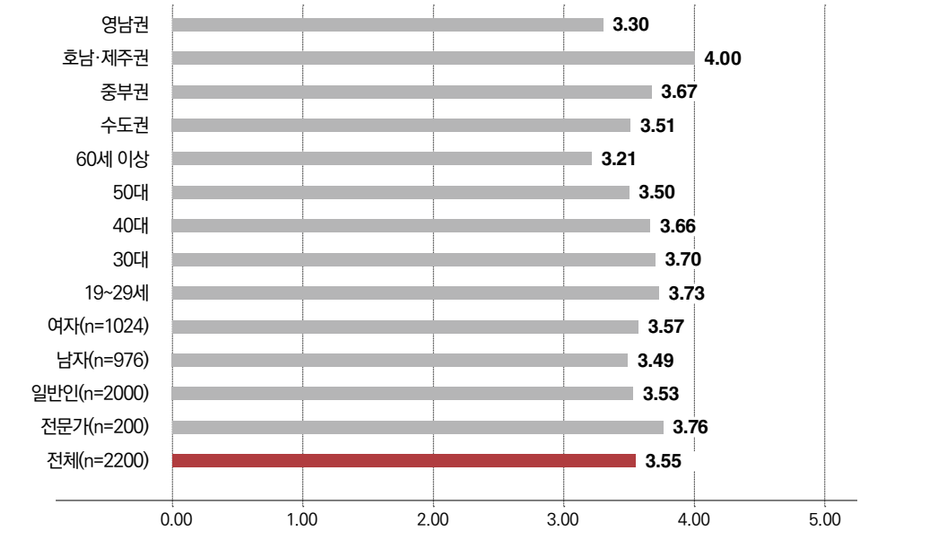
[그림 5-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정부신뢰, 사회신뢰



각각의 분야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국민과 정책전문가들의 정부정책 지지도 평균은 3.26으로 "보통"인 3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의 2.85점보다 0.4점정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정책이 국민에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도 2015년 3.1점, 2016년 2.95점 등 3점 정도에 머물던 것이 2017년에는 3.6점으로 0.5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정책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016년 조사에 1.8점에 그쳤던 수치가 3.3점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최순실 사태와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실추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2016년의 2.1점에서 2.9점으로 0.8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온전히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017년 정책평가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한 항목을 추가하여[7]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살펴보았다.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적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호남과 제주권의 점수(4점)가 영남권(3.3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의 기대감(3.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렇다면 2017년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분야의 정책을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어떠한 영역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1) 정책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2) 현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 그리고 3) 현 정부에서 가장 나빠진 정책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오고 있다.

우선 정책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응답자들에게 100점의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네 개의 분야(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로 나누어 점수를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림 5-3]은 2016년의 결과와 2017년의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2017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경제정책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29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분야가 그다음으로 25점, 외교안보분야 23점, 교육문화분야가 22점을 받아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민의 정책지지도는 개별 정책에 대한 9개 세부항목의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6) 정책지지도는 정부 신뢰와 사회신뢰, 그리고 정책의 중요성 인식보다 그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가지 개별 정책의 합으로 평가되는 정책지지도의 특성상 그 변화가 연도별로 크게 변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 사용된 설문 항목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이다.

다만 외교안보정책이 2016년 조사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교육문화정책보다 그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안보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증가하였고,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현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경제 회복에 대한 갈증이 응답자들이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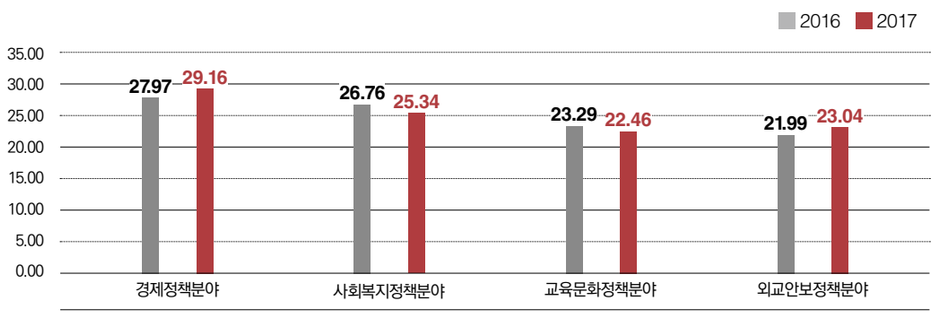
또한 본 조사에서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4개의 분야 중 어떠한 분야가 좋아졌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가 나빠졌다고 느끼는지를 2016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우선 [그림 5-4]는 응답자들이 어떠한 분야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조사 응답자의 58%가 작년보다 나아진 분야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 조사에서는 나아진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23%로 크게 줄어든 점이다. 또한 2017년 조사에서는 47%의 응답자가 사회복지정책분야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고, 외교안보정책분야(15.5%), 정제정책분야(9.5%)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교육문화정책분야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년도에 6%에서 올해 5%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전년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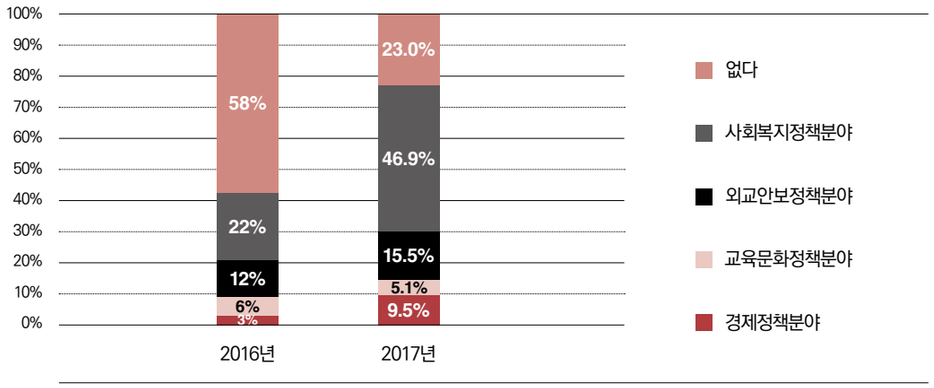
또한 본 조사에서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4개의 분야 중 어떠한 분야가 좋아졌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가 나빠졌다고 느끼는지를 2016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우선 [그림 5-4]는 응답자들이 어떠한 분야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조사 응답자의 58%가 작년보다 나아진 분야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 조사에서는 나아진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23%로 크게 줄어든 점이다. 또한 2017년 조사에서는 47%의 응답자가 사회복지정책분야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고, 외교안보정책분야(15.5%), 정제정책분야(9.5%)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교육문화정책분야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년도에 6%에서 올해 5%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전년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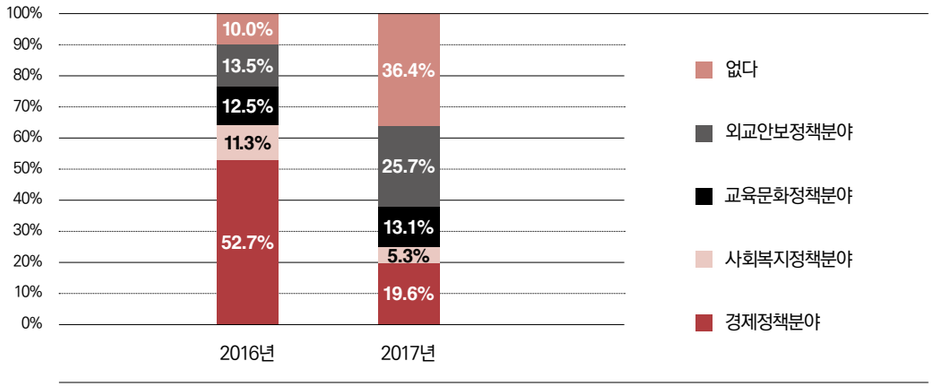
[그림 5-3] 4대 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



[그림 5-4]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5]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정책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안 좋아진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2016년도와 비교해 안 좋아진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10%에서 36%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안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분야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6%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 그리고 사드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분야에 대한 불신이 줄어든 것도 괄목할 만하다. 이는 출범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의 성공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경기 체감에 대한 지표들이 상승되어지고 있다는 점과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로의 접근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변화로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본 조사는 정부정책지지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각기 다른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교차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5점으로 조사된 항목을 1-2점을 부정적인 대답으로 3점을 보통으로 그리고 4-5점을 긍정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2016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67.4%가 정책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지지도가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더 높다(80.5%)는 점, 응답자 중 일반인의 그룹별 차이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룹별 차이는 정치적 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 진보나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들은 75%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중도 보수나 보수로 본인을 정의한 응답자의 경우 50-60%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에 긍정적인 응답이 50%가 넘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1] 정부정책지지도 교차분석결과

		정책지지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37	2	161	200
		18.5%	1.0%	80.5%	100.0%
	일반인	640	39	1321	2000
		32.0%	2.0%	66.1%	100.0%
전체		677	41	1482	2200
		30.8%	1.9%	67.4%	100.0%
일반인 -성별	남자	302	16	658	976
		30.9%	1.6%	67.4%	100.0%
	여자	338	23	663	1024
		33.0%	2.2%	64.7%	100.0%
일반인 -연령	19~29세	102	6	228	336
		30.4%	1.8%	67.9%	100.0%
	30대	121	12	216	349
		34.7%	3.4%	61.9%	100.0%
	40대	136	12	270	418
		32.5%	2.9%	64.6%	100.0%
	50대	120	4	281	405
		29.6%	1.0%	69.4%	100.0%
	60세 이상	161	5	326	492
		32.7%	1.0%	66.3%	100.0%
일반인 -지역	수도권	330	17	640	987
		33.4%	1.7%	64.8%	100.0%
	중부권	81	7	194	282
		28.7%	2.5%	68.8%	100.0%
	호남·제주권	52	2	164	218
		23.9%	0.9%	75.2%	100.0%
	영남권	177	13	323	513
		34.5%	2.5%	63.0%	100.0%
일반인 -학력	고졸 이하	313	21	580	914
		34.2%	2.3%	63.5%	100.0%
	대재 이상	327	18	741	1086
		30.1%	1.7%	68.2%	100.0%
일반인 -정치적 성향	진보	47	5	145	197
		23.9%	2.5%	73.6%	100.0%
	중도진보	138	6	442	586
		23.5%	1.0%	75.4%	100.0%
	중도	255	22	462	739
		34.5%	3.0%	62.5%	100.0%
	중도보수	150	4	221	375
		40.0%	1.1%	58.9%	100.0%
	보수	50	2	51	103
		48.5%	1.9%	49.5.%	100.0%

[표 5-2]는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2017년도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46.5%로 나타났다. 2016년도 조사당시 6.6%보다 크게 향상된 수치이다. 다만 현 정책에 대한 지지가 67%에 이르렀던 것에 반해 다소 낮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별 정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보류하고 있는 응답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대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주와 호남 지방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3.3%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이는 반면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5.9%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인 성향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을 진보와 중도-진보로 정의한 응답자들의 경우,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신을 보수와 중도-보수로 정의한 응답자들은 각각 25.3%와 9.7%만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정부신뢰도 교차분석결과

		정책지지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35	45	120	200
		17.5%	22.5%	60.0%	100.0%
	일반인	536	561	903	2000
		26.8%	28.1%	45.2%	100.0%
전체		571	606	1023	2200
		26.0%	27.5%	46.5%	100.0%
일반인 -성별	남자	273	230	473	976
		28.0%	23.6%	48.5%	100.0%
	여자	263	331	430	1024
		25.7%	32.3%	42.0%	100.0%
일반인 -연령	19~29세	75	97	164	336
		22.3%	28.9%	48.8%	100.0%
	30대	77	92	180	349
		22.1%	26.4%	51.6%	100.0%
	40대	92	125	201	418
		22.0%	29.9%	48.1%	100.0%
	50대	122	111	172	405
		30.1%	27.4%	42.5%	100.0%
	60세 이상	170	136	186	492
		34.6%	27.6%	37.8%	100.0%
일반인 -지역	수도권	262	281	444	987
		26.5%	28.5%	45.0%	100.0%
	중부권	63	82	137	282
		22.3%	29.1%	48.6%	100.0%
	호남·제주권	38	42	138	218
		17.4%	19.3%	63.3%	100.0%
	영남권	173	156	184	513
		33.7%	30.4%	35.9%	100.0%
일반인 -학력	고졸 이하	259	284	371	914
		28.3%	31.1%	40.6%	100.0%
	대재 이상	277	277	532	1086
		25.5%	25.5%	49.0%	100.0%
일반인 -정치적 성향	진보	31	28	138	197
		15.7%	14.2%	70.1%	100.0%
	중도진보	75	112	399	586
		12.8%	19.1%	68.1%	100.0%
	중도	189	289	261	739
		25.6%	39.1%	35.3%	100.0%
	중도보수	176	104	95	375
		46.9%	27.7%	25.3%	100.0%
	보수	65	28	10	103
		63.1%	27.2%	9.7%	100.0%

[표 5-3]은 사회신뢰도에 관한 그룹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0%에 그쳤던 반면 2017년에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2.9%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신뢰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일반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올바른 시스템 속에 움직이고 있는 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을 보수로 정의한 응답자의 경우, 52.4%가 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에 대한 평가가 사회에서 구축된 분배나 정의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사회신뢰에 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 사회신뢰도 교차분석결과

		정책지지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집단	전문가	48	94	58	200
		24.0%	47.0%	29.0%	100.0%
	일반인	658	897	445	2000
		32.9%	44.9%	22.3%	100.0%
전체		706	991	503	2200
		32.1%	45.0%	22.9%	100.0%
성별	남자	331	405	240	976
		33.9%	41.5%	24.6%	100.0%
	여자	327	492	205	1024
		31.9%	48.0%	20.0%	100.0%

연령	19~29세	138	134	64	336
		41.1%	39.9%	19.0%	100.0%
	30대	110	164	75	349
		31.5%	47.0%	21.5%	100.0%
	40대	117	195	106	418
		28.0%	46.7%	25.4%	100.0%
	50대	134	177	94	405
		33.1%	43.7%	23.2%	100.0%
	60세 이상	159	227	106	492
		32.3%	46.1%	21.5%	100.0%
학력	고졸 이하	304	405	205	914
		33.3%	44.3%	22.4%	100.0%
	대재 이상	354	492	240	1086
		32.6%	45.3%	2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	55	68	74	197
		27.9%	34.5%	37.6%	100.0%
	중도진보	150	273	163	586
		25.6%	46.6%	27.8%	100.0%
	중도	242	362	135	739
		32.7%	49.0%	18.3%	100.0%
	중도보수	157	158	60	375
		41.9%	42.1%	16.0%	100.0%
	보수	54	36	13	103
		52.4%	35.0%	12.6%	100.0%

정책지지도, 정부신뢰도, 그리고 사회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종합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책지지도 그리고 사회신뢰도가 2016년에 비해 많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촉진하고 사회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정부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에 비해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에 대한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정치적 기준으로 양분화된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전체의 유대감을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 정부에게 던진다고 하겠다.

06

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2017년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 점수는 3.3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초 평가가 시작된 2014년의 종합수치가 각각 3.1점(2014년), 3.05점(2015년), 2.98점(201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본 정책평가 이후 2017년의 조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는 정책이나 아직 완전한 평가가 힘든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

1 | 정책평가 결과 종합 328

2 |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3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평가가 실시된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세부 설문 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모든 분야의 점수가 평균인 3.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구조(평균 3.6점)와 정책내용(평균 3.4점)에 비해 정책과정(평균 3.2점)과 정책결과(평균 3.1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문 것이 특징이다. 정책결과의 경우 아직 정책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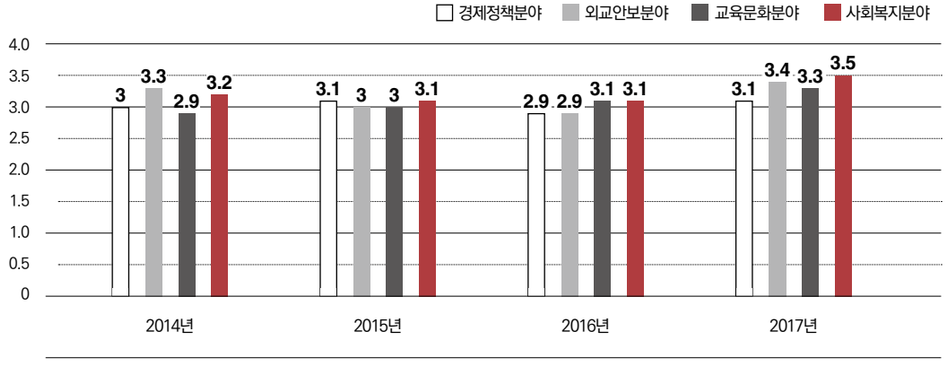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017년 정책평가에 포함된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 점수는 3.3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초 평가가 시작된 2014년의 종합수치가 각각 3.1점(2014년), 3.05점(2015년), 2.98점(201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본 정책평가 이후 2017년의 조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는 정책이나 아직 완전한 평가가 힘든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 분야별, 개별 정책별,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분야의 비교

[그림 6-1]은 4대 분야별 종합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첫 정책평가를 실시한 이후 그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경제정책분야는 2017년 3.1점으로 2014년의 3.0점, 2015년의 3.1점, 2016년 2.9점에 비해 소폭 상승해 기존의 평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의 폭과 평가점수가 다른 분야의 평가점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변화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외교안보정책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4년 3.3점, 2015년 3.0점, 2016년 2.9점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3.4점으로 0.5점의 상승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는 북핵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 안보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설문이 진행될 당시 사드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정책분야의 평가는 2017년 3.3점으로 2014년 2.9점, 2015년 3.0점, 2016년 3.1점 등과 비교하면 매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이 전체 40개 정책 종합순위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분야는 2014년 3.2점, 2015년 3.1점, 2016년 3.1점에 비해 2017년 3.5점으로 0.4점이 올랐고 네 분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정책분야는 국민 대다수가 효과를 직접 해택을 볼 수 있는 점에서 다른 평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새로운 사업이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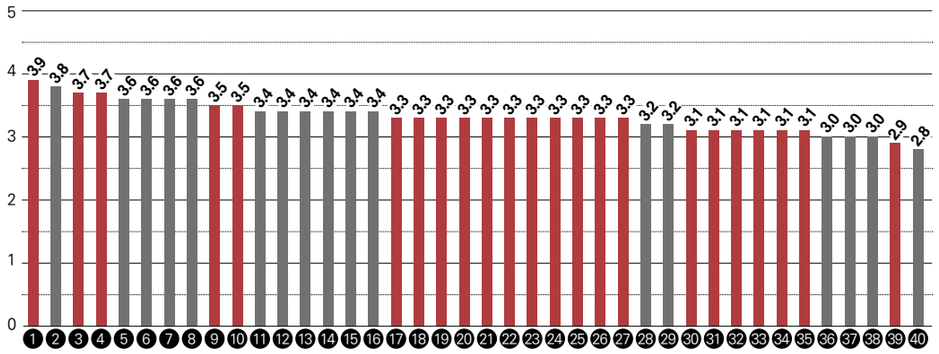
[그림 6-1] 4대 정책분야별 종합평균



② 개별정책의 비교

[그림 6-2]는 40개 정책종합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2017년 정책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정책 점수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최종 평가에 포함된 정책을 살펴보면 “보통” 수준 (3.0점)을 넘는 정책이 40개중 38개로 2개 정책(최저임금 인상, 혁신학교운영확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15개의 평가만이 3.0점 이상을 받은 것과 크게 대조된다. 또한 이는 2014년에 26개, 2015년에 22개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평균 3.5점을 넘어서는 정책도 8개로 2016년도에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중요하다. 이중 평균 3.5점이 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분야가 5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문화정책분야와 외교안보정책분야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정책분야 중 3.5점이 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 두 정책은 국가예방접종지원확대(3.9점), 치매국가책임제(3.7점)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정책분야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두 정책은 초등돌봄교실(3.9점)과 도시숲 조성(3.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2016년에도 포함되었던 정책으로, 두 정책 모두 2016년 점수보다 0.4점 이상(2016년 초등돌봄교실 3.5점, 도시숲조성 3.3점) 높아진 점수를 보여서 주목된다. 외교안보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두 정책은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3.6점)과 병봉급연차별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지원 확대(3.6점)였다. 또한 경제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개선(3.5점)과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조성(3.3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40개 정책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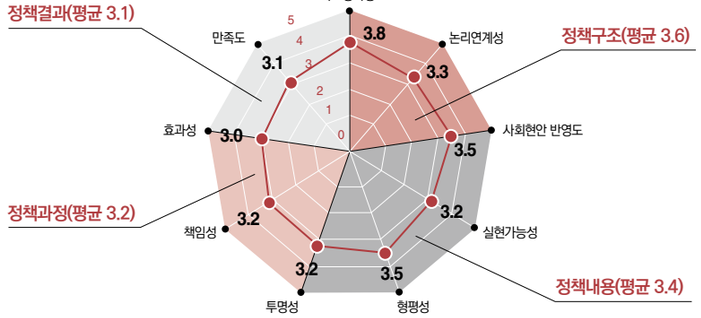
[표 6-1] 40개 정책평가 결과

❶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❷ 초등돌봄교실(교육부)
❸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❹ 도시숲 조성 (산림청)
❺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국가보훈처)
❻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❼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❽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국방부)
❾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❿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외교부)
⓫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⓭ 장병 인권보호 강화(국방부)
⓮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⓯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⓱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⓲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⓳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⓴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㉑ 굳건한 한미동맹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국방부)
㉒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㉓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추진(외교부)
㉔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㉕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㉖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방위사업청)
㉗ 학교폭력예방(교육부)
㉘ 가계부채 관리대책(금융위원회)
㉙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㉚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㉛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㉜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㉝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㉞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㉟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㊱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㊲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㊳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㊴ 최저임금인상(고용노동부)
㊵ 혁신학교 운영 확대(교육부)

③ 평가영역 및 항목별 비교

[그림 6-3]은 평가가 실시된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세부 설문 항목과 설문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분야의 점수가 평균인 3.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구조(평균 3.6점)와 정책내용(평균 3.4점)에 비해 정책과정(평균 3.2점)과 정책결과(평균 3.1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문 것이 특징이다. 세부설문 항목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목표명확성"이 3.8점으로 전체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현안 반영도"와 "형평성"이 3.5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형평성은 2016년에는 3.1점을 받은 것에 비해 그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논리연계성(3.3점)"과 "실현가능성(3.2점)"이 다소 다른 점수에 비해 평균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에 대한 보다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반면 정책과정과 정책결과에 대한 점수도 평균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족도(3.1점)"와 "효과성(3.0점)"은 평균에 가까운 점수가 보였는데 이는 아직 정책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분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상향시켜 소득증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나아가서는 경제성장까지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보호 대상 집단이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큰 방향성에 모두가 동의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의 대량실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다. 어느 산업 분야인지, 혹은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별·규모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핵심은 DTI, DSR 등을 통한 부채의 총량규제이다. 대출 요건 강화를 통해 총대출액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부채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질적 측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보대출 규제를 피한 신용대출의 증가와 같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변동금리 중심의 구조에서는 금리인상 시기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채의 질적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부채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채의 총량 감소를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채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한계 가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채의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채 상환 능력을 가진 중산층의 실수요자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보완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투기수요의 억제를 위해서 제시된 정책수단은 DTI, DSR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규제, 양도세 중과 등의 과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은 지나치게 수요억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에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요 이외에 소득 증대로 인한 보다 나은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라는 실수요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남·강북 할 것 없이 선호지역의 신축아파트 가격이 규제 이후에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공급측면의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지만, 이것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이 아닌 경기도권의 그린벨트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집행된 토지보상비가 도심 부동산에 투자되는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보다는 서울 도심의 선호지역에 보다 양질의 주거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선호지역에 대한 공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강화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책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본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한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정책의 이행에 투입되는 인력확충 및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규모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편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책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본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원활한 협업관계 구축과 동시에 상호 간에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본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업무의 관할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의 창출, 공공부문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환경개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정책은 일자리 문제 및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케인지안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정책들에 대해 정책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 조달에 대해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은 본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자초하였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정책 입안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의 동의에 기반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대의제는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포퓰리즘 혹은 중우정치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본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 정책의 효과로 기대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회한다는 점을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정책의 실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정규직'의 갈등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공정성 혹은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양자의 참여와 합의를 독려해 본 정책이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의 핵심 내용은 요금할인율 상향과 경쟁 촉진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다소 상충관계에 있다. 통신 3사의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통신 3사와 경쟁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통신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때문에 지나친 이익을 보고 있다면, 이들을 힘으로 압박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이다. 알뜰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의 인지도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비 부담 측면에서 요금할인율 추가 5%는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와 같이 현재의 틀을 깨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도모하고 보다 실질적인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곧바로 현재 시점에서의 본 정책 실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본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이 과연 현재 이 시점에서 탈원전이 필요하며, 동시에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위원회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가 정책적 입장을 유연하게 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정책과 같이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성패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그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탈원전 이후의 대안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경제적 판단을 내려 정책의 실행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르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익보다 큰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본 정책은 구조, 내용, 과정 및 결과의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대칭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주 및 중소 유통업자들의 불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 그 자체가 곧 그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주무부처가 개선된 제도를 실행할 의지와 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본 정책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들, 즉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막대한 리스크가 이해당사자들에게 널리 인식될 때 불공정거래의 관행은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처벌사례의 공유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본 정책의 낮은 인지도는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인들까지 본 정책을 인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본 정책은 사회적 행위의 규범으로서 그 지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기업의 상품 구매를 거부하는 윤리적 소비가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창업지원 정책에서는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의 한 방편으로 청년들의 창업 과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창업에서 청년 창업 비중은 매우 낮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창업 비중은 더욱 낮아서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청년들의 창업 욕구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층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공무원시험 합격이다. 이를 창업으로 돌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청년층의 창업 욕구를 자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문제와 이익창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창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술창업 활성화는 적극적 규제완화라는 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들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정책분야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정책은 2008년부터 지속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다. 많은 세부 프로그램들은 이전의 정책과 겹치거나 현재의 정책 내용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책평가가 동일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전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기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치매국가책임제가 기존의 치매관리 계획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되는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치매가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치매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보다 중요하게,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보다 주목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더 나은 돌봄 환경과 돌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에 관련된 문제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공적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는 아동에 대한 사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2013년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한 일련의 아동학대 종합정책에서부터의 아동학대 가해자 엄정처벌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심각성 등에 따라서 처벌기준을 높이고 더 체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한 피해아동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정책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만한 지표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법의 제정, 아동학대에 대한 '가정 내 훈육'에서 '범죄'로의 인식변화, 신고의무의 강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동학대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 아동학대 기소율은 점차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묻고 있기도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무조건 처벌을 강화할 수도 없는 일이며 학대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기준대로 강화되었는지도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 즉, 더욱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 기대대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적절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가 정말 기대대로 아동학대 범죄의 일반적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러한 정책이 규범적인 인식변화나 피해아동보호라는 정책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정책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주권을 지키는 정책이다.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단호한 단속방침을 보여주면서도 외교적 노력이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잘 해왔으며, 정책효과도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정책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중국해역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동기가 단기간에 낮아지기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간의 협조, 어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일회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심폐소생술 정책은 정책의 거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다른 사회복지정책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과 비교해서 정책의 효과성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 결과가 온전히 소방청 정책만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심폐소생술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급성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119 구조대를 통한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에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이 전수 의무조사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지표는 심폐소생술 정책의 효과성을 알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지표에 의한 정책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 공동보도자료(2017.9.26.)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의 성과는 높아졌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과 성과지표를 통해서 발견된 심폐소생술 지역간 성과 격차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달체계 등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고 보편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정책의 경우 매년 지원대상과 백신종류를 확대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여타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긍정의 평가를 받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예방접종 백신 성분의 안정성, 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을 우려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위험성 인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로 인해 최근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 같은 예방접종의 무용론이나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보다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는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구금이 끝난 다음 이들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감독 제도, 성충동 약물치료등 세부정책으로 이루어져있다. 흉악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등에 의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해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점을 가진다. 먼저, 관리제도가 실제로 관리대상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이 끝난 뒤 이들을 어떻게 재사회화할지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성폭력범죄자 관리 제도가 오래 지속되고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성범죄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도 증가한다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장기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진과 전문가, 그리고 성폭력 예방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 정책을 설명하고 소요 재정과 재원 조달방안 및 세부계획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국민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도 명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수단도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이고, 현재 여전히 세부 계획들 마련 중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정책을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면, 정부는 이에 따르는 국민적 염려와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관심, 참여, 소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가 요구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 및 법적 근거 마련에도 더욱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는 다른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비해서 종합적인 평가점수가 낮았다. 2017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준에 있어서의 모호성, 단기간에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일부 산업의 불만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법 시행 전부터 우려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노력 강화'라는 정책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의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일부 집단의 반발이 법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이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각계의 의견수렴 노력과 설득의 과정이 요청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견이나 홍보를 분명하게 정책내용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2017년 대통령 지시사항(6.22 수석·보좌관 회의)으로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합동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332개) 및 지방공기업(149개)에서 본 정책이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 공공부문에서조차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선발 및 채용 방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문의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서두른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민간부분으로까지 정책을 보다 견고히 성공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이혼으로 인한 편모나 편부 가정뿐만 아니라 미혼

모 가정 및 청소년이 가장인 가정, 그리고 조손가정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들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자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언론을 통해 자주 지적되었듯이,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가족의 실정은 보다 열악하다. 저소득층 미혼모 가정의 경우 아이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월 13만원으로 이는 보육원에서 길러지는 아이 한 명당 정부가 지원하는 돈 월 36만원의 약 1/3 수준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취약한 이들에게 보육, 소득, 교육, 주거 및 의료 등의 포괄적인 지원이 보다 보장될 수 있는 추가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교육문화정책분야

초등돌봄교실은 학생,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신축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집단 및 관련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집행이 된다. 이와 같이 분권화된 과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모니터링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기관들로 구성된 개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박람회의 공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채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실당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폭력예방 정책은 학교문화의 전반적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폭력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예방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의 관행과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일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정책은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소요가 매우 크다. 1인당 지급액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및 교원 확충, 운영시간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재원을 마련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협력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요 재원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득 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소득 분위 선정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었다. 국가장학금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득분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상대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로서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과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거주비와 생활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감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과 외식의 영양과 안전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과제로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급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계획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청소년의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판매업자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노력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지자체, 교육청, 보육시설, 학교, 판매업소,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원활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정 및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도시숲 조성 정책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숲의 확대와 편의 시설의 공급을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산림청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주기적인 공정률 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도시숲 트러스트)를 확대하여 왔으며 도시숲사랑 캠페인을 개최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시숲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교육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노인, 주부, 직장인들의 걷기 운동과 휴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각계각층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중 일정 기간을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유연하게 교과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잠재력을 키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원대한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과제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된다. 향후 자율활동의 여건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학교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정책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정책은 지역·계층·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및 재능 있는 인력의 조기 발굴·양성하고자 보편적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인터넷 윤리수준 향상,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계층, 세대 간 정보 격

차를 해소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정책 대상집단이 체감할 정도로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부 정책과제들이 충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한 문화복지증진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보편적인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그 대상으로 매우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무료 문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문화향유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지불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특색을 보인다. 대상집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부분적인 지불능력의 보전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감안한 정책의 설계라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일반 국민으로 그 대상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괴리될 위험도 있다.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은 획일적인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의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이를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현장의 자발성·창의성·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고, 둘째, 시·도의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원, 셋째, 교실 수업 및 평가 개선, 시·도 및 학교 단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한 시·도의 자율적인 혁신교육 지원,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에 대한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부가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확대할 때 얼마나 지역의 특성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소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외교안보정책분야

장병 인권보호 강화정책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군대 내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권존중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 구축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회의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여러 정책대안들은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에는 짧은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안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에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방위사업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확대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정책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 등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중 관계에 있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금한령 및 한한령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통상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를 좀 더 고려하여 한중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정책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일관된 지지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정책의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지난 몇 년 간 기존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6자 회담 등의 해결방법이 지속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기존의 해결방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또한 미사일 실험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 전문가 또는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및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정책의 경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에 대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정책의 경우 세부 정책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중앙 정부 외에 재외공관과 같은 행위자가 제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동행서비스와 같이 제도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수혜자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지원 확대정책의 경우 그동안 장기 계획에 맞게 꾸준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잘 이루어 졌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인건비 증가의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군인 봉급 인상과 자기개발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의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5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정책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미등록자 발굴을 위해 협업체계와 민원인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공자 요건 인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

련하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참전 미등록자의 요건과 보상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에 계속하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예컨대 총·포소리로 인한 이명 발생과의 연관관계 등 역학조사를 위한 예산 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여러 문헌들과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탈북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탈북민 지원 정책에 탈북민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본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즉 탈북민의 지속가능한 정착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진짜 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에서 책무규정을 두어 서로 간에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경제정책분야

김형태. 2017. 부채 트릴레마. 21세기북스.
매일경제. 2017.8.24.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줄속
매일경제. 2017.11.26. 8.2 대책 전보다 더 올랐다… 다시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머니투데이, 2017.12.6. 중산층이 무너지는 한국… 소득감소 지속 최악
아시아투데이. 2017.6.23. 통신비 4조6000억 절감에 정부 예산은 640억 뿐
연합뉴스 2017.11.30. 1천419조 가계부채 비상… 이자 폭탄만 2조3천억
이데일리. 2017.6.15. OECD 국가 대비 가계통신비 높은가 낮은가
중소기업청. 2014. 2013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앙일보, 2017.8.24. LTV 60%라 안내했는데, 50%로 정정할 판…
한국경제 2017.12.4. 11월 가계대출 4.6조 늘어… 올들어 월별 최대폭 증가
헤럴드경제. 2017.9.16. 10명 중 6명 알뜰폰 몰라
헤럴드경제, 2017.12.10. 한국에도 일본식 '잃어버린 세대' 등장… 20대 비정규직 많고 임금도 10년 간 제자리
현대경제연구원. 2017.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Bingham, R. and Felbinger, C. 2002. Evaluation in Practice. Chatham House.
Luca, D. L. and Luca, M. 2017. Survival of the fittest: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firm exit. Harvard Business School NOM Unit Working Paper, No. 17-088
Shane, S. 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 141-149.

사회복지정책분야

경기중앙신문. 2017. 아동학대범죄 기소율 최근 4년 사이 20%P 가까이 줄어.(2017.10.06. 보도)
경향신문. 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단체 "대선공약보다 후퇴"… 의료계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2017.08.09. 보도)
고재영, 최유석, 홍정익. 2015. 주간 건강과 질병 제8권 제28호. 국가예방접종 정책 국민 인식 및 만족도 경향.
관계부처 합동. 201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2014.02.28.)
관계부처 합동. 2016.「아동학대 방지 대책(안)」.(2016.03.29.)
관계부처 합동. 2017.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2017.07.05.).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2016. 보도자료.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2016.3.29.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2017.「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1년 토론회 자료집(2017.09.26.)
국민권익위원회. 2017. 2017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http://1398.acrc.go.kr/case/ISGAcase)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해경, 공용화기 사용으로 해양주권 수호(2016.11.08. 보도)
국민안전처. 2017. 보도자료. 불법 중국어선 강력한 단속 효과 '톡톡'(2017.11. 보도)
국회입법조사처. 2017. 이슈와 논점. 문재인 정보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2017.08.30.)

뉴데일리. 2016. 각 소방서 교육장 마련… 관련 예산 편성 없어 '엇박자'. (2016.04.28. 보도).
대검찰청. 2016. 보도자료.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2016.11.14. 보도)
대검찰청. 2017. 「2016 범죄분석」.
대한민국정부. 2016. 보도자료.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2016.10.11. 보도)
데일리메디. 2017. 지방 보건소 "정부, 치매안심센터 조급" 불만 제기(2017.11.11. 보도)
동아일보. 2017. [사설] '블라인드 채용' 민간도입 법제화… 시장경제 맞나(2017.06.24. 보도)
라포르시안. 2017. 취학아동 연평균 5만명 필수예방접종 안해… 부모신념 등으로 거부하기도. (2017.10.10. 보도).
메디게이트뉴스. 2017. "문재인 케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있다"(2017.10.21. 보도)
법률신문.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벌금형 받은 '몰카초범'은 제외"(2016.02.29. 보도).
법무부. 2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2016.12)
보건복지부. 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2015.12.)
보건복지부. 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2017.08.09. 보도)
보건복지부. 2017. 보도자료.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2017.9.18. 보도)
보건복지부. 2017.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문(2017.9.18. 보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2017. 보도자료. 아동학대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2017.3.27. 보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6. 「대한민국 치매현황」(2016.12.31.)
보건복지부. 2015. 2014-2018 제3차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보도자료.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 (2016.04.25. 보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2017.08.21. 보도).
서울경제. 2017. 블라인드 채용 및 NCS 제도 미준수 공공기관 수두룩(2017.10.12. 보도)
소방청. 질병관리본부. 2017. (보도자료) 심장정지환자, 일상생활 복귀 10년간 7배 증가, 시·도간 격차는 커져(2017.9.26. 보도)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17. 「2017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연합뉴스. 2016. 급성심정지 연간 3만명… 생존 열쇠는 '심폐소생술'(2016.04.06. 보도).
연합뉴스. 2016. 작년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 8%… 5년간 계속 증가(2016.10.04. 보도).
연합뉴스. 2016. '툭하면 전자발찌 훼손' 재범방지 한계… 인력부족 개선 '시급'(2016.07.20. 보도).
의협신문. 2017. 보건소 노인독감 예방접종 싹쓸이… 하루 5천건도(2017.10.12. 보도).
연합뉴스. 2017.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 6년… 확정 22명·집행 16명(2017.09.29. 보도).
연합뉴스. 2017. 성폭력 10년새 117% 급증… '고학력 초범' 집중. (2017.06.13. 보도).
연합뉴스. 2017.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연… 연내 오픈 겨우 18곳. (2017.09.18. 보도)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2016. 2016년 제1차 전북여성정책포럼.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 자료집. (2016.3.24.)
조선비즈. 2017. [기자수첩] 은행들의 '무늬만' 블라인드 채용(2017.09.11. 보도)
중앙일보. 2012.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성부·법무부 이원화돼 관리 허점(2012.07.24. 보도).
중앙일보. 2014. 안전교육 신청 2배 늘었는데… 담당 소방관은 단 1명. (2014.08.18.).
중앙일보. 2016. 한부모가족 내년 예산 925억 중 25세 미만 한부모 지원은 20억뿐. (2016.10.24. 보도)
질병관리본부. 2017.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계획」
최정아. 2014. 주간 건강과 질병 제7권 제39호. 우리나라 병원 외 급성심장정지 생존 현황(2010-2012).
쿠키뉴스. 2017. 김영란법 시행 1년… 엇갈리는 평가 결과(2017.09.24. 보도)
한겨레신문. 2017. 양육비 받아내주는 정부, 무책임한 아빠보다 낫네. (2017.07.04. 보도)
한겨레신문.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비 타격 입었나? (2017.09.25. 보도)
한겨레신문. 2017. 청탁금지법 1년… '귀찮은 예의'가 사라졌다, 거절이 쉬워졌다(2017.09.25. 보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Ⅰ)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년 춘계학술회의 – 아동학대의 현상과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 자료집. (2015.03.21.)
해양경찰청. 2016. 보도자료. 해양경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요건 확대하고 해상검문검색 거부 시 처벌 강화한다(2017.10.19. 보도)
e-나라지표. 중국어선 단속현황
e-나라지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교육문화정책분야

감사원. 2016a. 자료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 공개문. (9월).
감사원. 2016b. 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05월 24일).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정책 비교 연구-경기·전북·서울을 중심으로-. (08월).
경기도교육청. 2017. 2017 혁신학교운영기본계획. (1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17. 2017년 초등돌봄교실_운영_길라잡이.
교육부. 2014d.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기본계획.
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평가 어떻게 하나요 (교원대연수원 2015 연구용역).
교육부. 2016.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12월).
교육부. 2017a. 2017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10월).
교육부. 2017b. 2018년도 교원 연수중점 추진방향. (8월).
교육부. 2017c1. 보도자료,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발표. (1월 11일).
교육부. 2017c2. 보도자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2월 3일).
교육부. 2017c3. 보도자료,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월 11일).
교육부. 2017c4. 보도자료,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8월 29일).
교육부. 2017c5. 보도자료,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내실화 추진. (2월 28일).
교육부. 2017c6. 보도자료,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유학기제 교실을 만든다. (4월 13일).
교육부. 2017c7. 보도자료, 내년부터 약1500개 중학교에서 1학년 자유학년제 시작. (11월 16일).
교육부. 2017c8. 보도자료,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주요 내용. (11월 16일).
교육부. 2017c9. 보도자료,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관련 질의응답. (11월 16일).
교육부. 2017c10.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11월 16일).
교육부. 2017c11. 보도자료, 2018년 시도교육청별 자유학기, 자유학기 확대 운영 예정 규모. (11월 16일).
교육부. 2017c12. 보도자료, 「교육부·문체부 핵심정책토의」 실시. (8월 30일).
교육부. 2017e. 2017년 업무계획. (1월)
교육부. 2017f.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3월).
교육부. 2017g. 2017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1월).
교육부. 2017h. 2017년 국가장학금지원 기본계획. (1월).
교육부. 2017i. 혁신학교 확산 관련 참고자료. (11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2016.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유보통합과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7a.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7월).
국회예산정책처. 2017b.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2016a.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국회입법조사처. 2016b.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개선과제. (5월).
국회입법조사처. 2016c.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a. 20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 (9월).
국회입법조사처. 2017b.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8월).
국회입법조사처. 2017c.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11월).
김정안(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제원센터장). 2017. 서울형혁신학교이해. (5월).
김철민 국회의원실, 2017. 국내 도시숲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8월).
대한민국 정부. 2017.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7a.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
문화체육관광부. 2017b. 보도자료,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2017c. 보도자료,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본권이 확대된다.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2017d. 2017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7e.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자료. (11월).
방송통신위원회. 2016a. 2016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16b. 2016년도 방송통신정책성과.
방송통신위원회. 2016c. 2016년 우수사례보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방송통신위원회. 2017d. 2017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7e. 2017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산림청. 2017a. 2017년 주요업무계획.(1월).
산림청. 2017b. 2017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1월).
산림청. 2017c. 2017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1월).
산림청. 2017d.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2월).
산림청. 2017e.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8월).
서울시교육청, 2017, 2017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1월).
서울시교육청, 홍익대학교. 2015. 서울형혁신학교 성과 분석 연구.(11월).
식약처, 2017c. 보도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 보고회' 개최.(2월 23일).
식약처. 2016a. 제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2017년 시행계획.(3월).
식약처. 2016b.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현황(2016. 9월 기준).
식약처. 2017a. 2017년 업무계획.(1월).
식약처. 2017b.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1월).
식약처. 2017d.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4월).
안민석 국회의원실. 2017. 보도자료, 문화누리카드 사업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10월 11일).
연합뉴스, 어린이 먹거리 안전 민간에 맡기라는 식약처 '논란', (2017년 9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079000060.HTML
유은혜 국회의원실. 2017a.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학기엔 1분위 2학기엔 10분위?.(10월 24일).
유은혜 국회의원실. 2017b. 보도자료,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한 형제자매(동일가구원)중 약 4만 건(39,354건), 서로 소득분위 달랐다.(10월 24일).
조선일보. 2017.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3배 많다.(2017년 10월 1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2/2017101200053.html
한국교육개발원. 2016a. 교육정책 포럼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만족도에 관한 통계.(4월).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정책포럼 혁신학교 운영 현황 – 충북 행복씨앗학교를 중심으로.(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a.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b.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결과보고서.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미디어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미디어이슈3권 9호.
한국일보. 2017a. '맞벌이 구세주' 초등돌봄교실이 흔들린다.(2017년 9월 22일).
http://www.hankookilbo.com/v/67fb6a4d752448519a22c26209dbfaf6
한국일보. 2017b. '혁신학교 확대' 교육현장선 목소리 엇갈려.(2017년 5월 29일).
http://www.hankookilbo.com/v/24d4b3b7d39d460aabdcfb7d60bef34b
한국장학재단. 2017.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1월).

외교안보정책분야

감사원. 2016. 외교부 제외공관 홈페이지 및 영사핫라인 운영 부적정(2016.04.).
강동완·임성옥. 201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역할 및 개선방안-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사간의 협업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2).
경북도민일보. 2017.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국가보훈처 참전 사실 등록(2017.12.12.).
경북일보. 2017. 성주 사드 발사대 4기 전격 추가 배치(2017.9.6.).
경향신문. 2017. 4대강·방산비리… 적폐청산 진두지휘 중책(2017.12.7.).
경향신문. 2017. ARF서 '북한 문제' 핵심 의제 될 듯(2017.8.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2015년 정책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평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국가보훈처. 2014.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
국가보훈처. 2015. 정책브리핑.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2015.5.7.).
국가보훈처. 2017.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紙上)토론』.
국가인권위원회. 2016. 보도자료.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정상환 상임위원,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 기구 회의서 주제발표 –(2016.10.6.).
국민권익위원회. 2017. 보도자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 전년 대비 0.09점 상승(2017.12.6.).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 2016』.
국제뉴스. 2016. 6.25참전 미등록 유공자 발굴… 17년까지 마무리(2016.6.5.).
국회사무처 국제국. 2017. 『북핵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중국 방문 결과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6.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 ·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2017.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2017. 『주요분야별 재원배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김도희. 2017. 『트럼프 미(美)대통령 방한의 주요 의제와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37호.
김승현. 201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43호.
김연호. 2017.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의 시각』. USKI Washington Review.
김예경. 2017.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내용분석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김예경. 2017.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70호.
남북하나재단 외. 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노컷뉴스. 2017. 감사원 "해외서 억울한 일 당해도 대사관은 뒷짐"(2017.3.24.).
노컷뉴스. 2017. 12월 중 세번째 한중 정상회담… 한중 관계 해빙기(2017.11.11.).
뉴스1. 2017. 美국무부 "北 핵보유국 협상 없다…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2017.12.7.).
데일리그리드. 2017. 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방법은?(2017. 11. 22.).
매일경제. 2017. 상습구타 없다더니… 자살한 박일병 몸에 멍자국(2017.7.25.).
미래한국. 2017. 정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탈북민 출신으로 임용해야(2017.1.6.).
박영한·오경원·김지원. "북한 대함탄도미사일 위협 분석".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10.
박한규. 2017. "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 이익에 대한 논의".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반길주. 2017. "바다 전장(戰場)을 활용한 북한의 핵전략 최소억제-핵 EMP 공격 대응방안의 모색". KIMS PERISCOPE.
방위사업청. 2017. 『2017년도 성과관리 기본계획(수정본)』.
백민정. 20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미측 전문가 견해 분석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브레이크뉴스. 2017. 박주선 국회 부의장, 재외공관 민원업무 '사상 최다' 기록(2017.10.9.).
서울경제. 2017. 한국당 "협의체는 책임회피 기구" 국민의당 "文 안보 인식 여전히 우려"(2017.9.28.).
성석호. 2015.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 대한민국국회.
세계일보. 2017. 한중관계 엄중시기에 외교안보라인 '중국통 패싱' 심각(2017.9.30.).
아시아경제. 2017. [일지]北,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2017.11.29.).
아시아경제. 2017. 인권위 사무총장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 인권은 불가역적 성질 있어(2017.11.30.).
아주경제. 2017. [2017 국감]공관병 갑질 비판에 사령부 목 탄 날(2017.10.23.).
아주경제. 2017. 발리여행객, 정부 전세기타고 무사 귀국… 남은 사람들도 순차 입국 예정(2017. 12.01.).
연합뉴스. 2017. 방산업계 치부 드러낸 KAI 수사… 비리확인 성과 속 늑장 지적도(2017.10.11.).
연합뉴스. 2017. 국방위, 5·18 특별법 의결 무산…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보류(종합)(2017.12.13.).
연합뉴스. 2016. 탈북민 3만명 시대-정착지원체계 문제는 없나(2016.10.9.).
연합뉴스. 2017. 북한, 방북 러 의원대표단에 "핵보유국 인정받아야 미국과 협상"(2017.12.1.).
이승현 · 형혁규. 2017. "북한의 핵 ·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1387호.
이인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5년간 34,072명 87%증가』.
이임자 · 조용원. 2017.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국내 소비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경제이슈』 제19호. 산업연구원.
이지훈 · 조윤오. 2015. "필리핀 앙헬레스 한국인의 범죄두려움 관련 요인 연구".
인지현. 2017. 유권자 정책성향 조사. "核무장" 61.9% "사드배치" 57.8%… 외교·안보는 '보수'.
임태훈. 2016.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

외교부. 2015.『외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외교부. 2016.『외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외교부. 2017.『2017년도 외교부 예산개요』.
외교부. 2017.『한 · 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외교부. 2017.『한 · 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이데일리. 2016.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아시나요?(2016. 10. 8.).
정근식 외. 2016.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정욱식. 2015. "방위산업 비리, 깃털이 아닌 몸통을 봐야 한다."『황해문화』통권 제86호.
제주신보. 2017.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 서비스 외면 받는다.(2017.9.27.).
조남훈. 2017. "북한 핵미사일 위험과 경제적 파급효과".『동향과 분석』.
진민정. 2015. "제도화된 권력투쟁과 호명된 담론 :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담론 경쟁".『의정연구』.
청와대. 2017.『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충청일보. 2017. 64년 만에 '참전유공자 명예' 찾은 최병화옹(2017.6.25.).
통일부. 2017a.『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통일부. 2017b.『통일부 2017년도 성과계획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 2017년 12월 정기여론조사 3 – 대북문제 등(2017.12.11.).
허영. 2016.『한국헌법론』.
홍성수. 2014.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제43권.
홍현익. 2017.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한국의 대응방안".『정세와 정책』2017년 10월호.
황소희. 2017. "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 이익에 대한 논의".『입법과정책』제9권 제1호.
황태정. 2016.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입법과 정책』8(1).
jtbc. 2017. 방산 비리에도 손해배상 청구 안 해… '링컨법' 도입 안 해(2017.12.12.).
KDI. 2017.『KDI 북한경제리뷰』.
VOA뉴스. 기획보도: 한국 탈북민 3만명 시대 2. "탈북민 지원정책, 자활형·사회통합형으로 바뀌어야"(2016.11.22.).
VOA뉴스. 2017.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100개국 돌파… 한국 등 2371호 보고서 제출(2017.10.31.).
YTN. 2017. 방치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시급"(2017.10.7.).

부록–2017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1. 경제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공정거래위원회	원칙 있는 재벌개혁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	O	O
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4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형성 방지		
5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부담 경감	O	O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여건 조성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확대		
10	관세청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해소		
11	관세청	불법·부정무역 단속		
12	국세청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13	국세청	권리보호요청제도	O	
1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편의 개선		
15	국세청	신고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16	국세청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편의 제고 및 환급수혜자 확대		
17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서비스		
18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19	금융위원회	중금리 대출(사잇돌) 제도		
20	금융위원회	초대형 IB 육성		
21	금융위원회	핀테크 육성	O	
22	금융위원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23	금융위원회	대부업금리 인하		
24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유도		
25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26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개선·세입기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27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수립		
28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29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30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지원 강화		
32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복지 강화		
33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3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35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	O	
36	농촌진흥청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37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3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시장 상생환경 조성		
39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O	
40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개선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41	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층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개선		
42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43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44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 한류마케팅		
45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46	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O	
4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육성	*	
48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 지원		
4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50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채권보험제도 운영		
5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52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53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5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5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측정 및 서비스	O	
56	해양수산부	김 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한 김 산업 발전방안		
57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30% 저감 및 선박·항만효율 10~20% 증대를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 사업 추진		
58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O	O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O	O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O	O
	국토교통부	신산업 투자 확대	O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O	
	금융위원회	조선해운구조조정	O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대책	O	O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O	O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8]	O	O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O	O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	O	O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O	

8)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육성' 통합

2. 사회복지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경찰청	치매노인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2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실종아동 신속 발견	O	
3	경찰청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만들기		
4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줄이기		
5	경찰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확대 등 장애인 면허제도 합리적 개선		
6	경찰청	과학수사를 통한 중요 미제사건 해결		
7	경찰청	생활주변의 경미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8	경찰청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운영, 재외국민 보호 강화		
9	경찰청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견고한 국제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경찰청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최, 사이버 국제공조 활성화		
11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운영으로 시민신고 간소화 방안 마련		
12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O	
13	고용노동부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일과 삶의 균형①(직장어린이집)		
14	고용노동부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일과 삶의 균형②(육아휴직급여)		
15	고용노동부	신중년 보람있는 노후 지원(사회공헌활동 지원)		
16	고용노동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O	O
17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센터		
18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O	O
19	국민권익위원회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20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		
21	국민권익위원회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22	기상청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날씨·행정 도메인 분리 운영		
23	기상청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		
24	기상청	기상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서비스		
25	기상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26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27	기상청	황사특보와 미세먼지경보체계 통합	O	
28	기상청	지진정보 제공 서비스 대폭 개선		
29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30	대검찰청	국민안전 위협하는 마약류 확산 차단 대책		
31	대검찰청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경찰과 협업)	O	
32	대검찰청	중점검찰청 확대 시행		
33	대검찰청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O	O
34	대검찰청	형사부 브랜드화 시행		
35	대검찰청	검찰 인권감독관 신설		
36	대검찰청	고검 복심화		
37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확대 시행		
38	대검찰청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적극 조치		
39	대검찰청	검사 과거사 사과 및 직권 재심청구 등		
40	대검찰청	공인전문수사관 제도 시행		
41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		
42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43	법무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로파크(Law Park)' 운영		
44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45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O	O
46	법무부	교정시설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47	법무부	분류센터 운영		
48	법무부	스마트접견		
49	법무부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		
50	법무부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생활 환경개선		
51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52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또는 국적회복) 제도		
53	법무부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		
54	법무부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5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O	O
56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8년~’20년)		
5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5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O	
60	보건복지부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체계 강화		
61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O	O
62	소방청	쉽고 편리한 신고서비스 환경 개선		
63	소방청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O	O
64	소방청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소방안전체험』 습관화 추진		
65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O	
66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의 나트륨 저감 기술 지원 사업		
67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68	여성가족부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9]	O	O
6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70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O	
7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72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국제역량 강화		
73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74	인사혁신처	공직 내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 채용(균형인사)	O	
75	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혁신		
76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	O	O
77	해양경찰청	정부(해경) 방제비용 현실화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강화		
78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		
79	해양경찰청	연안·항만 해상교통관제(VTS) 센터 통합구축		
80	해양경찰청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		
81	해양경찰청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82	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83	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		
84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지원		
85	행정안전부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86	행정안전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단 구성		
8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		
88	행정안전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안전신문고』		
89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및 지역안전지수 서비스		
90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91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9) 여성가족부의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며, 크게 아동양육비 등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음.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92	행정안전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확보		
93	환경부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94	환경부	빈용기보증금제도		
95	환경부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96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	O	
97	환경부	층간소음 갈등해소		
98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99	환경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		
100	환경부	환경개선자금		
101	환경부	환경오염 피해구제		
추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지원	O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O	O

3. 교육문화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O	O
2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지원	O	O
3	교육부	혁신학교 운영·확대	O	O
4	교육부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O	O
5	교육부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대학입학전형료 투명성 제고	O	
6	교육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	O	
7	교육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O	
8	교육부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학사 제도 개선	O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	O	O
10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O	
11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스토리 등 우수 원천 콘텐츠 발굴	O	
1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O	
13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주간 등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O	
14	산림청	도시숲 조성	O	O
15	산림청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16	산림청	맞춤형 산불예방 대책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17	산림청	합리적 산지이용 체계 구축 및 산지 규제 개선		
18	산림청	해외산림 자원개발 활성화 추진		
추가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O	O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O	O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전2018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여건 조성	O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	O	O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	O	O

4. 외교안보분야

연번	주관부처	부처제출 정책	1차 평가대상	최종 평가대상
1	국가보훈처	유엔(UN)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		
2	국방부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O	O
3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	*	
4	국방부	장병 의식주 질적 개선		
5	국방부	군 복무 중 장병 자기개발 기회 및 지원 확대	*	
6	국방부	장병 인권보호 강화	O	O
7	외교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O	
8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O	O
9	외교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10	외교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O	
11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O	O
12	외교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 북한 비핵화 견인 노력 전개		
13	외교부	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14	외교부	유럽지역 소다자 협의회 개최 및 다자회의에서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의 우리 위상 공고화		
15	외교부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16	외교부	신북방정책 추진		
17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가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18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다층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19	외교부	중남미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20	외교부	평화활동 강화		
21	외교부	북한 인권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22	외교부	중견국과의 협력 채널 구축		
23	외교부	다자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		
24	외교부	대테러 국제협력 추진		
25	외교부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 증진		
26	외교부	통합적·체계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		
27	외교부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수검		
28	외교부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29	외교부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인도적 지원 추진	O	
30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31	외교부	군축·비확산 국제협력 강화		
32	외교부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33	외교부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34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O	O
35	외교부	재외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강화		
36	외교부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37	외교부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O	
38	외교부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를 통한 매력한국 알리기		
39	외교부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40	외교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구현		
41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한 경제통일 구현		
42	통일부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3	통일부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O	O
44	통일부	평화와 통일공감대 확산 제고	O	
45	통일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추가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O	
추가	국가보훈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O	O
추가	국방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	O	O
추가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	O	O
추가	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제도 개선을 통한 첨단무기 국내개발	O	
추가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	O	O
추가	병무청	병역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	O	
추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제도운영의 공익성 강화	O	
추가	통일부	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O	

10) 국방부 '병 봉급 연차적 인상'과 국방부 '군 복무 중 장병 자기개발 기회 및 지원 확대' 통합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1판 1쇄 인쇄 2018년 2월 13일
1판 1쇄 발행 2018년 2월 20일

발행인 김수곤
지은이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심동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분야)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총괄)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총괄)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분야)

펴낸곳 동아E&D
주소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등록 2008년 2월 18일 101-86-37667
출판사등록 2010년 4월 20일 제300-2009-18호
아트디렉터 유진민
디자인 전기욱
ISBN 978-89-97257-15-7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 편집저작권 © 동아E&D

값 20,000원